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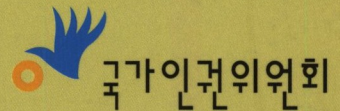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119-01

www.humanrights.go.kr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 모음집

2008. 12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목 차

1.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ICESCR)	
• 대한민국 제 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국문)	1
1995년 6월 7일 E/C.12/1995/3	
• 대한민국 제 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영문)	7
1995년 6월 7일 E/C.12/1995/3	
• 대한민국 제 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국문)	15
2001년 5월 21일 E/C.12/1/Add.59	
• 대한민국 제 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영문)	24
2001년 5월 21일 E/C.12/1/Add.59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ICCPR)	
• 대한민국 제 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국문)	35
1992년 9월 25일 CCPR/C/79/Add.6	
• 대한민국 제 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영문)	38
1992년 9월 25일 CCPR/C/79/Add.6	
• 대한민국 제 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국문)	43
1999년 11월 1일 CCPR/C/79/Add.114	
• 대한민국 제 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영문)	50
1999년 11월 1일 CCPR/C/79/Add.114	
• 대한민국 제 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국문)	57
2006년 11월 28일 CCPR/C/KOR/CO/3	
• 대한민국 제 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영문)	64
2006년 11월 28일 CCPR/C/KOR/CO/3	

3.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인종차별철폐협약, ICERD)

- 대한민국 제 7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국문) 71
1993년 9월 15일 A/48/18, 199-235항
- 대한민국 제 7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영문) 79
1993년 9월 15일 A/48/18, 199-235항
- 대한민국 제 8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국문) 87
1996년 9월 24일 CERD/C/304/Add.12
- 대한민국 제 8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영문) 92
1996년 9월 24일 CERD/C/304/Add.12
- 대한민국 제 9, 10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국문) 97
1999년 4월 7일 CERD/C/304/Add.65
- 대한민국 제 9, 10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영문) 101
1999년 4월 7일 CERD/C/304/Add.65
- 대한민국 제 11, 1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국문) 107
2003년 8월 22일 CERD/C/63/CO/7
- 대한민국 제 11, 1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국문) 111
2003년 8월 22일 CERD/C/63/CO/7
- 대한민국 제 13, 1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영문) 117
2007년 8월 17일 CERD/C/KOR/CO/1
- 대한민국 제 13, 1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영문) 124
2007년 8월 17일 CERD/C/KOR/CO/1

4.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 대한민국 제 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국문) 131
1993년 1월 28일 A/48/38, 제405-450절
- 대한민국 제 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영문) 142
1993년 1월 28일 A/48/38, 제405-450절
- 대한민국 제 3, 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국문) 155
1998년 7월 10일 A/53/38/Rev.1, 제347-386절

• 대한민국 제 3, 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영문)	163
1998년 7월 10일 A/53/38/Rev.1, 제347-386절	
• 대한민국 제 5차, 6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국문)	173
2003년 8월 10일 CEDAW/C/KOR/CO/6	
• 대한민국 제 5차, 6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영문)	183
2003년 8월 10일 CEDAW/C/KOR/CO/6	
5.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협약, CAT)	
• 대한민국 제 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국문)	191
1996년 11월 13일 A/52/44. 44-69항	
• 대한민국 제 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영문)	195
1996년 11월 13일 A/52/44. 44-69항	
• 대한민국 제 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국문)	201
2006년 7월 25일 CAT/C/KOR/CO/2	
• 대한민국 제 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영문)	208
2006년 7월 25일 CAT/C/KOR/CO/2	
6.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아동권리협약, CRC)	
• 대한민국 제 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국문)	215
1996년 2월 13일 CRC/C/15/Add.51	
• 대한민국 제 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영문)	222
1996년 2월 13일 CRC/C/15/Add.51	
• 대한민국 제 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국문)	231
2003년 3월 18일 CRC/C/15/Add.197	
• 대한민국 제 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영문)	247
2003년 3월 18일 CRC/C/15/Add.197	

6-1.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CRC-OPAC)

- 대한민국 제 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국문) 265
2008년 6월 27일 CRC/C/OPAC/KOR/CO/1
- 대한민국 제 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영문) 271
2008년 6월 27일 CRC/C/OPAC/KOR/CO/1

6-2. 아동 매매,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CRC-OPSC)

- 대한민국 제 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국문) 277
2008년 7월 2일 CRC/C/PSC/KOR/CO/1
- 대한민국 제 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최종견해 (영문) 290
2008년 7월 2일 CRC/C/PSC/KOR/CO/1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검토(UPR)

- 최종권고(국문) 2008년 5월 29일 A/AHRC/8/40 301
- 최종권고(영문) 2008년 5월 29일 A/AHRC/8/40 322

특별보고관

1. 의견과 표현의 자유 관련 특별보고관 보고서 (1995년), Mr. Abid Hussain 341
1995년 11월 21일 E/CN.4/1996/39/Add.1
2. 의견과 표현의 자유 관련 특별보고관 보고서(1999년), Mr. Abid Hussain 363
1999년 1월 29일 E/CN.4/1999/64
3.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2007년), Mr. Jorge A. Bustamante 365
2007년 3월 14일 A/HRC/4/24/Add.2

대한민국 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1995년 6월 7일

문서번호 : E/C.12/1995/3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조약의 16조와 17조에 따라 가입국이 제출한 보고서의 심의

1. 위원회는 1995년 5월 2일과 3일 열린 3차, 4차 및 6차 회의(E/C.12/1995/SR.3,4 and 6)에서 조약의 1조부터 15조까지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최초 보고서(E/1990/5/Add.19)를 심의했다. 그리고 다음의 최종 견해를 1995년 5월 18일 열린 27차 회의(12차 회기)에서 채택했다.

A. 머리말

2.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지침에 대체로 부합되는 포괄적인 보고서를 준비한 데 대해, 그리고 질의 사항들에 대한 서면 답변을 회기 전에 제출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 당사국은 또한 보고서를 토론하기 위해 상당히 고위직의 대표단을 파견하고 위원회와 유용한 대화를 하게 해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위원회는, 보고서가 형식 면에서는 포괄적임에도 불구하고 내용면에서는 많은 분야에서 극히 일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위원회가 제출한 질의 사항에 대해 더 상세하고 정확한 서면 답변을 제공한 것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정부가 1995년 5월 5일에 답변을 신속하게 제출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B. 긍정적 측면들

3. 위원회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이 성취한 빠른 경제 성장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주목한다. 그리고 상당한 물질적 진전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향유를 진전시키는데 기초가 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한국의 발전 단계에 적절한 사회보장 제도의 발전을 향한 첫 조치들에 더욱 주목한다. 한국 사회에서 더욱 긍정적인 발전은 노년층을 제외하고 사회 모든 부문에서 나타난 실질적인 문맹 퇴치, 평균 수명의 연장, 국민주택조합(national housing pool)을 늘리기 위한 노력에서 입증된다.
4. 위원회는 가정 내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최근의 입법 노력과 여성의 상속권을 인정코자 한 점에 주목한다.
5. 위원회는 공공법무관 제도(the Public Legal Officers)의 도입을 통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부 주요 부처의 핵심 인권사안에 대한 정책수립을 환영한다.

C. 조약의 적용을 저해하는 요인과 장애

6. 위원회는 한국이 사회 정치적 이행기를 거치고 있다고 본다. 각 분야들이 충분히 균형있게 발전하지 못했다. 눈에 띄게 빠른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항상 적절한 수준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호로 이어지지 않았다. 한국은 최근에는 군사 통치 기간을 벗어나 민주적 정부 체제를 갖추고, 특히 뿌리깊은 사회적 편견들에 직면해 시민사회 형성이라는 무거운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정치적 분단이 야기한 문제들 때문에 국가 안보 위협에 이유를 둔 광범위하고도 고착된 적대의식이 지속되고 있다.

D. 가장 우려되는 분야

7. 위원회는 조약의 국내법 상 지위에 대해 우려한다. 정부의 대표들은 모든 국내법이 조약의 규정과 일치한다고 단언했지만, 위원회는 국내법이 조약의 규정들에 부합하는지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계속 유감으로 생각한다.

-
8. 위원회는 노동조합결성권과 관련된 제약들이 조약의 8조에 따른 한국정부의 의무에 배치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방위산업체의 노동자 등의 집단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으면서, 교직 종사자 등에게 노동조합 결성권을 금지하는 것은 뚜렷한 이유가 없다. 마찬가지로 파업권에 관한 규제는 지나치게 제약적이고, 노동자들 행위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부 당국에게 거의 절대적인 재량권이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이 높이 존경받는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노조에 가입할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이를 옹호하고자 문화적 전통을 내세우는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근거라고 판단한다.
 9. 위원회는 또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사례들과 조합원들의 평화로운 활동에 대한 경찰의 공격에 대해서 대단히 놀랍게 생각한다.
 10. 한국정부는 여성문제에 관한 정책과 광범위한 특별 계획들을 발표했지만, 위원회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현재 차지하는 지위가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은 오랜 문화적 편견을 포함해 여러 요인으로부터 파생되는 차별적 관행들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여성의 종속 상황은 정부 보고서에도 나타난 가정내 폭력의 심각성이 증명한다. (국제결혼의 경우 처럼) 여성들이 그녀의 국적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여성의 법적 능력을 박탈하는 시대착오적 규칙도 주목해야 한다. 교육 분야에서도, 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에서 나타나는 남녀학생 비율의 격차가 우려스럽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중등 및 고등교육에 드는 높은 비용과 접근의 어려움이 여성들의 교육 수혜 비율의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1. 위원회는 고용 시에 명백하게 드러나는 높은 빈도의 성차별 행위 등의 작업장에서의 차별적인 관행과 남녀 간 임금격차에 대해서 각별한 유감을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한국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법률과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12. 위원회는 한국의 작업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의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정부가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을 무척 놀랍게 생각한다. 여러 노

동 관련 규제가 10인 미만 사업장들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특별히 우려할 만한 점이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에 최저임금제를 확대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유감스럽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재검토하겠다고 의지를 표현한 것을 환영한다. 한국의 작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와 작업조건은 우려를 야기하고 있으며, 한국정부가 위원회에 제출한 정보에는 이러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범위의 법적 조치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13. 위원회는 한국의 교육제도의 많은 요소들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 단지 초등교육만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무상 교육이 중등 및 고등 교육에까지 확대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원회는, 정부 대표가 경쟁적인 입시 요건을 낳는 고등 교육 기회의 공급 부족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구두로 인정한 사실에 주목한다. 이러한 결과의 하나로, 사설 학원들이 쉽게 학원비를 올리고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아동들은 이러한 제도 밖으로 강제로 배제되고 있다.
14. 위원회는 한국 내 주거 상황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이 주제에 관해, 특히 부적합한 주거상황·무주택자의 숫자 및 강제퇴거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 국제 민간단체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72만명이 사후대책에 대한 아무런 통보없이 퇴거당했으며, 1992년 2월 이래로 1만6천명이 역시 퇴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내 민간단체의 자료에 따르면, 1994년 4천명이 퇴거당했다. 이와 같은 위원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주거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 좀더 일반적으로 주거권 문제에 대한 의견도 듣지 못했다.
15. 위원회는 한국의 경제적 자원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사회 내 한계 계층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충분히 진전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더 큰 관심과 염려가 필요한 사람들의 범주에는 극빈층, 무주택자와 특히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다.

E. 제안과 권고

16. 위원회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영역에서 본 조약이 모든 신규(新舊)를 막론한 모든 국내법에 우선하도록 한국 정부가 그 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조약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모든 국내법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한국사회에서 조약 규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법 집행 기관들이 규정을 준수하는 것 뿐 아니라 사법 절차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17. 위원회는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와 파업권과 관련한 법과 규정을 본 조약 및 기타 적용 가능한 국제규범에 일치하도록 즉각 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 특히 교사와 공무원 및 기타 집단의 노동조합 결성권과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18. 위원회는 정부가 기존에 수립한 여러 계획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증진하는데 우선 순위를 둘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여성차별에 대처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재원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 및 성인 교육, 고용 기회의 증진, 법개정 및 사법행정의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갖는 지위의 불평등성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의 도입이 추진되어야 한다.
19.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산업안전에 대한 규제 및 최저 임금제를 1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모든 노동조건의 개선은 한국인 노동자 및 외국인 노동자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기존의 차별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20.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주거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의 일반논평 4에 따라, 주거 대책 없는 철거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한국에서의 본 조약 11조의 적용에 관한 보충 정보, 특히 주거권에 관한 보충 정보를 얻기를 희망한다.

-
21. 위원회는 또한 교육 분야의 문제들, 특히 여성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불리한 계층의 중등 및 고등 교육과정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고등교육부문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에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정규 교육의 모든 과정에서 인권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권고한다.
22. 한국 정부가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요소를 도입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해 사회의 한계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신속하게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사회적 고립과 취약성을 고려하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아울러 극빈층과 무주택자 및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번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conomic and Social
Council

Distr.

GENERAL
E/C.12/1995/3
7 June 1995

Original: ENGLISH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Republic of Korea. 07/06/95.
E/C.12/1995/3. (Concluding Observations/Comments)***

Convention Abbreviation: CESCR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S 16 AND 17 OF THE COVENANT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REPUBLIC OF KOREA

1.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articles 1 to 15 of the Covenant (E/1990/5/Add.19) at its 3rd, 4th and 6th meetings (E/C.12/1995/SR.3, 4 and 6) held on 2 and 3 May 1995 and adopted at its 27th meeting (twelfth session) held on 18 May 1995 the following concluding observations.

A. Introduction

2. The Committee expresses its appreciation to the State party for its comprehensive report, prepared largely in conformity with the Committee's guidelines, and for the written replies to the list of questions made available to it before the session. The State party is also to be commended for sending a large high level delegation to discuss the report and for its useful dialogue with the Committee. The Committee, however notes, that the report, although comprehensive in form provided information which in many areas was excessively general in content. Accordingly, the offer of the Government to furnish further and precise written responses to questions posed is welcomed. The Committee appreciates the subsequent prompt submission of those replies on 5 of May 1995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 Positive aspects

3. The Committee notes, with satisfaction, the significant and rapid economic growth during the past 30 year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t the considerable material progress achieved should lay the foundation for the enhanced enjoyment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Committee further notes the first steps taken towards the development of a social security system appropriate to a country at the Republic of Korea's stage of development. Further positive developments in the Korean society are evidenced by the virtual eradication of illiteracy among all sectors of society other than older persons, the increase in the level of life expectancy and the efforts to increase the national housing pool.
4. The Committee takes note of the recent legislative attempts to address the problem of violence against women in the family and the attempt to recognize the rights of women to inheritance.
5. The Committee welcomes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focal points in the major government ministries, including the provision of legal ai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Legal Officers System.

C. Factors and difficulties impeding the application of the Covenant

6. The Committee recognises that Korea is passing through a period of social and political transition. The developments in each of these areas have not been sufficiently balanced. The efforts and achievements in securing outstanding and rapid economic growth have not always been matched by an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t is also acknowledged that the country has only recently emerged from a sustained period of military rule to a system of democratic government and that it faces a heavy agenda of changes in the establishment of a civic society, particularly in the face of deeply entrenched social prejudices. Finally, problems deriving from the political parti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tinue to impose a pervasive fortress mentality arising from perceived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D. Principal subjects of concern

7. The Committee is concerned as to the status of the Covenant in national law. Although representatives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 asserted that all domestic legislation is 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venant,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no mechanisms exist permitting the verification of compatibility between domestic legislation and the provisions of the Covenant.
8. The Committee is of the view that restrictions concerning the right to form trade unions are not consistent with the obligations assumed by the Republic of Korea under article 8 of the Covenant. There is no apparent reason for the ban on the formation of trade unions by groups such as the teaching profession, particularly where the prohibition does not apply to other groups including workers in the defence industry. Similarly, the regulations concerning the right to strike are excessively restrictive and would appear to leave to the authorities an almost absolute discretion in the determination of the legality of incidents of industrial action. Whilst acknowledging the cultural tradi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the high esteem in which teachers are held, the Committee finds this to be a wholly unacceptable basis on which to defend the excessive limitation on the freedom of significant sectors of the Korean society to enjoy the basic right to belong to unions of their choice.

-
9. The Committee is also greatly disturbed by reports of dismissals for engaging in industrial action and of police attacks on trade unionists engaged in peaceful activities.
 10. Despite the Government's stated policy and its range of special programmes, the Committee views the situation of women in Korean society as very unsatisfactory. In all areas of life women suffer from discriminatory practices due to many factors, including long standing cultural prejudice. In the home, the subjugation of women is evidenced by the very high levels of domestic violence against them which is disclosed in the Government's report. Notice is also taken of such anachronistic rules as the legal inability of a woman in certain cases to vest her nationality in her child. In education the disparities between the percentages of men over women in second and third level institutions is disturbing. In this regard the Committee observes that the lack of access to and high cost of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contribute to the low rate of female participation.
 11. Particular concern is expressed as to the wage differential between men and women and to other discriminatory practices in the workplace including an apparently high rate of sexual discrimination in recruitment. The Committee expresses its concern with regard to the non enforcement by the Government of its own policies and legislation in these matters.
 12. The Committee is alarmed that there has been a relatively high incidence of accidents in the workplace in Korea and that there has been a failure to adequately address the problem. It is especially disturbing that various work place regulations do not apply to enterprises with fewer than 10 employees. The failure of minimum wage regulations to extend to staff of these enterprises is to be regretted and the Committee welcomes the Government's stated intention to review the situation. The conditions and treatment of those non nationals in the Korean workforce give cause for concern and the information made available to the Committee by the Government does not disclose an adequate range of legal measures to protect such workers.
 13. The Committee is disturbed by a range of features of the Korean education system. Only primary education is provided free of charge. However, given the strength of the Korean economy it appears appropriate that free education should also extend to the

secondary and higher sectors. The Committee also notes the acknowledgement made orally by the Government's representative that there is a severe problem of under supply of places in higher education resulting in extremely competitive entry requirements. One consequence of this situation is that private institutions are likely to raise their charges and thus force the children of the lower income groups to stay out of the system.

14. The Committee is concerned by the housing situation in Korea and considers that it has not been given adequate information on the subject, especially with regard to unsuitable housing, the number of homeless people and forcible evictions. It notes that, according to international non governmental sources, 720,000 persons were evicted on the occasion of the Olympic Games in Seoul and that no information has been provided on their subsequent situation, while 16,000 persons are said to have been evicted since February 1992. Lastly, according to national non governmental sources, 4,000 evictions took place in 1994. Despite the Committee's concerns, there has been no response to its questions or, more generally, to problems relating to the right to housing.
15. The Committee is of the view that the Government, in view of its economic resources, has inadequately addressed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the most marginalized members of society. Among categories of person who are in need of greater attention and concern are the very poor, the homeless and especially victims of severe physical and mental handicap.

E.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16. The Committee draws attention to the obligation on the Republic of Korea to ensure the status of the Covenant in the field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s superior to all national law whether precedent or antecedent. It recommends that all laws be examined in order to ensure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venant. It also recommends that programmes of education be extended in order to increase awareness of the provisions of the Covenant throughout society and to ensure its application in the judicial process as well as its observance by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
17.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Government immediately amend its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the freedom to form trade unions and the right to strike in order to bring them into compliance with the Covenant and with other applicable international standards. In particular, measures should be taken to ensure that teachers, civil servants and others have the right to form trade unions and to take strike action.
 18. The Committee, though acknowledging the value of existing governmental programmes, urges that priority be given to the promotion of the role of women in the society.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in order to deal with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t is necessary to allocate resources to carry out a range of initiatives in the fields, *inter alia*, of juvenile and adult education, enhanced job opportunities, law reform an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It is also recommended that programmes should be introduced with a view to redressing the imbalances in the status of women in the Korean society.
 1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Republic of Korea extend the regulations on safety in the workplace and on minimum wages to enterprises with fewer than 10 employees. All improvements in conditions of work should be applied equally to national and non national workers and existing discriminatory practices against those non nationals currently employed should be eradicated.
 20.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appropriate measures should be taken in order more effectively to guarantee the right to housing and, in particular, to ensure that no evictions are carried out without offers of alternative housing, in accordance with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4. It would also like further information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11 of the Covenant in Korea and in particular on the right to housing.
 21.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immediate attention be given to problems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in particular to enhancing the access of the most vulnerable and disadvantaged groups, and especially women, to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the need for an expanded higher education sector.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greater attention be given to the provis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at all levels in the school system.

22. While it is acknowledg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introduced elements of a social welfare system, it is urged to proceed swiftly with its expansion to meet the needs of those on the margins of society including foreign workers. The protection of foreign workers needs, in its turn, particular attention especially considering their social isolation and vulnerability. Particular attention is drawn to the very poor, the homeless and the victims of severe mental or physical illness.

대한민국 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최종견해

E/C.12/1/Add.59

21 May 2001

한국

1. 위원회는 규약 1~15조에 관한 한국정부의 제2차 이행보고서(E/1990/6/Add.23)를 4월 30일과 5월 1일에 열린 12, 13, 14회 회의(E/C.12/2001/SR12,13 and 14)에서 심의했으며, 5월 9일에 열린 26회 회의(위원회 제25차 회기)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견해를 채택했다.

A. 서문

2. 위원회는 포괄적 내용의 이행보고서와, 위원회의 질의사항(E/C.12/Q/REPOFKOR/2)에 대해 서면 답변을 제출한 당사국(한국정부)에 감사를 표한다. 위원회는 보고서 발표와 건설적인 대화를 위해 많은 수의 전문대표들을 파견해 준 것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비록 위원회에 제출된 서면 또는 구두 답변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제공되기는 하였지만, 본 이행보고서가 많은 중요사안에 관한 정보나 최근의 통계, 특히 경제위기 이후의 중요 상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위원회는 생각한다.
3. 위원회는 제1차 이행보고서 심의 이후 채택되었던 지난 최종견해에 담겨있던 제안과 권고들이 거의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B. 긍정적인 측면들

4. 위원회는 1997~1998년 외환위기 이후의 신속한 경제회복, 인권에 대한 개방적 분위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향유의 실현에 있어 이루어진 최근의 일부 진전 등에 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5.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일련의 법과 계획들이 마련된 것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1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최저임금의 적용범위가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된 것을 환영한다.
6. 위원회는 여성부의 신설에 주목하며, 고용·외국인과의 결혼·자녀의 출생신고·자녀에게 성(姓)을 물려줄 수 있는 가능성 등과 관련하여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공립·사립 아동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아동복지법과 관련계획들이 마련된 것을 위원회는 환영한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7. 위원회는 최근 UN난민고등판무관실이 서울사무소를 개설하고 난민신청서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

C. 규약 실현의 장애요소

8. 위원회는 한국이 주요한 사회경제적 과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정부가 규약 하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9.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을 통해 강제되고 있는 ‘요새 심리(fortress mentality)’의 만연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높은 수준의 방위비 지출에 반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핵심분야들에 대한 예산은 감소하고 있는 불균형적 현실에 주목한다.

-
10. 위원회는 깊이 자리잡은 전통적·문화적 편견이 이주노동자와 여성 등 특정 집단을 주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11. ‘경제우선주의’적 접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장에 낮은 비중을 두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특정 사회집단이 주거, 사회복지, 의료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주변화되고 있다고 위원회는 생각한다.

D. 주요 우려사항

12.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구조조정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와 협상을 할 때 규약의 권리들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과잉의존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대량정리해고·고용상태 악화·소득격차 심화·가정파탄 증가·많은 사람들의 주변화 등으로 나타났다.
13. 위원회는 빠른 속도의 경제발전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수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권리들 혹은 일부 집단의 권리들이 경제회복과 시장경쟁력확보를 위해 희생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14. 위원회는 한국정부의 통계자료 확보방법이 충분히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예를 들어 실업, 불안정고용(Underemployment), 주거, 빈곤과 이주 등에 관련된 통계자료들이 그러하다. 몇몇 경우, 정부가 제공한 통계는 UN전문기구와 민간단체를 포함한 여타의 기관들이 제공한 통계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취약계층의 요구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정책들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지니는 통계들이다.
15. 위원회는 1차 보고서 심의 이후에, 규약의 권리를 국내법에서 완전히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헌법에 따르면 규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데, 이 경우 신법(新法) 또는 특별법이 규약의 일부 권리에 우선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위원회는 우려한다. 또한, 규약상의 모든 권리가 국내법원에서 직접 원용되는지의 여부에 관해 명확한 입장이 없는 점 그리고 그러한 판례가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16. 위 6항에서 주목한 진전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위원회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여자 태아에 대한 높은 낙태율이 보여주듯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호주제가 법에 명시되어있고, 가정폭력 발생 비율이 여전히 높고, 여성의 고등교육 접근률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직장내의 여성차별과 성희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남녀의 평균임금격차는 매우 크다.
17. 위원회는 보고서 심의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독립적 기관의 정보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연금혜택, 실업, 의료혜택, 직업안정성 등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50% 가까이 되며, 이들 중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18. 위원회는 최근 몇 년 사이 산업재해 발생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는 산업안전관련 규제의 완화와 근로감독관의 부족이 초래한 결과로 보인다.
19. 위원회는 교사들이 규약 8조의 권리(노조결성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된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규약 및 헌법 33조가 보장하고 있는 권리인 단체교섭 및 파업권이 교사들에게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한국사회에서 교사에게 전통적으로 주어진 고결한 지위를 위원회가 인지한다고 해도, 위원회는 정부가 기본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전통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20. 위원회는 파업(industrial actions)을 관장하는 법률이 투명하지 않고 파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관련기관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이 점에 있어서,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위원회는 판단한다. 또한, 위원회는 대량해고에 의해 유발된 최근의 노동 관련 시위에서 과도한 경찰력이 사용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러한 상황들의

종합적인 효과는 규약 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라고 위원회는 생각한다.

21.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 아동노동 그리고 가정 파괴로 인한 아동 학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 점에서,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충분히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2. 위원회는, 기반시설·교육·보건의료 및 기타 필수 시설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도시 지역에 고도로 집중돼 있어 인구가 농촌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주했으며 많은 노인들은 농촌에서 가족농지를 돌보기 위해 남겨졌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 동안 농촌 지역 주민들의 상황이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빈곤선 아래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는 한편, 위원회는 주어지는 지원이 충분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수급기준이 너무 엄격해 많은 빈곤층이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규 생계급여의 액수가 사전 통보 없이 또는 이유 없이 급격히 삭감될 수도 있다고 한다. 국민연금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전국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나, 연금을 받을 나이에 근접하고 있음에도 보험료를 충분한 기간 납부할 수 없었던 상당 비율의 경제활동인구가 연금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24. 위원회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최소 2%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가 심지어 정부 기관에서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위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강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는 데 우려를 느낀다.
25. 위원회는, 위원회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 7에 의거, 강제철거되는 사람의 숫자와 강제철거 발생 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원회는 또한 공공사업으로 인해 퇴거당하는 가옥소유자들과 달리, 민간 개발사업의 피해자들에게는 보상이나 임시주거시설이 제공되지 않는 것을 우려한다. 더욱이

위원회는 저소득층, 특히 취약집단, 한계계층들의 주거비 부담, 거주자들에게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거주, 노숙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우려를 느낀다.

26. 위원회는 보건 분야 예산의 비율이 (전체 정부예산 중) 1% 이하이며 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불안하게 느낀다. 민간의료기관이 지배적—모든 보건의료기관의 9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금융 위기 이후 더욱 악화되는 추세—이며, 이는 곧 사회의 한계 계층들이 보건의료에 접근하는데 부정적인 결과를 의미한다는 점을 위원회는 우려한다.
27. 위원회는 열악한 공교육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사교육으로 자녀의 교육을 보충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히 저소득층은 과중한 재정부담을 안게 되는 점을 우려한다.
28. 위원회는 또한 고등교육에서 사립기관이 지배적이며, 이는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 중 2/3 이상이 남학생이며 이는 성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29. 위원회는 초등교육 단계만이 무상의무교육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발전수준에 걸맞지 않다.
30. 위원회는 지금까지 오직 한 명의 난민신청자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현재의 난민 지위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데 우려를 느낀다.
31. 위원회는 인권교육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일에 가장 직접 연관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필수 과정으로 아직 공식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느낀다.
32.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지식인과 예술인의 활동을 제약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국가보안법 하에서, 작품이 검열, 몰수 혹은 파괴될 뿐 아니라 지식인과 예술인들 자신이 형사 기소의 대상이 되고 있다.

E. 제안과 권고

33. 위원회는 한국정부의 최초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에 담겼던 제안과 권고를 다시 반복하고 확인하면서 그것들을 이행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34. 위원회는, 정부 활동의 인권적 접근은, 각 권리와 관련된 실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 가장 취약한 집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법,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위원회는 국가의 통계기관들과 관련된 부처들이 규약의 관점으로 모든 권리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35.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는 새로운 법의 제정을 주목하는 한편, 본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의 지위에 관한 1991년 원칙(파리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같은 맥락에서 본 위원회의 일반논평 10에 대한 주의를 요청한다.
36.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규약이 국내법 체제 안에서 직접 원용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규약의 지위가 구법이든 신법이든, 혹은 특별법이든지에 관계없이 모든 국내법에 우선해야 한다고 권고하며, 이와 관련해 본 위원회의 일반논평 9를 참조한다.
37. 위원회는 신설된 여성부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면서 법률과 사회에 성평등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필요한 예산을 배정할 것을 권고한다.
38. 위원회는 “비정규” 노동자의 상황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제3차 이행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함을 권고한다. 한편,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비정규노동자의 지위를 재고(再考)하고 규약 하의 권리들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
39. 위원회는 규약 8조의 규정 즉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자신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이해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교섭을 행할 권리, 그리고 파업권을 한국정부에 상기시킨다. 위원회는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공공질서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재 모두에서 교원 및 공무원들에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3차 이행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40. 위원회는 아동 성 매매와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취하고 그러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원상회복을 위한 계획을 확대시킬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41. 위원회는 주거 문제에 대한 지원을 구하는 진정이나 탄원을 다루기 위해 정부 내에 전담부서(focal point)를 설치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민간 개발사업에 의한 강제철거의 피해자들에게도 보상과 임시주거시설 등의 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또한 한국정부는 취약집단 또는 한계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적절한 주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노숙자나, 비닐하우스와 같이 기준 이하의 조건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원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42. 위원회는 규약 13조와 본 위원회 일반논평 13에 부합하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도록 공교육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을 수립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그 계획은 다음의 요소를 담아야 한다. 중등교육의 무상의무교육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그 합리적 기한설정(timetable); 사교육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와 공교육 강화를 위한 공교육제도의 기능과 질에 대한 재검토; 고등교육을 포함해 모든 단계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 연구, 사회 각계 각층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접근 보장을 위한 구체적 조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교육 단계 교과내용의 재평가. 이러한 주제에 대한 정보가 한국정부의 제3차 이행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43. 전통적인 관행이 어떤 권리를 향유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거나 남아 선호 및 여자태아의 낙태 등 어떤 종류이든 차별을 존속시키는 한, 한국정부는 일반 대중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대중 캠페인을 수행해야 한다.
44. 위원회는 1993년 세계인권대회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에 따라, 인권고등판무관실과의 협력 속에, 본 위원회 및 기타 다른 조약 기구들이 채택한 견해 (observations)들을 고려하면서 인권 관련 국가행동계획을 준비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국가인권행동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3차 이행보고서에 담을 것을 요구한다.
45. 위원회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제출할 제3차 이행보고서에 농촌 부문의 상황과 농업 및 식량 생산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을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번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Economic and Social
Council**

Distr.

GENERAL
E/C.12/1/Add.59
21 May 2001

Original: ENGLISH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Republic of Korea. 21/05/2001.
E/C.12/1/Add.59. (Concluding Observations/Comments)***

Convention Abbreviation: CESCR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S 16 AND 17 OF THE COVENANT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Republic of Korea

1.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second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articles 1 to 15 of the Covenant (E/1990/6/Add.23) at its 12th, 13th and 14th meetings (E/C.12/2001/SR.12, 13 and 14) held on 30 April and 1 May 2001 and adopted at its 26th meeting (E/C.12/2001/SR.25), held on 9 May 2001, the following concluding observations.

A. Introduction

2. The Committee expresses its appreciation to the State party for the comprehensive report and for the written replies to its list of questions (E/C.12/Q/REPOFKOR/2). The Committee notes with satisfaction the presence of a large expert delegation which presented the report and which approached the dialogue in a frank and constructive manner. The Committee notes, however, that the report failed to include information on several important areas and updated statistics, particularly on the critical situation following the financial crisis, although this was partly remedied in the written and oral information subsequently provided to the Committee.
3. The Committee regrets that most of its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its previous concluding observations, adopted upon examination of the initial report, have not been implemented.

B. Positive aspects

4. The Committee notes with satisfaction the significant and rapid economic recovery from the 1997-1998 financial crisi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present open climate towards human rights generally, and the advances recently realized in the enjoyment of som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5. The Committee notes with satisfaction the adoption of a wide range of laws and programmes aimed at ensuring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for all persons, including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of 1999,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the National Pension Schem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cheme and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Act. It welcomes the extended application of the minimum wage to workers in all enterprises, whereas the minimum wage had previously been applicable only to workers in enterprises employing more than 10 persons.
6. The Committee takes note of the recent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for Gender Equality. It also notes with satisfaction the actions taken to grant women equality with regard to employment, marriage to foreigners, equality in the registration of children, and the possibility of passing on their family name to their children. It further

welcomes the Child Welfare Act and the programmes in place to significantly expand public and private childcare facilities, which are encouraging women's participation in remunerative activities.

7. The Committee welcomes the recent opening of an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in Seoul, through which applications for asylum can be processed.

C. Factors and difficulties impeding the application of the Covenant

8.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State party is experiencing a period of major socio economic transition that affects its ability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e Covenant.
9. The Committee notes the continued negative effects on the enjoyment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the pervasive "fortress mentality", which is enforced by the National Security Law. Moreover, the high level of defence expenditure is in contrast with the shrinking budget for key area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0. The Committee notes that deeply rooted traditions and cultural prejudices marginalize certain categories of persons, such as migrant workers, and many women.
11.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economy first" approach adopted by the State party has resulted in a low priority being placed on the protec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is has led to the marginalization of certain groups in society in such matters as housing, social welfare and health care.

D. Principal subjects of concern

12.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State party did not take into account its Covenant obligations when negotiating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o overcome its financial crisis and restructure its economy. The overreliance on macroeconomic policies has had profound negative effects on the enjoyment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that there have been large scale employee

dismissals and lay offs, a significant deterioration in employment stability, growing income inequalities, an increasing number of broken families and marginalization of a large number of persons.

13. The Committee views with concern the fact that the rapid pace of economic development has not been matched by efforts to guarante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in such a situation, some rights or the rights of some groups are being sacrificed for the sake of economic recovery and market competitiveness.
14.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data collection methods of the State party do not seem to be fully reliable. Examples include data on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housing, poverty and migration. In some cases, there were very large gaps between the statistics provided by the Government and those from other sources, including the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and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which has serious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policies and programmes designed to address the needs of the most vulnerable and marginalized people.
15. The Committee regrets that no adequate effort has been made since the examination of the initial report to ensure that the rights provided for in the Covenant are fully enshrined in law.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the status of the Covenant is equal to that of domestic laws, which means that the protection of some rights may be overridden by subsequently enacted laws or special laws. It regrets the lack of clarity as to whether all Covenant rights can be invoked in domestic courts and further regrets the absence of any case law.
16. Notwithstanding the advances noted in paragraph 6, the Committee notes with deep concern the continued unequal status of women. Persisting problems include the traditional preference for sons, which is manifested in a high incidence of induced abortions of girl foetuses that threaten the reproductive rights of women; the patriarchal head of family system (ho ju) as defined in law; the high incidence of domestic violence; the relatively low access by women to tertiary education;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nd a large

gap in the average salaries paid to women and to men.

17. The Committee regrets that the specific conditions of work to which the so called “irregular workers” are subject have not been clarified during the dialogue. Information from independent sources indicate that “irregular” workers are distinguished from “regular” workers, although they often perform the same tasks, in that irregular workers receive lower wages, pension benefits, unemployment and health benefits and have less job security. It also notes that the proportion of irregular workers in the general labour force has grown to half, the great majority of them women.
18. The Committee is alarmed at the rising incidence of industrial accidents in recent years, which appears to be the result of a relaxation of the standards governing industrial safety and of the insufficient number of on site inspectors.
19. The Committee notes that teachers can legally enjoy their right under article 8 of the Covenant to form and belong to trade unions. However, it is concerned that they are still prevented from participating in collective bargaining and in strikes, a right guaranteed in both the Covenant and in the national Constitution (art. 33). While cognizant of the elevated status that is traditionally bestowed on teachers in Korean society, the Committee considers it inappropriate for the Government to assume the role of guardian of traditions that prevent the exercise of this fundamental right.
20.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that the laws governing industrial actions are not transparent and appear to give the authorities inordinate discretion in determining the legality of strikes. In this regard, it considers entirely unacceptable the approach taken to criminalize strike activities. In addition, the Committee is deeply disturbed by the excessive force used by the police against recent labour demonstrations that had been set off by massive lay offs. The Committee considers the combined effect of these circumstances to be a clear negation of the rights provided for in article 8 of the Covenant.
21.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rising incidence of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child labour, and hardships caused by a breakdown of the family. In this

regard, the legal protection accorded to children does not appear to have been adequately implemented.

22.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e shifting population distribution from rural to urban areas, with most government programmes to develop infrastructure, education, health care and other essential facilities being highly concentrated in the urban areas. Urban migration of younger people has left many older persons to care for family farms in the countryside. The Committee regrets that the situation of persons living in rural areas has not been sufficiently dealt with during the present dialogue.
23. While welcoming the adoption of programmes to supplement the incomes of those living under the poverty line, notably through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e Committee has doubts about the adequacy of the assistance given. The eligibility criteria are apparently so rigid as to exclude many of the poor, and the amount of financial assistance regularly awarded can reportedly be drastically reduced without notice and without reaso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which is said to have nationwide coverage and be open to all persons, nevertheless fails to provide for an inordinate proportion of the workforce who are reaching pensionable age but have not been able to contribute to the system for a sufficient number of years.
24.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despite the State party's attempts to promote employment of the disabled, the previous 2 per cent quota for workers with disabilities in enterprises employing over 300 employees has not been met, even within government agencies.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that enforcement mechanisms for this purpose do not seem to have been established.
25. The Committee regrets the lack of accurate information concerning the number of forced evictions and the specific conditions under which they can occur, in accordance with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7.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that victims of private construction projects are not provided with compensation or temporary lodging, unlike private homeowners who are evicted as a result of public projects. Moreover,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affordability of housing for lower income groups, especially the vulnerable and marginalized groups; about the use of "vinyl houses" for dwellings, which pose grave risks to their

-
- dwellers; and about the increasing number of the homeless.
26. The Committee is disturbed that the portion of the government budget allocated to health, which is under 1 per cent is low and declining. It is concerned at the predominance of privately operated health care facilities estimated to exceed 90 per cent of all health care facilities, a trend that accelerated in the wake of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consequent negative implications for access to health care by the most marginalized sectors of society.
 27.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the low quality of education in public schools is compelling families to supplement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with private instruction, thereby placing an undue financial burden on families, especially those in lower income groups.
 28. The Committee also notes with concern the predominance of private institutions in higher education, a fact detrimental to the lower income groups. It further notes that over two thirds of the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are males, which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29. The Committee notes that education is free and compulsory only at the primary school level, which is not commensurate with the State party's high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30.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present criteria for granting refugee status appear to be far too stringent, with only one application having been approved to date.
 31.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human rights education has not yet been formally incorporated as a required subject for all members of those professions that are most directly involved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32.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National Security Law is being used to curtail the activities of intellectuals and artists. Under this law, not only are their works being censored, confiscated or destroyed, but the intellectuals and artists themselves are

being subjected to criminal prosecution.

E.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33. The Committee reiterates and affirms its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its previous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State party's initial report and urges the State party to take concrete steps to implement them.
34. The Committee emphasizes that a human rights approach to government actions must begin with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actual situation in respect of each right, accurate identification of the most vulnerable groups, and the formulation of appropriate laws, programmes and policies. It urges the national statistical agencies and relevant ministries to review the ways in which data relating to all rights are collected through the lens of the Covenant.
35. While noting the enactment of a new law that establishes 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e Committe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the commission in full conformity with the 1991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the "Paris Principles"), and in this context, draws attention to its General Comment No. 10.
36.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accord the Covenant a legal status that would enable it to be invoked directly within the domestic legal system. It recommends that such status be superior to all national laws, whether precedent, antecedent or special, and refers in this regard to its General Comment 9.
37.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llocate the necessary resources to enable the newly established Ministry for Gender Equality to function effectively and to apply a gender perspective in legislation and in society.
38.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detailed information on the situation of "irregular" workers be included in the third periodic report. In the meantime, it strongly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reconsider the status of irregular workers and guarantee their rights under the Covenant.

-
39. The Committee reminds the State party that the provisions of article 8 guarantee for all persons the right to freely form and join trade unions, the right to engage in collective bargaining through trade un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ir economic and social interests, as well as the right to strike.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desist from using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striking trade unions. It also urges the State party to refrain from using any force beyond that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right of teachers and other civil servants to form and join trade unions, to engage in collective bargaining and to strike should be guaranteed in law and in practice. Detailed information on this is requested in the third periodic report.
40.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more effective measures to combat the sexual trade of children and child labour, as well as expand its programmes directed at the protection and rehabilitation of the victims of such practices.
4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stablish a focal point within the Government for dealing with complaints or appeals for assistance on housing matters. It recommends that protection be provided, such as compensation and temporary housing, to victims of forced evictions resulting from private development projects. The State party should also ensure that adequate housing is available to members of vulnerable or marginalized groups. Moreover, the State party should take immediate measures to assist all those who are homeless or living in exceptionally substandard conditions, such as "vinyl houses".
42.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stablish a plan to strengthen the public education system in conformity with article 13 of the Covenant and General Comment No. 13 of the Committee, and in accordance with the State party's high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The plan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elements: a reasonable timetable for specific ac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free and compulsory secondary education; a re examination of the functions and quality of the public education system relative to private education, with a view to strengthening the former and easing the burden on low income groups imposed by the latter; a study of accessibility of schools at all levels, including tertiary education, and specific actions

to be taken to ensure equal access by all sectors of society; and a reassessment of the curricula at all levels of instruction directed at promoting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formation on this matter is requested in the third periodic report of the State party.

43. Insofar as traditional practices pose an obstacle to the fulfilment of some rights or perpetuate discrimination of any kind, including the preference for sons and the abortion of girl foetuses, the State party should carry out large scale public campaigns to promote understanding among the general public about human rights.
44.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prepare, in accordance with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adopted at the 1993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in cooperation with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 national human rights plan of action, taking into account the observations made by this and other treaty bodies. It requests that information on such a national plan be provided in the State party's third periodic report.
45.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in its third periodic report, to be submitted by 30 June 2006, on conditions in the rural sector and the situation regarding agriculture and food production.

대한민국 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최종 견해

배포

일반

CCPR/C/79/Add.6

1992년 9월 25일

원문: 영어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

대한민국

1. 본 이사회는 1992년 7월 13일, 14일 및 15일에 열린 제1150차, 제1151차 및 제1154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최초보고서 (CCRP/C/68/Add.1)를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였다.*

A. 서론

2. 본 이사회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된 당사국의 성의 있는 보고서에 사의를 표한다. 상기의 보고서는 본 협약의 이행에 관련된 법률과 규정에 관하여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회는 본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에 관한 충분한 정보와 협약의 이행을 저해할 수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에 관한 정보가 부족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와 동시에, 이사회는 대표단이 제공한 명확하고 광범위한 구두 답변과 상세한 의사 표시에 사의를 표한다.

* 1992년 7월 29일에 열린 제45차 회기(1173차 회의).

B. 긍정적인 측면

3. 본 이사회는 대한민국이 최근 수 년간 본 협약과 그에 따른 선택의정서를 포함하여 다수의 국제 인권조약 가입하고 이에 따라 본 협약 제41조에 대한 선언을 하였으며,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 점에 만족을 표한다. 본 이사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본 협약의 보류를 철회하기 위한 검토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고 법률적 구조의 제공에 관한 상당한 진보가 있었다. 현재 국내정치에서의 반대입장도 상당히 수용할만하다. 독립적인 기관인 헌법재판소는 매우 강력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C. 규약의 적용을 저해하는 요인과 어려움

4. 본 이사회는 남북한의 관계가 여전히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최근 화해, 협력 및 불가침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결정은 긍정적인 전기로 보인다. 정부기관에 따르면,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와해와 무력도발에 대한 매우 실질적인 위협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보호와 통합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D. 주요 문제영역

5. 본 이사회는 대한민국 헌법이 본 협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1조의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은 본 협약의 제2조와 제26조에 비추어 다소 불완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우려는 헌법 제37조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다양한 권리와 자유가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으로는 불식되지 아니한다.
6. 본 이사회는 주요 관심사는 국가보안법의 존속에 관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으로 국내의 공공질서에 의미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영향이 과대평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사회는 일반 법률과 특히 이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법만으로도 국

가안보를 방어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정 내용은 다소 모호한 용어로 정의되어 있어 실제로 국가안보에 위협적이지 않은 행위와 본 협약에서 용인하지 아니하는 대응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7. 본 이사회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경찰의 지나친 권력행사, 국가안전기획부의 조사권의 범위 및 제12조의 이행, 특히 북한 방문과 관련한 부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사회는 수감자들이 재교육을 받는 상황이 재교육이라는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실제로 갇생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가혹함의 정도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본 협약의 조항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간첩활동의 정의와 관련하여 내러지는 국가기밀의 포괄적인 정의 역시 잠재적으로 오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8. 본 이사회는 또한 다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사형을 선고받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사형선고를 받는 위반행위에 절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본 협약 제6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또한 기소 전에 심문을 위한 긴 기간은 본 협약 제9조 3항과 배치되고 있다. 기타 관심분야로는 정치적 견해에 따른 장기간 인신구속, 특정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본 협약 제15조에 기술된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집회 및 결사에 대한 사전허가 요구 등이다.

E. 제안 및 권고사항

9. 대한민국이 과거 장기간에 걸쳐 이룬 인권존중에 관한 긍정적인 발전을 고려하여 본 이사회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본 협약의 조항에 일치하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 이사회가 동 협약에 규정된 권리의 완전한 이행에 주요 장애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보안법의 단계적인 철폐를 위한 시도가 이행되어야 하며, 한편으로는 몇몇 기본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형규정 범죄를 축소하고 동 협약 제15조의 조항내용이 형법에도 적용되도록 하며,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권리의 이행에 제한을 더욱 축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이사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14조에 관한 유보의 철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본 협약과 선택의정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권고한다.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Distr.
GENERAL
CCPR/C/79/Add.6
25 September 1992
Original: ENGLISH

HUMAN RIGHTS COMMITTEE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0 OF THE COVENANT

Comment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REPUBLIC OF KOREA

1.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CPR/C/68/Add.1) at its 1150th, 1151st and 1154th meetings, held on 13, 14 and 15 July 1992, and adopted* the following comments:

A. Introduction

2. The Committee expresses its appreciation for the State party's well documented report which had been submitted within the specified time limit. The report contained detailed information on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venant. However,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report does not include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the implementation of the Covenant in practice and about factors and difficulties which might impede the application of the Covenant. At the same time the Committee appreciates the clear and comprehensive oral replies and detailed clarifications given by

* At the forty fifth session (1173rd meeting), held on 29 July 1992.

the delegation.

B. Positive aspects

3. The Committee notes with satisfaction that in recent years the Republic of Korea has become a party to a number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including the Covenant and its Optional Protocol, and that it has made the declaration provided for in article 41 of the Covenant. It has also joined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The Committee also notes with satisfaction that currently consideration is being given to the possibility of withdrawing the Republic of Korea's reservations to the Covenant. Additionally, progress has been made in regard to the provision of legal aid and towards narrowing the scope of oper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Internal political dissent is now more accepted. The Constitutional Court, an independent organ, is playing a vigorous and important role.

C. Factors and difficulties impeding the application of the Covenant

4.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still appear to be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recent conclusion of the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 Aggression and Exchanges and Co operation appears to constitute a positive step. According to the authorities, the Republic of Korea is, however, still coping with a very real threat of destabilization and military pro vocation and, therefore, the Government continues to hold the view that it is essential to retain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order to protect the security and integrity of its liberal democratic system.

D. Principal subjects of concern

5. The Committee expresses its concern over the fact that the Constitution does not incorporate all the rights enshrined in the Covenant. Also, the non discrimination provisions of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would seem to be rather incomplete as compared with articles 2 and 26 of the Covenant. These concerns are not allayed by the argument that, pursuant to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various rights and freedoms not enumerated therein are not to be neglected.

-
6. The Committee's main concern relates to the continued oper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Although the particular situation in which the Republic of Korea finds itself has implications on public order in the country, its influence ought not to be overestimated. The Committee believes that ordinary laws and specifically applicable criminal laws should be sufficient to deal with offences against national security. Furthermore, some issues addressed by the National Security Law are defined in somewhat vague terms, allowing for broad interpretation that may result in sanctioning acts that may not be truly dangerous for State security and responses unauthorized by the Covenant.
 7. The Committee wishes to express its concern regarding the use of excessive force by the police; the extent of the investigatory powers of the National Security Planning Agency; and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12, particularly in so far as visits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e concerned. The Committee also considers that the conditions under which prisoners are being re educated do not constitute rehabilitation in the normal sense of the term and that the amount of coercion utilized in that process could amount to an infringement of the provisions of the Covenant relating to freedom of conscience. The broad definition of State secrets in connection with the definition of espionage is also potentially open to abuse.
 8. The Committee also expresses concern about the still high number of offences liable to the death penalty. In particular, the inclusion of robbery among the offences carrying the death penalty clearly contravenes article 6 of the Covenant. The very long period, allowed for interrogation before charges are brought, is incompatible with article 9, paragraph 3, of the Covenant. Other areas of concern relate to the continued imprisonment of persons on grounds of their political opinion; the persistence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certain respects; problems relating to the principle of the lawfulness of the penalties covered by article 15 of the Covenant? and the requirement for advance authorization of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E.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9. Taking into account the positive developments regarding respect of human rights that have taken place in the State party over the last years,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tensify its efforts to bring its legislation more in lin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venant. To that end, a serious attempt ought to be made to phase out the National Security Law which the Committee perceives as a major obstacle to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ights enshrined in the Covenant and, in the meanwhile, not to derogate from certain basic rights. Furthermor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reduce the cases in which the death penalty is applied; to harmonize to a greater extent the Penal Cod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5 of the Covenant; and to reduce further the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peaceful assembly (art. 21). Finally, the Committee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actively consider withdrawing its sweeping reservation in respect of article 14 and take additional steps with a view to enhancing public awareness of the Covenant and the Optional Protocol in the State party.

대한민국 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최종 견해

1999년 11월 1일

유엔문서번호 : CCPR/C/79/Add.114

1. 위원회는 1999년 10월 22일에 열린 1791, 1792차 회의(CCPR/C/SR.1791과 SR.1792 참조)에 한국정부의 2차 정기보고서(CCPR/C/114/Add.1)를 검토하고, 1999년 10월 29일에 열린 1802차 회의(CCPR/C/SR.1802)에서 다음의 최종 견해를 채택했다.

A. 들어가며

2.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제2차 정기 보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당사국의 1차 보고서가 규약의 실제 이행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견해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차 보고서 또한 마찬가지로의 결함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더 나아가 보고서 심사 중 위원들이 제기한 여러 질문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것을 위원회는 유감으로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정부가 규약의 모든 조항들에 잘 따르고 있는지 이행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었다.

B. 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장애

3. 두개의 한국간에 아직 어떠한 최종적 합의도 없었다는 사실로 인해 한국정부가 갖고 있는 안보에 대한 우려를 위원회는 이해한다. 그러나 안보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는 것, 그 자체로 규약에 인정하고 있는 권리들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순 없다. 그리고 당사국이 진정한 안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하더라도, 권리의 제한은 규약의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C. 긍정적인 요소

4. 위원회는 민간단체들에게 보고서를 전파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민간단체들은 위원회가 보고서를 심의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예술작품 상영에 대한 검열을 책임졌던 공연윤리위원회의 폐지가 보여주듯, 사회의 개방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위원회는 주목한다.
5. 위원회는 규약에서 인정하는 권리들, 특히 2조1항, 3조, 26조 하에서 보장하는 평등에 대한 권리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법들이 제정된 것을 인지한다. 여성발전기본법, 고용평등에 관한 법률 내 개정들, 장애인고용법, 성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바로 그것이다.
6. 위원회는 규약 및 인권 일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인지한다. 여기에는 판사, 변호사 그리고 검사들에 대한 의무적인 인권교육이 포함된다. 또한 주요 국제인권규약들을 한글로 번역하고 배포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D. 주요 관심 분야 및 권고

7. 규약에서 규정하는 권리들의 국내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이는 특히 대한민국의 헌법이 모든 권리들, 그리고 그 권리들이 제한될 수 있는 정도와 범위를 낱낱이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의 6조에 따르면, 당사국이 비준한 국제규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규약에 가입한 후 제정된 법률이 규약이 인정하는 권리보다 우위에 있음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 조항이 해석돼 온 것에

대해 위원회는 우려한다.

8. (한국정부의) 1차 보고서를 검토한 이후,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그것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당사국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은 분단상황이 야기하는 법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구금, 조사 그리고 실체법상의 책임(substantive liability)에 관한 특별법규를 마련하는데 이용된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역자주: 일반적인 경우보다 긴 구금일수, 지나치게 높은 형량을 부과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점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부분) 이는 규약의 9조, 18조, 그리고 19조 등 다양한 조항들에 반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정부의 1차 보고서를 검토한 이후 권고한 사항, 즉 당사국이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가야 함을 다시금 권고한다.

9.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7조 하에서 “반국가단체”를 고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의 범위가 불합리하게 광범위하다고 생각한다. 선택의정서에 따라 개인적 통보로서 위원회에 보내진 사례들과 7조 하에서 기소된 내용에 대한 정보들을 검토해본 결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규약의 19조 세 번째 문장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규약은 단지 사상의 표현이 적성단체(enemy entity)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그 실체에 대해 동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유만으로, 사상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검찰의 내부 지침(역자주: 국보법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라는 행정지침)이 규약과 합치하지 않는 국보법 7조의 남용을 억제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한다.

당사국은 규약에 부합하도록 7조를 긴급히 개정해야 한다.

10.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를 장려하고 강화시키는 법률과 관행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 특히, 호주제는 여성을 종속적인 역할로 위치 짓는 가부장적 사회를 반영하면서 동시 강화시킨다. 태아성감별 관행, 둘째와 셋째로 태어나는 아동 중에 남아의 불균형한 비율, 위험한 낙태가 명백히 초래한 높은 모성사망률이 심각하게 우

려된다. 위원회는 남녀가 이 규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들을 동등하게 향유할 권리와 법의 동등한 보호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규약 제3조와 26조-를 이행하지 못한 정부의 실패가 전반적인 사회적 태도로 인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11. 가정폭력 방지와 처벌에 대한 당사국의 새로운 입법을 환영하는 반면에, 높은 수준의 가정폭력과 법과 관행에 여전히 남아있는 부적절함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 특히, 위원회는 강간 범죄가 여성의 저항을 증거로 요한다는 점, 강간 피해자와의 결혼이 피고인의 변호 사유가 된다는 점, 혼인상의 강간은 형사상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우려한다.

가정폭력 방지와 처벌을 규정한 새입법은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약화시키는 기존의 법규범을 폐지함으로써 강화되어야 한다.

12. 위원회는 고용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도,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많은 수의 여성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의 미흡 그리고 남녀사이의 임금 격차를 우려한다.

본 규약의 3조와 26조에 대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1999년 1월에 제정된 성차별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에게 동등한 고용의 기회와 고용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3. 오로지 피구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구금의 사법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형사절차법은 규약 9조3항에 반한다. 규약의 9조3항은 형사기소(criminal charge)로 구금된 모든 사람은 판사 혹은 법에 의해 사법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는 다른 관리의 심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과도한 기소전 구속(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30일,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은 50일)과, 그러한 구금의 정당한 근거 부족은 한국정부의 규약 9조 이행에 의문을 제기한다.

당사국은 규약 9조가 정하는 피구금자의 모든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14. 위원회는 검사가 구금 시설을 매달 감독하는 절차에 주목한다. 하지만 이를 비롯해 여타의 체계들이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우를 방지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우와 관련된 고소에서 적은 비율만이 공무원에 대한 조치로 이어졌다는 것은 기존의 수사 절차의 신뢰성을 의심케 한다. 위원회는 또한 본 규약 9조의 요건을 당사국이 준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한다. 표면상 검찰 당국과 법원이 피고인과 공범의 자백에 광범위하게 의존한다는 것은 수사 공무원에 의한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우를 부추긴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고문의 혐의를 조사하는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와 위 13번째 문장(편집자주: 원문에는 15로 되어 있음)에 언급된 형사절차의 개정은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15. 위원회는 ‘사상전향제’를 폐지한 것을 환영하지만 그것이 ‘준법서약제’로 대체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위원회에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어떤 재소자가 준법서약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는지, 무엇이 서약의 결과이고 법적 효력인지가 불분명한 채로 남아있다. 위원회는 (준법)서약 요구가 차별적으로,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규약에 합치되지 않는 법을 따르겠다는 서약을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일부 재소자들에게 석방의 조건으로 부과되는 ‘준법서약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16. 정부 보고서에서 제공된 정보의 신빙성과 보고서 검토과정에서 보여준 대표자들의 응답을 볼 때, 사법부의 독립 정도를 충분히 판단할 수 없음을 위원회는 유감스럽게 여긴다. 사법부의 독립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판사 재임용 제도에 대해 특히 우려한다.

한국정부는 법관임명의 제도와 실제 운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17. 광범위한 도청은 당사국이 이 규약의 17조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낳게 한다. 위원회는 또한 데이터베이스 상의 부정확한 정보의 시정을 위한 구체적

혹은 그러한 정보의 오용 또는 남용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한다.

18. 수도 내의 주요 도로에서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질서의 이익을 위한 주요 도로에서의 일부 제한은 허용할 수 있지만, 이 규약 21조는 그러한 모든 제한은 법에 합치할 뿐 아니라 민주사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한한다. 당사국에 의해 부과된, 주요 도로에서 집회를 가질 권리의 절대적 제한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19. 위원회는 교사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허가하고 공무원들이 작업장 협회를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한 법의 변화를 주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교사와 기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에 관해 남아있는 제약들이 이 규약의 22조2항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한다.

당사국은 대한민국 내 모든 사람들이 이 규약 22조 하의 권리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목적을 가지고, 공무원의 단결권에 관한 입법 계획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20. 위원회는 당사국이 23조4항과 14조7항의 유보철회를 환영한다. 위원회는 아직도 남아있는 유보사항인 규약 14조5항과 22조에 대하여 그 철회를 검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21. 선택 의정서에 의거하여 제출된 통보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통보제출자에게 추가적인 이의나 금전 배상을 위한 소송과 같은 국내소송절차를 통해 위원회의 구제권고를 실현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지적한다.

이미 그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낸 국내법원으로 사건을 보내는 것보다는, 한국정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실현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

22. 위원회는 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제공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을 당사국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공무원 뿐만 아니라 사회공공단체의 직원이나 의료관계 종

사자들을 포함한 인권관계 전문가들에게도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3. 위원회는 당사국인 한국정부가 2003년 10월 31일까지 3차 정기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그 보고서는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개정 지침(CCPR/C/66/GUI)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며 이번 최종 견해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번 최종 견해와 다음 정기 보고서가 대한민국 내에서 널리 배포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번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Distr.

GENERAL
CCPR/C/79/Add.114
1 November 1999

Original: ENGLISH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 Republic
of Korea. 01/11/99.***

CCPR/C/79/Add.114. (Concluding Observations/Comments)

Convention Abbreviation: CCPR
HUMAN RIGHTS COMMITTEE
Sixty seventh session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0 OF THE COVENANT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Republic of Korea

1.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second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CPR/C/114/Add.1) at its 1791st and 1792nd meetings (see CCPR/C/SR.1791 and SR. 1792), held on 22 October 1999, and adopted the following concluding observations at its 1802nd meeting (CCPR/C/SR.1802), held on 29 October 1999.

A. Introduction

2. The Committee welcomes the second periodic report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Korea within the specified time limit. The Committee regrets, however, that despite its comment that the initial report of the State party did not include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implementation of the Covenant in practice, the second periodic report suffered from the same deficiency. The Committee further regrets the lack of responses to a number of questions posed by its members during the examination of the report. As a result, the Committee was prevented from fully monitoring compliance by the State party with all provisions of the Covenant.

B. Factors and difficulties affec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venant

3. The Committee appreciates the security concerns of the State party that result from the fact that no final agreement has been reached between the two Koreas. The Committee stresses, however, that citing security concerns does not of itself justify restrictions on Covenant rights, and that even when a state party is faced with genuine security problems restrictions on rights must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Covenant.

C. Positive factors

4. The Committee commends dissemination of the report among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that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Committee's examination of the report. The Committee takes note of an increasing openness of society, as is evident from abolition of the Performance Monitoring Committee, which had been responsible for censorship of the performing arts.
5. The Committee notes the enactment of a number of laws aimed at strengthening protection of Covenant rights, especially the rights to equality protected under article 2, paragraph 1, and articles 3 and 26 of the Covenant. These laws include the Basic Women's Development Act, amendments introduced in the Employment Equality Act, the Handicapped Employment Act, the Gender Discrimination Prevention and Relief Act and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Victim Protection Act.
6. The Committee notes measures undertaken to enhance awareness of the Covenant and of human rights in general that include obligatory human rights training for judges, lawyers and prosecutors. It also welcomes the translation into the Korean language and

distribution of the maj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D. Principal Areas of Concern and Recommendations

7. The status under domestic law of the rights provided for in the Covenant remains unclear, particularly since the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enumerate all of these rights and the extent and criteria under which they may be limited.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article 6 of the Constitution, according to which international treaties ratified by the State party have the same effect as domestic laws, has been interpreted as implying that legislation enacted after accession to the Covenant has status superior to that of Covenant rights.
8.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grave concern expressed after consideration of the initial report regarding the continued existence and applic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According to the State party, the National Security Law is used to deal with legal problems that arise from the division of Korea. However,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it is also used to establish special rules of detention, interrogation and substantive liability that are incompatible with various articles of the Covenant, including articles 9, 18 and 19.

The Committee reiterates the recommendation made after consideration of the State party's initial report that the State party phase out the National Security Law.

9.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the scope of activities that may be regarded as encouraging "anti state organizations" under article 7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is unreasonably wide. From the cases that have come before the Committee in individual communications under the Optional Protocol, and other information provided on prosecutions brought under article 7, it is clear that the restrictions placed on freedom of expression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19, paragraph 3 of the Covenant, as they cannot be regarded as necessary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The Covenant does not permit restrictions on the expression of ideas, merely because they coincide with those held by an enemy entity or may be considered to create sympathy for that entity. The Committee also emphasizes that internal directives regarding prosecution policy do not provide adequate guarantees against the use of article 7 in a manner that is

incompatible with the Covenant.

The State party must urgently amend article 7 so as to make it compatible with the Covenant.

10. The Committee is deeply concerned about the laws and practices that encourage and reinforce discriminatory attitudes towards women. In particular, the family headship system both reflects and reinforces a patriarchal society in which women have a subordinate role. The practice of identifying the sex of foetuses, the disproportionate percentage of boys among second and third born children and the high rate of maternal mortality that apparently arises from the number of unsafe abortions are deeply disturbing. The Committee stresses that prevailing social attitudes cannot justify failure by the State party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s 3 and 26 of the Covenant, to ensure equal protection of the law and the equal right of men and women to the enjoyment of all the rights set forth in the Covenant.
11. While welcoming the new legislation enacted by the State party for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at the high level of such violence and the remaining inadequacies in law and practice.

Specifically,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offence of rape requires evidence of resistance by the woman, that marriage to the victim of rape provides a defence to the accused, and that it appears that marital rape is not a criminal offence.

The new legislation on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should be strengthened by eliminating existing legal rules that weaken the protection of women against such violence.

12. The Committee is concerned over the extent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employment, over the lack of adequate protection for the high number of women employed in small enterprises and over the disparity between the earnings of men and women.

In order to ensure compliance with articles 3 and 26 of the Covenant, the State party must promot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Gender Discrimination Prevention and Relief

Act enacted in January 1999, and adopt positive measures to guarantee equality of opportunity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for women.

13. The law of criminal procedure, under which the detention of a suspect is subject to judicial review only if the detainee lodges an appeal, is incompatible with article 9, paragraph 3, of the Covenant, which provides that every person detained on a criminal charge shall be brought promptly before a judge or other officer authorized by law to exercise judicial power. The excessive length of permissible pre trial detention (30 days in ordinary cases and 50 days in cases involv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the lack of defined grounds for such detention also raise questions of compliance by the State party with article 9.

The State party must amend its law so as to ensure respect for all the rights of detained persons provided for under article 9 of the Covenant.

14. The Committee takes note of the procedures for monthly monitoring of conditions in detention centres by prosecutors, but it is concerned that these and other mechanisms are not adequate to prevent instances of torture and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of detainees. The small percentage of cases in which complaints of torture or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lead to action against officials calls into question the credibility of the existing procedures of investigation.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that non compliance by the State party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9 of the Covenant, and the seemingly widespread reliance of the prosecuting authorities and the courts on confessions by accused persons and accomplices, facilitate acts of torture and cruel, degrading and inhuman treatment by interrogating officials.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body to investigate allegations of torture and amendments of the criminal procedure mentioned in para. 15 above should not be delayed.

15. While the Committee welcomes the abolition of the "ideology conversion oath", it regrets that it has been replaced by a "law abidance oath". From the information provided to the Committee it remains unclear which prisoners are required to sign the oath and what the consequences and legal effects of the oath are.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oath requirement is applied, on a discriminatory basis, particularly to persons convicted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that in effect it requires persons to make an oath to abide by a law that is incompatible with the Covenant.

The “law abidance oath” imposed on some prisoners, as a condition for their release, should be abolished.

16. The Committee regrets that, in view of the paucity of information provided in the report and in the responses of the delegation during consideration of the report it is unable adequately to assess the extent of judicial independence. It is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the system of reappointment of judges that raises serious questions about judicial independence.

The State party must provide full details on the system and actual practice of judicial appointments.

17. The extensive use of wiretapping raises serious questions of compliance by the State party with article 17 of the Covenant.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that there are no adequate remedies by way of correction of inaccurate information in data bases or for their misuse or abuse.

18. The prohibition of all assemblies on major roads in the capital would appear to be overbroad. While some restrictions on assemblies on main roads in the interests of public order are permissible, article 21 of the Covenant requires that all such restrictions be in conformity with the law and b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The absolute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hold assemblies on main roads imposed by the State party do not meet these standards.

19. The Committee notes the changes in law that allow teachers to form trade unions, and public servants to form work place associations. Nevertheless,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remaining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of teachers and other public servants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2, paragraph 2, of the Covenant.

The State party should continue with its programme of legislation regarding the right of association of public servants with the object of ensuring that all persons in Korea shall enjoy their rights under article 22 of the Covenant.

20. The Committee welcomes the withdrawal by the State party of its reservations on articles 23 (para. 4) and 14 (para. 7). It strongly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review the remaining reservations on articles 14 (para. 5) and 22 with a view to their eventual withdrawal.

21. In relation to the Committee's Views on Communications submitted under the Optional Protocol, the Committee finds it inappropriate that the State party should require the author of a communication on which the Committee has expressed its views to seek a remedy through the domestic courts, by way of further appeal or a claim for compensation.

Rather than referring such cases back to the domestic courts which have already pronounced on the matter, the State party should immediately proceed to give effect to the Views expressed by the Committee.

22. The Committee calls on the State party to continue its efforts to provide human rights education to its public officials. It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sider making such education obligatory, not only for public officials but for members of all human rights related professions, including social workers and medical personnel.

23. The Committee requests that the State party submit its third periodic report by 31 October, 2003. That report should b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Guidelines adopted by the Committee (CCPR/C/66/GUI) and should give particular attention to the issues raised in these concluding observations. The Committee requests that these concluding observations and the next periodic report be widely disseminated in the Republic of Korea.

©1996–2001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Geneva, Switzerland

대한민국 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

배포:

일반

CCPR/C/KOR/CO/3

28 November 2006

원문: 영어

자유권규약위원회

제88차 회기

2006년 10월 16일-11월 3일 제네바

ADVANCED UNEDITED VERSION

1. 자유권규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6년 10월 25일과 26일의 제2410차와 2411차 회의(CCPR/C/SR.2410 과 2411)에서 대한민국의 제3차 정기보고서(CCPR/C/KOR/2005/3)를 심의하였고 2006년 11월 2일 2422차 회의(CCPR/C/SR.2422)에서 아래와 같은 최종 견해를 채택하였다.

A. 들어가며

2. 위원회는 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한민국이 제출한 제3차 정기보고서에 환영한다. 위원회는 고위급 대표들 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제기한 서면 및 구두 질의에 답변을 제공한 대표단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높게 평가한다.

B. 긍정적인 요소

3. 위원회는 파리원칙에 제시된 기준에 일치하여 2001년에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환영한다.
4. 위원회는 여성가족부의 설립 그리고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의 도입 및 여성채용목표제를 포함한, 여성에 대한 비차별을 증진하기 위해 실시했던 자발적 조치들에 주목한다.
5. 위원회는 가정 폭력을 퇴치하기 위해 취해진 당사국의 조치들, 특히 그러한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검사의 임명에 환영한다.
6. 위원회는 또한 2008년 그 효력이 발생할 호주제 폐지가 포함된 민법 개정안이 2005년 3월 국회에서 채택된 점에 대해 환영한다.

C. 주요 관심 분야 및 권고

7. 위원회는 위원회가 채택한 개인정보에 대한 견해의 효과를 발효하게 하는 국내적 조치가 없다는 점에 우려한다.

위원회가 위원회의 견해를 채택할 때, 당사국은 그러한 견해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절차를 즉각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8. 위원회는 당사국이 규약 제14조 5항의 유보를 철회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 한다. 그러나 규약 제22조 유보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 유감이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규약 제14조 5항의 유보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규약의 제 22조 유보를 철회할 것을 장려한다.

9. 위원회는 테러방지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논의 중임에 주목하고 존재하고

있는 혹은 제안된 테러방지법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불충분하며 테러리즘의 정의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감이다. (제2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및 제26조)

당사국은 모든 테러방지 및 관련 입법 조치들이 규약에 일치할 것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통신감청, 수색, 구금 및 추방과 관련된 국가의 규정들은 규약의 관련 조항들에 엄격하게 일치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국내입법에 ‘테러리스트 행위들’에 대한 정의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10. 위원회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어 고용된 많은 여성이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또한 정치, 입법 및 사법 분야의 고위직에 있어서 여성의 대표성이 낮다는 점에 우려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26조)

당사국은 정치, 입법 및 경제 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효과적인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및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국회와 사법부에서 고위직 여성의 대표성 증가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11.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과 계획들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가정폭력의 책임자들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데 진전이 없었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 위원회는 부부간 강간을 포함한 가정폭력에 대한 특별한 법적 조항이 당사국 국내입법에 없다는 점에 우려한다. (제3조, 제7조 및 제26조)

당사국은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취한 조치의 효율성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또한 부부간 강간이 형사 범죄로 성립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경찰을 포함한 법 집행관들은 가정폭력사건을 다루기 위한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이고 일반 대중들을 민감하도록 하는 인식 재고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12. 위원회는 사업장에서의 이주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차별적인 대우와 직장에서의 남용을 직면하고 있고, 적절한 보호와 구제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 우려한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공적인 신분증명서가 압수 및 보유되고 있는 점 또한 우려사항이

다. (제2조, 제22조 및 제26조)

당사국은 이주노동자들이 규약에 포함된 권리들을 차별 없이 향유할 것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 복지와 교육시설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뿐만 아니라 노조 결성권 및 적절한 형태의 구제 규정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3. 위원회는 구금 장소에서의 고문 혹은 다른 형태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주장에 대해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일정 형태의 징벌의 관행, 특히 수갑, 쇠사슬 및 안면 마스크의 사용 및 명백한 기한의 제한 없이 30일 간의 독방구금을 통한 징벌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이 점에 비추어, 위원회는 또한 책임있는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처벌이 결여되어 있음을 우려한다. (제7조, 제9조)

당사국은 정신병원을 포함한 모든 구금 장소에서 법률 집행관들에 의한 모든 형태의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적절한 조치들에는 독립적인 조사 기구, 시설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와 심문시 비디오녹화를 포함할 수 있다. 당사국은 이러한 행위를 한 가해자를 기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한 처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며,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당사국은 징벌의 가혹하고 잔혹한 조치들, 특히 수갑, 쇠사슬과 안면마스크의 사용 및 30일의 독방구금을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14. 위원회는 재판 전 피의자 구금동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당사국의 방해에 우려한다. 특히, 변호인의 조력이 피의자 신문 시에만 허용되며, 심지어 신문 동안에도 경찰관이 수사방해, 공범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의 이유로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또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신병원 시설에 구류되는 동안 변호인의 조력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 우려한다. (제9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보호 구금에 변호인의 신속한 접견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15. 위원회는 개인이 체포 영장없이 48시간까지 구금될 수 있는 긴급체포절차와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위원회는 이 절차가 지나치게 의존되고 남용되고 있다는

보고에 우려한다.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당사국은 규약 제9조에 일치하도록 긴급체포절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그렇게 구금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위원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관련 개정안의 즉각적인 채택을 촉구한다.

16. 위원회는 형사 조사 또는 체포 영장에 의해 구금된 자들이, 특히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도한 재판 전 구금 기간(일반 사건의 경우 30일,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사건의 경우 50일)에 비추어, 규약 제9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의 구금의 적법성을 결정할 수 있는 판사에게 신속하게 회부되는 자동적인 권리를 향유하고 있지 않는 점에 우려한다. (제9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규약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형사 범죄로 체포된 자 혹은 구금된 자의 보호를 반영하는 입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당사국은 어떠한 구금이라도 즉각적으로 사법적 감시를 받는 것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17. 위원회는 (a) 2003년 병역법 개정으로 현역 복무 거부로 인한 처벌이 최대 3년 징역형을 받고 있고, 그들이 재소집될 수 있고 새로운 처벌을 받게 되는 횟수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제한이 전혀 없으며¹⁾; (b) 병역의무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고용에서 배제되며; (c) 유죄를 선고받은 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전과자로 낙인됨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들에 대해 우려한다 (제18조)

당사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병역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을 인정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규약 제18조에 일치하는 입법을 제정할 것을 장려한다. 이 점에서, 위원회는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22의 11항(General Comment 22, para.11)에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18.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최근의 시도들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가보안법

1) 예비군 복무대상자 중 병역거부자들이 소집 거부를 하여 한 번 처벌받은 후에도 계속 소집되어 반복 처벌받는 자들을 말함 - 번역자주

이 존속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동의(consensus)가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른 기소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이 조항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규약의 제19조 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제19조)

당사국은 국가보안법 제7조와 이로 인해 부과된 형벌이 규약의 요건에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긴급한 사안으로 삼아야만 한다.

19. 위원회는 노조 결성과 노조 활동에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 상당한 수의 고위 공무원이 있고 당사국이 특정 노조, 특히 전국공무원노조(KGEU)를 인정하기를 꺼려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제22조)

당사국은 고위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재고해야 할 것이고 7만 6천명의 구성원을 둔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결사의 자유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표부와 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20. 비록 위원회는 당사국이 규약에 규정된 인권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고양하기 위한 노력에 주목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당사국은 초등, 중등, 고등학교와 직업교육의 과정, 특히 법 집행관들의 훈련 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반영(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21.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번에 채택된 최종견해를,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및 행정부가 한국어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차기 정기보고서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 비정부기구를 포함하여 일반대중에 넓게 배포되기를 요청한다.

22. 대한민국의 제4차 정기보고서의 제출기한은 2010년 11월 2일이다. 이번에 채택된 최종견해는 공표되고 일반대중 뿐만 아니라 사법부, 입법부 및 행정부에 넓게 배포될 것을 요청한다.

23. 위원회의 절차규칙 제71조 5항에 따라, 12, 13 및 18항의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추가 정보를 1년 이내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차기 정기보고서에 권고 및 규약의 이행 전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기를 요청한다.

(번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Distr.
GENERAL
CCPR/C/KOR/CO/3
28 November 2006
Original: ENGLISH

Human Rights Committee
Eighty eighth session
Geneva, 16 October 3 November 2006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 PARTIES UNDER ARTICLE 40 OF THE COVENANT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REPUBLIC OF KOREA

1. The Human Rights Committee considered the third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CPR/C/KOR/2005/3) at its 2410th and 2411th meetings (CCPR/C/SR.2410 and 2411), on 25 and 26 October 2006, and the Committee adopted the following concluding observations at its 2422nd meeting (CCPR/C/SR.2422), on 2 November 2006.

A. Introduction

2. The Committee welcomes the submission by the Republic of Korea of its third periodic report, which was prepared in conformity with the reporting guidelines. The Committee commends the high level delegation as well as the constructive dialogue with the delegation that provided responses to the written and oral questions

formulated by the Committee.

B. Positive aspects

3. The Committee welcomes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established in 2001 in conformity with the standards set out in the Paris principles.
4. The Committee notes with appreciation the initiatives undertaken to promote non discrimination regarding women,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Plan for Realization of Gender Equal Employment and a Recruitment Target Scheme for women.
5. The Committee welcomes the measures taken in order to combat domestic violence, in particular the nomination of special prosecutors charged with the duty of handling such crimes.
6. The Committee also welcomes the adop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in March 2005 of the Civil Code amendment which includes the abolition of the Family Head System and which will come into force in 2008.

C. Principal areas of concern and recommendations

7.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about the absence of domestic measures giving effect to the Views on Communications adopted by the Committee on the Republic of Korea.

When the Committee has adopted its Views, the State party should immediately proceed to give effect to them.

8.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State party has stated its intention to withdraw its reservation to article 14(5) of the Covenant; however, it regrets that the State party intends to maintain its reservation to article 22.

The State party is invited to withdraw its reservation to article 14(5) of the Covenant. The State party is also encouraged to withdraw its reservation to article 22 of the Covenant.

9. While taking note of the draft counter terrorism laws that are currently before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the Committee regrets that insufficient information was provided in relation to existing or proposed counter terrorism legislation and that no definition of terrorism was provided (arts. 2, 9, 10, 13, 14, 17 and 26).

The State party should ensure that all counter terrorism and related legislative measures are in conformity with the Covenant. In particular, national rules concerning the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searches, detention and deportation should be in strict conformity with the relevant Covenant provisions. The State party should introduce a definition of “terrorist acts” in its domestic legislation.

10.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at the high number of women employed in small enterprises who are categorized as non regular workers. It is also concerned that women are under represented in high level positions in the political, legal and judicial spheres (arts. 2, 3 and 26).

The State party should take necessary legal and practical measures to increase the effective participation of women in the political, legal and economic sectors. In addition, initiatives to increase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n high level positions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judiciary should be undertaken.

11. Notwithstanding a variety of measures and programmes intended to combat domestic violence, the Committee regrets the lack of progress in the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those responsible for domestic violence.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specific legal provisions on domestic violence, including marital rape, are lacking in the State party’s legislation (arts 3, 7 and 26).

The State party should assess the effectiveness of the measures taken by it to combat domestic violence. It also recommends that the penal legislation of the State party be

reformed to establish marital rape as a criminal offence. Law enforcement officials, in particular police officers, should be provided with appropriate training to deal with cases of domestic violence, and awareness raising efforts should be continued to sensitize the public.

12.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migrant workers face persistent discriminatory treatment and abuse in the workplace, and are not provided with adequate protection and redress. The confiscation and retention of official identification papers of such workers is also of concern (arts. 2, 22 and 26).

The State party should ensure to migrant workers enjoyment of the rights contained in the Covenant without discrimination. In this regard, particular attention should be paid to ensuring equal access to social services and educational facilities, as well as the right to form trade unions and the provision of adequate forms of redress.

13.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allegations of torture or other forms of ill treatment in places of detention. Moreover, the Committee regrets the continued practice of certain forms of disciplinary punishment, in particular, the use of manacles, chains, and face masks, and the continuation of disciplinary punishment through the “stacking” of 30 day periods of isolation without any apparent time limit. In the light of this,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at the lack of thorough investigation and adequate punishment of the responsible officials (arts. 7 and 9).

The State party should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all forms of ill treatment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in all places of detention including mental health hospitals. Appropriate measures may include independent investigative bodies, independent inspection of facilities and videotaping of interrogations. The State party should prosecute perpetrators of such acts and ensure that they are punished in a manner proportionate to the seriousness of the offences committed by them, and grant effective remedies, including compensation to victims. In addition, the State party should discontinue harsh and cruel measures of disciplinary confinement, in particular, the use of manacles, chains, and face masks, and the “stacking” of 30day periods of isolation.

14. The Committee is concerned by the State party's interference with the right to counsel during pre trial criminal detention, in particular, that consultation with counsel is permitted only during interrogation, and that even during interrogation, police officials can deny access to counsel on grounds that it will purportedly interfere with the investigation, aid a fugitive defendant, or endanger the acquisition of evidence. In addition, consultation with legal counsel is not provided during the involuntary commitment of persons to mental health facilities (art. 9).

The State party should ensure prompt access to counsel in all forms of custodial detention.

15. The Committee expresses concern with regard to the urgent arrest procedure, whereby individuals can be detained without an arrest warrant for up to 48 hours. In particular,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reports of excessive recourse to and abuse of this procedure (arts. 7, 9, 10).

The State party should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restrict the use of the urgent arrest procedure and to guarantee the rights of persons so detained, in conformity with article 9 of the Covenant. In particular, the Committee urges the prompt adoption of the relevant amendments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pending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16.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those detained for the purposes of criminal investigation or under an arrest warrant do not enjoy an automatic right to be brought promptly before a judge to have the legitimacy of their detention determined as prescribed by article 9, paragraph 3 of the Covenant, particularly in view of the excessive length of permissible pre trial detention (30 days in ordinary cases and 50 days in cases involv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art.9).

The State Party is urged to reform legislation to reflect the protection due to persons arrested or detained on criminal charges as stipulated in article 9 of the Covenant. In particular, the State party should ensure that any detention is promptly subjected to judicial scrutiny.

17.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a) under the Military Service Act of 2003 the penalty for refusal of active military service is imprisonment for a maximum of three years and that there is no legislative limit on the number of times they may be recalled and subjected to fresh penalties; (b) those who have not satisfied military service requirements are excluded from employment in government or public organisations and that (c) convicted conscientious objectors bear the stigma of a criminal record (art.18).

The State party should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recognize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ors to be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It is encouraged to bring legislation into line with article 18 of the Covenant. In this regard, the Committee draws the attention of the State party to the paragraph 11 of its general comment No. 22 (1993) on article 18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18. The Committee notes the attempts in recent years to amend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the absence of consensus concerning its alleged continued necessity for reasons of national security. However, it is concerned that prosecutions continue to be pursued, in particular under article 7 of this law. Under such provisions, the restrictions placed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19, paragraph 3 of the Covenant (art.19).

The State party should as a matter of urgency ensure the compatibility of article 7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sentences imposed there under,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venant.

19. The Committee expresses its concern at the significant number of senior public officials who are not permitted to form and join trade unions and at the State party's unwillingness to recognise certain trade unions, in particular,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KGEU) (art. 22).

The State party should reconsider its position vis à vis the rights of association of senior public officials and engage in dialogue with the representatives of the 76,000 KGEU members with a view to ensuring the realization of their right of association.

20. Although the Committee notes the efforts made by the State party to increase public awareness of the human rights set out in the Covenant, it is concerned that these efforts are limited.

The State party should integrate human rights education in primary, secondary, higher and vocational curricula and, in particular, in the training programmes of law enforcement officials.

21.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make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available in the Korean language to the general public as well as to the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authorities. It requests that the next periodic report be widely disseminated among general public, including civil society and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working in the Republic of Korea.

22. The Committee sets 2 November 2010 as the date for the sub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s fourth periodic report. It requests that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be published and widely disseminated to the general public, as well as to the judicial,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authorities.

23. In accordance with rule 71, paragraph 5, of the Committee's rules of procedure,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submit within one year information on the follow up to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s in paragraphs 12, 13 and 18. The Committee requests the Republic of Korea to include in its next periodic report information on its remaining recommendations and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venant as a whole.

- - - - -

대한민국 7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
대한민국

인권고등판무관실

1993년 9월 15일

A/48/18, 199 235항 (최종견해 및 논평)

협약 약호: CERD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43차 회기

협약 제9조에 따른 당사국 보고서 검토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대한민국

199. 위원회는 1993년 8월 3일에 개최된 제987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제7차 정기보고서(CERD/C/221/Add.1)를 검토하였다(CERD/C/SR.987).
200. 정기보고서는 당사국이 최근 수행한 주요 진전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하였으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그 선택의정서,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대한민국이 가입한 사실을 특히 강조하였다. 또한 보고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협약의 규정된 다양한 조항들의 이행을 위하여 채택한 조치들을 강조하였으며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
201. 위원회는 보고서를 적절한 시한 내에 제출한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감사를 표하였다. 보고서는 협약 상의 의무사항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는 유용한 정보들을 담고 있으며 지난 보고서 검토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협약의 실제적 이행과 협약의 이행을 저해하는 요인 및 어려움에 대한 정보는 불충분하다. 협약 규정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법적 조치 등에 관한 정보가 차기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202. 위원회 위원들은 특히 협약에 포함된 권리의 실제 이행과 관련된 정보들, 즉 사법 행정체계,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 국가보안법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다.
203. 위원들은 외국인 거주자, 특히 화교, 외국인 근로자, 이민족간의 결혼에서 출생한 자녀 등에 대한 외국인 혐오와 차별에 관하여 정보들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집단의 상황과 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적 태도에 관해 추가 정보를 요청하였다. 또한 위원회 위원들은 영남지역 이외의 지역 출신자들에 대한 차별 혐의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하였다.
204. 위원들은 또한 국내법에서의 협약의 지위, 특히 협약과 헌법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으며, 이는 헌법 제6조 1항에 의하면 헌법이 협약을 국내법에 우선하지 않고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205. 협약 제2조에 관하여, 위원회 위원들은 차별금지를 규정함에 있어 인종차별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 헌법 제11조를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하였다.
206.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위원회 위원들은 이에 대하여 당사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물었다.
207. 협약 제3조에 관하여, 위원회 위원들은 그러한 규정의 이행에 관하여 최근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다.

-
208. 협약 제4조에 관하여, 위원회 위원들은 당사국의 형법에 인종차별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었음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채택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9. 협약 제5조와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들은 노동조합 가입 및 설립을 위한 외국인의 자격,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료 및 기타 사회적 서비스의 권리 향유 등에 관해 설명을 요청하였다.
210. 협약 제6조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들은 법원이나 행정당국에 인종차별에 관한 진정이 없는 이유와 정부 기구나 공공기관이 인종차별행위를 한 경우 인종차별의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구제책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다.
211. 협약 제7조에 관하여, 위원회 위원들은 외국인 학교의 수, 지위, 재정에 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였다. 또한 특히 인권증진을 위해 취한 활동, 이해와 관용에 대한 학교 교육, 사법집행관 인권훈련연수 등에 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였다.
212. 위원회 위원들은 또한 협약 제14조에 규정된 선언에 대한 당사국의 의지에 관하여 추가 정보를 요청하였다.
213. 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대한민국 대표단은 당사국내에 있는 외국인의 수를 분류한 통계, 특히 중국인에 대한 외국인의 숫자에 관한 통계를 제공하였다. 더불어, 대표단은 지역주의를 근거로 한 차별이 없다고 하였다.
214. 국내법에 있어서 협약의 지위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대표단은 정부가 대한민국 법률에 협약을 수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따라서 법원에서 직접 적용이 가능하고 원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고 하였다.
215. 헌법 제11조에 인종차별금지가 누락되었다는 질문에 대하여, 대표단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7조를 통해 인종차별금지가 규정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
216. 협약 제3조에 관하여, 대표단은 대한민국 정부가 남아공에 대하여 무기, 핵기술, 원유금지를 제외한 모든 경제적 제재를 철회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17. 협약 제4조에 관하여, 대표단은 인종차별의 문제가 대두되는 경우 정부는 필요에 따라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18. 제5조에 관련하여, 대표단은 귀화조건과 그러한 조건이 취소 또는 완화되는 사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귀화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고 위원회에 설명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에서 상호호혜정책의 여부에 따라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다. 이와 동일하게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을 위하여 합법적으로 등록한 경우 대한민국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219. 협약 제7조에 관하여, 대표단은 다수의 외국인 학교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모두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학교에 대해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을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학위에 관해서도 외국인 학교에 대한 차별이 없으며 이는 모든 학교가 동등한 기준에 의해 평가되기 때문이다. 학교는 인권증진, 인권교육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매년 12월을 인권주간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 대표단은 정부가 인권기준에 대한 사법집행관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훈련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220. 협약 제14조에 규정된 선언에 관하여 대표단은 정부는 여전히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221. 마지막으로 대표단은 위원회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것이며 특히 협약 제4조, 국가인권기구, 헌법상의 인종차별금지 규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하였다.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은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전념할 것이며, 새로운 목표가 설정되고 그러한 목표를 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제출할 차기 보고서는 이러한 발전사항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최종견해

222. 1993년 8월 17일에 개최된 제1007회 회의에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a) 서문

223.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적절한 시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환영하며 이는 협약의 이행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의 진지한 태도를 반영한다.

224. 위원회는 정기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들과 대표단이 구두로 제공한 추가정보를 높이 평가한다.

(b) 긍정적 측면

225. 위원회는 국제인권조약의 규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당사국의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 특히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협약 제3조를 이행하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협약 제14조에 따른 선언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강조한다.

226.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그동안 심각한 인종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c) 주요 우려사항

227. 위원회는 차별을 금지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와 기타 법률 규정이 차별의 근거로서 인종 등을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다.

228. 이와 마찬가지로 위원회는 인종차별의 예방과 금지를 위해 필요한 법적, 기타 조치를 당사국이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특히 협약 제4조를 이행하기 위한 규정이 국내법에 없으며 인종차별 행위의 형사처벌을 규정하지 않

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229. 위원회는 미국인과 아시아인의 사이의 결혼에서 출생한 자녀,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및 배우자, 영남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차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d) 제안 및 권고

230. 위원회는 당사국의 차기 보고서가 협약의 실제 이행에 관한 충분한 정보, 특히 이 과정에서 대두되는 장애요인과 어려움 등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차기 보고서는 인종차별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헌법 및 형법 상의 적절한 규정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231.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의 이행에 관련되는 문제에 대한 위원회의 여러 일반 권고를 주의깊게 연구하도록 권고한다. 이러한 일반권고의 내용은 차기 보고서의 준비에 있어서 당사국을 지도할 뿐만 아니라 협약 상의 다양한 규정에 대한 실효적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결정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종차별 금지에 관한 협약 제4조의 의무적 성격, 특히 인종차별에 관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 개발, 사법집행관에 대한 인권연수 및 교육 제공의 중요성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32. 더불어, 위원회는 국내법률에 인종차별 금지 규정이 누락된 점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당사국은 또한 차별 예방을 위한 조치와 차별에 대한 형사적 처벌에 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233.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14조에 의한 선언을 할 것을 권고하며 당사국이 차별문제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인권의 이행을 감시할 독립적인 인사로 구성되는 국가기구의 설립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234. 또한 위원회는 특히 차기 보고서에 국내법과 국제조약이 상충되는 경우 국내법에

서 협약의 실제적 지위, 이민족간의 결혼에서 출생한 자녀 및 외국인 자녀의 상황, 그들에 대한 사회의 태도, 영남지역에 사는 주민과 비교할 때 호남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동등한 교육, 의료, 취업 기회의 보장을 위한 활동, 관용을 증진하고 인권기구의 원칙과 규정의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제공 등에 관한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35. 또한 위원회는 차별적 관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를 위한 법적 구제의 실효성과 그러한 차별의 피해자에게 보상이 제공된 구체적인 사례에 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요청한다.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Republic of Korea.

15/09/93.

A/48/18,paras.199 235. (Concluding Observations/Comments)

Convention Abbreviation: CERD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Forty third session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9 OF THE CONVENTION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Republic of Korea

199. The seven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ERD/C/221/Add.1) was considered by the Committee at its 987th meeting held on 3 August 1993 (CERD/C/SR.987).
200. The report was introduced by the representative of the reporting State, who briefly described the major developments that had occurred recently in his country. He drew particular attention to his Government's accession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its Optional Protocol and to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1967 Protocol. He also highlighted measures taken by his Government to implement various articles of the Convention, pointing, in that regard, to

his Government's enhanced involvement in international efforts to dismantle apartheid in South Africa.

201. Members of the Committee thanke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timely submission of its report, which demonstrated the Government's serious attitude towards its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While it was observed that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report was useful and had answered questions raised by the Committee in its examination of previous reports, it was also noted that the report did not contain sufficient information on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on the factors and difficulties impe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t was recommended that information on those and other matters, including texts of the legislative measures taken to give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next periodic report.
202. Members of the Committee also requested information on the system of administration of justice, on the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nd on the scope of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especially as they related to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 rights contained in the Convention.
203. Members of the Committee drew attention to the reports they had received of xenophobia and of discrimination allegedly practised against foreign residents, particularly those of Chinese descent, foreign workers and children of mixed parentage. Further information was requested concerning the situation of those groups and general social attitudes towards them. In addition, members of the Committee sought clarification on allegations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from regions other than the south east of the Republic of Korea.
204. Members of the Committee also requested clarification as to the status of the Convention in domestic law, especially in the event of conflict between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the Constitution, as article 6.1 of the Constitution appeared to render the Convention equal in status but not superior to domestic law.
205. With regard to article 2 of the Convention, members of the Committee noted that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which provided for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
- contained no reference to the prohibi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requested clarification in that regard.
206. Referring to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members of the Committee asked whether the State party had taken any steps in that regard.
207. Concerning article 3 of the Convention, members of the Committee asked for information on any recent change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its provisions.
208. With regard to article 4 of the Convention, members of the Committee emphasized the need to take positive measures to prevent xenophobia and racial discrimination, expressing concern at the omission of provisions against racial discrimination from the State party's penal law.
209. In connection with article 5 of the Convention, members of the Committee sought clarification on matters relating to: naturalization and the rights to inheritance of naturalized citizens; foreigners' eligibility to join or create trade unions and enjoy the benefit of their protection; the level of wages received by foreign workers; and foreign workers' enjoyment of the rights to medical and other social services.
210. In respect of article 6 of the Convention, members of the Committee requested clarification as to the reasons for the lack of complaints of racial discrimination before the court or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as to the remedies available to victims of racial discrimination in the event of violations by government bodies and public agencies.
211. Concerning article 7 of the Convention, members of the Committee sought further information on the number, status and funding of schools for foreigners. They also wished to know more about the activities undertaken to promote human rights, understanding and tolerance in schools, in general, and the human rights training given to law enforcement officials, in particular.
212. Members of the Committee also requested further information on the reported

intention of the State party to make the declaration provided for in article 14 of the Convention.

213. In reply to questions raised by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the representative of the State party provided information on the breakdown of the foreign population in the State party and the trends in the size of the foreign population over time,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Chinese. In addition, he denied that there was discrimination in the State party on the basis of regionalism.
214. With respect to concerns raised over the status of the Convention in domestic law, the representative stated that his Government had incorporated the Convention in the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so that it was directly applicable and could be invoked before the courts.
215. With regard to the question raised as to the omission of the prohibi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in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the representative replied that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covered that point as it provided that the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shall not be neglected on the grounds that they are not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216. In respect of article 3 of the Convention, the representative indicated that his Government had lifted economic sanctions against South Africa except the ban on arms, nuclear technology and oil.
217. Concerning article 4 of the Convention, the representative pointed out that should problems of racial discrimination arise, his Government would strengthen protective measures, as necessary.
218. In connection with article 5, the representative provided information on the requirements of naturalization and cases when such requirements could be waived or reduced. In addition, he informed the Committee that naturalized citizens benefited from the same rights and had the same obligations as other citizens. Non nationals could own property subject to the existence of a policy of reciprocity in the State of which they were nationals. Equally, foreign workers had the same rights as workers

who were nationals of the country, provided that they were legally registered for work, i.e. in accordance with immigration laws.

219. With regard to article 7 of the Convention, the representative indicated that many schools for foreign nationals covered both primary and secondary levels and that his Government did not provide funding for such schools. There was no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schools in relation to diplomas, since all schools were evaluated in accordance with uniform standards. School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human rights, and educating people about human rights and observed human rights week each December. In addition, the representative explained that his Government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educating law enforcement officers in human rights standards and that a training programme for such officers was in operation.
220. In regard to the declaration under article 14 of the Convention, the representative indicated that his Government was still deliberating on that matter.
221. Finally, the representative said that he would transmit the Committee's comments to his Government, particularly those relating to article 4 of the Conventi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the incorporation of the prohibi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in the Constitution. The new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committed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new goals were being set and new programmes developed to that end. The next report to be submitted under the Convention would reflect those developments.

Concluding observations

222. At its 1007th meeting, held on 17 August 1993, the Committee adopted the following concluding observations.

(a) Introduction

223. The Committee noted the timely submission of the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as a reflection of the Government's seriousness in meeting its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224. The Committee welcom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report and the additional information provided by the delegation in its oral presentation.

(b) Positive aspects

225. The Committee welcomed the measures taken by the State party to introduce policies and to promulgate legislation in conformity with i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obligations. The Committee appreciated, in particular, the eff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to implement article 3 of the Convention and noted the intention of the Government actively to consider making the declaration under article 14 of the Convention.

226. The Committee also noted that the State party had not encountered any serious ethnic problems during the reporting period.

(c) Principal subjects of concern

227. The Committee noted with concern that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and other legal provisions prohibiting discrimination contained no reference to race and other factors as grounds of discrimination.

228. The Committee was equally concerned that the necessary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to prevent and prohibit racial discrimination had not been taken by the State party. It noted, in particular, that domestic legislation lacked provisions to implement article 4 of the Convention and did not provide for the criminal penalization of racially discriminatory acts.

229. The Committee expressed its concern at the reported discrimination suffered by Amerasian children, children of foreign workers and their spouses and persons living in regions other than the south east of the Republic of Korea.

(d)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230. The Committee recommended that the State party's next report should include

sufficient inform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practice, including factors and difficulties encountered in that regard. Equally, the report should contain the text of legislative provisions such as relevant parts of the Constitution and Penal Code designed to prevent and address problems of racial discrimination.

231. The Committee recommended that the State party should study carefully various General Recommendations adopted by the Committee on matters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he contents of those Recommendations should not only guide the State party in the preparation of its next report but also assist it in determining the action to be taken to ensure more effective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In that respect, particular attention was drawn to the mandatory nature of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4 of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hibi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development of national institutions to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especially with regard to matters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the importance of providing human rights training and education to law enforcement officials.
232. In addition, the Committee recommended that steps be taken to rectify the omission of race as a ground for discrimination from national legislation. The State party should also give careful consideration to adopting measures to prevent discrimination and to providing for the punishment of discrimination in criminal law.
233. The Committee encouraged the State party to make the declaration under article 14 of the Convention and recommended that the State party should give serious consideration to setting up a national institution composed of independent members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including matters relating to discrimination.
234. Moreover, the Committee expressed the wish to receive further information, in the next report, on the actual status of the Convention in domestic legislation, particularly in cases where the provisions of domestic legislation conflicted with those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on the situation of children of mixed parentage and foreign workers and the general social attitude towards them; on the actions taken to assure equal provision of education, medical and other care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ose persons living in the south western reg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s compared to those living in the south eastern region; and on the provis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to promote tolerance and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human rights instruments.

235. The Committee also expressed the wish to receiv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effectiveness of legal remedies for those who suffered from discriminatory practices and on specific cases where compensation had been provided to victims of such discrimination.

대한민국 제8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

배포
일반

CERD/C/304/Add.12

1996년 9월 24일

원문: 영어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 대한민국

1996년 9월 24일

CERD/C/304/Add.12. (최종견해/논평)

협약 약호: CERD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49차 회기

협약 제9조에 따른 당사국 제출 보고서 검토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대한민국

1.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1996년 8월 6일과 7일에 개최된 제1159회 및 1160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제8차 정기보고서(CERD/C/258/Add.2)를 검토하였으며 (CERD/C/SR.1159 1160 참조), 1996년 8월 19일 개최된 제1176회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견해를 채택 하였다.

A. 서문

2. 위원회는 대한민국 제8차 정기보고서를 환영하며 당사국 보고서의 정기적인 제출을

높이 평가하였다. 위원회는 제7차 정기보고서 심의회의에서 위원회가 제시한 제안사항과 권고의 일부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대표단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표단과의 솔직한 대화와 심의회의 중 제기된 문제에 대한 대표단의 구두답변을 높이 평가하였다.

B. 협약 이행을 저해하는 장애요인과 문제점

3. 위원회는 역사적으로 단일민족인 대한민국에 지난 수 년간 외국인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주목한다. 특히 위원회는 그러한 다수의 외국인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는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적절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C. 긍정적 측면

4. 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제14차 당사국 회의에서 채택된 협약 제8조 6항의 수정안을 수용한 국가 중의 하나임을 높이 평가한다.
5. 한국인 근로자와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를 동일한 기반에서 보호, 보장하기 위한 행정지침의 채택은 협약 제5조의 정신에 부합된다.
6. 이에 관하여,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불법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허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며,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을 통해 특히 국적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고 열악한 작업환경과 저임금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를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7. 위원회는 모든 출입국관리소에 진정접수 신고센터가 설립된 것을 환영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그들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진정을 접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8. 위원회는 기본적인 자유가 침해된 경우 정부 및 사법 당국의 구제책 모색과 그 보상

을 위해 개인, 국가 또는 그 대표를 고소하는 등 많은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9. 위원회는 당사국의 이전 정기보고서 심의회의에서 제기된 위원회의 권고를 대한민국 정부가 이행한 것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법집행관에 대한 인권인식 증진 세미나를 개최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 법무부가 국제인권조약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 또한 이러한 국제조약에 대한 일반대중의 친숙함을 향상시킬 수 있다.
10. 대한민국 대표단이 제공한 설명에 의하면 개인은 협약의 규정을 법원에서 원용할 수 있으며 협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기반에서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것에 대해 만족스럽게 주목한다.
11.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의 제14조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곧 수용할 계획이라는 대표단의 발언을 환영한다.

D. 주요 우려사항

12. 위원회는 협약 제2조의 규정과 이에 관한 위원회의 과거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인종, 피부색, 민족 또는 인종에 근거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13. 또한 협약 제4조가 아직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는 대한민국 법률이 인종차별 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하고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단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14.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으며, 이는 특히 중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불가와 일부 대기업에서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15. 또한 위원회는 비록 정부가 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간의 결혼에 의해 출생한 자녀에 대한 차별 문제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생각한다.
 16. 위원회는 협약 제5조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결과 위원회는 인종, 국가 또는 민족적 기원에 대한 구별 없이, 협약 제5조에 규정된 다양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향유하는지에 관해 실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17. 대한민국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인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어렵고 불안한 여건에서 숨어서 생활하고 일하는 외국인 즉 협약 제5조 (a), (b), (d), (e), (f) 항에 의거한 차별의 피해자인 외국인들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강제근로에 시달리고 있는 외국인 연수생의 상황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우려를 표한다.

E. 제안 및 권고

18. 위원회는 대한민국 법률에서 차별의 근거로서 인종적 이유를 누락시킨 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헌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권고하며, 협약 제2조의 의무적 성격을 주목한다.
19. 위원회는 또한 협약 제4조의 의무성을 강조하며, 당사국이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적절한 법률을 채택하도록, 특히 인종차별 행위와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장려하는 단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권고한다. 이에 관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위원회의 일반권고 XV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20.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고 정착한 외국인 후손들이 인종을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차기 보고서에 이러한 외국인의 상황, 이민족간의 결혼에서 출생한 자녀의 현황, 특히 미국인과 아시아인간의 결혼에서 출생한 자녀, 그리고 그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추가 정보가 제공될 것을 요청한다.

-
21. 위원회는 당사국의 차기 보고서가 협약 제5조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취한 법적, 실질적 조치에 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하도록 권고한다.
 22. 위원회는 또한 외국인 근로자, 특히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적인 지위에 있는 외국인의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며, 특히 관련당국이 계획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그들의 지위를 합법화 시킬 것을 권고한다.
 23.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기 보고서에 인종차별 문제에 관한 진정, 기소 사례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다.
 24. 위원회는 1996년 1월 4일 제출되어야 할 당사국의 차기 보고서가 본 심의에서 제기된 모든 사항들을 다루는 완전한 보고서가 될 것을 권고한다.

UNITED
NATIONS

CERD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Distr.

GENERAL
CERD/C/304/Add.12
24 September 1996

Original: ENGLISH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 Republic of Korea. 24/09/96.
CERD/C/304/Add.12. (Concluding Observations/Comments)***

Convention Abbreviation: CERD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Forty ninth session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9 OF THE CONVENTION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Republic of Korea

1.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onsidered the eigh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ERD/C/258/Add.2) at its 1159th and 1160th meetings, held on 6 and 7 August 1996 (see CERD/C/SR.1159 1160), and adopted the following concluding observations at its 1176th meeting, held on 19 August 1996.

A. Introduction

2. The Committee welcomes the eigh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s pleased by the regularity with which the State party submits its reports. It takes note of the detailed supplementary information provided by the delegation, which includes replies to some of the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adopted by the Committee during its consideration of the seventh periodic report of the State party. The Committee also appreciates the open dialogue initiated with the delegation and the delegation's oral replies to the questions raised during the discussion.

B. Factors and difficulties impe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3.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Republic of Korea, of which the population has historically been ethnically homogeneous, has for several years been experiencing a rapid growth of its foreign population. In particular, the Committee notes that many of those foreigners are in an irregular situation, a fact which makes it difficult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their behalf because they have no legal status in the country.

C. Positive aspects

4. The Committee views with interest the Government's wish to establish an independent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t notes with appreciation that the Republic of Korea is among the States parties which have accepted the amendments to article 8, paragraph 6, of the Convention, adopted at the 14th meeting of States parties.
5. The adoption of administrative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foreign industrial trainees in order to ensure them protection on an equal basis with national and legally registered foreign workers is in the spirit of article 5 of the Convention.
6. In that regard,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considering creating a work permit for illegal foreign workers that would place them under the aegis of the Labour Standards Act, which, *inter alia*, prohibits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nationality and ensures minimum protection against poor working

conditions and low wages.

7. The Committee welcomes the setting up of complaint centres in all immigration control centres, where foreign workers can file complaints in cases where their rights have been violated.
8. The Committee notes the existence of many possibilities for seeking remedies with the governmental and legal authorities and for suing individuals, the State or its representatives for compensation in cases of violations of fundamental human rights.
9. The Committee appreciates the Government's implementation of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 made during its consideration of the State party's previous report, that human rights awareness sessions should be organized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as a contribu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Ministry of Justice's translation into Korean of the text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is also likely to enhance the general public's familiarity with those instruments.
10. The Committee notes with satisfaction that, according to the explanations provided by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may be invoked by individuals before the courts, which may apply them directly on the same basis as domestic law.
11. The Committee welcomes the statement by the delegation that the State party is planning to accept soon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under article 14,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D. Principal subjects of concern

12.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neither the Constitution nor the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explicitly prohibits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race, colour, descent, or national or ethnic origin, despite the provisions of article 2 of the Convention and the Committee's previous recommendations on the matter.

-
13. The Committee also notes with concern that article 4 of the Convention has not yet been fully implemented, since the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contains no provisions explicitly punishing acts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prohibiting organizations which promote and encourage racial discrimination.
 14.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there is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of foreign origin who were born and have settled in the Republic of Korea, particularly Chinese, in relation to people of Korean origin, with regard to certain matters for example, the impossibility of acquiring citizenship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ifficulty in obtaining employment in some large companies.
 15. The Committee also notes that, although the Government recognizes the existence of a problem of discrimination against Amerasian children, no information has been provided on any steps taken by the Government to remedy that situation.
 16. The Committee regrets the fact that insufficient information has been provided with regard to article 5 of the Convention. As a result, the Committee has been unable to form an opinion on the actual situation regarding the equal enjoyment by all, without distinction as to racial, national or ethnic origin, of the various rights set forth in article 5 of the Convention.
 17. The large number of foreigners who are being employed in ever increasing numbers by businesses in the Republic of Korea, who live and work clandestinely in the country, usually under difficult and precarious conditions, and who are the victims of discrimination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5 (a), (b), (d), (e) and (f) of the Convention, is a source of concern for the Committee. The same concern has been expressed with regard to the situation of foreign trainees who are allegedly subjected to various form of discrimination and forced labour.

E.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18.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constitutional and legislativ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remedy the omission of race as a ground for discrimination in the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that regard, notes the compulsory nature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2 of the Convention.

19. The Committee also underlines the compulsory nature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4 of the Convention and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dopt appropriate legislation to give effect to those provisions, particularly by enacting a law explicitly prohibiting and punishing acts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organizations which promote and encourage racial discrimination. In that regard,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should take account of the Committee's General Recommendation XV.
20.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measures be taken to ensure that persons of foreign origin who were born and have settled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no longer subject to discrimination based on ethnic origin. The Committee would like the next report to provide further information on the situation of such foreigner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children of mixed marriages, particularly Amerasian children, and any measures taken to improve that situation.
2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next report of the State party should include detailed information on legislative and practical measures taken by the authorities to ensure respect for the provisions of article 5 of the Convention.
22.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measures be taken to improve the situation of migrant workers, particularly foreigners with irregular status in the Republic of Korea; in particular, it recommends that, as envisaged by the authorities, a work permit be introduced for such persons, in order to legalize their situation.
23.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include in its next report information on complaints received, and cases tried, concerning matters of racial discrimination.
24.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next periodic report of the State party, which was due on 4 January 1996, be a full report dealing with all the points raised during the present discussion.

대한민국 9차, 10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

제54차 회기

CERD/C/304/Add.65

1999년 4월 7일

1. 위원회는 단일문서로 제출된 한국정부의 제9차/제10차 이행보고서(CERD/C/333/Add.1)를 1999년 3월 2일과 3일에 열린 1307회, 1308회 회의(CERD/C/1307-1308)에서 심의했으며, 3월 17일에 열린 1329회 회의(CERD/C/SR.1329)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A. 서문

2. 위원회는 한국정부의 보고서를 환영하며, 한국정부가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위원회와의 대화과정에서 대표단이 제공해준 자세한 추가정보들을 주목한다. 그러나, 지난 심의에서 채택되었던 위원회의 권고사항¹⁾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에 관해 한국정부가 제출한 정보들은 충분치 못하다고 위원회는 생각한다.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대표단이 충실한 답변을 해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B. 긍정적 측면들

3.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1999년 말까지 인권법(Human Rights Act)을 채택하고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

1) 역주: 제8차 이행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CERD/C/304/Add.12, 1996년 9월 24일)

-
4.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지난 1998년 12월 4일,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ILO(국제노동기구) 조약 111호를 비준한 것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5. 1998년 10월부터 근로기준법이 모든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1998년 5월 18일에 ‘외국인토지취득법’이 개정되었고, 1997년 12월 12일에는 ‘국적법’이 개정되었다. 위원회는 인종차별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이러한 입법조치들을 환영한다.
 6.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이와 상충되는 그 어떠한 국내법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서술한 정부보고서의 내용을 위원회는 관심있게 주목하는 바이다.
 7. 인종차별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활동 등 인권관련 정부기관들이 광범위한 훈련 및 홍보 활동을 펼친 것에 대해 위원회는 환영한다.
 8.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협약 제14조 1항과 관련,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통보를 접수하여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회가 보유하도록 승인한다고 선언한 것, 그리고 협약 제8조 6항의 개정사항을 비준한 것을 환영한다.

C. 주요 우려사항

9. 협약 제2조와 제4조가 나열하고 있는 체약국의 법적 의무들을 모두 포괄하는 조항이 앞으로 제정될 인권법에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의도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인종·피부색·가문(혈통)·출신국가나 출신민족 등에 근거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한국의 헌법에도 여타 국내법률에도 없다는 것에 대해 위원회는 여전히 우려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단체의 금지 등에 관해 명시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우려한다.
10. 한국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위원회 일반권고(General Recommendation) 19”²⁾의

2) 역주: 협약 제3조(인종차별(racial segregation)과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Apartheid))의 해석에

견지에서 본 인종차별 행위에 관한 정보나 또는 그러한 인종차별을 막기 위한 활동들에 관한 정보가 없는데, 이 점에 있어 위원회는 보고서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11.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협약 제5조에 관해 단지 노동권에 관한 정보들만 제공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 결과, 위원회는 협약 제5조에 나열된 여타의 권리들을 모든 이가 실제로 동등하게 향유하고 있는지에 관해 판단을 할 수가 없었다.
12. 위원회는 불안정한 체류자격(irregular status)을 가진 외국인들이 처해있는 취약한 현실에 대해 우려한다. 이들은 열악하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일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협약 제5조, 특히 5조 (d)항과 (e)항의 침해를 받은 차별대우의 피해자들이다.
13. 외국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태어나고 정착한 외국태생의 사람들에게 대한 차별에 관해 위원회는 여전히 우려를 표한다. 미국인-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들이나 난민신청인-한국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한 사실상(de facto)의 차별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우려한다.

D. 제안과 권고

14. 위원회는 협약 제2조와 제4조가 국내법에 완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모든 적절한 입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1999년 말까지 제정될 예정인 인권법이, 인종·피부색·가문(혈통)·출신국가나 출신민족에 근거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그러한 차별행위를 불법화하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차기 보고서 제출시, 인종차별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모든 새로운 법률들의 전문(全文)을 위원회에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한다.
15. 협약 제5조의 내용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당국이 취한 입법조치나 실제조치들에 관한 정보들이 차기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관한 위원회의 일반권고.

-
16. 한국정부가 최근 외국인산업연수생 및 기타 외국인노동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왔다는 점은 인정하나, 위원회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상의 차별을 막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정부에 제안한다. 또한, 모든 이주노동자 특히 불안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17. 위원회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정착한 외국태생의 사람들이 출신민족에 근거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권고한다. 위원회는, 난민신청인과 결혼한 여성 그리고 혼혈아동들(특히 미국인-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동)이 인종차별이나 인종적 편견을 받지 않도록 한국정부가 인식교양 캠페인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18. 위원회는, 인종차별에 관한 사건이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한 건도 계류된 적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협약 제14조에 규정된 절차에 대한 접근성, 또한 협약 상의 관련조항들을 다루는 기존의 진정(호소)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문제에 관해 한국정부는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위원회는 권고한다.
 19. 위원회는, 인종차별행위의 피해자들에게 법률 구조를 제공하고 진정(호소)기관에 대한 취약집단의 접근성을 높일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20. 본 협약의 원칙들과 목적들을 도모하기 위한 홍보, 교육, 훈련 등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해야한다고 위원회는 제안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보고서와 본 최종견해를 한국 내에 널리 배포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위원회는 권고한다.
 21. 다음 정기보고서는 본 최종견해에 담겨있는 제안 및 권고사항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최신의 정보와 설명을 담은 것이 되어야 한다고 위원회는 권고한다.

(번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Distr.

GENERAL
CERD/C/304/Add.65
7 April 1999

Original: ENGLISH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 Republic of Korea. 07/04/99.
CERD/C/304/Add.65. (Concluding Observations/Comments)***

Convention Abbreviation: CERD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Fifty fourth session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9 OF THE CONVENTION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Republic of Korea

1.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ninth and ten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submitted in one document (CERD/C/333/Add.1), at its 1307th and 1308th meetings, held on 2 and 3 March 1999 (CERD/C/SR.1307-1308), and adopted, at its 1329th meeting (CERD/C/SR.1329), held on 17 March 1999, the following concluding observations.

A. Introduction

2. The Committee welcomes the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expresses its appreciation for the regularity with which the State party submits its reports. It takes note of the detailed supplementary information provided by the delegation in the oral dialogue with the Committee. Nevertheless, the Committee is of the view that the information submitted regarding the follow up of recommendations made by it during the consideration of the previous report of the State party was incomplete. The Committee commends the quality of the delegation's oral replies to the questions raised during the discussion.

B. Positive aspects

3. The commitment by the State party to adopt a Human Rights Act and establish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before the end of the year 1999 is welcomed.
4. It is noted with satisfaction that the State party ratified, on 4 December 1998,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Convention (No. 111) concerning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5. Legislative measures taken by the State party to prevent and combat racial discrimination are welcomed. These measures include the State party's decision to apply the Labour Standard Act to all illegal foreign workers as of October 1998; the amendment to the Foreign Land Acquisition Act on 15 May 1998 and the amendment to the Nationality Act on 13 December 1997.
6. It is noted with interest that,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e report of the State party,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take precedence over any conflicting national law.
7. The wide range of dissemination and training activities undertaken by the authoritie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including activities to prevent and combat racial discrimination, are welcomed.

-
8. The declaration made by the Republic of Korea under article 14,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recognizing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from individuals or groups, is welcomed, as well as the State party's ratification of the amendment to article 8, paragraph 6, of the Convention.

C. Principal subjects of concern

9. While acknowledging that the envisioned Human Rights Act is intended to contain provisions covering all legal obligations set out in articles 2 and 4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neither the Constitution nor any law of the State party explicitly prohibits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race, colour, descent, or national or ethnic origin, and that no law contains provisions explicitly penalizing acts of racial discrimination or prohibiting organizations which promote and incite racial discrimination.
10. The absence of information in the State party's report regarding acts of racial discrimination as well as on action to prevent racial segregation in the light of General Recommendation XIX is regarded as a shortcoming.
11. The Committee notes that information provided with regard to article 5 of the Convention covered only labour related rights. As a result, the Committee has been unable to form an opinion on the actual situation regarding the equal enjoyment by all persons of the other rights set forth in article 5 of the Convention.
12.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vulnerable situation of foreigners with irregular status who live and work in the country, usually under difficult and precarious conditions. Such persons are victims of discrimin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5 of the Convention, notably paragraphs 5 (d) and (e).
13. While acknowledging the efforts undertaken by the State party to improve the status of foreigners, concern is expressed about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of foreign origin who were born and have settled in the Republic of Korea. De facto discrimination against Amerasian children and against Korean women married to asylum seekers is also of concern.

D.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14.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all appropriate legislative measures to ensure that articles 2 and 4 of the Convention are fully reflected in domestic law. In this regard, it suggests that the Human Rights Act that is to be enacted before the end of 1999 explicitly prohibi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race, colour, descent, or national or ethnic origin, declare such acts illegal and penalize them, as prescribed in article 4 of the Convention. Additionally, the Committee requests that the State party submit, together with its next periodic report, the full texts of all new legislation adopted to prevent and combat discrimination.
1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next report of the State party should include information on legislative and practical measures taken by the authorities to ensure respect for the provisions of article 5 of the Convention.
16. While acknowledging the fact that the State party has recently taken measures to improve the status of foreign "industrial trainees" and other foreigners working in the country, the Committee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ake further measures against discrimination in the labour conditions of foreign workers.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measures be taken to improve the situation of all migrant workers, particularly those with irregular status.
17.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further measures be taken to ensure that persons of foreign origin who were born or have settled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not subject to discrimination based on ethnic origi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awareness raising campaigns, to protect women married to asylum seekers and children of mixed marriages, particularly Amerasian children, from racial discrimination or racial prejudice.
18. Noting that no cases of racial discrimination have reached the courts or administrative bodies, the Committee recommends to the State party to increase its efforts to provide easy access to existing recourse mechanisms dealing with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including the procedure set out in its article 14.

-
1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provide legal aid to victims of acts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facilitate access to recourse procedures by vulnerable groups.
 20. The Committee suggests that the State party allocate more resources to facilitate dissemination, education and training in order to promote the principles and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In this regard, it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appropriate steps to widely disseminate its report, along with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in the Republic of Korea.
 2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next periodic report of the State party be an updating report dealing with the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대한민국의 11차, 1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63차 회기
2003년 8월 4-22일

대한민국

1. 위원회는 통합문서로 제출된 제11차·12차 대한민국 이행보고서(CERD/C/426/Add.2)를 2003년 8월 8일과 11일에 열린 1592회, 1593회 회의(CERD/C/SR/1592&1593)에서 심의하였다. 제11차 이행보고서의 제출시한은 2000년 1월 4일이었으며, 제12차 이행보고서의 제출시한은 2002년 1월 4일이었다. 위원회는 2003년 8월 18일에 열린 1604회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A. 서문

2.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이행보고서 제출을 환영하며 정부대표단이 구두 및 서면으로 제공한 추가정보들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보고한 개선사항들에 대해 만족을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심의회의에 대규모의 정부대표단이 참석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원회의 질문에 대해 대표단의 각 일원이 솔직하고 건설적인 답변을 제공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B. 긍정적 측면들

3. 위원회는 지난 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통해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가 설립된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4. 위원회는 지난 2003년 7월 채택된 고용허가제 입법을 통해 앞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이

국내노동자들과 동일한 노동관련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위원회는 교육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불법체류자의 자녀를 비롯한 의무교육연령의 외국인 아동들이 학교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가지게 된 것을 환영한다.

5. 위원회는 2002년 4월 출입국관련규정이 개정되어 화교를 비롯한 외국인에 대해 영주 거주(F-5) 체류자격이 신설된 것을 환영한다.
6. 위원회는 난민제도 및 난민지위심사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 특히 난민인정협의 회에 시민사회의 위원들이 위촉되어 활동하게 된 점과 난민들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처우 및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된 점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C. 우려 및 권고사항

7. 위원회는 인구의 동질성 즉 단일민족성에 관한 정부의 관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동시에 위원회는 화교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여타 인종적 소수자에 관해 이행보고서에서 언급된 정보들을 주목한다.

대한민국 사회의 인종적 구성분포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없는 것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이행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일반지침’ 제8항에도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인종에 따른 인구분포 자료를 차기 이행보고서에서 제공해 줄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하며, 위원회 일반권고 8호(특정 인종 및 종족 집단의 자기 인지)의 내용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또한 백정(白丁) 집단의 상황에 관한 정보 취합에 있어, 위원회 일반권고 29호(가문에 따른 차별)의 내용을 참작할 것을 제안한다.

8. 위원회는 이행보고서에 인종차별행위들, 피해자의 진정이나 사법적 대응에 관한 정보들이 부족하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인종차별 피해자의 고소, 고발이나 소송 제기가 없다는 것은 관련 입법의 부재, 사법구제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 또는 관련당국의 기소의지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대한민국에 상기시키고자 한다.

위원회는 인종차별 사건 및 관련 현행법이 적용된 사건의 수사 및 기소 현황, 부과된

형벌 등을 성별에 따라 분류한 자료가 차기 이행보고서에 포함되기를 요청한다. 또한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2항의 ‘불합리한 차별(unreasonable discrimination)’이라는 용어가 현실에서 어떻게 해석·적용되고 있는지에 관해 더욱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는 바이다.

9. 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는 반면, 대한민국의 국내법이 여전히 협약 제4조의 요구들(인종차별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대한민국은 협약 제4조의 이행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권고 15호의 내용에 비추어 국내법률을 검토해야 하며, 또한 협약 제4조에 부합하도록 인종차별 및 인종혐오 사건을 다루는 특정한 법률을 도입해야 한다.

10. 위원회는 산업연수생 제도 하의 외국인 노동자들과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협약 제5조의 권리들을 완전히 향유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모든 이주노동자의 상황 특히 신체의 안전과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한다. 또한 산업연수생, 미등록노동자, 난민 및 난민신청인을 비롯한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협약 제5조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차기 이행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11. 외국인여성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주목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외국인 여성들이 대한민국으로 인신매매되는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한다. 대한민국은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가능한 한 외국인 여성의 모국어를 통한 지원—을 위한 현재의 노력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

12. 위원회는 차기 이행보고서 준비시 인종차별철폐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장한다.

13. 위원회는 인종차별행위에 관한 국내적 구제조치, 차별사건에 있어 배상을 위한 법적 수단, 협약 제14조에 따른 개인청원절차 등에 관한 정보가 대한민국 내에 널리 배포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증진되어야 함을 권고한다.

14. 협약 특히 제2조부터 제7조의 내용을 국내의 법질서에서 이행함에 있어, 더반 세계 인종차별철폐대회 선언 및 행동계획의 관련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함을 대한민국에 권고한다. 또한 더반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선언 및 행동계획을 국내 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한 국가행동계획 및 기타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차기 이행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15. 당사국 이행보고서를 국문으로 작성하여 보고서가 위원회에 제출되는 시점부터 일반대중이 그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위원회의 최종견해 역시 국문으로 배포되어야 함을 대한민국에 권고한다.
16. 제13차, 14차 이행보고서를 그 제출시한인 2006년 1월 4일까지 통합보고서의 형태로 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과 보고서 작성시 본 최종견해에 제기된 모든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다루어 줄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한다.

[번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Distr.
GENERAL

CERD/C/63/CO/7
22 August 2003

Original: ENGLISH
UNEDITED VERSIO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Sixty third session

4 22 August 2003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9 OF THE CONVENTION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REPUBLIC OF KOREA

1.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eleventh and twelf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ere due on 4 January 2000 and 2002 respectively, submitted as one document (CERD/C/426/Add.2), at its 1592nd and 1593rd meetings (CERD/C/SR/1592 & 1593), held on 8 and 11 August 2003. At its 1604th meeting, held on 18 August 2003, it adopted the following concluding observations.

A. Introduction

2. The Committee welcomes the reports submitted by the State party and the additional oral and writte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delegation. It expresses its satisfaction with the progress reported. The Committee has been encouraged by the attendance of a large delegation and expresses its appreciation for the candid and constructive responses of its members to the questions asked.

B. Positive aspects

3. The Committee notes with satisfaction the adop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in 2001, establishing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4. The Committee welcomes legislation adopted in July 2003, establishing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which provides foreign workers with the same labour protection as domestic workers. It also welcomes the amendment to the education regulations, which allows foreign children of compulsory school age, including those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equal access to local schools.
5. The Committee welcomes the amendments of April 2002 to the immigration regulations which have facilitated the attainment of permanent resident status by foreigners, including members of the ethnic Chinese community.
6. The Committee notes with appreciation the progress made in improving the asylum system and the process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in particular the expansion of the Refugee Recognition Council to include members of civil society and the increased access to social services and the labour market afforded to refugees.

C.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7. The Committee takes note of the view of the State party as to the homogeneity of its population. However, it also notes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e report about ethnic Chinese and other ethnic minorities living in the Republic of Korea.

In light of the absence of specific statistical data on the ethnic composition of South Korean society,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provide an estimate of the ethnic composition of the population in subsequent reports, as requested in paragraph 8 of the reporting guidelines, and draws the attention of the State party to its General Recommendation VIII concerning the self identification of members of particular racial and ethnic groups. The Committee also suggests that the State party take into account its General Recommendation XXIX on descent based discrimination when gathering information on the situation of the Paekjong community.

8. The Committee regrets the lack of specific information in the State party's report on acts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complaints and legal action by victims. The Committee reminds the State party that the absence of complaints and legal action by victims of racial discrimination may be the result of the absence of relevant specific legislation, or of a lack of awareness of the availability of legal remedies, or of insufficient will by the authorities to prosecute.

The Committee requests that the State party include in its next periodic report statistical information disaggregated by gender on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launched, and penalties imposed, in cases of offences which relate to racial discrimination, and where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existing domestic legislation have been applied. The Committee also requests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how the term "unreasonable discrimination" in article 30.2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2001) has been interpreted and applied in practice.

9. While taking note that there are ongoing discussions in the State party concerning the drafting of a Discrimination Prohibition Law, the Committee also remains concerned that the legislation of the State party does not seem to fully respond to the requirements of article 4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review its domestic legislation in the light of General Recommendation XV of 1993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4 of the Convention, and that it adopt specific legislation on the offence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incitement of racial hat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
10.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foreign workers in the industrial trainee programme and undocumented migrants do not fully enjoy their rights as provided by article 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tinue to take measures to improve the situation of all migrant workers,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the right to security of person and to social security and social services.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clude in its next report inform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relevant provisions of article 5 for all foreign workers, including industrial trainees, undocumented migrants, refugees and asylum seekers.

11.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trafficking of foreign women to the State party for the purpose of prostitution, although it notes the State party's efforts to combat this phenomenon.

It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expand and strengthen ongoing efforts to prevent trafficking and provide support and assistance to victims, wherever possible in their own language.

12.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consult with organizations of civil society working in the area of combating racial discrimination during the preparation of the next periodic report.
13. The Committee recommends the State party to disseminate widely information and raise public awareness on the available domestic remedies against acts of racial discrimination, on the legal avenues to obtain compensation in cases of discrimination, and on the individual complaints procedure under article 14 of the Convention.
14.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into account the relevant parts of the Durban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when implementing the Convention in the domestic legal order, in particular in respect of articles 2 to 7 of the Convention, and that it include in its next periodic report information on action plans or other measures they have taken to implement the Durban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at national level.

-
1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s reports be made readily available in the Korean language to the public from the time they are submitted and that the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se reports be similarly publicized.
 16.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submit its thirteenth periodic report jointly with its fourteenth periodic report, due on 4 January 2006 and that it address all points raised in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대한민국 13차, 14차 정보보고서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

배포 일반
CERD/C/KOR/CO/1
2007년 8월 17일
원본 : 영어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71차 회의

2007년 7월 30일~8월 17일, 제네바.

대한민국

1.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제출한 제13차 및 제14차 합동 정기보고서(CERD/C/KOR/14)를 2007년 8월 9일과 10일에 개최된 위원회의 제 1833차와 1834차 회의(CERD/C/SR.1833 및 1834)에서 심사하였다. 위원회는 2007년 8월 17일에 개최된 제 1844차 회의(CERD/C/SR.1844)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 견해를 채택하였다.

A. 도입

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정기 보고서를 적시(適時)에 제출한 것을 환영하며, 위원회의 지난 최종 견해(CERD/C/CO.9)에서 제기된 문제를 다루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감사를 갖고 주목한다.
3. 위원회는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가진 열린 대화, 그리고 일련의 문제들 및 위원들이 제기한 폭넓은 질문에 대하여 구두 및 서면으로 종합적이고 철저한 답변을 해준 데 대하여 감사를 표명한다.
4. 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발표한 데 대해 감사를 갖고 주목하며, 나아가 이는 대한민국 당국이 위원회와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추

구한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B. 긍정적인 측면

5. 위원회는 2007년 5월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채택을 환영한다.
6. 위원회는 2007년 5월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채택을 환영한다.
7. 또한 위원회는 2006년 6월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위한 통역지원센터 설립을 환영한다.
8.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2004년 3월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법 위반 사건 처리를 위한 지침의 채택을 포함해 성적 착취 혹은 가사(家事)적 예속을 목적으로 한 외국 여성 인신매매를 철폐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다양한 조치에 만족을 표한다.
9. 위원회는 2006년 5월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의 채택을 환영한다.

C. 우려사항 및 권고

10. 헌법 제 6조 1항에 의거하여 이 조약 제 1조의 직접적인 적용가능성에 대한 대표단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법에 인종차별의 정의가 없다는 점을 언급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평등과 비차별에 대한 헌법 제 11조 제 1항에 이 협약 제 1조 제 1항과 연결되는 차별 금지 사유가 포함되어있지 않은 점을 주목한다. (제 1조)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이 협약 제1조의 인종차별 정의를 포함시켜 국내법이 이 협약과 일치할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이 협약의 제 1조 1항에 따라 차별 금지 사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헌법 제 11조 제 1항에 명시된 차별의 정의를 검토할 것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11. 위원회는 최근 외국태생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그들이 한국사회에 통합되도록 촉진하기 위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채택을 환영하는 동시에, 고용, 결혼, 주거, 교육 및 인간관계를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주 노동자, 다민족간 출생 자녀

등의 외국인에 대하여 만연한 차별이 지속되는 데 대하여 여전히 우려한다. (제 2조 및 제 5조)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외국인처우기본법의 영어번역본과 시행에 대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또한 위원회는 이 협약의 제 2조와 제 5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이주 노동자와 다민족간 출생자녀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철폐하며, 다른 민족 혹은 국적자가 이 조약의 제 5조에 명시된 권리를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이 협약 제 2조와 제 5조에 따라 법률 제정을 포함한 추가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1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민족적 단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는 타 민족적 및 국가적 집단간의 이해, 관용, 우의를 증진하는 데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주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는 보고서 제 43조에서 46조의 “순혈주의”와 “혼혈”과 같은 개념을 언급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대표단의 설명을 이해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용어, 그리고 그러한 용어가 야기할 수 있는 인종 우월성에 대한 생각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만연해있다는 데에 우려를 표한다. (제 2조 및 제 7조)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차기 정기 보고서에 대한민국 영토에 살고 있는 민족간(inter ethnic) 출생자녀의 수에 대한 자세한 통계 수치를 제시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현대 대한민국 사회의 다민족적 성격을 인식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실제 상황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단일민족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 문화 및 정보 분야에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권고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초등 및 중등학교의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 국내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 및 국가 집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보, 모든 인종, 민족 및 국가 집단 간의 이해와 관용, 우의를 증진시키는 인권의식 프로그램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13.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 제정안의 채택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논의를 언급하는 동시에, 현재 대한민국의 법이 이 협약 제 4조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부합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전 최종 견해의 제 9항에 표시된 우려를 재차 강조한다.

위원회는 이 협약 제 4조의 이행과 관련하여 일반권고 7호(1985년)과 15호 (1993년)에 대한민국의 관심을 촉구하며, 대한민국이 이 협약 제 4조에 따라 인종적으로 유발된 범죄의 금지 및 처벌을 위한 세부적인 법률적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 마련 및 채택을 위하여 신속하게 행동해줄 것을 촉구한다.

14.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국제조약이 자동적으로 국내법이 되기 때문에, 현실에서 비시민권자(non citizen)가 헌법에 보장된 대부분의 권리와 자유를 시민과 동등하게 향유하고 있다는 대표단의 설명을 주목함과 동시에, 엄격하게 헌법 제10조에 따라 국민만 법 앞에 동등하며 헌법의 제2장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있다는 데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위원회는 비시민에 대한 일반권고 30호(2004년)에 당사국의 관심을 촉구하고, 당사국이 이 협약에 명시된 권리 향유에 있어 국제법 하에 인정된 정도까지 국민과 비시민 사이에 평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법적 및 여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

15.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난민과 망명 신청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출입국 관리법을 검토 중이라는 정보를 이해하는 동시에, 난민 신청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이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의 지연으로 인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발효된 이후 제한된 수의 망명 신청자들만이 난민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제 5조)

위원회는 난민과 망명 신청자에 대한 한국 법률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여타 인정받은 국제 기준에 따라 재검토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난민지위인정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인도주의적 보호를 부여받은 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난민들이 통합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
16. 위원회는 성적 착취 혹은 가사적 예속을 목적으로 한 외국 여성 인신매매를 철폐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취한 노력을 이해하는 동시에, 외국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가 지속적으로 만연한다는 점에 여전히 우려를 표한다. (제 5조(b))

위원회는 인종차별의 성에 관련된 차원의 일반권고 25호(2000)에 대한민국의 관심을 촉구하고, 대한민국이 성적 착취 혹은 가사적 예속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여성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 피해자와 특히 불법체류자에게 적절한 정보와 지원 및 협조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을 권고한다.

17. 위원회는 제출된 정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남편이나 국제결혼중개업소로부터 받을 학대 가능성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며, 대한민국 사회에의 통합을 막는 다양한 장애에 직면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국제결혼 여성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특히 한국인 남편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제결혼 여성이 이혼 혹은 별거하게 된 경우에 법적인 거주 자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국제결혼중개업소가 지나친 비용을 요구하거나, 배우자가 될 한국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신분증 및 여행 문서를 압수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결혼중개업소의 활동을 규제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국제결혼여성의 한국사회 통합을 위하여 한국과 한국 전통에 대한 충분한 정보 및 한국어 강좌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추가로 제안한다.

18. 위원회는 이주노동자들이 갱신이 불가능한 3년 계약만 부여 받고, 이직에 심각한 제한이 있으며, 직장 내에서 오랜 근무시간, 낮은 임금, 안전하지 못하거나 위험한 근무환경 및 짧은 고용 계약(3년)등 차별적인 대우와 학대에 직면해있는 데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이주노동자, 특히 비정규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장 내 차별적인 대우, 임금 체납 혹은 불납, 산업 재해의 경우 법적인 보호 및 구제를 취하는 데 장애에 부딪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제 5조 (e) 및 제 6조)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이주노동자가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그들의 노동권을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고용계약의 연장 등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사용자에 의한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이들의 체류 자격과는 상관없이 효과적인 보호와 구제방법을 취할 모든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이 조약의 제 5조 (e) 항과 제 6조에 따라 모든 이주노동자의 동등하고 효과적인 권리 향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채택된 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차기 정기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요청한다.

19. 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심사한 인종차별 관련 진정 건수에 대하여 대표단이 제공한 정보를 환영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이 이 사건의 성격과 결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 (제 6조)

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심사하는 인종 차별과 관련된 진정 건수, 성격 및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최신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20. 위원회는 명예훼손 대한 제 307조 및 제309조나 모욕에 대한 제 311조와 같은 인종 차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사용되는 현행 형법 조항이 국가 법원에서 호소된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또한 위원회는 이 협약이 국내법의 일부를 구성하며 대한민국 법정에서 직접 적용 가능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의 조항을 언급하거나 직접적으로 적용가능성을 확인한 판결이 없다는 점을 주목한다.

위원회는 고소의 부재가 관련된 세부적인 법률이 부재하고 법적인 구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대한민국에 상기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경찰공무원, 변호사, 검사 및 판사를 포함하여 형사 사법 제도 내에서 일하는 자들에 대하여 인종차별주의와 차별에 대한 국내법적 메커니즘과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이 협약과 조항들에 대한 정보 캠페인 및 교육 프로그램을 조직할 것을 권고한다.

-
21.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기준을 고려하도록 촉구한다.
 2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국내법적 질서 내에서 이 협약의 이행, 특히 이 협약의 제 2조와 제7조와 관련한 이행할 때 더반 선언과 행동계획의 관련 부분을 고려하고, 국내적 단계에서 더반 선언과 행동계획 이행을 위하여 취하는 행동 계획 혹은 다른 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차기 정기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23.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보고서를 그들의 제출 시점에 일반에 폭넓게 공개할 것, 그리고 이러한 보고서와 관련된 이 위원회의 견해를 유사하게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
 24.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차기 정기 보고서 준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및 인종 차별 방지를 위한 분야의 시민사회 기구들과 함께 폭넓게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
 25. 위원회는 국제적인 인권 조약기구에 의해 최근 승인된 보고에 대한 조화된 지침 (HRI/MC/2006/2 및 Corr.1)에 나온 일반 핵심 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핵심 문서를 개정하도록 요청한다.
 26. 대한민국은 1년 이내로 절차규칙의 제 65조의 제 1항에 의거하여 제 11항, 제 13항, 제 17항에 포함된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후속 조치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7. 위원회는 제 71차 회의에서 위원회가 채택한 인종차별철폐조약 관련 문서를 위한 지침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이 2010년 1월 4일 예정인 제 15차 및 16차 통합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한다.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Distr.
GENERAL

CERD/C/KOR/CO/1
17 August 2007

Original: ENGLISH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Seventy-first session
Geneva, 30 July-17 August 2007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9 OF THE CONVENTION**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REPUBLIC OF KOREA

1.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thirteenth to fourteen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submitted in a single document (CERD/C/KOR/14) – at its 1833rd and 1834th meetings (CERD/C/SR.1833 and 1834), held on 9 and 10 August 2007. At its 1844th meeting (CERD/C/SR.1844), held on 17 August 2007, it adopted the following concluding observations.

A. Introduction

2. The Committee welcomes the timely submission of the periodic reports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notes with appreciation the efforts made by the State party to address the issues raised by the Committee in its previous concluding observations (CERD/C/CO/9).

3. The Committee expresses appreciation for the open dialogue held with the high-level delegation and for the comprehensive and thorough answers given orally and in writing to the list of issues and to the wide range of questions raised by members.

4. The Committee notes with appreciation th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ook the floor before the Committee on an independent basis, which further demonstrates the willingness of the State party's authorities to pursue a frank and constructive dialogue with the Committee.

B. Positive aspects

5. The Committee welcomes the adoption, in May 2007, of a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6. The Committee welcomes the adoption, in May 2007,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7. The Committee also welcomes the establishment in June 2006 of the Interpretation Support Centre for Foreign Migrant Workers.

8. The Committee notes with satisfaction the various measures by the State party to combat trafficking of foreign women for the purpose of sexual exploitation or domestic servitude, including the adoption of the Act on Punishment of Prostitution and Brokerage of Prostitution of March 2004 and the Guidelines for Dealing with Cases of Violation of the Act on Punishment of Prostitution and Brokerage of Prostitution.

9. The Committee welcomes the adoption in May 2006 of the Educational Support Plan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C.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10. Notwithstanding the assurances provided by the delegation concerning the direct applicability of article 1 of the Convention pursuant to the provision of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the Committee notes the absence of a defini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in the law of the State party. The Committee further notes that article 11,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on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includes none of the prohibited grounds of discrimination referred to in article 1,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Article 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bring its internal law in line with the Convention by including a defini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in keeping with that contained in article 1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sider reviewing the definition of discrimination set out in article 11,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with a view to extending the list of prohibited grounds of discrimin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11. While welcoming the recent adoption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aimed at eliminating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of foreign origin and facilitate their integration in Korean society,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about the persistence of widespread societal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including migrant workers and children born from inter-ethnic unions, in all areas of life, including employment, marriage, housing, educ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rticles 2 and 5)

The Committee requests that the State party provide an English translation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as well as detailed information on its implementation.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s 2 and 5 of the Convention, adopt further measures, including legislation, to prohibit and eliminate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including migrant workers and children born from inter-ethnic unions, and to guarantee the equal and effective enjoyment by persons of different ethnic or national origin of the rights set out in article 5 of the Convention.

12.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the emphasis placed on the ethnic homogeneity of the State party may represent an obstacle to the promotion of understanding, tolerance and friendship among the different ethnic and national groups living on its territory. In this regard, while appreciating the explanation provided by the delegation that references to concepts such as “pure blood” and “mixed-bloods” in paragraphs 43 to 46 of the report are to be intended as a mere description of a terminology still in use in the State party, the Committee is nonetheless concerned that such terminology, and the idea of racial superiority that it may entail, continues to be widespread in the Korean society. (Articles 2 and 7)

The Committee requests that the State party provide in its next periodic report disaggregated statistical data on the number of persons born from inter-ethnic unions living on the territory of the State party.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dopt appropriate measures in the fields of teaching, education, culture and information, to recognise the multi-ethnic character of contemporary Korean society and overcome the image of Korea as an ethnically homogeneous country, which no longer correspond to the actual situation existing in the State party. In this regard,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o include in curricula and textbooks fo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information about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different ethnic and national groups living on its territory, as well as human rights awareness programmes aimed to promote understanding, tolerance and friendship among all racial, ethnic and national groups.

13. While taking note of discussions currently underway in the State party with regard to the adoption of a proposed Discrimination Prohibition Act, the Committee reiterates the concern expressed in paragraph 9 of its previous concluding observations that the existing legislation of the State party does not respond fully to the requirements of article 4 of the Convention. (Article 4)

The Committee draws the attention of the State party to its general recommendations no. 7 (1985) and no. 15 (1993)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4 of the Convention, and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dopt specific legislative measures to prohibit and punish racially motivated criminal offenc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of the Convention. In this regard,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move expeditiously towards the drafting and the adoption of a Discrimination Prohibition Act.

14. While taking note of the explanations provided by the delegation that as international treaties to which the Republic of Korea is a party automatically become the law of the land, non-citizens enjoy, in practice, most of the rights and freedoms set out in the Constitution on an equal basis with citizens,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strictl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only citizens are equal before the law and are entitled to exercise the rights set out in Chapter II of the Constitution. (Article 5)

The Committee draws the attention of the State party to its general recommendation no. 30 (2004) on non-citizens, and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all appropriate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to

guarantee equality between citizens and non-citizens in the enjoyment of the rights set forth in the Convention to the extent recognised under international law.

15. While appreciating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delegation that the Immigration Control Act is currently being review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refugees and asylum seekers,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only a limited number of asylum seekers have been recognised as refugees sinc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due to a complex procedure and long delay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n asylum claims. (Article 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Korean legislation on refugees and asylum seekers be reviewed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other recognised international standards. In particular,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ss be carried out in a fair and expeditious manner, that asylum seekers and persons granted humanitarian protection be allowed to work, and that comprehensive measures be adopted in order to facilitate the integration of refugees in Korean society.

16. While appreciating the efforts undertaken by the State party to combat trafficking of foreign women for the purpose of sexual exploitation or domestic servitude,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trafficking of foreign women continues to be widespread. (Article 5 (b))

The Committee draws the attention of the State party to its general recommendation no. 25 (2000) on gender-related dimensions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crease its efforts to combat trafficking of foreign women for the purpose of sexual exploitation or domestic servitude and provide adequate information, assistance and support to foreign women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with a particular regard to those with an irregular status.

17.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according to information received, foreign women married to Korean nationals are not adequately protected against possible abuses perpetrated by their husbands or by the international marriage agencies, and encounter various obstacles to their integration in Korean society. (Article 5 (b) and (c) (iv))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dopt appropriate measures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foreign female spouses, *inter alia* by ensuring that their legal resident status in case of separation/divorce does not depend entirely on the proof that the end of the relationship is to be attributed to the Korean spouse's fault.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activities of international marriage agencies be regulated so as to avoid such abuses as excessive fees, withholding of essential information about the future Korean husband and confiscation of identity and travel documents. The Committee further suggests the adoption of all appropriate measures – including provision of adequate information on the country and its traditions and the organisation of Korean language courses – to facilitate the integration of foreign female spouses in the society of the State party.

18.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migrant workers can only be granted non-renewable, 3-year contracts, and face severe restrictions to their job mobility as well as discriminatory treatment and abuses in the workplace, such as longer working hours, lower wages, unsafe or dangerous conditions of work and short length employment contracts (3 years).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that migrant workers, in particular those with an irregular status, encounter obstacles in obtaining legal protection and redress in cases of discriminatory treatment at the workplace, unpaid or withheld wages, or injury or illnesses suffered as a result of industrial accidents. (Articles 5 (e) and 6)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dopt adequate measures, including extension of the length of employment contracts, to ensure the effective enjoyment by migrant workers of their labour rights without any discrimination based on nationality.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effective measures in order to ensure the right of all migrant workers, regardless their status, to obtain effective protection and remedies in case of violation of their human rights by their employer.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include in the next periodic report detailed information on the measures adopted to ensure the equal and effective enjoyment by all migrant workers of their rights under articles 5 (e) and 6 of the Convention.

19. While welcoming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delegation on the number of complaints relating to racial discrimination consider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Committee regrets that the State party has not submitted sufficient information regarding the nature and outcome of these cases. (Article 6)

The Committee requests that the State party provided detailed updated information on the number, nature and outcome of complaints relating to racial discrimination consider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pursuant to article 30 (1)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20.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existing criminal law provisions that may be used to punish acts of racial discrimination, such as articles 307 and 309 concerning defamation or article 311 on libel, have never been invoked in national courts. The Committee also notes that although the Convention forms part of the domestic law and is directly applicable in the courts of the State party, there are no court decisions which contain references to, or confirm the direct applicability of, its provisions. (Articles 6 and 7).

The Committee reminds the State party that the absence of complaints may be an indication of the absence of relevant specific legislation, of a lack of awareness on the availability of legal remedies, or of insufficient will on the part of the authorities to prosecute. In this regard,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provide specific training for those working with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cluding police officers, lawyers, prosecutors and judges on the mechanisms and procedures provided for in national legislation in the field of racism and discrimination.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organise information campaigns and education programmes on the Convention and its provisions.

21.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consider ratify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22.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into account the relevant parts of the Durban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when implementing the Convention in the domestic legal order, in particular in respect of articles 2 to 7 of the Convention, and that it include in its next periodic report specific information on action plans or other measures taken to implement the Durban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at the national level.
23.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s reports be made readily available to the public at the time of their submission, and that the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with respect to these reports be similarly publicised.
24.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sult widely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s well as with organisations of civil society working in the area of combating racial discrimination, in connection with the preparation of the next periodic report.
25. The Committee invites the State party to revise its core document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mmon Core Document in the Harmonised Guidelines on Reporting, recently approved by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bodies (HRI/MC/2006/3 and Corr.1).
26. The State party should, within one year, provide information on the way it has followed up on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paragraphs 11, 13 and 17, pursuant to paragraph 1 of rule 65 of the rules of procedure.
27.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submit its fifteenth and sixteenth periodic reports in a single document, due on 4 January 2010, taking into account the guidelines for the CERD-specific document, as adopted by the Committee at its 71st session.

대한민국 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대한민국

1993년 1월 28일

A/48/38,제405 450항 (최종견해/논평)

협약 약호: CEDAW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부분 발췌>

대한민국

405. 위원회는 1월 28일 개최된 제224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제2차 정기보고서 (CEDAW/C/13/Add.28와 Corr.1)를 검토하였다 (CEDAW/C/SR.224 참조).
406.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최초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여성의 권리에 관한 법적, 행정적 발전의 개관을 보고서에 잘 기술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인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눈부신 경제 개발에 의하여 더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아직 여성의 정치적 역할과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에는 이에 상당한 진전이 없었다.
407. 대표단은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 제2차 정기보고서의 내용과 대한민국이 달성하거나 노력한 발전사항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하였다. 그녀는 위원회에 보고하면서 보고서가 형식과 내용에 관한 일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최초보고서는 제6차 회기에서 위원회가 검토하였음을 밝혔다. 제2차 정기보고서는 주로 협약

이행에 있어서의 진전과 최초보고서 제출 시 응답하지 않았던 질문에 관한 내용이
었다. 제2차 보고서는 여성문제에 관련된 정부부처와 비정부단체가 공동으로 작성
하였다.

408. 대표단은 이 보고서의 서론은 대한민국의 제도적 체계, 법적 및 실질적 평등을 이
루는 데 있어서의 진전,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언급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409. 대한민국 여성의 지위에 관하여 대표단은 산업화의 결과로 여성은 경제활동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1989년에 개정된
이후에 여성은 이제 더 이상 취업제한, 임금차별, 승진기회의 제한 등의 차별을 당
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410. 그녀는 1945년 정부수립 이후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정치적 권리를 향유하게 되었
으나 국가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에 관해서는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직, 교육, 대중매체 분야에서의 참여는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에 따라 여성의 비정부단체에서의 참여가 매우 적극적이라고
설명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1989년의 가족법 개정이 특히 재산권에서 남성과 동
일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함으로써 매우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주장하였다.
411. 대표단은 협약의 주요 규정이 헌법에 통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여성 발
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직도 협
약에 유보조항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고, 장래에 이러한 유보를 철회하기 위하여 지
속적인 노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412. 회의 전 실무그룹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대표단은 실질적 평등을 촉진하
기 위해 취해진 특별조치를 강조하였다.
413. 이러한 조치로 공무원 채용 시 성별구분 제도 폐지, 시·군·구에 가정복지과 신설
하였다. 또한 여성의 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증진시키고 전통적 편견을 종식시

키기 위하여 공무원 및 교사 연수과정에 여성학을 포함시키고, 정부의 정책결정 위원회들에 여성참여비율을 2000년까지 15%로 증가시키기 위한 국무총리령도 발표되었다.

세부 조항 관련 질문

제2-4조

414.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대표단은 제2정무장관실이 특히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활동에의 여성참여 등에 관한 여성문제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제2정무장관실은 대중여론을 조사하여 여성의 지위에 관한 정책권고안을 작성한다. 또한 다양한 여성관련 프로그램의 조정과 이행에 관련한 부서들 간의 연락을 담당하고 있다.
415. 위원회는 여성의 이익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정한 사실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칭찬하였다. 그러한 사례로는 1987년의 남녀고용평등법, 1989년 가족법 개정, 1989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등 남녀평등의 문제를 규제하기 위한 것들이 있다. 위원회는 개정 근로기준법(제56조)에 “노동부장관에 의해 승인된 경우 이외에 어느 여성도... 22시부터 6시 사이에 작업하거나 휴일에 작업하도록 승인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협약 제57조는 “사용자는 비록 단체교섭합의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8세 이상의 모든 여성에게 1일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 규정에 관련하여 노동부가 승인하기로 결정한 예외적인 경우가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 질문하였다. 답변에서 대표단은 제56조(야간 및 휴일 작업 금지)는 1989년 3월에 개정되어 현재는 “근로자의 동의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이외”로 개정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녀는 여성근로자의 권리는 확대되어 근로자의 동의가 노동부장관의 승인 보다 우선한다고 설명하였다.
416. 노동부장관이 1,000명 이상의 여성근로자를 고용하는 20개 사업장에 보육원을 건립하도록 한 권고사항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에서, 대표단은 1992년 9월

현재 대한민국에는 4,366개소의 보육원이 있으며 그 중 27개소는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고, 41개소는 건설 중에 있다고 하였다. 정부와 비영리단체가 이러한 보육원의 건립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수용중인 각 연령별 비율은 3세 이하의 아동이 24,370명(20.2%)이며, 3세에서 5세 사이의 아동은 95,857명(79.8%)이다.

제5조

417. 대중매체, 교육, 취업에 있어 여성의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대표단은 위원회에 설명하기를, 대한민국 정부는 여학생들이 전문직에 대하여 건강하고 계몽된 태도를 가지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신설 공영 교육방송국의 “전문가의 세계”라는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418. 교육과 취업분야에 관련하여 그녀는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를 바꾸기 위한 조기교육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성차별 폐지를 위한 장기전략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또한 여고생들의 전문직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990년, 대한민국 정부는 여중생을 위한 모범 직업안내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이를 시·도 교육위원회에 배포하였다.
419. 1990년 이후 남녀공학은 모든 초등학교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었으며, 모든 중학교의 54.3%와 고등학교의 38.7%가 남녀공학이다.
420. 여성폭력 문제의 성격과 정도에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여성지위위원회가 제36차 회기에서 채택하고, 그 후 경제사회이사회가 결의안 1992/18로 채택한 모든 형태의 여성폭력 철폐에 대한 결의안 초안의 후원자였다고 대표단은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대중인식 제고프로그램, 교육 및 지역사회의 역할에 관한 대중매체 홍보, 매맞은 여성을 위한 일시보호소와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설립, 경찰서 상담원과 직통전화를 위한 안내서와 편람 배포, 소책자, 팸플릿, 스티커 배포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

제6조

421. 성매매금지법과 동법 시행령 위반자에 대한 구체적 형벌이나 구금기간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한 죄를 범한 자는 동법에 의하여 최고 3만원 (40달러)의 벌금에 처하거나 구속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성매매를 선동하거나 남에게 성매매 행위를 강요한 자, 또는 아내를 그러한 목적으로 제공한 남편은 최고 10만원(133달러)의 벌금에 처하거나 최고 1년의 구속에 처할 수 있다.
422. 성매매여성을 위한 재활원 운영, 이를 수혜 받은 성매매 여성의 숫자와 이들 여성이 취업 시까지 사후관리를 제공하는지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대표단은 성매매는 성매매금지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으며, 기술 및 문화교육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성매매 발생과 복귀를 예방하기 위하여 3개소의 여성직업지도원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제7조

423. 제2차 보고서에 의하면 60명의 여성 국회의원이 있으나, 단지 26.7%만이 지역구에서 선출되었으며 나머지 73.3%는 비례대표제에 의하여 국회의석을 차지하였다고 위원회는 지적하였다. 비례대표제와 선거제도에 관한 설명이 요청되었다. 대표단은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는 두 종류의 선거구가 있으며 이는 지역구와 전국구라고 설명하였다. 전국구 의석은 지역구 의원 선거를 위한 총선에서 5석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게 비례적으로 배정된다고 하였다. 의석이 없거나 지역구 총선에서 5석 또는 그 이하를 획득하였으나 총 유효투표수의 0.3%를 초과한 투표수를 얻은 정당에게는 우선적으로 1석을 배당하게 된다.
424. 위원회는 지난 국회에는 총 299명의 의원 중에서 단지 6명만이 여성이었으며 1992년 3월 24일 선거에서는 여성 국회의원의 수가 3명으로 오히려 감소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이유로 여성들이 고위직에 진출을 하지 못하며, 여성들의 동등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를 질문하였다. 대

표단은 1988 1991년 제13대 국회에서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전국선거구에서 선출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지역선거구에서 여성후보자는 아무도 선출되지 못하였다. 국회의 구성은 정당에 의존하고 있으며 4개 주요 정당 중 3개 정당이 합당하였기 때문에, 선거구에서 정당을 대표한 여성의원의 수는 감소하였다.

425. 공적 영역에 있어 그녀는 정치와 의사결정과정 참여하는 여성의 수준은 별로 변화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결정 단위에는 여성이 아주 적다. 문화적, 사회적 활동에 관련해서는 소비자운동과 일부 여성단체는 성공적이거나 다른 일부 여성단체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8조

426. 외교관 중 여성 비율에 대한 질문과 국제 분야에서 고위직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증대 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며, 대표단은 1992년 말 현재 58명의 여성이 외교관으로 있으며, 이는 전체의 4.9%에 해당한다고 말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 분야에서의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제9조

427. 제9조 유보의 철회에 관련하여 대표단은 이 사항에 관한 공청회가 완료되었으며, 개정과정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제10조

428. 1987 1991년 제6차 사회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평가 중 여성문제 관련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여, 대표단은 제7차 계획위원회가 규명한 주요 문제, 즉 교육에서의 불평등과 남녀가 분리된 훈련 등의 문제를 요약하여 설명하였다. 전통적인 성역할과 편견 때문에 성별로 상이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상이점은 교과과정, 교재, 전공분야선택, 교육 및 직업 안내서, 과학기술교육의 기회, 여성기관에서의

연수, 성차별 문제에 관한 교사의 인식부족 등에 나타나고 있다.

429. 기술직업학교의 전체 학생 중 단지 1.4%만이 여학생이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들은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의 숫자가 전공분야별로 나와 있는 통계치가 있는지, 그리고 더 많은 여성이 기술직업훈련 받고 대학에서 이공계 공부를 하도록 권장하는 조치가 있는지 질문하였다. 또한 위원들은 여성들이 비전통적 분야에서 경력을 쌓도록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장학금과 후원금이 여성에게 제공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대표단은 대부분의 남학생이 공업, 농업 및 과학을 전공하는 반면 상업계 고등학교에는 많은 수가 여학생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녀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관한 자료를 성별로 제공하였다. 또한 그녀는 대한민국 정부는 더 많은 여성들이 기술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하여 여자고등학교를 설립하였으며, 그러한 학교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 여자대학교는 공과대학을 설치 준비 중이라고 하였다.

제11조

430. 위원회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근로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위원들은 그 원칙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 원칙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대표단은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에 동법의 엄격한 시행을 위하여 고용성차별 폐지를 위한 지침을 모든 사업체에 제공하였으나, 사용자가 많은 차별적인 관행을 폐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차별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업무의 평등성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지침은 없다.
431. 노동인구 중 이혼여성 및 별거여성의 비율에 관하여 대표단은 1988년 노동인구의 결혼비율은 1000명당 62.7명, 이혼율은 1000명당 1.7명이었으나, 1990년에는 결혼비율은 동일하나 이혼율은 1000명당 1.8명으로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432. 전통적 노동집약적 제조수출업종의 이전으로 인한 실직 여성들에 대해, 이들의 취업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산업

구조의 변화를 인식한 이후 직업훈련의 중심을 전문직 및 기술직 분야에 두게 되었다고 대표단은 답변했다. 이로써 노동집약적인 분야에서 실직한 여성근로자를 위한 재훈련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 1991년 대한민국 정부는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학교를 개설하였으며, 이 학교에서는 사무자동화, 금속공예, 전자, 기계설계, 패션디자인에 관한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433. 그녀는 산업별 여성실업률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통계자료를 제출하였다.
434. 여성근로자들이 전통적 직종에서 일하기 위한 훈련을 받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대표단은 비전통적인 분야에서의 여성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안성 여성직업훈련센터를 설립하여 기술인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와 일부 여성단체는 여성을 위한 비전통적 직종 개발을 위하여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435. 대한민국 정부가 높은 소득과 지위를 보장하는 직업을 위한 여성교육을 장려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대표단은 모범 직업안내 프로그램을 언급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하이테크 직업훈련과 직장연수를 증대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436. 복지에 관하여 대표단은, 가정이 복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사회보장제도는 가정 다음의 부차적인 것이라는 원칙에 기반 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빈곤계층을 위한 선별적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설명하였다. 정부의 사회복지는 선택적인 반면에 여성복지프로그램은 아동과 빈곤계층에게 집중되어 있다.

제12조

437. 대표단은 모자가정과 미혼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1989년 4월에 모자복지법을 제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동법에 따라 정부는 모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77개소의 모자건강센터를 설립하였다.

-
438. 낙태가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지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허용되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대표단은 형법에 의하여 낙태는 금지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 법을 위반하는 자는 1만원(12달러)의 벌금에 처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된다고 하였다.
439. 대한민국의 가족계획정책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대표단은 대한민국은 가족계획에 의하여 비교적 성공적인 인구조절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 결과 인구증가율은 1960년 3%에서 1992년에는 0.96%로 떨어졌으며, 같은 기간동안 전체 출산율은 6%에서 1.6%로 낮아졌다. 주요 가족계획프로그램으로는 사회적지원프로그램, 정부제공 피임서비스 및 불임수술이 있다. 대한민국이 성공한 이유의 하나는 여성계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440. 에이즈(AIDS)가 여성에 미치는 영향, 혈청검사 양성반응 여성을 돕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대표단은, 1987년 12월에 제정된 에이즈예방법에 따라 취약집단에 정기의료검진이 시행되며 모든 헌혈혈액은 검사되고, 감염자는 교육과 상담을 제공 받는다고 하였다. 1992년 12월 현재, 혈청검사 양성반응자는 245명이며, 그 중 27명이 여성이고 11명은 상업적 성매매 여성이었다. 1989년 이후에는 양성반응자가 더 이상 보고되지 않았다. 에이즈로 보고된 10건당 8건이 치명적이었다.

제13조

441. 위원회 위원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모자가정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그 문제가 얼마나 확산되어 있고 독신모가 발생한 주원인이 무엇이기에 모자복지법을 제정하게 되었는지 질문하였다. 대표단은 독신모의 주요 원인은 배우자의 사망(75%), 이혼(12%), 배우자에 의한 유기(3%), 배우자의 소재불명(3%), 그리고 미혼모(3%)라고 설명하였다. 모자가정의 문제는 주로 빈곤, 자녀교육, 정신적 불안정이다. 모자복지법에 의하면 18세 이하의 자녀를 부양하는 저소득 독신모 가정은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그녀는 정부가 그러한 가정에 자녀의 양육과 중, 고등학교 및 직업훈련을 포함하는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한다고 답변하였다. 1992년부터 그러한 가정은 영구임대아파트 배정 시 우선권을 갖는다.

제15조

442. 여성이 남편의 동의없이 은행용자를 얻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보유한 자는 누구든지 은행용자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계약 체결 시 남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443. 여성농민도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토지를 상속 받을 수 있고 여성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에 관한 법의 개정 가능성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대표단은 가족법은 가정에서 여성의 동등권을 보장하며, 재산에 관하여서는 특히 더 그러하다고 답변하였다. 아내와 남편 모두 결혼 후에 획득한 재산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재산의 동등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개정 가족법에 따라 정부는 1990년에 상속법을 개정하였고,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공제를 증액시켰다. 이는 미취업 배우자 특히 가정주부에게도 상당한 재산권이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따라서 여성농민도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토지를 상속 받을 수 있다.

제16조

444. 당사국의 협약 제16조 1항 (g)절의 유보에 관하여, 대표단은 호주로서 남편의 이름을 쓰는 것은 관습이며 이에 대한 반대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호주법의 개정이 시작되면 그 관습은 변화될 수 있다.
445. 비록 아내가 가정 밖에서 일한 적이 없더라도 축적된 재산에 대해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남편과 아내가 재산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개정 가족법에 따라 호주적, 세금, 가족 구성원간 관계 재설정 등을 위한 가정법원소송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대표단 답변하였다.
446. 가족법 개정안에 의하면 이혼에 의한 아동의 양육권은 법정에서 결정된다. 이 규정이 어머니에 대한 차별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대표단은 이혼에 의

한 아동의 양육권은 부모의 상호합의로 결정되거나 현행 가족법령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아내가 상호합의에 의하여 자신의 뜻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47. 아동의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에 관한 기준이나 법체계가 있는가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 대표단은 양육과 교육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 제837조 (이혼 및 아동의 양육과 교육에 관한 책임)에 따라 가정법원이 아동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여건을 고려하여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가정법원은 언제든지 그러한 규정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절한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최종견해

448. 위원회 위원들은 질문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한 대표단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다수의 사안에 관하여 추가설명이 요청되었으며, 여기에는 정치생활에의 여성참여, 경제 분야에 여성의 더욱 적극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 가족권리와 교육 및 보건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다른 위원들은 제2차 정기보고서는, 대한민국의 고도의 경제성장에 비추어 봤을 때의 통계수치와 노동법, 여성문제를 담당하는 다른 기관들 간의 조정문제, 광범위한 현상으로 보이는 불임시술 등에 관한 정보가 누락되었다고 우려를 표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유보한 협약의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으며 대한민국이 유보 철회를 고려하기를 희망하였다.
449. 상세한 답변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의장은 대한민국에는 가족법, 전통, 사업장에서 차별 등 여성을 차별하는 장애물이 아직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녀는 제3차 정기보고서는 보다 개선될 것이며, 위원회가 요청한 모든 필요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포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450. 그녀의 최종 답변에서, 대한민국 대표단은 대한민국 정부가 유보 철회를 고려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에 관하여 그녀는 대한민국은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위원들에게 확인하였다. 출산휴가, 국가기관과 가족법 기능 등의 사안에 관하여 다른 세부적인 내용이 제공되었다.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Republic of Korea. 28/01/93.

A/48/38,paras.405 450. (Concluding Observations/Comments)

Convention Abbreviation: CEDAW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Republic of Korea

405.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second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EDAW/C/13/Add.28 and Corr.1) at its 224th meeting, on 28 January (see CEDAW/C/SR.224).
406. The Committee considered that the report gave a good overview of legal and administrative developm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in terms of women's rights since the submission of the initial report, testifying to the continued commitment of the Government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However,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the economy, which had brought an increasing number of women into the economically active group, had yet to bring about a corresponding advancement in terms of women's political role and their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407. In her introductory statement, the representative briefly described the contents of the second periodic report and the developments that had been achieved or attempted. She informed the Committee that the report had been formulated according to the general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reports and the initial report

that had been reviewed by the Committee at its sixth session. The second periodic report dealt mainly with the progres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also with the questions unanswered at the time the initial report was submitted. The second periodic report had been prepared jointly by the ministries and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concerned with women's affairs.

408. The representative said that the introductory part of the report mentioned the institutional framework, the progress made in achieving de jure and de facto equality, and the policies to abolish the discrimination faced by women in the Republic of Korea.
409. In addressing the status of women in her country, the representative pointed out that as a result of industrialization, women had become actively involved in economic activities and, since the revision in 1989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enacted in 1987, women no longer faced such discrimination as restrictive recruitment, wage differentials and limited opportunities for promotion.
410. She said that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45, women had enjoyed the same political rights as men; however, their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decision making process was still unsatisfactory. Yet their participation in the civil service, education and the mass media was gradually improving. She explained that women were very active in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freedom of associat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Most importantly, she claimed, the revision of the Family Law in 1989 had been a significant breakthrough in providing the same status to women as men, especially in the area of property rights.
411. The representative said that the main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had not only been integrated into the Constitution but had also become the legal basis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in the country. The Committee noted that the Government still maintained reservations to the Convention and hoped that, in the future, a sustained effort would be made to withdraw those reservations.
412. In replying to the questions that had been submitted by the pre session working

group, the representative highlighted specific measures aimed at accelerating the process of achieving de facto equality.

413. Those measures included the abolition of the sex segregated recruitment system for government employees, the establishment of Family Welfare Divisions in cities, provinces and districts; the inclusion of women's studies in courses for the training of civil servants and teachers to enhance social consciousness of equality and end traditional prejudices against women, and the Decree of the Prime Minister intended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female participants in policy making committees of the Government to 15 per cent by the year 2000.

Questions related to specific articles

Articles 2-4

414. In answer to a question, the representative said that the Ministry of Political Affairs II was in charge of women's affairs, particularly those related to women's participation in various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activities. It surveyed public opinion and made policy recommendations concerning the status of women. It also liaised with the departments concerned with coordinating and implementing various programmes on women.
415. The Committee praise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act that a number of special laws concerning women's interests had been enacted or revised. Such laws included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of 1987, the revised Family Law of 1989 and the revised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of 1989 to regulate the question of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The Committee noted that the revised Labour Standard Act (art. 56) stipulated: "no female ... shall be authorized to work between the hours of 22.00 and 6.00 or on holidays unless otherwise approved by the Minister of Labour". According to article 57 "an employer shall be forbidden to place any female 18 years or older on overtime work for a period exceeding two hours a day, six hours a week and 150 hours a year, even if provided for in a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The Committee asked what kind of exceptions the Ministry of Labour had decided to authorize with regard to those

provisions. In response, the representative said that article 56 (Prohibition of night and holiday work) had been amended, in March 1989, to read "unless otherwise approved by the Minister of Labour with the consent of the employee". She explained that the right of the female employee had been expanded in that the consent of the employee preceded the authorization of the Minister of Labour.

416. In reply to another question concerning the extent to which the Ministry of Labour's advice had been followed that 20 industries with over 1,000 women workers should establish day care centres at the workplace, the representative said that, in September 1992, the total number of day care centres in the Republic of Korea was 4,366, of which 27 facilities were in the workplace, and 41 were in the process of being established. Government and non profit organizations subsidized the establishment of those centres. The percentage of each age group being accommodated was as follows: 24,370 (20.2 per cent) children below three years of age and 95,857 (79.8 per cent) children between three and five years of age.

Article 5

417. With regard to the measures taken to abolish the traditional stereotype of women in the mass media, education and employment, the representative informed the Committee that, in the field of mass media, the Government was sponsoring a programme entitled "The World of Professions" on the newly established Public Education Broadcasting Station to encourage girl students to acquire a healthy and enlightened attitude towards careers.
418.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employment, she said that a long term strategy to eliminate sexual discrimination was important, providing education at an early age to change traditional attitudes towards women. The Government also operated special programmes for high school girl students to promote desirable attitudes towards careers. In 1990, the Government had adopted a Model Career Guidance Programme for middle school girl students, which had been disseminated to the education committees in cities and provinces.
419. Since 1990, coeducation was widely practised in all primary schools: 54.3 per cent

of all middle schools and 38.7 per cent of all high schools were coeducational.

420. With regard to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problem of violence against women, the representative said that her Government had been a sponsor of the draft resolution on violence against women in all its forms adopted by the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at its thirty sixth session and subsequently adopted by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s resolution 1992/18. The Government had accordingly adopted various measures, including public awareness programmes; mass media information on the role of education and the community; provision of shelter houses for battered women, counselling centres for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the workplace, guides and a manual for counsellors and hot lines at police stations; and the dissemination of brochures, pamphlets and stickers.

Article 6

421. In reply to a question on the specific penalties or terms of imprisonment for offenders under the Prostitution Prevention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on the Prevention of Prostitution, the representative said that, according to the Act, any person found guilty of prostitution, or of inciting another to commit such an act, could be fined up to 30,000 won (US\$ 40) or be punished by imprisonment. In addition, those who provoked or forced others into prostitution, or a husband who provided his wife for such purposes, could be fined up to 100,000 won (US\$ 133) or be imprisoned for a maximum term of one year.
422.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rehabilitation centres for prostitutes, the number of prostitutes who had benefited and whether any follow up was provided until they found employment, the representative explained that prostitution was prohibited by the Prostitution Prevention Act and three women's vocational guidance centres were in operation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prostitution and to reinstate prostitutes in society through technical and cultural training. She provided statistics.

Article 7

423. The Committee noted that it was stated in the second periodic report that there were

60 women legislators, but only 26.7 per cent had been elected from electoral districts, while the remaining 73.3 per cent occupied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as a result of the national representation system. Clarification of the na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nd the electoral system was sought. The representative explained that there were two categories of constituency to elect members to the National Assembly, namely, the local electoral districts and the national electoral districts. The allocation of seats to national electoral districts was proportional to each political party that gained five or more seats in the general election for the local constituencies. In cases where there were political parties that had obtained no seat or that had gained five or fewer seats in the general election for local constituencies, but had obtained a number of votes exceeding 0.3 per cent of the total valid votes, then one seat would be allotted preferentially to each of those political parties.

424. The Committee noted that, in the last National Assembly, only 6 out of a total of 299 deputies were women, and in the election of 24 March 1992 the number of female parliamentarians had further dropped to 3. Members asked what was preventing women from attaining high positions and what had been done to ensure their equal representation. The representative said that in the Thirteenth National Assembly, for the term 1988 1991, all the parliamentarians had been elected in the national electoral districts. However, no female candidates in the local electoral districts had been successful. Since the composition of the parliament depended on the political parties and three of the four main parties had merged, the number of female parliamentarians representing the parties in the electoral districts had accordingly decreased.

425. Concerning public affairs, she said that the level of women in politics and in decision making had not changed significantly. Women were poorly represented in decision making positions in the Government. In terms of cultural and social activities, the consumers' movement and some women's organizations had been successful, although some women's organizations suffered from financial difficulties.

Article 8

426. In answer to a question on the percentage of women in the diplomatic corps and

what had been done to increase female participation in higher positions in the international field, the representative stated that there were 58 women in the diplomatic corps, representing 4.9 per cent of the total at the end of 1992. The Government was developing a training programme to expand female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field.

Article 9

427. In connection with the withdrawal of the reservation to article 9, the representative said that the public hearing on that matter had been completed and the revision process was under way.

Article 10

428. Replying to a question concerning an assessment of the Sixth Five Year National Socio Economic Development Plan, 1987 1991, with regard to women's issues, the representative outlined the major problems that had been identified by the Committee on the Seventh Plan, such as the lack of equality in education and sex segregated training. A different educational environment had been created for each sex because of traditional sex roles and prejudices. The differences covered curricula, textbooks, choice of fields of study,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opportunities to study science and technology, training in women's institutions, and teachers' lack of awareness of gender issues.

429. As girl students accounted for only 1.4 per cent of the student body of technical vocational schools, members wished to know whether there were any data on the number of girl students attending vocational high schools, according to the subjects that they specialized in, and whether measures were being taken to encourage more girls to follow technical vocational training or to study technology at universities. They also wished to know how many scholarships and fellowships had been granted to girls to encourage them to follow careers in non traditional fields. The representative indicated that male students constituted the majority of students specializing in engineering, agriculture and science, while females were highly represented in commercial high schools. She provided statistics on vocational high

school enrolment by gender. She indicated further that the Government had established a girls' high school to encourage more girls to pursue technical vocational training and that the number of such schools would be increased. One women's university wa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college of engineering.

Article 11

430. The Committee noted that the revised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included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work regardless of the workers' sexual identity. Members asked whether that principle had been put into practice and whether there had been difficulties in applying it. The representative said that, in 1991, the Government had furnished all industries with guidelines for eliminating sexual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in order to help ensure the strict enforcement of the Act; however, employers had not abandoned many discriminatory practices. There were no concrete standards for determining discrimination nor were there concrete guidelines for determining the equal nature of work.
431. Asked about the percentage of divorced and separated women in the labour force, the representative said that, in 1988, the marriage rate was 62.7 per 1,000 persons and the divorce rate was 1.7 per 1,000 persons in the labour force; however, the divorce rate had risen to 1.8 per 1,000 persons in 1990 while the marriage rate had remained unchanged.
432. The question was raised whether efforts had been made to procure employment for women who had lost their jobs in the traditional labour intensive manufacturing trade, as it was transferred elsewhere. The representative stated that the Government was shifting the emphasis of its vocational training to the professional and technical fields after recognizing the changed structure of the industry, which was expanding the opportunities for retraining female workers who had lost their jobs in the labour intensive sectors. In 1991, the Government had opened a vocational training school for women, which provided courses on office automation, metal crafts, electronics, machine design and fashion design.
433. She provided statistics in answer to a question on the unemployment rate of women

according to industrial sector.

434. Asked whether women workers were being trained to perform in traditional occupations, the representative said that, in order to promote women's advancement into non traditional fields, the Government had founded the An Sung Vocational Training Centre for Women, which provided training programmes for technicians. The Government and some women's organizations were also concentrating their efforts on developing non traditional occupations for women.
435. In answer to the question whether the Government encouraged women's education for employment that would give them higher pay and status, the representative referred to the Model Career Guidance Programme. The Government was also trying to increase high tech vocational training and in service training.
436. Regarding welfare, the representative said that the Government provided selective welfare programmes for the less privileged, based on the principle that the family was primarily responsible for welfare and that the social security system was secondary to the family. The Government's social welfare was based on selection, while the women's welfare programme was focused on children and the less privileged.

Article 12

437. The representative said that, in April 1989, the Maternal Child Welfare Act was enacted to support fatherless families and unwed mothers. Under the Act, the Government had constructed 77 maternal and child health centres to improve the health of mothers and children.
438. Asked whether abortion was legally permitted and, if so, under what circumstances, the representative explained that, according to the Criminal Act, abortion was prohibited. Offenders were fined 10,000 won (US\$ 12) or imprisoned for up to one year. However, abortion was allowed in exceptional cases under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
439. In answer to a question concerning the family planning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resentative said that the country had had comparative success in controlling its population by means of family planning. As a result, the rate of population increase had dropped to 0.96 per cent in 1992 from 3 per cent in 1960; while the total fertility rate had dropped to 1.6 per cent from 6 per cent in the same period. Major family planning programmes included social support programmes, government supplied contraceptive services and sterilization operations. One of the reasons for the country's success was the activities of the women's groups.
440. Replying to a question on the effects of AIDS on the situation of women and on the action taken to cater to the needs of those women who were sero positive, the representative said that, under the AIDS Prevention Act of December 1987, regular medical check ups were provided for vulnerable groups of the population, all donated blood was tested, and education and counselling were provided for those who were infected. At 31 December 1992, there were 245 sero positive persons, including 27 women, of whom 11 were commercial sexual workers, but since 1989 no further cases had been reported. Out of 10 reported cases of AIDS, 8 had been fatal.

Article 13

441. Members noted that the Government of Korea "had emphasized the protection of fatherless families" and asked how widespread the problem was and what the main reasons were for the single mothers that had led to the enactment of the Maternal Child Welfare Act. The representative explained that the main reasons for the single mothers were death of spouse (75 per cent), divorce (12 per cent), abandonment by spouse (3 per cent) unknown whereabouts of spouse (3 per cent) and unmarried mothers (3 per cent). The problems of fatherless families were mainly poverty, child education, and mental insecurity. According to the Maternal Child Welfare Act, low income female headed families with children of 18 years or younger were entitled to protection. She said that the Government had been providing such families with the means to raise and educate their children (including middle and high schools and vocational training). From 1992, such families had priority over others in the allocation of permanent rental apartments.

Article 15

442. Asked whether women could obtain a bank loan or conclude contracts without the consent of their husbands, she said that anyone who had an income or who owned property was qualified to obtain a bank loan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consent of the husband was not necessary in order to conclude a contract.
443. In answering a question on the prospect of changing the law concerning inheritance so that women farmers could inherit land from their deceased husbands and not be bypassed because of their sex, the representative said that the Family Law provided for the equal status of women in the family, especially regarding property. Both wife and husband had an equal right to property acquired after marriage, and had the right to ask for an equal division of such property.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Family Law, the Government had revised the inheritance law in 1990 and had increased the inheritance tax allowance for spouse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an unemployed spouse and especially a housewife also had significant property rights. Accordingly, women farmers could inherit land from their deceased husbands.

Article 16

444. Regarding the State party's reservation to article 16, paragraph 1 (g), the representative indicated that it was the custom to use the paternal name as the family name and there was rarely any objection to that custom; however, when the revision of the Family Registration Act began, that custom could change.
445. In answer to a question about the equal right of the husband and wife with regard to property based on the extent of their contribution to the accumulated assets, even if the wife had never worked outside the home, the representative explained that,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Family Law, the Government had revised the provisions on family registration, tax, and domestic litigation to re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members.
446. According to the draft of the bill revising the Family Law, the custody of children upon divorce would be decided on by the court. A question was raised as to whether

that provision constituted discrimination against mothers. The representative indicated that the custody of the children upon divorce was determined either by the couple's mutual agreement or the court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family code. That meant that if the wife could not achieve her wish on the basis of mutual agreement, she could go to court.

447. Asked whether there was a criterion or jurisprudence on who was to have custody of the children, the representative said that, according to article 837 (divorce and responsibility for fostering and education of the children), in the absence of an agreement on matters concerning fostering and education, the Family Court could decide on matters necessary for such fostering and education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age of the children, the property status of the father and mother and any other circumstances. The Family Court could also at any time change such provisions or take any other proper disposition.

Concluding observations

448. Members thanked the representatives for the detailed answers that had been provided to the questions. Additional clarification was sought on a number of points, including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political life, the measures envisaged to encourage women to take a more active part in the economic sector, and the provisions on family rights, education and health. Other members expressed their concern that the second periodic report lacked statistics and information on labour laws, especially in view of the country's high rate of economic growth, on the coordination of the different bodies dealing with women's issues and on the practice of sterilization, which seemed to be a widespread phenomenon. The Committee also expressed its concern about the reservations to the Convention made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oped that it would consider withdrawing those reservations.
449. In expressing her appreciation for the detailed answers, the Chairperson said that there were still some obstacles discriminating against women in the Republic of Korea, such as family laws, traditions and discrimination at the workplace. She hoped that the third periodic report would be better and would include all the necessary information and statistical data that had been requested by the Committee.

450. In her final reply, the representative of the Republic of Korea indicated that her Government would attempt to withdraw the reservations. On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decision making, she assured members that the Republic of Korea would do its utmost to improve the situation of women. Other details were provided on such issues as maternity leave, the functioning of the national machinery and family law.

대한민국 3, 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대한민국

1998년 7월 10일

A/53/38/Rev.1, 제347 386항 (최종견해)

협약 약호 : CEDAW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부분 발췌>

대한민국

347. 위원회는 1998년 7월 7일 개최된 제400차 및 제401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제3차 및 제4차 정기보고서(CEDAW/C/KOR/3과 CEDAW/C/KOR/4)를 검토하였다. (CEDAW/C/SR.400 and 401 참조).

당사국의 발표

348. 대표단은 제4차 보고서는 25개 비정부단체 대표와 7명의 여성정책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대한민국은 1996년 8월에 협약 제20조의 개정안을 비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349. 대표단은 협약의 비준으로 대한민국 여성의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1993년의 제2차 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위원들의 논평은 특히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시민권 관련 성차별 법률의 철폐 등에 관한 여성정책의 이행에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었다.

-
350. 대표단은 여러 주요 법적 개혁, 즉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1991년 모자복지법, 1993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을 설명하였다. 1997년에 국적법 개정이 발효되었으며, 제9조에 대한 대한민국의 유보는 곧 철회될 것이다.
351. 대표단은 협약을 널리 알리고자 추진한 정부의 노력들 중 1994년 대한민국 협약비준 10주년 기념 심포지움과 1996년 협약 해설서 출판 등을 설명하였다.
352. 1998년 2월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인권의 필수요소로서의 여성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정책우선순위로 택하였다. 정부는 대한민국 사회 제반영역에서의 여성참여 증진을 위해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여성정책 기본계획(1998 - 2002)을 도입하였다. 정부는 또한 2002년까지 각종 정부위원회에 여성의 비율을 30%로 증가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353. 대표단은 제4차 세계여성대회가 끼친 지대한 영향을 지적하고 북경행동강령이 여성의 더 많은 권한강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하였다. 대회 이후 조처로 정부는 여성의 진보를 위하여 10개 정책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으며, 여기에는 아동보호 시설의 확충, 아동보호서비스의 향상, 여성정보네트워크의 수립 등이 포함되었다.
354. 대표단은 여성의 정치참여 증대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사회의 민주적 발전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였다. 매년 공공분야에 책정된 수의 여성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가 제도화되었으며, 여성채용비율은 1996년의 10%에서 2000년까지는 2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55. 대표단은 경제위기와 그 잠재적인 악영향이 대한민국 여성, 특히 저소득 모자가정에 가하는 충격에 대해 언급하고, 정부는 이러한 가정에 안전망을 제공하고 가정파탄을 막기 위한 노력을 증대시킬 것임을 밝혔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한 정부프로그램도 강화할 예정이다.
356. 대표단은 고용평등을 위한 법률과 규정은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채용, 배치, 승진

에 있어서 양성평등은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기대만큼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357. 발표를 마치면서 대표단은 비록 유교사상이 아직도 남녀평등의 완전한 실현을 가로막고 있지만, 과거의 전통에서 완전한 양성평등, 대의제 민주주의, 번영의 공유로 바뀌어 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있다고 하였다. 그녀는 법률에 따른 동등한 보호로 덕분에 대한민국 여성은 국가건설 과정에서 협력적 파트너로 등장하게 될 것이며, 21세기의 세계 양성평등의 르네상스에 자신들만의 새 장을 쓰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하였다.

위원회의 최종 논평

서론

358.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고위직 대표단을 환영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보고서, 특히 잘 구성되어 있고 종합적인 제4차 보고서를 칭찬하였다. 그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구성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여성현황과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치적 의지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들의 질문에 정부가 빠짐없이 답변하여 보고서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 준데 대해 감사한다. 위원회는 또한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비정부단체에게도 감사를 드린다고 하였다.

긍정적 측면

359. 위원회는 여성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채택한 결정적인 조치와 양성평등의 관점을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하기 위한 대책을 환영하였다.
360. 위원회는 여성을 위한 혁신적인 국가기구의 수립과 강화에 환영을 표하였으며, 특히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환영을 표하였다.

-
361.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비정부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보호법 도입,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센터와 긴급피난처 설립, 가정폭력과 기타 성희롱의 신고와 공식대응을 장려하는 인식증진캠페인 등을 추진한 사실을 환영하였다.
362. 위원회는 여성발전 국가계획 및 이에 따른 10대 우선과제 선정을 통하여 북경행동강령을 이행하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노력에 만족을 표시하였다. 위원회는 북경행동강령과 여성발전계획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5년에 제정한 여성발전기본법과 7,000만 달러의 여성발전기금을 높이 평가하였다.
363. 위원회는 국내법을 협약에 부합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다수의 법률과 법률조항을 채택하고 개정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특히 포괄적인 방법으로 남녀평등문제를 취급할 목적으로 제정된 1998년 가정폭력방지법과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그것이다. 위원회는 1997년 국적법 개정과 대한민국 정부가 협약 제9조 유보의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영하였다.
364.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사회경제적 분야에서 광범위한 정책, 전략, 조치를 취한 사실을 높이 평가하고, 여성을 위한 비전통적인 직종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도입 등 교육분야에서의 업적을 강조하였다.
365. 위원회는 여성차별 금지가 다수의 헌법 조항에는 물론 1989년 남녀평등고용법에 정의되어 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여성근로자를 위한 출산혜택과 특정계층의 근로자에 유리한 혜택을 높이 평가하였다.

협약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어려움

366. 위원회는 대한민국 여성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경제위기의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고,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책과 입장을 지적하였다.
367. 위원회는 뿌리깊은 남성에 대한 가부장적 가치와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 고정

관념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민법이 개정되기는 하였지만 동성동본 혼인금지 등의 차별규정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지적하였다.

주요 관심 및 권고사항

368.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협약에 대하여 유보조항을 둔 데 대하여 우려한다.
369.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2000년도 이전에 협약에 대한 유보들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도록 촉구한다.
370. 위원회는 법률과 정책이 여성의 생활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보고서에 수록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
371. 위원회는 이후의 보고서에서는 법률 및 정책의 이행과 집행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지난 보고서 제출 이후 이루어낸 진전에 관한 비교분석을 성별로 구분된 통계자료 형태로 포함하도록 권고한다.
372. 위원회는 비록 헌법에 차별의 정의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 정의가 협약 제1조에 명시된 목적이나 효과를 가지는 차별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위원회는 또한 1989년 남녀고용평등법은 종교적 신념, 정치적 선호, 연령, 장애에 기반한 차별도 포함하는 완전한 의미의 차별정의를 포함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373. 위원회는 헌법과 모든 관련 법률에 협약 제1조를 반영하는 차별의 정의를 포함하도록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정부가 여성의 법률지식을 증대 시키기 위하여 정보를 배포하고, 법적조언의 제공을 보장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진척시키고,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위한 방안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374. 위원회는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에 여성에 대한 폭력이 퍼져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

-
375. 위원회는 특히 법관, 보건담당자,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성 인지적 훈련 등 포괄적 조치를 도입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다. 또한 적절한 보호소를 제공하고 교육 및 대중매체에 비폭력적 분쟁조절의 모델을 포함시키도록 권고한다.
376. 위원회는 정치, 정책결정구조 및 사법제도에 여성의 대표성이 불충분하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 모든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여성의 승진에 이바지하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377. 위원회는 여성의 정치참여 및 정치교육 증대, 여성지도자에 대한 대중인식 제고, 특정대상과 할당제의 지속적 장려, 정당의 여성대표 최소 30% 할당제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을 위해 더 많은 정부지원이 제공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사법제도의 여성 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 초안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민간부문, 특히 비전통적 부문에서 여성할당제를 장려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다.
378. 위원회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현재의 아시아 경제위기와 그것이 여성의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관심사항을 제기한다:
- (a) 사업장내 성희롱,
 - (b) 민간부문 여성근로자의 사회보호 불충분,
 - (c) 직업적 차별 (전통적 여성직종에의 집중을 포함),
 - (d) 고급인력 여성의 취업기회 부족 및 남녀간의 임금격차,
 - (e) 여성 사업가에 대한 지원 불충분 (특히 비전통적 부문),
 - (f) 농업 여성의 상황 (특히 노인 여성과 농어촌지역),
 - (g) 조기퇴직 및 시간제 여성근로자 수의 증가.
379.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 (a) 사회보호 계획에서 시간제 근로자 수 증가에 관한 통계자료 제공,
 - (b)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 이행 및 여성의 무급노동 인정,

-
- (c) 공공 민간부문 간 여성에 대한 동일한 사회보호 제공 (두 부문간 근로환경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민간부문 유급출산휴가 확대 포함),
 - (d) 국제노동기구 협약들, 특히 협약 제110조 및 제111조의 비준,
 - (e) 성차별적 고용 및 광고 금지,
 - (f) 사업장내 성희롱 신고 및 추방을 위한 인식증진캠페인과 훈련프로그램.
380. 위원회는 농어촌여성의 상황, 특히 공적 및 사적영역에서 의사결정자 혹은 주도자의 위치에 충분히 대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381.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농촌여성에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을 농업노동자로 인정하는 등 정책과 프로그램이 모든 영역에서 혜택을 주도록 장려한다. 그리하여 고용기준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장 받고 의사결정과정과 보건 및 사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는 또한 농어촌여성의 현황에 대한 추가연구와 해당분야 정책수립에 기반이 되는 통계자료 수집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농촌여성이 신용거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382. 위원회는 또한 다음의 사항에도 우려를 표명한다:
- (a) 여성특별위원회를 포함한 국가기구의 지위와 역할 및 권한과 예산,
 - (b) 남녀 간 결혼최소연령의 차이,
 - (c) 높은 낙태율,
 - (d) 현행 상속법의 차별적 성격에 따른 영향,
 - (e) 보건시설 이용 여성, 특히 에이즈(HIV/AIDS) 및 성병 감염 여성의 수에 관한 정보가 보고서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않음.
383.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다음 정기보고서에서 이러한 사항에 관련하여 채택한 조치들을 기술하도록 권고하였다.
384.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1955년 고용보험법이 보장하는 사회안전의 권리가 장애 여성에게 실현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노인 여성을 위해 건강증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현재의 경제위기에 의하여 위협 받지 않게 하도록 권고한다.

385. 위원회는 현재의 경제위기가 가져올 수 있는 여성에의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필요 시에는 특별조치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386. 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 특히 정부, 행정관료와 정치인이 여성을 위한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취하여진 조치와 및 향후 필요한 조치를 인식하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본 최종평가서를 널리 배포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해서 협약, 위원회의 일반 권고사항, 북경선언과 행동강령을 광범위하게, 특히 여성단체와 인권단체에 배포할 것을 요청한다.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Republic of Korea. 10/07/98.
A/53/38/Rev.1,paras.347-386. (Concluding Observations/Comments)

Convention Abbreviation: CEDAW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Republic of Korea

347.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third and four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CEDAW/C/KOR/3 and CEDAW/C/KOR/4) at its 400th and 401st meetings, on 7 July 1998 (see CEDAW/C/SR. 400 and 401).

Introduction by the State party

348. The representative noted that the fourth report had been produced by a consultative body, comprising representatives from 25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by 7 women's policy specialists and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d ratified the amendment to article 20 of the Convention in August 1996.

349. The representative stated that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had impacted significantly on the lives of Korean women. The comments of the Committee members on the second report in 1993 had provided substantial guidance in implementing women's policies, particularly in respect to women's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and the elimination of gender discriminatory laws relating to citizenship.

-
350. The representative described several major legal reforms, including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1987, the Mother Child Welfare Act 1991, the 1993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and Protection of the Victim Act, the 1995 Women's Development Act and the 1997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the Victim Act. Amendments to the Nationality Act had been enacted in 1997 and the Republic of Korea's reservations to article 9 would soon be withdrawn.
351. The representative described Government efforts to make the Convention widely known, including a 1994 symposium observing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country's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and the publication of annotations to the Convention in 1996.
352. The representative noted that, since February 1998, the Government had made it a policy priority to promote women's rights as an integral part of human rights. It had established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Women's Affairs and had introduced the Master Plan in Women's Policies (1998 - 2002), which aimed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all sectors of Korean society. The Government also planned to increase the ratio of women in Governmental committees to 30 per cent by the year 2002.
353. The representative noted the significant impact of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and that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actively contributed to the further empowerment of women. In follow up to the Conference, the Government had identified ten policy priorities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including the expansion of child care facilities, the upgrade of child care servic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women's information network.
354. The representative emphasized that increased participation by women in politics was a prerequisite for the enhancement of women's social status and further democratic development of the society. A female public employee target system had been instituted in 1995 to facilitate the recruitment of a prescribed number of women into the public sector each year and ratios of women employees were expected to rise from 10 per cent in 1996 to 20 per cent by the year 2000.

-
355. The representative noted the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and its potential adverse affects on Korean women, particularly low income female headed households, and indicated that the Government intended to increase its efforts to provide a safety net for these families and prevent the breakdown of the family unit. It also intended to strengthen its programmes to enhance women's economic activities.
356. The representative indicated that gender equality in recruitment, placement and promotion had not been realized and that, while laws and regulations designed to achieve equal employment were already in place, the entry of women into the workforce had not proceeded as rapidly as expected.
357. In concluding her presentation, the representative stated that, although Confucian ideology still hindered the complete realization of gender equality, it was a matter of time before the traditions of the past would give way to full gender equality,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shared prosperity. She expressed confidence that, with the benefit of equal protection under the law, Korean women would emerge as contributing partners in the process of nation building and write their own chapter in the global gender equality renaissance of the twenty first century.

Concluding comments by the Committee

Introduction

358. The Committee welcomes the high level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commends the Government for its reports and particularly the well structured and comprehensive fourth periodic report, which generally complied with the Committee's guidelines, and provides a broad range of information and data on the situation of women in Korea and the political will of the Government to advance the status of women. The Committee appreciates the exhaustive replies of the Government to questions posed by experts which amplified the written reports. The Committee also appreciates the input of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the preparation of the reports.

Positive aspects

359. The Committee welcomes the definitive steps taken by the Government towards the advancement of women and the measures taken to integrate a gender perspective into policies and programmes.
360. The Committee welcomes the establishment and strengthening of the proactive national machinery for women, in particular,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Women's Affairs.
361. The Committee welcomes the Government's close collaboration with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combat domestic violenc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protective legislation, in addition to the creation of sexual and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centres, emergency shelters and awareness raising campaigns to encourage the reporting of and official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and other forms of sexual harassment.
362. The Committee notes with satisfaction that the Government's efforts to implement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through the preparation of a national pla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and identification of ten priorities in that respect. The Committee commends the 1995 enactment of the Women's Development Act and the Women's Development Fund endowed with US\$ 70 million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and the Women's Development Plan.
363. The Committee notes with appreciation the adoption and revision of numerous laws and legal provisions in order to bring domestic legislation in line with the Convention, in particular, the 1998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ct, Protection of the Victim Act and the 1995 Law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which aims to address the issues of gender equality in a comprehensive way. The Committee welcomes the amendments of the National Act in 1997 and the news that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the withdrawal of its reservation to article 9 of the Convention.

364. The Committee commends the Government on a wide range of policies, strategies and measures in social and economic areas and underlines, in particular, the achievements in the area of education,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non traditional career orientation for women.

365. The Committee commends the fact tha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s defined in a number of articles of the constitution, as well as the Equal Opportunity Act 1989. It also commends the fact that maternity benefits for working women and preferential benefits for specific classes of workers for the purpose of redressing discriminatory conditions is not viewed as discriminatory.

Factors and difficulties affec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366. The Committee notes the negative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and particularly the policies and positions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hich are aggravating the situation for Korean women.

367. The Committee notes the persistence of entrenched paternalistic male values and traditional stereotyping of women's role. In spite of amendments to the civil code, discriminatory provisions remained, such as the prohibition of marriages between individuals with common surnames.

Principal areas of concern and recommendations

368. The Committee is concerned with the reservations entered by the Government of Korea to the Convention.

369. The Committee urges the Government to review its reservations to the Convention with a view to their withdrawal before the year 2000.

370.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reports contain insufficient information on the actual impact of laws and policies on women's lives.

37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subsequent reports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laws and policies.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subsequent reports includ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rogress achieved since the previous reports through, inter alia, statistical data disaggregated by sex.

372.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although the constitution contains a definition of discrimination, the definition does not include discrimination with both the purpose or effect as specified in article 1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also notes that the Equal Opportunity Act 1989 does not include a full definition of discrimination, which also includes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religious beliefs, political preferences, age or disability.
373. The Committee recommends the inclusion in the constitution and all relevant legislation of a definition of discrimination which reflects that in article 1 of the Convention. It also recommends that the Government disseminate information, ensure the provision of legal aid and under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increase legal literacy among women.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be expedited and the provision of remedies for discriminatory practices.
374.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violence against women is still pervasive in Korean society.
37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Government intensify its efforts to combat violence against women through, inter alia, the introduction of comprehensive measures, including gender sensitive training of the judiciary, health personnel and law enforcement officials. It also recommends the provision of adequate shelters and the incorporation of models of non violent forms of conflict resolution in education and the media.
376.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under representation of women in politics and decision making structures, including the judicial system.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fostering a political environment conducive to women's promotion in all sectors of public and private life.

377. The Committee recommends the provision of more governmental support in order to increase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ducation, raise public awareness about women leaders, continue promoting targets and quotas, introduce incentives to encourage a minimum quota of 30 per cent representation of women in political parties and the drafting of policies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the judicial system. It also recommends that the Government encourage the private sector to introduce quotas for women, particularly in non traditional areas.

378.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situation of women in the labour market and emphasizes the current Asian economic crisis and its impact on the situation of women. The Committee raises the following concerns:

- (a)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 (b) Insufficient social protection of female workers in the private sector;
- (c) Occupational segregation, including concentration in traditional female occupations;
- (d) Lack of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highly qualified women, as well as the wage differential between women and men;
- (e) Insufficient support to women entrepreneurs, particularly in non traditional areas;
- (f) Situation of women in agriculture, especially of elderly women and in rural areas;
- (g) Early lay off an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part time women workers.

379. The Committee recommends:

- (a) Provision of statistical data on the growing number of part time workers in social protection schemes;
- (b)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and recognition of women's unpaid work;
- (c) Provision of equal social protection for women 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cluding extension of paid maternity leave to the private sector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working conditions in these sectors;
- (d)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onventions, especially Conventions 110 and 111;
- (e) Elimination of gender restrictive recruitment and advertisements;
- (f) Awareness raising campaigns and training programmes to encourage the reporting and elimination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
380. The Committee expresses concern at the situation of rural women, in particular in regard to their under representation in decision making/leading public and private positions.
381.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Government to give full attention to the needs of rural women and to ensure that policies and programmes benefit them in all areas, including in regard to their recognition as agricultural workers, so as to benefit from the rights under the Employment Standard Act, and access to decision making, health and social services.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more studies on the situation of rural women, and the collection of statistical data to inform policies in this area.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Government facilitate access to credit for rural women.
382. The Committee's further concerns include:
- (a) The status and role of the national machinery, including the Commission on Women's Affairs, its authority and budget;
 - (b) The differential minimum age of marriage of women and men;
 - (c) The high rate of abortion;
 - (d) The discriminatory impact of existing inheritance laws;
 - (e) The provision of inadequate information on the numbers of women using health facilities, especially those with HIV/AIDS an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in the report.
383.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Government of Korea provide further information in its next periodic report describing measures taken to address these concerns.
384.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Government give special attention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provided by the 1955 Unemployment Insurance Scheme to disabled women, and that the policy to provide a variety of programmes for older women, including the promotion of their health, not be jeopardized by the present economic crisis.
38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at special attention be given by the Government,

and if necessary special measures be introduced, to prevent adverse consequences for women as a result of the present economic crisis.

386. The Committee requests the wide dissemin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present concluding comments in order to make the Korean people, and particularly the Government, administrators and politicians, aware of the steps that have been taken to ensure de facto equality for women and the further steps required in that regard. The Committee also requests the Government to continue to disseminate widely, and in particular to women's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s, the Convention, the Committee's general recommendations and the Beijing Declaration and the Platform for Actio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39차 회기

2007년 7월 23일 ~ 8월 10일

1. 위원회는 2007년 7월 31일, 제 801회 및 802회 회의에서(CEDAW/C/SR.801 (B)와 802 (B)), 대한민국의 제 5차 및 6차 정기보고서(CEDAW/C/KOR/5 와 CEDAW/C/KOR/6)를 심의하였음.

위원회의 현안 및 질의 목록은 CEDAW/C/KOR/Q/6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답변은 CEDAW/C/KOR/Q/6/Add.1에 수록됨.

서론

2. 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제5차 및 6차 정기보고서를 준비한 대한민국 정부에 위원회는 감사를 포함**. 위원회는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는 동시에 위원회의 일반적 권고를 고려한 보고서의 질적인 수준을 평가함.

위원회는 또한, 심의 전 사전 실무그룹에서 제기한 현안과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대표단의 구두발표 및 위원회의 현장 질의에 대표단이 명확한 답변을 해준데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를 포함**.

3. 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법무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등 협약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정부부처 전문가를 포함한 고위급 정부대표단의 파견을 평가함. 위원회 위원들과 대한민국 정부대표단과의 건설적 대화에 감사를 포함.
4.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1999년 8월에 협약 제9조의 유보조항을 철회한 것을 평가함.

-
5.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2006년 10월 18일 모든 형태의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협약 선택의 정서에 가입한 것을 환영함.

긍정적 측면

6.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1998년 제4차 정기보고서(CEDAW/C/KOR/4) 심의 이후로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 철폐, 양성평등의 촉진, 그리고 협약 당사국의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법과 법규를 제·개정하는 것을 높게 평가함.

특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성차별제도인 호주제가 민법개정을 통해 폐지됨을 환영함.

7. 위원회는 여성가족부의 전폭적인 예산 확대,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정책책임관, 그리고 정부부처 내 여성정책담당관실 설치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여성지위 향상을 위하여 국가조직을 강화한 정부의 노력을 환영함.
8. 위원회는 성인지적 관점을 모든 정부정책에 도입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2006년 성인지적 예산정책 도입을 평가함.
9.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2001년 성을 포함한 18가지의 사유에 의한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 기능을 지닌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한 것을 축하함.

우려 및 권고사항

10. 위원회는 협약당사국이 협약의 모든 규정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음을 상기하는 한편, 현 최종권고문에 수록된 우려와 권고사항은 차기 정기보고서 제출 시까지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함.
- 따라서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위원회가 우려와 권고사항을 제기한 분야에서의 이행에 중점을 둘 것과, 다음 정기보고서에 그 이행 사항과 이행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청하며, 아울러 이행 확보를 위하여 동 권고사항을 관련 부처와 국회에 전달하기를 요청함.

-
11.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2005년 민법을 개정, 200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게 됨으로써 나머지 유보조항의 철회가 가능하게 된 것을 환영하지만, 협약 제16조 (g)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기 위한 명확한 일정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함.
 1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구체적인 기간 내에 협약 제16조 (g)항 유보의 신속한 철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
 13. 대한민국의 국내법상 협약이 직접 적용될 수 있고 여성의 법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체계가 구비되어 있음을 인정하지만, 여성차별 철폐를 위한 다양한 법과 정책이 현존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계획의 입안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정치 참여 및 고용 분야를 포함하여 협약의 모든 조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있어 진전 속도가 더딘 점에 우려를 표함. 위원회는 또한 1984년 협약의 비준 이후로 협약을 인용한 소송사태가 부재한 것을 우려함. 이는 협약, 선택의정서, 그리고 위원회의 일반적 권고가 변호사, 판사, 검사, 그리고 여성 자신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음을 의미함.
 14.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기존 법과 정책의 이행을 강화하고 가속화하기를 요청함. 이를 위해 단기, 장기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시한을 정하고, 그러한 목표를 얼마나 실현했는지 그 효과, 경향, 진전 정도 및 성취 결과를 효과적으로 모니터하고 평가하며, 필요시 목표 조정과 같은 조치를 취하길 바랍.
위원회는 또한 구체 절차 및 그 활용도를 강화하는 등, 현존하는 법률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기를 권고함.
또한 변호사, 검사와 판사들을 대상으로 협약과 선택의정서 절차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며,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시키기를 요청함.
 15.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직접적 및 간접적 차별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직장에서의 남녀평등을 규정한다는 것,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성에 기반한 여러 차별적 행위를 다루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위원회는 직접적 및 간접적 차별과 협약 전체를 포괄하는 협약 제1조의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가, 관련 국내법에서 차별에 대

한 금지에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과 공공 및 민간 분야 모두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우려함.

16.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협약 제1조 및 협약 전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여성에 대한 직·간접 차별 금지를 헌법 및 적절한 입법조치를 통해 구현하기를 요청하며 또한 민간 분야에도 적용되기를 권고함.

또한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의 본질에 관련하여, 그리고 협약 제2조 (a)항의 남녀평등원칙을 실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공무원, 국회의원, 판사, 변호사, 그리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협약의 실질적 평등의 개념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을 더 기울이길 요청함.

17. 위원회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환영하는 한편, 배우자 강간이 범죄로 규정되지 않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함. 위원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에만 기소되는 것에 대해 특별히 우려함. 또한 위원회는 여성 폭력에 대한 신고율, 기소율, 유죄 판결율이 낮은데 대해 우려를 표함. 만연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여성 폭력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의 부족에 대해 우려함.

18.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여성폭력을 여성인권 침해로 인정하고 모든 형태의 여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 일반권고 19호를 충분히 활용하길 바랍.

또한 가정폭력을 포함, 여성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며, 아울러 배우자 강간을 범죄화하고 성폭력 범죄에서의 피해자 신고 요건 폐지를 요청함.

위원회는 농촌여성을 포함해서 모든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이, 보호 명령 등 구제 수단과 보호를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고, 충분한 숫자의 안전한 쉼터를 이용할 수 있고,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함.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공무원, 특히 법집행관, 법관, 의료종사자, 사회복지사들이 모든 형태의 여성폭력을 이해하고 관련 법 규정을 숙지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요청함.

또한 가정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여성폭력의 정도와 그 원인 및 결과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연구를 촉구하며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목표가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또한 통계자료와 조치의 결과를 다음 정기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청함.

19. 위원회는 계속되는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 현상 및 이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함. 강제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구출, 보호 및 재활 제도의 이행을 환영하나, 성구매 고객은 초범의 경우 교육을 위한 “존스쿨” 프로그램에 참석할 경우 처벌이 면제되는 반면, 소위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은 법률상 기소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위원회는 우려를 표함. 또한 십대 소녀들이 돈을 목적으로 나이 많은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는 원조교제가 지속적으로 만연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함.

20.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경찰 및 국제적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것과 인신매매범들과 성매매 착취자들을 기소하고 처벌함으로써 협약 제 6조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함.

위원회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발생국, 경유국, 목적국과 협조하여 국제적, 지역적, 양자간 협력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기를 요청함.

위원회는 유엔 초국적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완하는 인신매매, 특히여성과아동의매매방지,억제및처벌에관한의정서에 비준할 것을 권고함.

위원회는 성매매 여성들이 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도록 성매매에 관한 법률을 재검토할 것을 대한민국에 요청함.

위원회는 성매매 여성들의 원활한 사회 재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여성과 여아들에게 재활 및 경제적 자립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함.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십대 소녀들의 원조교제 방지를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도록 권고함.

21. 국제결혼 브로커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의 초안이 마련된 것을 알고 있지만, 위원회는 외국인여성들이 결혼과 착취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인신매매될 소지가 있는 국제결혼의 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점을 우려함. 또한 이러한 국제결혼에 가정 폭력

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함.

2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신속히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결혼 브로커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외국인여성들이 국제결혼 브로커, 인신매매자, 그리고 배우자에 의한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추가 정책들과 방안들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인 여성들에게 배우자의 학대로부터 구제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법을 제공하고 구제기간 중에는 국내체류를 허락하도록 권고함.

더불어 외국인 여성들에게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와 예방대책을 포함, 자신들의 권리와 구제 방법에 대해 알리도록 권고함.

23. 정당법과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계획 등 정치와 공공분야 여성 참여확대를 위해 채택한 법과 계획들을 인지하고 있지만, 위원회는 정치 분야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이 계속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점, 특히 국회, 행정부, 사법부, 재외공관, 학계, 민간부문의 정책결정과정 직위에 여성들의 참여가 아직도 저조함에 대해 우려를 표함.

24. 위원회는 학계와 민간분야를 포함한 모든 공공분야의 선출직 또는 임명직에서의 여성참여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협약 제4조 1항과 위원회 일반권고 25호에 따라 대한민국이 더 많은 한시적 특별조치를 채택하는 등의 노력을 강화하고 지속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장려함.

또한 대한민국이 현재와 미래 여성리더들을 위해 제공 중인 리더십과 협상능력 훈련 프로그램들을 확대하도록 권고함.

더불어 사회 각 분야의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들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들을 지속하도록 권고함.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실행한 방안들의 효과와 시행 결과들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차기 보고서에 보고하도록 요청함.

25. 위원회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책임에 있어 가부장적인 태도와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지속되고 있음에, 특히 농촌지역에서 그러함에 우려를 표함. 이는 여성들의 교육과 직업 선택, 한정된 공공 및 정치 참여,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한 상황 등으로 반영되고 있음. 위원회는 이러한 고정관념이 여성폭력의 근본원인이라는 것에 대해 또한 우려함.

26. 위원회는 잔존하는 뿌리 깊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방안을 실행하기를 요청함.

이러한 방안은 협약 제2조 (f)항과 제5조 (a)항에 따라 가정과 사회에서의 전통적인 성역할과 연관된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 여성과 여아를 포함한 대중의 인식제고와 교육 캠페인을, 특히 남성과 남아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여야 함.

위원회는 상기 방안의 이행에 있어서 특별히 농촌지역을 목표로 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평가하도록 요청함.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남아와 여아의 교육선택에 있어서 노동시장에서의 기회와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양성을 더욱 촉진하도록 요청함.

또한 여성폭력을 포함하여 여성차별을 영속시키는 고정관념, 남녀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여성의 열등한 지위에 대처하도록 요청함.

위원회는 미디어가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공적 또는 사적 분야에서 동등한 지위와 책임을 가진 존재로 보도하도록 장려하기를 권고함.

27.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여성고용확대방안,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과 같이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들의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취한 방안들을 환영하면서도, 위원회는 여성들이 당면해있는 심각한 불리한 처지, 즉 일정 저임금 분야에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여성들이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 아웃소싱과 외부계약과 같은 여러 형태의 탄력적 고용형태 및 이에 연관된 고용보장 및 부가급여의 부족, 그리고 남녀의 현격한 임금 차이에 대해 우려를 표함.

위원회는 또한 현존 노동법을 충실히 준수하지 않고 법을 교묘하게 회피하여 여성노동자의 고용보장을 부인하는 기업들의 관행을 우려함. 특히, 효과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과 여성들이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제소 절차가 결여되었음을 우려함. 또한 여성들이 작업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구제책을 찾는 데에 주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함.

28.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노동시장에서의 남녀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가속화하도록 촉구함.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협약 제4조 1항과 위원회의 일반권고 25호에 의거 한시적 특별 조치를 도입하도록 요청함. 특히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직업 분리를 철폐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함.

위원회는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가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들의 상황을 성실히 모니터링 하고, 기업들이 여성들에게 더 많은 전일제 및 정규직 고용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대다수가 여성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부가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 정규직을 확대하도록 촉구함.

위원회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조항들의 실행을 요청함.

위원회는 현존 법률이 준수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과 여성들이 그들의 노동권리 침해에 대하여 제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청함.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구제절차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이의 인지를 통해 여성들이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요청함.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효과적인 방안들을 통해 가정과 직업상의 책임이 양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녀간에 가사와 가족 책임을 분담하도록 촉진하도록 요청함.

29. 위원회는 많은 여성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직업이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의존해야 하는 점과 20세에서 24세 여성들 사이의 높은 낙태율에 대해 우려함. 위원회는 또한 생명공학분야에서 여성 생식 보건과 권리에 대한 보호가 부족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함.

30.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여성들의 보건 서비스에의 접근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요청함. 특히 20에서 24세까지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 및 생식 보건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장하는 등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화하도록 촉구함.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생명공학 적용에 관련된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또는 연구 목적을 위한 여성 난자 기증 및 채취를 법률적으로 규제하고, 의료의 질과 법적, 윤리적 기준의 준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함.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지체 없이 생명윤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임신 및 연구 목적으로 여성 난자를 기증 또는 채취하는 경우, 통지 및 자발적 서면 동의에 대한 조건을 포함하도록 요청함.

또한 여성과 보건에 관한 위원회 일반권고 24호를 성 인지적 및 나이 인지적 보건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위한 틀로 활용하도록 요청함.

31. 위원회는 특정 여성 집단에서의 여성의 빈곤화에 대해, 특히 여성 가장가정의 빈곤함에 대해 우려를 표함.
3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국가발전계획과 정책에서 여성의 빈곤화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강구, 이행하기를 권고함. 또한 위원회는 시행된 방안들의 효율성을 모니터하고, 다음 정기보고서에 보고하도록 요청함.
33. 위원회는 대한민국 민법이 이혼 시 여성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함. 이는 혼인 기간 중 축적한 재산이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여성은 이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에서 나타남.
34.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혼인과 가족관계에서의 평등을 위한 협약 제16조와 위원회의 일반 권고 21호를 참고하여, 혼인 기간동안 축적된 재산에 대한 여성의 평등권을 보장하도록 민법을 검토, 개정하도록 권고함.
35. 위원회는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의 법적 혼인 연령에 관한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현재 최저 법적 혼인 나이가 여성은 16세, 남성은 18세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함.
36. 위원회는 협약 제 16조 2항과 위원회의 일반권고 21번,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민법을 속히 개정하여 여성의 최저 법적 혼인 연령을 18세로 조정하도록 권고함.
37.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협약의 의무이행에 있어서, 협약 규정들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배경 선언과 행동강령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촉구하며, 이에 대한 정보를 다음 정기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청함.

38. 위원회는 또한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협약을 충실히 또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함을 강조함. 따라서 위원회는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고 협약의 조항들을 확실하게 반영할 것을 권고하며, 다음보고서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요청함.
39. 위원회는 주요 7대 국제인권협약¹⁾ 준수가 모든 분야에서 여성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향상시키는 것임을 인지함. 따라서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협약, 즉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재고하길 권유함.
40. 위원회는 여성의 법적 평등 및 실질적인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사항들을 알리고, 앞으로 취해야 할 필요 조치를 알리기 위해 현 권고안이 공무원, 정치인, 국회의원, 여성 및 인권단체를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널리 전파되기를 요청함.
특히 여성과 인권단체에 협약과 선택의정서, 위원회 일반 권고, 배경선언 및 행동강령과 “여성 2000: 21세기의 성평등, 발전과 평화”가 주제였던 제23회 특별 총회 결과를 널리 보급하기를 요청함.
41.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현 권고안에 대하여 협약 제 18조에 의거 2010년 1월 예정인 다음 정기보고서에서 답변하기를 요청함.

(번역: 여성가족부)

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국제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그리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Distr.: General
10 August 2007

Original: English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irty-ninth session
23 July-10 August 2007

**Concluding comment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Republic of Korea**

1.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CEDAW/C/KOR/5 and CEDAW/C/KOR/6) at its 801st and 802nd meetings, on 31 July 2007 (see CEDAW/C/SR.801 (B) and 802 (B)). The Committee's list of issues and questions is contained in CEDAW/C/KOR/Q/6, and the responses by the Republic of Korea are contained in CEDAW/C/KOR/Q/6/Add.1.

Introduction

2. The Committee expresses its appreciation to the State party for its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which followed the Committee's guidelines for the preparation of periodic reports. The Committee notes the quality of the reports, which are informative and takes into account the general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The Committee also expresses its appreciation to the State party for its written replies to the list of issues and questions raised by the pre-session working group and for the oral presentation and further clarifications offered in response to the questions posed orally by the Committee.

3. The Committee commends the State party for its high-level delegation, headed by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hich included representatives of different government departments, including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Labour and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with expertise in a broad range of areas covered by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appreciates the constructive dialogue that took place between the delegation and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4. The Committee commends the State party for the withdrawal of its reservation to article 9 in August 1999.

5. The Committee congratulates the State party for its accession, on 18 October 2006, to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Positive aspects

6. The Committee notes with appreciation that, since the consideration of its fourth periodic report (CEDAW/C/KOR/4) in 1998, the State party has enacted and revised numerous laws and legal provisions aimed at eliminating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promoting gender equality and at achieving compliance with the State party's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In particular, it welcomes the adoption of the amendment of the Civil Act abolishing the family head system, which was a prime example of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7. The Committee welcomes the efforts of the State party to strengthen the national machinery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as reflected in the significantly increased financial resources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s well as the existence of the Women's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senior gender policy coordinators and the women's policy teams within line ministries.
8. The Committee commends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 to incorporate gender perspectives into all government policies and its introduction of a gender-sensitive budget policy in 2006.
9. The Committee congratulates the State party on the establishment, in 2001,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which provides for investigation and remedie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based on 18 different factors, including gender.

Principal areas of concern and recommendations

10. **While recalling the obligation of the State party to systematically and continuously implement all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views the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identified in the present concluding comments as requiring the State party's priority attention between now and the submission of the next periodic report. Consequently, the Committee calls upon the State party to focus on those areas in its implementation activities and to report on action taken and results achieved in its next periodic report. It calls upon the State party to submit the present concluding comments to all relevant ministries and to Parliament so as to ensure their full implementation.**
11. While welcoming the amendment to the Civil Act in 2005, which will become effective on 1 January 2008, paving the way towards the lifting of the State party's remaining reservation to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no clear timeline has been established to withdraw the reservation to article 16, paragraph 1 (g), of the Convention.
12.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expedite its efforts towards the withdrawal, within a concrete time frame, of its reservations to article 16, paragraph 1 (g), of the Convention.**
13. While acknowledging the direct applicability of the Convention in the domestic legal system and the legislative framework for women's de jure equality, the Committee expresses its concern about the lengthy planning process for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the slow pace of progress i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ll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including in the area of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despite the different laws and policies that are in place.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that the lack of examples of any court cases invoking the Convention since its ratification in 1984

indicates that the Convention, the Optional Protocol and the general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are not sufficiently known by lawyers, judges and prosecutors, and by women themselves.

14. **The Committee calls upon the State party to strengthen and speed up the implementation of existing laws and policies by: setting clearly defined and time-bound targets, immediate as well as long-term; effectively monitoring and assessing impact, trends over time and progress towards realizing goals and objectives and results achieved; and by taking corrective action as necessary. It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sure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existing laws, including by enhancing available remedies and their use. It also calls upon the State party to provide training for lawyers, judges and prosecutors about the Convention and the procedures under its Optional Protocol and to enhance women's knowledge of their rights and capacity to claim them.**

15. While noting that the 1987 Equal Employment Act covers direct and indirect discrimination and provides for the equal treatment of women and men in the workplace, and also noting th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covers a number of discriminatory acts on the basis of gender,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a defin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 of the Convention, encompassing both direct and indirect discrimination and covering all areas of the Convention, has yet to be applied through its prohibition in relevant domestic laws and made applicable to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16.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mbody in its Constitution or in other appropriate legislation a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encompassing both direct and indirect discrimination, in line with article 1 of the Convention and covering all areas of the Convention, and that it be made applicable to the private sector. It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enhance its awareness-raising efforts with respect to the nature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the Convention's concept of substantive equality among Government officials, legislators, judges and lawyers and the general public in order to accelerate the practical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women and me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a) of the Convention.**

17. While welcoming the amendments to the Act on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and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 Committee regrets that marital rape has not been criminalized. The Committee remains particularly concerned that under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 crime of sexual violence is prosecuted only upon complaint by the victim. The Committee also expresses its concern about the low rates of reporting, prosecutions and convictions of cases of violence against women. It is concerned about the lack of information and data provided about the prevalence of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18. **The Committee calls upon the State party to address violence against women as a violation of women's human rights and to make full use of the Committee's general recommendation 19 in its efforts to address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It urges the State party to intensify its awareness-raising efforts with regard to the unacceptability of all such violence, including domestic violence and requests the State party to criminalize marital rape and to eliminate the requirement of a victim's complaint in order to prosecute**

crimes of sexual violence. The Committee calls upon the State party to ensure that all women, including rural women, who ar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have access to immediate means of redress and protection, including protection orders, and access to a sufficient number of safe shelters, as well as to legal aid. It calls upon the State party to ensure that public officials, especially law enforcement personnel, the judiciary, health-care providers and social workers, are fully familiar with relevant legal provisions and are sensitized to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at they are capable of providing adequate support to victims. It urges the State party to collect data and to conduct research on the prevalence, causes and consequences of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including domestic violence, and to use such data as the basis for further comprehensive measures and targeted intervention. It invites the State party to include statistical data and the results of measures taken in its next periodic report.

19.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persistence of trafficking and exploitation of prostitution and by the lack of data about these phenomena. While welcoming that victims of forced prostitution are entitled to rescue, protection and rehabilitation,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so-called voluntary prostitutes are subject to prosecution under the law, while first-time clients of prostitutes do not face punishment if they attend the “John School” programme, designed to educate such first-time offenders.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about the continued widespread phenomenon of *Wonjokyuje*, in which adolescent girls engage in a sexual relationship with older men for money.

20.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fully implement article 6 of the Convention, to collect and analyse data from the police and international sources and to prosecute and punish traffickers and those who exploit prostitution. The Committee calls upon the State party to increase its efforts at international, regional and bilateral cooperation with countries of origin, transit and destination in order to prevent trafficking. The Committee also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consider ratifying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ary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he Committee further calls upon the State party to review its law on prostitution in order to ensure that women in prostitution are not criminalized. The Committee recommends the State party take measures to facilitate the reintegration of prostitutes into society and to provide rehabilitation and economic empowerment programmes for women and girls exploited in prostitution.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e State party provide adolescent girls with educational programmes to stop *Wonjokyuje*.

21. While noting the elaboration of a draft law to regulate marriage brokers, the Committee expresses its concern about the increased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s, which may lead to foreign women being trafficked into the Republic of Korea for purposes of marriage and exploitation. It is also concerned at the prevalence of domestic violence in such marriages.

22.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speedily enact the draft law to regulate the activities of marriage brokers and to develop additional policies and measures to protect foreign women from exploitation and abuse by marriage brokers and traffickers, and by their spouses. The Committee

recommends the State party provide women with viable avenues of redress against abuse by their husbands and permit them to stay in the country while seeking redress.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e State party make foreign women aware of their rights and avenues of redress, including measures available for protection and preven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23. While noting the adoption of laws and plans to increase women's participation in public and political life, such as the Political Party Act and the five-year plan for expansion of women managers in public positions,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women continue to be underrepresented in politics, especially in decision-making in many areas, inclu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Government at all levels, the judiciary, the foreign service, academia and the private sector.

24.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intensify its efforts and to take sustained measures, including further temporary special measur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and the Committee's general recommendation 25, in order to accelerate the increase in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n elected and appointed bodies in all areas of public life, including in academia and the private sector. It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xpand its current training programmes on leadership and negotiation skills for current and future women leaders. It further recommends the State party continue its efforts to rais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women's full and equal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t all levels for society as a whole. It requests the State party to carefully monitor the effectiveness of measures taken and results achieved and to report thereon in its next periodic report.**

25.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e persistence of patriarchal attitudes and deep-rooted stereotypes regarding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women and men in the family and in society, especially in rural areas, which are reflected in women's academic and professional choices, their limited participation in public and political life and in their disadvantaged position in the labour market.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that these stereotypes are a root cause of violence against women.

26. **The Committee calls upon the State party to take sustained and systematic measures to overcome persistent and deep-rooted stereotypes that are discriminatory to women. Such measures should include awareness-raising and public educational campaigns, aimed in particular at men and boys, including women and girls, with a view to eliminating stereotypes associated with traditional gender roles in the family and in society, in accordance with articles 2 (f) and 5 (a)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calls upon the State party to specifically target rural areas in the implementation of such measures and to regularly monitor and evaluate their impact. The Committee calls on the State party to further encourage diversification of the educational choices of boys and girls, bearing in mind their subsequent opportunities and chances in the labour market. It also calls upon the State party to address stereotypes, the unequal power relations between women and men and women's position of inferiority, which perpetuat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cluding violence against wome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courage the media to project a positive image of women and of the equal status and responsibilities of women and men in the private and public spheres.**

27. While welcoming the measures aimed at improving the situation of women in the labour market, such as the comprehensive plan for the development of women's resources, the female employment expansion measures and the amended Equal Employment Act,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serious disadvantages women face, including the concentration of women in certain low-wage sectors, the high percentage of women in non-regular work, the various flexible forms of work, such as outsourcing and contracting out, and the related lack of job security and benefits, as well as the significant wage gap between men and women.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about the insufficient compliance with existing labour legislation and about the practices of companies that circumvent the law denying women workers job security. In particular,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lack of effective monitoring mechanisms and complaints procedures for women to claim their rights. It is also concerned that women may be reluctant to seek remedies for cases of sexual harassment at the workplace.

28.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accelerate and ensure equal opportunities for women and men in the labour market. It calls on the State party to introduce temporary special measur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and its general recommendation 25. It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take measures to eliminate occupational segregation, in particular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The Committee further urges the State party to diligently monitor the situation of women in the labour market and to increase the number of women in regular work by ensuring that enterprises provide more opportunities for women to gain access to full-time and regular employment and by extending benefits to non-regular workers, the majority of whom are women. The Committee calls upon the State party to enforce the provisions of the Equal Employment Act in regard to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The Committee also calls upon the State party to ensure that effective monitoring mechanisms are in place to achieve compliance with existing legislation, and that there are procedures in place for women to file complaints of violations of their labour rights. The Committee calls upon the State party to ensure availability of remedies and to make women aware of their rights and of available remedies in order that they can have access to justice and can claim their rights. The Committee also calls upon the State party to take effective measures to support the reconciliation of family and work responsibilities and to promote the sharing of domestic and family responsibilities between women and men.**

29. The Committee expresses its concern about the fact that many women depend on working members of their families for access to health services and about the high rate of abortion among women between the ages of 20 and 24.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about the possible inadequate protection of women's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in the use of biotechnology.

30.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monitor the access of all women to health services and to take appropriate action. It urges the State party to strengthen measures aimed at the prevention of unwanted pregnancies including enhanced programmes of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education, and to specifically target women between the ages of 20 to 24.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donation or harvest of eggs from women for reproductive or research purposes be legally regulated, in order to protect human rights of women involved in the application of biotechnology, and regularly monitored in**

terms of both quality of care and the observance of legal and ethical standards. The Committee calls upon the State party to amend without delay the Act on Bioethics and Biosafety to include a requirement of informed, free and written consent in cases of donation or harvest of eggs for reproductive or research purposes. The Committee also calls on the State party to make full use of the Committee's general recommendation 24 on women and health as a framework in the development of gender- and age-sensitive health policies and programmes.

31. The Committee expresses its concern about the feminization of poverty in certain groups of women, particularly the prevalence of poverty among female-headed households.

32.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analyse the situation and to take concrete measures to address the problem of the feminization of poverty comprehensively in its national development plans and policies. It requests the State party to monitor the effectiveness of measures taken and results achieved and to report thereon in its next periodic report.**

33.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Civil Act fails to ensure equality for women in the dissolution of marriage, as reflected in the lack of women's rights to an equal share of assets accumulated during marriage if those assets have been registered in the name of one spouse only.

34.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review the Civil Act and make necessary amendments, in the light of article 16 of the Convention and the Committee's general recommendation 21 on equality in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 in order to give women equal rights to assets accumulated during the marriage.**

35. While noting that an amendment to the Civil Act to bring the legal age of marriage into compliance with the Convention is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the minimum legal age of marriage remains at 16 for females and 18 for males.

36.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work towards the speedy enactment of the amendment of the Civil Act to raise the minimum legal age of marriage for girls to 18 in order to bring it into line with article 16, paragraph 2,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s general recommendation 21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37.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in its implementation of the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to utilize fully the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which reinforce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requests the State party to include information thereon in its next periodic report.**

38. **The Committee also emphasizes that full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s indispensable for the achievement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t calls for the integration of a gender perspective and the explicit reflec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in all efforts aimed at the achievement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requests the State party to include information thereon in its next periodic report.**

39.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adherence of the State party to the seven maj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¹ enhances the enjoyment by women of thei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all aspects of life. The Committee therefore encourag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consider ratifying the treaty to which it is not yet a party, namel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40. The Committee requests the wide dissemin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present concluding comments in order to make the people, including government officials, politicians and parliamentarians, and women's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s aware of the steps that have been taken to ensure de jure and de facto equality of women and of the further steps that are required in that regard.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continue to disseminate widely, in particular to women's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s, the Convention, its Optional Protocol, the Committee's general recommendations, the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and the outcome of the twenty-third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entitled "Women 2000: gender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41.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respond to the concerns expressed in the present concluding comments in its next periodic report under article 18 of the Convention, which is due in January 2010.

¹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대한민국 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고문방지위원회의 최종견해 : 대한민국

1996년 11월 13일
A/52/44, 44-69항 (최종평가/의견)

고문방지 위원회
협약 제19조에 따른 당사국 제출보고서 검토
고문방지위원회의 결론 및 권고사항

< 대한민국 부분 일부 발췌 >

B. 대한민국

44. 본 위원회는 1996년 11월 13일 개최된 제266차 및 제 267차 회의에서 대한민국 1차 보고서(CAT/C/32/Add.1)를 검토하였고(CAT/C/SR.266 및 267 참조), 다음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채택하였다.

1. 서론

45.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상세하고도 적기에 제출해준 보고서에 환영을 표하며 전반적인 내용은 본 위원회의 지침과 일치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본 위원회의 문제제시에 대하여 응답해준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한다.

2. 긍정적인 면

46. 본 위원회는 1993년 이후 인권을 향상시키고 강화하며 최소한의 국제적인 기준을 실현시키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환영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인권에 관한 일련의 국제조약을 당사국이 비준한 것과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사회를 건설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이행하려는 의지를 환영하는 바이다.
47. 본 위원회는 일부 관련 법규와 규정 및 제도 등이 이미 인권강화의 정신에 비추어 개정되었음을 주목하고 있다.
48. 대한민국의 문민정부가 상당수의 시민들에게 특사를 허용하고 복권을 시켰으며, 그에 따라 자유로운 정치적 환경에 기여한 점을 격려하는 바이다.
49.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법률적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력에 만족하며 주목하고 있다.
50. 본 위원회는 또한 비록 몇몇 경우이긴 하지만 피고인들에게 고문을 가한 공무원들이 유죄를 선고 받고, 일부는 법정외 심문과정에서 협박이나 감금을 통해 얻은 진술은 증거로서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격려하는 바이다.
51. 본 위원회는 또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점들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부적절하고 용납되지 않는 관습과 제도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데 대하여 보고서의 솔직함에 감사하는 바이다.
52. 본 위원회는 호주 및 캐나다와 범죄문제에 관한 상호 법적인 공조협약을 체결하고 프랑스 및 미국과도 이러한 조약에 서명한 점에 만족하며 주목하고 있다.

3. 본 협약의 이행을 방해하는 요인과 어려움

53. 본 위원회는 한반도의 보안문제와 긴장상황을 알고 있다.

54. 본 위원회는 결론과 권고사항에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협약의 조항내용이 준수되지 아니한다면 어떠한 예외적인 경우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은 강조되어야 한다.

4. 문제영역

55.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본 협약의 제1조에 포함된 정의에 비하여 형법상의 고문에 관한 범죄 정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56. 본 위원회는 자백을 얻어내기 위하여 많은 수의 정치범들이 심문과정에서 아직도 '고문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보고가 비정부기구에 의해서 계속되는 있다는 점에 대하여 깊이 우려를 표명한다. 경우에 따라 고문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듯한 용의자들에 대한 수면박탈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

57. 또한 본 위원회는 한국의 법률제도가 이들 용의자들이 기소되기 이전의 장시간 심문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58.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고문과 학대행위를 자행한 관계자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아왔다는 점에도 역시 우려를 표명한다. 고문피해자들이 공식적으로 고소한 경우에만 조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59. 본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한반도의 보안 문제의 결과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의 조항이 독단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동 조항들은 그 모호성으로 인해 독단적으로 적용될 심각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60. 대한민국의 보고서는 고문의 범죄에 관한 구제에 대하여 단 한 가지의 특정한 사례만을 언급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구제나 보상을 얻는 기존의 절차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61. 법원의 송환명령이나 기타 승인 없이 10일까지 용의자를 감금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할만한 일이다.

5. 권고사항

62. 대한민국은 고문 범죄의 정의에 대하여 본 협약 제1조와 일치하도록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63. 대한민국의 법률은 본 협약과 전반적 인권 보호를 위한 기준에 비추어 보다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64. 본 협약 제10조에 따라 경찰 수사관, 검사, 다른 법집행공무원, 그리고 의료관계자들은 연수내용 중 고문방지 관련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어 교육되어야 하며, 제1조에 따른 고문의 정의 및 고문행위를 자행한 자들에 대한 형법상의 책임 등은 특별히 강조되어 교육되어야 한다.

65. 독립적인 정부기관이 구금시설에 대한 감찰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법집행공무원으로서 스스로 고문범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검사들은 주요 감찰요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66. 본 위원회에 알려진 가혹행위관련 주장들에 대하여 적절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결과를 본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권고한다.

67. 기소 전에 심문을 목적으로 경찰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30일 혹은 50일간의 최장구속 기간은 너무 길며 따라서 축소되어야 한다.

68. 본 위원회는 협약 제15조 이행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심문중 변호인을 배석하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한다.

69.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유보조항을 재검토하며 본 협약의 제21조와 제22조 관련하여 선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 Republic of Korea

13/11/96.

A/52/44,paras.44 69. (Concluding Observations/Comments)

Convention Abbreviation: CAT
COMMITTEE AGAINST TORTURE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19 OF THE CONVENTION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B. Republic of Korea

44.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AT/C/32/Add.1) at its 266th and 267th meetings, held on 13 November 1996 (see CAT/C/SR.266 and 267), and adopted the following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1. Introduction

45. The Committee welcomes the detailed and timely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on the whole conforms to the Committee's guidelines. The Committee also thanks the State party for its responses to the concerns expressed by the Committee.

2. Positive aspects

46. The Committee welcomes the positive changes since 1993 towards improving and enhancing human rights and achieving the minimal international standards, as demonstrated, *inter alia*, by the State party's ratification of a series of international treaties concerning human rights and by its willingness to build a society characterized by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to move towards the democratization of society.
47. The Committee notes that some relevant laws, regulations and institutions have already been amended in the spirit of human rights enhancement.
48. It is encouraging that the civilian Government granted amnesty to and restored the rights of a large number of citizens and thus contributed to the more liberal political climate.
49. The Committee notes with satisfaction the eff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to expand the scope of legal aid available to the economically underprivileged.
50. The Committee is also encouraged that, at least in a few cases, public officials who have tortured prisoners have been convicted and that, in some cases, courts have ruled that confessions obtained under duress during interrogations are inadmissible as evidence.
51. The Committee also appreciates the frankness of the report, which shows the Republic of Korea's consciousness of the problems that remain to be solved and its awareness of the need for further improvements to be made with regard to inadequate and unacceptable practices and institutions.
52. The Committee notes with satisfaction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concluded mutual judicial assistance treaties on criminal matters with Australia and Canada and has signed such treaties with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
3. Factors and difficulties impeding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53. The Committee is aware of the security problems and the tens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54. The Committee has tried to take this fact into consideration in formulating its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However, it must be emphasized that no exceptional circumstances can ever provide a justification for failure to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vention.

4. Subjects of concern

55.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not incorporated a specific definition of the crime of torture in its penal legislation in terms consistent with the definition contained in article 1 of the Convention.
56. The Committee notes with deep concern that continued reports from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show that many political suspects still go through the "torture procedure" during interrogation, in an attempt to extract confessions from them. The sleep deprivation practised on suspects, which may in some cases constitute torture and which seems to be routinely used to extract confessions, is unacceptable.
57.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that the legal system facilitates long periods of interrogation of suspects before they are charged.
58. The Committee is equally concerned at the State party's continued failure promptly and impartially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those responsible for acts of torture and ill treatment. It is unacceptable that only formal complaints of the victims of torture are investigated.
59. While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is the result of security problem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Committee emphasizes that the Republic of Korea must ensure that the provisions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are not implemented arbitrarily. The vagueness of its provisions gives rise to a great

danger of arbitrariness.

60. The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mentions a single specific case concerning the obtainment of redress for a crime of torture. The Committee expresses its concern that the existing procedures for obtaining redress or compensation are not effective.
61. It is a matter of concern that suspects may be detained for up to 10 days without a remand order or any form of approval by the courts.

5. Recommendations

62.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enact a law defining the crime of torture in terms consistent with article 1 of the Convention.
63. The national laws should be further reviewed in the light of the Convention and other standard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general.
64. Education of police investigators, public prosecutors, other law enforcement personnel and medical personnel regarding the prohibition against torture should be fully included in their training,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 of the Convention,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definition of torture as contained in article 1 of the Convention and on the criminal liability of those who commit acts of torture.
65. An independent governmental body should take over the inspection of detention centres and places of imprisonment. Public prosecutors, who are also part of law enforcement personnel, which may itself be subject to investigation of the crime of torture, should not be the main inspection figures.
66.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allegations of ill treatment which have been brought to its attention be duly investigated and that the results of such investigations be transmitted to the Committee.
67. The 30 or 50 day maximum period of detention in police premises for interrogation purposes before the suspect is charged is too long and should be shortened.

-
68.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counsel be permitted to be present during interrogation, especially since such presence would be in furtherance of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15 of the Convention.
69. The Committee hopes that the Republic of Korea will review its reservation and make the declarations concerning articles 21 and 22 of the Convention.

대한민국 2차 정보보고서에 대한

고문방지위원회의 최종견해

Distr.

GENERAL

CAT/C/KOR/CO/2

25 July 2006

원문: 영어

고문방지위원회
36차 회기
2006년 7월 25일

대한민국

1. 위원회는 2006년 5월 11일과 12일에 열린 제 711차와 714차 회의(CAT/C/SR.711, CAT/C/SR.714)에서 대한민국의 제2차 정기보고서(CAT/C/53/Add.2)를 심의하였고, 2006년 5월 18일의 722차 회의(CAT/C/SR.722)에서 아래의 결정과 권고를 채택하였다.

A. 도입

2. 4년 늦게 제출되었지만 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준비한 대한민국의 제2차 정기 보고서를 환영한다. 위원회는 보고서 심의 기간 중 제공한 구두 및 시청각 정보와 위원회의 질의사항(CAT/C/KOR/Q/2)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서면 답변서 제공에 감사한다. 또한 고위급 대표와의 진솔하고 건설적인 대화에 감사를 표한다.

B. 긍정적인 측면들

3. 위원회는 최초 보고서 심의 후 인권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중요한 진전에 환영한다. 또한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협약의 이행을 강화하고 위원회 권고 실행

을 위한 법 개정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당사국의 지속적인 노력에 주목한다:

- (a) 국가보안법의 보다 엄격한 적용, 위 법으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의 석방 및 사면을 위한 조치들;
- (b) 2000년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정뿐 아니라 같은 해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정, 그리고 이후 대통령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립과 같은 과거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절차 제공을 위한 조치들;
- (c) 2001년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와 일정한 조건아래 구금 및 교정시설의 조사권한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 (d) 체포 전, 판사가 (요청시) 개인을 심문할 수 있게 하는 1997년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포함, 경찰이 구금한 자의 기본적인 법적 보호수단의 존중을 보장하는 조치들; 2002년의 수사과정 중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의 시행과 2005년의 수사과정 중 인권 보호강화를 위한 일반지침들;
- (e) 법무부, 국방부와 지방검찰청 내에 인권국 혹은 인권부서의 설립; 그리고
- (f) 구금 및 교정시설에 대한 성폭력감시위원회와 교정행정자문위원회와 같은 민간감시기구의 설립.

C. 우려와 권고사항

4. 국내법에 고문에 대한 변화를 위해 권고를 마련할 것이라는 대표단의 확인에는 환영하나,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1조에 제시된 것처럼 국내의 형법에 고문 범죄의 명확한 정의를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점에 우려한다.

위원회의 이전 권고(A/52/44, 62항)를 상기하며, 당사국은 협약 제1조와 일치하도록 국내의 형법에 고문 범죄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 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형법 제125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고문에 해당되는 그 밖의 행위들은 형법의 다른 규정에서 다루어지고 더 낮은 형벌을 받는 반면, 폭력 및 잔혹한 행위와 관련한 형법 제125조는 오직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특정 개인에게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당사국은 모든 고문 행위가 협약 제4조 2항과 일치하도록 유죄화 및 처벌됨을 보장하기 위해 자국의 형법을 재검토하고 필요 시 개정하여야 한다.

6.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제한하고 유죄 선고를 받은 자들에 관용을 베푸는 최근의 조치들을 인정하나, 위원회는 위 법의 특정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 그리고 체포 및 구금 관련 규정과 법규가 자의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위원회의 이전 권고(A/52/44, 59항)를 상기하며, 당사국은 국가보안법이 협약과 완전히 일치하고 위 법에 의한 체포와 구금이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높이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위 법의 폐지 혹은 개정에 대한 국회 내 토론 경과와 결과에 대한 정보를 차기 정기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7. 고문과 기타 부당한 방식의 대우를 방지하고 금지하기 위한 입법 및 행정적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체포와 조사 중 그리고 구금 및 교정시설에서 특히 과도한 위력의 사용과 기타 부당한 방식의 대우 관련하여 법 집행관에 의한 고문과 위협의 지속적인 주장에 대해 우려한다.

당사국은 구금 및 교정시설 종사 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법 집행관에 대한 엄격한 법의 적용 정책이 개발되고 이행됨을 보장함으로써, 인권 문화를 증진하는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인권교육, 인권의식고양, 특히 고문금지 관련 일반적인 훈련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증대하여야 한다.

8. 고문 그리고/또는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관련 인권침해 주장이 많이 보고되고 있음에도, 위원회는 법 집행관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기소, 유죄 및 징계조치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우려한다. 이 점에서, 위원회는 또한 형법과 민법에서 고문 가해자에 대한 시효의 적용이 고문 피해자에게 배상과 다른 구제 조치 제공이나 고문 행위의 조사, 기소 및 처벌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고문 피해자의 치우나 사회 복귀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에 우려한다.

(a) 당사국은 고문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모든 주장들이 즉각적이고 철저히 조사되고

모든 피해자들은 구제 및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국내법 체계에 보장하여야 한다.

- (b) 이 점에서, 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고문범죄를 포함하여) 인도에 반한 범죄에 대한 시효 적용의 배제 또는 정지를 위한 법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 (c)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고문 및 부당한 대우를 받은 피해에 대한 처우와 사회 복귀(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것 포함하여)를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9. 위원회는 심문과 조사 중 변호인이 참여할 권리가 현재의 형사절차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오직 검찰청의 지침에 따라 허용되고 있음에 우려를 가지고 주목한다.

당사국은 경찰에 의해 구금한 사람의 기본적인 법적 보호장치가 존중될 수 있는 실효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위원회는 심문과 조사 중 변호인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형사소송법 관련 개정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10. 사법부 독립에 관해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사법부 독립의 충분한 보장의 부재, 특히 판사들에 대한 평가과정이 그들의 신분 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당사국은 판사의 신분 안전을 보장하고 그들의 사법적 직무에 대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위원회는 개인을 영장 없이 최대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는 긴급체포절차가 과도하게 사용되고 이 절차의 남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당사국은 긴급체포절차 사용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남용 방지 및 이와 같이 구금된 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야 한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형사소송법 관련 개정안의 즉각적인 채택을 촉구한다.

12. 위원회는 개인, 특히 망명신청자가 고문 받을 수 있는 장소로의 추방 혹은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고문 위협에 직면한 장소로 이전 혹은 송환되었는지 관련자들의 사안을 조사할 것이라는 대표단의 확인에 환영한다. 당사국은 한국정부의 관할권 지역 밖으로 한국민 및 외국인의 추방, 귀환 또는 송환을 결정할 때 협약 제3조의 요건들이 적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3. 위원회는 혼잡하고 열악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대용감방’(경찰서에 설치된 구금장소)에 구금된 많은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

당사국은 ‘대용감방’의 사용을 제한하고 그 기능을 명확히 하며, 구금된 자들에게 인도적인 환경 제공 보장 및 대표단이 제안한 새로운 구금 시설 건립을 완공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모든 구금시설들이 국제적 최소기준에 부합하도록 당사국이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14. 위원회는 구금시설에서 높은 수의 자살 및 돌연사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구금시설에서의 폭력, 고문 그리고 기타 여러 형태의 부당한 대우의 만연과 사망자 수와의 연관성에 대해 세부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당사국은 구금 시설내의 사망자 수를 줄이고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의료 치료에 대한 적절한 설비 및 접근이 제공되어야 하고 자살예방 프로그램들이 그러한 시설에 설립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구금시설에서의 사망자 수와 고문 및 기타 부당한 대우의 만연과의 연관성에 대해, 만약 있다면,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15. 위원회는 군내의 자살 건수와 부당한 대우 및 신참자 괴롭힘을 포함한 학대로 일어난 자살 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당사국은 군내에서 부당한 대우 및 가혹행위들을 방지하여야 한다. 군내 자살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실시와 그러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 음부즈만 제도 같은 프로그램

및 현재의 조치들에 대한 효용성을 평가할 것을 장려한다. 군내 자살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은 특히 모든 군인을 위한 인식고양, 훈련 및 교육활동들이 포함될 수 있다.

16. 위원회는 형사재판이 종종 조사관이 용의자의 자백을 받아낼 것을 조장하는 조서에 의지하고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또한 자백에 근거하여 국가보안법으로 유죄를 받은 사람의 수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 우려한다.

당사국은 고문의 결과로서 작성된 문서는 어떠한 절차에서도 증거로 원용될 수 없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위원회는 법적 소송절차에서 서면의 증거능력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두고 있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형사소송법의 관련 개정안의 채택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고문의 결과로 얻어진 문서를 배제하는 어떠한 특정 판결에 대한 정보, 자백에 근거하여 국가보안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수에 대한 정확한 자료, 그러한 자백이 강요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어떠한 조사가 실시되었는지 그리고/또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이가 고문죄로 유죄를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차기 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17. 위원회는 가정폭력의 만연과 부부강간을 포함 기타 성별에 기초한 여러 형태의 폭력에 우려하며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해결 및 합의의 결과로 인한 낮은 기소율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부부강간이 현행법에서 형사범죄가 아님을 주목한다.

당사국은 부부간의 강간과 성별에 기초한 폭력의 피해자들이 긴급구제수단 및 보호조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수사과정에서 해결과 합의를 구할 목적으로 취한 조치들이 학대의 피해자들인 여성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을 것과 가해자들이 기소되어 처벌받을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일반대중과 특히, 입법부, 사법부, 법의 집행관 및 의료 제공자들에게 위 사안에 대한 인식고양과 훈련활동을 지속하기를 촉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에게 부부간의 강간은 형사범죄를 구성함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18. 위원회는 성매매 목적으로 매매되는 여성과 아동의 수에 대한 통계적 자료뿐 아니라 법 집행관이 행한 고문 및 부당한 대우 관련 주장과 이에 대한 조사, 기소, 형사 관

결 및 징계 결정에 대해 연령과 성별로 분석된 자료가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배상 및 사회 복귀에 대한 정보와 위 14, 15항에서 위원회가 권고한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19. 당사국은 보고서, 질의서에 대한 당사국의 답변과 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를 모든 적절한 언어로 공식 웹사이트, 언론과 민간단체에 널리 공표하여야 한다.
20. 위원회는 당사국이 7,9,13,14,15항에 포함된 위원회 권고에 대해 당사국의 답변을 1년 이내에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21. 당사국은 3,4,5차 보고서로 간주될 차기 정기보고서를 5차 정기보고서의 제출일인 2012년 2월 7일까지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22.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의 선택의정서 비준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협약의 제21조와 제22조에 대한 선언철회를 고려 중에 있고 법무부가 이미 그 효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대한 당사국의 신속한 노력을 격려한다.

(번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Distr.
GENERAL

CAT/C/KOR/CO/2
25 July 2006

Original: ENGLISH

COMMITTEE AGAINST TORTURE
Thirty-sixth session
1-19 May 2006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19 OF THE CONVENTION**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REPUBLIC OF KOREA

1.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second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AT/C/53/Add.2) at its 711th and 714th meetings, held on 11 and 12 May 2006 (CAT/C/SR.711 and CAT/C/SR.714), and adopted, at its 722nd meeting on 18 May 2006 (CAT/C/SR.722), the following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A. Introduction

2. The Committee welcomes the second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as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Committee's guidelines, but was submitted with a four-year delay. The Committee commends the comprehensive written responses provided to the list of issues (CAT/C/KOR/Q/2), as well as the oral and audio-visual information provided during the consideration of the report. It also expresses its appreciation at the open and constructive dialogue with the high-level delegation.

B. Positive aspects

3. The Committee welcomes the significant progress made to ensure better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period since the consideration of the first report. It also notes the State party's ongoing efforts to revise its legislation and under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in order to give effect to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s, and to enhanc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cluding:

GE.06-43253 (E) 110803

(a) The more stringent applic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measures to release and pardon individuals previously convicted under the law;

(b) Measures to investigate and provide remedies for past violations of human rights, such as the enactment in 2000 of the Special Act to Find the Truth on Suspicious Deaths and the subsequent establishment of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as well as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Restoration of Honour and Compensation of Persons Engaged in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2000;

(c) The establishment in 2001,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with a mandate to investigate and remedy human rights violations and, in certain circumstances, to conduct inspections of detention and correctional facilities;

(d) Measures to ensure that the fundamental legal safeguards for persons detained by the police are respected, including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1997 to enable judges (upon request) to examine individuals before arrest; the enactment of the Directive for Human Rights Protection during Investigation Procedures in 2002; and the General Measures to Reinforce Human Rights Protection during Investigation Procedures in 2005;

(e)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units or departments within the Ministries of Justice and National Defense, and in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s; and

(f) The establishment of civilian monitoring bodies for detention and correctional facilities, such as the sexual violence monitoring board and the correctional administration advisory committee.

C. Subjects of concern and recommendations

4. While welcoming the oral assurances given by the delegation that it will make recommendations for changes in domestic law regarding torture,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the State party has not incorporated a specific definition of the crime of torture in its penal legislation as set out in article 1 of the Convention.

Recalling the Committee's previous recommendation (A/52/44, para. 62), the State party should incorporate a definition of the crime of torture into its Criminal Cod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 of the Convention.

5.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article 125 of the Criminal Code relating to violence and cruel acts is only applicable to specific individuals in investigation and trial processes, while other acts constituting torture that fall outside the scope of this article are dealt with under differe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and are subject to lesser penalties.

The State party should review and, if necessary, amend its Criminal Code to ensure that all acts of torture are criminalized and pun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paragraph 2, of the Convention.

6. While acknowledging recent measures to limit the applic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to extend leniency to persons convicted,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specific provisions of the law remain vague and that rules and regulations regarding arrest and detention continue to be applied in an arbitrary way.

Recalling the Committee's previous recommendation (A/52/44, para. 59), the State party should continue to review the National Security Law to ensure that it is in full conformity with the Convention, and that arrests and detentions under the law do not increase the potential for human rights violations. The State party should also include information, in its next periodic report, on the progress and outcomes of discussions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to repeal or amend the law.

7. Despite the existence of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o prevent and prohibit torture and other forms of ill-treatment,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at continuing allegations of torture and intimidation committed by law-enforcement officials,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the use of excessive force and other forms of ill-treatment, during arrest and investigation, and in detention and correctional facilities.

The State party should give higher priority to efforts to promote a culture of human rights by ensuring that a policy of zero tolerance is developed and implemented for all law-enforcement personnel, as well as for all staff in detention and correctional facilities. The State party should also intensify its efforts to reinforce human rights education, awareness-raising and training activities in general, and with regard to the prohibition of torture in particular.

8. In view of the number of reported allegations of torture and/or other acts of cruel an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and of complaint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general,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relatively low rate of indictments, convictions and disciplinary measures imposed on law-enforcement officials. In this regard,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that the application of a statute of limitations on torture offences, in both criminal and civil law, may result in the lack of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acts of torture, as well as in the lack of compensation and other remedies provided to victims of torture. Further,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re are no specific programmes for the treatment or rehabilitation of victims of torture.

(a) The State party should ensure in its legal system that all allegations of torture and ill-treatment are promptly and thoroughly examined, and that all victims obtain redress and have an enforceable right to fair and adequate compensation;

(b) In this regard, the Committee urges the adoption of the bill to exclude or suspend the application of a statute of limitations to crimes against humanity (including torture crimes), which is currently pending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c) **The Committee also urges the State party to establish comprehensive programmes for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both physical and mental) of victims of torture and ill-treatment, including the right to fair and adequate compensation.**

9.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the right to have legal counsel present during interrogations and investigations is not presently guaranteed by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is only permitted under guidelines of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The State party should take effective measures to ensure that fundamental legal safeguards for persons detained by the police are respected. In this regard, the Committee recommends the adoption of the relevant amendments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currently pending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guaranteeing the right to have legal counsel present during interrogations and investigations.

10. While taking note of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tate party concerning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at the lack of sufficient guarantees of this independence, in particular that the evaluation process of judges may impact the security of their tenure.

The State party should take measures to ensure security of tenure of judges and to prevent interference in their judicial functions.

11.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reports that the urgent arrest procedure, by which individuals can be detained without an arrest warrant for a maximum period of 48 hours, is excessively resorted to, amounting to an abuse of the process.

The State party should continue to take all necessary leg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o strictly regulate the use of the urgent arrest procedure and to prevent its misuse, and to guarantee the rights of persons detained in this manner. In particular, the Committee urges the prompt adoption of the relevant amendments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currently pending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12.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absence of adequate legal protection of individuals, particularly of asylum-seekers, against deportation or removal to locations where they might be subjected to torture.

The Committee welcomes the delegation's oral assurances that it will study the matter of persons removed or returned to locations where they face a real personal risk of torture. The State party should ensure tha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3 of the Convention apply when deciding on the expulsion, return or extradition of each case of non-citizens or persons of Korean nationality who may be returned to areas outside the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13.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number of persons held in “substitute cells” (detention cells in police stations), which are reported to be overcrowded and in poor condition.

The State party should limit the use of “substitute cells”, clarify their function, ensure that they provide humane conditions for those detained, and complete the proposed construction of new detention facilities. The Committee also urges the State party to ensure that all detention facilities conform to international minimum standards.

14.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high number of suicides and other sudden deaths in detention facilities. It notes that detailed investigations have not been conducted into the link between the number of deaths and the prevalence of violence, torture and other forms of ill-treatment in detention facilities.

The State party should take all necessary steps to prevent and reduce the number of deaths in detention facilities. Adequate provision of and access to medical care should be provided, and suicide prevention programmes should be established in such facilities.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duct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link, if any, between the number of such deaths and prevalence of torture and other forms of ill-treatment in detention.

15. The Committee expresses its concern at the number of suicides in the military and at the lack of precise information on the number of suicides caused by ill-treatment and abuse, including hazing, at the hands of military personnel.

The State party should prevent ill-treatment and abusive measures in the military. It is encouraged to conduct systematic research into the causes of suicides in the military an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measures and programmes, such as the ombudsman system, to prevent such deaths. Comprehensive programmes for the prevention of suicides in the military may include, inter alia, awareness-raising, training and education activities for all military personnel.

16.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reports that criminal trials regularly invoke and place great reliance on investigation records, often encouraging investigators to obtain confessions from suspects. The Committee also notes with concern that the number of convictions based on confessions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has not been provided.

The State party should ensure that statements made as a result of torture cannot be invoked as evidence in any proceedings. In this regard, the Committee recommends the adoption of the relevant amendments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currently pending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which would place stricter conditions on the admissibility of written evidence in legal proceedings.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clude, in its next report, information on any specific jurisprudence excluding statements obtained as a result of torture, as well as precise data on the number of convictions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based on confessions, and information as to whether any investigations are conducted into whether such confessions are coerced, and/or anyone has been found guilty of torture in this connection.

17.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prevalence of domestic violence and other forms of gender-based violence, including marital rape, and notes the low rate of indictments, resulting in part from settlements and agreements made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The Committee also notes that marital rape is not a criminal offence under the law.

The State party should ensure that victims of marital rape and gender-based violence have access to immediate means of redress and protection, that measures aimed at seeking settlement and agreements in investigation processes are not detrimental to women who are victims of abuse, and that perpetrators are prosecuted and punished.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continue to undertake awareness-raising and training activities on the issue for the public at large and particularly for legislators, the judiciary, law-enforcement personnel and health-service providers. The Committee also urges the State party to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marital rape constitutes a criminal offence.

18. The Committee regrets the absence of data, disaggregated by age and sex, on complaints relating to torture and ill-treatment allegedly committed by law-enforcement officials and on the related investigations, prosecutions and penal and disciplinary sentences, as well as statistical data on the number of women and children trafficked for purposes of prostitution. Information is also requested on any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provided to victims. Information is further requested on the results of the studies recommended in paragraphs 14 and 15 above.

19. The State party should widely disseminate its report, as well as its reply to the list of issues, and the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in all appropriate languages through official websites, the media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20.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provide, within one year, information on its response to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paragraphs 7, 9, 13, 14 and 15.

21. The State party is invited to submit its next periodic report, which will be considered as the third, fourth and fifth report, by 7 February 2012, the due date of the fifth periodic report.

22.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State party is considering ratific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It also notes that the State party is considering making the declarations under articles 21 and 22 of the Convention, and that the Ministry of Justice has already issued an opinion to that effect. It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expedite its efforts in this regard.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 대한민국

배포
일반

CRC/C/15/Add.51

1996년 2월 13일

원문: 영문

조약 약어: CRC

아동권리위원회

1. 위원회는 1996년 1월 18일과 19일에 가졌던 266, 267, 268번째 회의(CRC/C/SR. 266-268)에서 대한민국의 최초 보고서 (CRC/C/S/Add. 21)를 심의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적 의견을 채택하였다.

1. 머리말

2.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 학문영역에 걸친 수준 높은 대표단을 파견하여 위원회와 솔직하고도 생산적인 대화를 나눈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한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보낸 사전 질의에 대하여 한국 대표단이 서면으로 제출해 준 정보와 본 위원회와의 대화에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해 준 추가 정보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2. 긍정적 측면

3. 위원회는 이 조약이 한국의 국내법 체계 내에서 곧바로 적용가능하며 법정에서도 인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만족스럽게 바라본다.
4. 위원회는 아동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가 행동 계획의 개발을 환영하며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에 이 행동 계획이 포함되

었다는 사실을 환영한다. 또한 최근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가 설립되었음을 환영한다.

5.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사회, 경제적 발전의 원동력"으로써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흡족하게 바라본다.
6. 위원회는 또한 한국 정부의 서면 답변에서 엿볼 수 있는 열린 자세를 환영하며, 조약에 대한 유보 조항을 철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숙고하는 과정에서 한국 대표단이 보여준 열린 자세를 환영한다. 본 위원회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인 관계와 직접적인 만남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삽입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민법 개정 작업에 고무되는 바이다. 위원회가 더욱 기쁘게 여기는 것은 한국 대표단이 진술했듯이 이와 같은 민법 개정으로 당사국인 한국이 조약 제9조 3항에 관한 유보를 철회할 수 있으리라는 점이다.

3. 조약의 이행을 저해하는 요인과 어려움

7. 위원회는 현 시기 정치적·경제적 과도기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주목한다. 급속한 경제 성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언제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적절한 수준에서 실현하려는 노력과 부합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빈곤의 증대로 영향받는 극빈층 아동과 관련해서는 특히 그러하다. 한국은 최근야야 군사 통치에서 벗어났으며, 이런 상황은 한국 아동들이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누리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왔다.

4. 우려되는 주요한 문제들

8.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조약 제9조 3항, 제21조 (가)항 그리고 제40조 2항 (나)호의 (5)를 유보한 처사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원칙과 아동의 관점 존중이라는 원칙을 포함하여 이 조약의 원칙 및 규정들에 반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9. 위원회는 영구적이고 효과적인 조정과 감시 기제를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한

국에서 취해지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한국 정부가 조약에서 포괄하는 모든 영역에 관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믿을 만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한다. 이와 같은 데이터는 아동,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에 관하여 한국 정부가 채택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진전된 정도를 가늠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10.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이 조약의 원칙과 조항들을 자국의 아동들과 어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교사, 사회사업가, 판사, 법집행 공무원, 심리학자, 보건 의료인 등 한국에서 아동을 위하여 아동 가까이에서 일하는 여러 전문가 집단에 대하여 이 조약 내용에 관한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여긴다.
11. 조약 제4조를 이행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아동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가용 자원의 최대 범위까지 이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이 부적절한 것으로 우려한다. 아동을 사회적·인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분야에 대해서도 그리고 가장 취약한 집단의 아동들의 욕구에 대하여도 배려가 충분치 못했다.
12. 위원회는 또한 이 조약의 기본 원칙(즉, 조약 제2, 3, 12조의 규정)이 한국의 입법, 정책,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한국 정부의 보고서가 시인하듯이, 아동을 단순히 "작은 어른 혹은 미숙한 어른"으로서 여기고 취급하는 널리 만연된 관습을 변혁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이 조약의 기본적 가치들을 국민들에게 일깨우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한 한국 정부의 조치는 불충분한 것이었다. 위원회는 또한 소녀(최소 결혼 연령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는), 장애 아동 그리고 혼외 출생 아동을 괴롭히는 차별적 태도의 존속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다.
13. 위원회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을 맡고 있는 가족이 국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14. 위원회는 국적을 가질 권리, 표현,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그리고 결사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이 불충분한 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한국 정부가 명분으로 삼아 온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은 이와 같은 여러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가로막아 왔다.

15. 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의 입양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과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파양 제도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상으로 배려한다는 원칙과 조약 제21조에서 확립된 법적 보호 장치들과 관련하여 조약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입양은 자격 있는 당국에 의하여 공인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모든 타당하고도 믿을 만한 정보가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또한 아동을 포함한 모든 관계 당사자들이 그러한 정보에 입각하여 동의하는 것을 기본적인 조건으로 해야 한다. 위원회는 특히 이런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여긴다. 국제 입양률이 높은 것 또한 위원회가 염려하는 바이다. 아동 학대와 가정 폭력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적절한 조사 체계가 결여 되어 있다는 데 대하여 우려한다. 아동 유기 문제, 높은 소년 소녀가장 세대 비율, 부모와 교사들이 하나의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고질적인 체벌의 지속 등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16.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교육 제도에서 조약 제29조에 반영되어 있는 교육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는 점을 우려한다. 지극히 경쟁적인 풍토는 아동이 잠재된 재주와 능력을 계발하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책임 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을 가로막을 위험을 안고 있다.
17. 위원회는 아동이 노동해야 할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개혁을 비롯해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이 불충분하다고 본다. 이것과 관련하여, 의무 교육을 마치는 연령과 고용 허용 최소 연령간의 모순에 위원회는 특히 주목하고 있다.
18. 위원회는 또한 한국의 현행 소년 사법 제도와 제37, 39, 40조 등 조약과 조화되지 못하는 점에 관심을 갖는다.

5. 제안과 권고

19.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유보했던 조약 제9조 3항, 제21조 (가)호, 제40조 (나)호의 (5)에 대하여 그 유보를 철회하는 방향에서 계속 재고해 줄 것을 권장한다.
20. 위원회는 조약 제42조의 견지에서,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자각하고 옹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특히 소녀, 장애 아동, 혼외 출생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의 지속 문제에 한국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공공 캠페인을 전개시킬 것, 그리고 이들 범주에 속하는 아동의 지위와 보호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즉시 효력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
21. 위원회는 또한 아동을 위하여 아동 곁에서 일하는 전문가 집단에 대하여 이 조약에 관한 교육 활동을 반드시 실현할 것을 권고한다. 그 전문가 집단이란 교사, 사회사업가, 판사, 법집행 공무원, 보건 의료 요원 그리고 조약이 포괄하는 여러 영역에 있어서 데이터수집을 해낼 임무를 부여 받은 공무원 등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더 나아가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사업'의 정신에 근거하여 학교 교과 과정에 아동의 권리 교육을 포함시킬 것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22.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한국의 국내법을, 차별 금지(조약 제2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조약 제3조), 아동의 의사 존중(조약 제12조) 등을 포함한 이 조약의 원칙과 조항에 충분히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을 권장한다. 위원회는 특히 대한민국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법적 조치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즉, 조약 제2조에 따르는 소년과 소녀의 평등한 혼인 가능 최소 연령의 설정, 조약 제23조에 따르는 모든 장애 아동의 기본권(특히 교육권)의 보장, 혼외 출생 아동에 대한 차별 철폐, 한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동이 무국적자가 될 위험 방지, 모든 형태의 체벌에 대한 명백한 금지, 그리고 고용 허용 최소 연령을 의무 교육이 종료되는 나이에 맞게끔 높이는 일. 또한 위원회는 국내·국제 입양에서 이 조약의 원칙 및 규정과 완전히 조화되게끔 관련 법규들을 포괄적으로 개혁할 것을 권장하며, 동시에 1993년의 '국제 입양과 관련된 아동 보호와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기준을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23.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전국적 규모와 지역적 규모로 이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영속적이고도 여러 학문 영역에 걸친 기구를 발전시킬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아동을 위한 음부즈맨 혹은 대등하고도 독립적인 청원 기관과 감시 기관의 설립을 한층 더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민간 단체들과 한층 긴밀한 협력을 증진할 것을 권장한다.
24. 위원회는 또한 자료 수집 체계를 개선하고 분산된 지표들을 적절하게 정리할 것을 권고한다. 이것은 가장 취약한 범주에 속하는 아동의 상황에 마땅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조약이 적용되는 모든 영역을 다루고, 진전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25.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조약 제4조의 완전한 이행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또한 아동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이행을 위하여 가용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반차별의 원칙과 아동 이익 최선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불이익을 받고 있는 아동 집단의 상황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6.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가정, 학교, 사회 생활에 대한 아동의 참여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그들이 기본적 자유를 더욱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기본적 자유 속에는 의견을 가질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권리들은 민주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권리들이며, 오로지 법률로써 정해진 바대로만 제한받는다.
27. 위원회는 특히 조약 제18조, 제27조에 비추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대한 가족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좀더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한다. 아동 유기를 막기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소년 소녀 가장이 이끄는 가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그들 가정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

-
28. 가정 폭력과 아동 학대에 있어, 위원회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 피해 입은 아동을 보호하고 적절한 육체적, 사회적 회복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더욱 나은 조치들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이런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감독하고 그리고 적절한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29.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조약 제29조에 표현된 교육 목적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권장한다.
30. 아동의 노동 분야에 있어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이 조약, 특히 제32조를 충분히 반영시키기 위하여 그 입법과 관행에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장한다. 고용 허용 최소 연령에 관한 ILO조약 138호의 기준이 고려될 수 있으며, ILO와 협의를 하면서 이와 같은 행동을 추구해 줄 것을 권고한다.
31.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특히 제37, 39, 40조에 나타난 조약의 정신과 '베이징 룰', '리아드 가이드라인' 그리고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엔 규칙'과 같은 소년 사법 분야의 유엔 기준의 정신에 입각하여, 소년 사법 제도의 포괄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다. 자유 박탈을 검토하는 것은 오로지 마지막 수단으로써만, 그것도 가장 짧은 기간이라야 한다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의 권리 보호에 그리고 사법 제도의 완전한 독립성과 공정성과 함께 적정 절차(due process of law)에도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소년 사법 제도와 관계 있는 모든 전문가들에게 관련 국제 기준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이 조직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소년 사법 행정 분야에서의 국제적 지원을 인권센터(the Center for Human Rights)와 범죄 방지와 형사정의분과(the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Branch)에 구해 볼 것을 한국 정부에 제안하고 싶다.
3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제출했던 보고서, 위원회의 회의록 그리고 위원회의 최종 의견이 한국 내에서 가능한 한 널리 배포될 것을 권고한다.

(번역: 어린이·청소년 권리연대)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Distr.

GENERAL
CRC/C/15/Add.51
13 February 1996

Original: ENGLISH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Republic of Korea. 13/02/96.
CRC/C/15/Add.51. (Concluding Observations/Comments)***

Convention Abbreviation: CRC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Eleventh session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public of Korea

1.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RC/C/8/Add.21) at its 266th, 267th and 268th meetings (CRC/C/SR.266-268), held on 18 and 19 January 1996, and adopted* the following concluding observations.

A. Introduction

2. The Committee expresses its appreciation to the State party for engaging, through a high level and multidisciplinary delegation, in an open and fruitful dialogue with the Committee. It welcomes the written information submitted by the delegation in reply to

the questions included in the list of issues, as well as the additional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tate party following the dialogue held with the Committee.

B. Positive aspects

3. The Committee notes with satisfaction that the Convention is directly applicable in the domestic legal order and can be invoked before the courts.
4. The Committee welcomes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 plan of action for children and its incorporation in the Seventh Five Year Social Economic Development Plan for 1992-1996, as well as the recent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5. The Committee notes with satisfaction the importance attached by the Government to education, considered as the "driving force of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6. The Committee also welcomes the openness, reflected in the written replies and reaffirmed by the delegation during the dialogue, towards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withdrawing the reservations entered by the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is encouraged by the revision of the Civil Code that is being undertaken with the aim of incorporating the right of the child who is separated from one or both parents to maintain personal relations and direct contact with both parents on a regular basis. It is also encouraged by the fact that, as stated by the delegation, such a measure will enable the State party to withdraw its reservation pertaining to article 9, paragraph 3 of the Convention.

C. Factors and difficulties impe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7. The Committee notes the difficulties facing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present period of political and economic transition. The efforts to secure rapid economic growth have not always been matched by an appropriate level of realiz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children belonging to the most disadvantaged groups affected by growing poverty. The fact that the country has only recently emerged from a period of military rule has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enjoyment of

th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children.

D. Principal subjects of concern

8. The Committee is of the view that the reservations made by the State party to article 9, paragraph 3, article 21, paragraph (a) and article 40, paragraph 2 (b) (v) raise questions about their compatibility with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including the principles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nd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9.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insufficient measures adopted to ensure a permanent and effective coordinating and monitoring mechanism. The Committee also notes the insufficient measures taken to gather reliabl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on all areas covered by the Convention, to evaluate progress achieved and to assess the impact of policies adopted on children,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the most vulnerable groups of children.
10.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insufficient measures taken to ensure that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re widely known to children and adults. The lack of adequate training on the contents of the Convention of the various professional groups working with and for children, including teachers, social workers, judges, law enforcement officials, psychologists and health personnel, is also noted with regret.
11. As regards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4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e inadequacy of measures taken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children'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o the maximum extent of available resources. Insufficient attention has been paid in this regard to the areas of the social and human development of children and to the needs of the most vulnerable groups of children.
12.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that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in particular the provisions of its articles 2, 3 and 12, have not been adequately reflected in legislation, policies and programmes. Insufficient measures have been adopted to create awareness of these basic values of the Convention with a view to changing the

prevailing consideration and treatment of the child simply "as a mini adult or immature adult", as recognized in the report.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e persistent discriminatory attitudes affecting girls including in relation to the minimum age for marriage disabled children and children born out of wedlock.

13.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e insufficient assistance provided for families to assume their responsibilities in the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14. The Committee expresses its concern at the insufficient measures adopted, including of a legal nature, to ensu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ivil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children, such as in relation to the right to a nationality, freedom of expression,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as well as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peaceful assembly. The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invoked by the Government have hampered the enjoyment of such fundamental freedoms.
15. The Committee is of the view that the approach of the State party in the field of adoption and the prevailing system of dissolution of adoption, raises questions as to its compatibility with the Convention, including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s the paramount consideration, as well as to the legal safeguards established by article 21. In this regard, the Committee is particularly concerned at the insufficient measures taken to ensure that adoption is authoriz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n the basis of all pertinent and reliable information and of the informed consent of all persons concerned, including the child. The high rate of inter country adoption is also of concern to the Committee. With regard to child abuse and domestic violence,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lack of preventive policies and of adequate reporting mechanisms. Abandonment of children, the high rate of child headed families and the persistence of corporal punishment, widely envisaged by parents and teachers as an educational measure, are other subjects of concern to the Committee.
16.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insufficient consideration given in the education system to the aims of education as reflected in article 29 of the Convention. The highly competitive nature of the education system risks hampering the development of the child to the fullest potential of his or her abilities and talents and the child's

preparation for responsible life in a free society.

17. Concern is also expressed at the insufficient measures adopted, including in the field of legal reform, to prevent situations of child labour. In this regard, the discrepancy between the age for completion of compulsory education and the minimum age for admission to employment is noted with particular concern.
18.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about the existing juvenile justice system and its lack of compatibility with the Convention, including articles 37, 39 and 40.

E.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19.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Government to continue to consider reviewing its reservations to article 9, paragraph 3, article 21, paragraph (a) and article 40, paragraph (b) (v), with a view to withdrawing them.
20.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Government strengthen its efforts aimed at promoting advocacy and creating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in the light of its article 42. The Committee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develop public campaigns with a view to addressing effectively the problem of persisting discriminatory attitudes, in particular towards girls, disabled children and children born out of wedlock, and that it adopts pro active measures to improve the status and protection of these groups of children.
21. The Committee also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ensure training activities on the Convention to professional groups working with and for children, including teachers, social workers, judges, law enforcement officers, health personnel and officials entrusted with the task of ensuring data collection in the areas covered by the Convention. In the spirit of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the Committee further encourages the Government to give consideration to the incorpo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in the school curricula.
22.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Government to pursue its efforts in order to ensure full compliance of its national legislation with the provisions and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including non discrimination (art. 2),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rt. 3) and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art. 12). The Committee particularly recommends that legislative measures be adopted with a view to ensuring an equal minimum age for marriage for girls and boys, in the light of article 2; ensuring the basic rights of all disabled children, in particular the right to education, in the light of article 23; abolishing any discrimination towards children born out of wedlock; preventing any risk of statelessness for a child born to a Korean mother; clearly prohibiting any form of corporal punishment; and raising the minimum age for employment with a view to adjusting it to the age of compulsory education. In the field of national and inter country adoption,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undertake comprehensive legal reform to ensure full compatibility with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s well as to consider ratifying the 1993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 country Adoption.

23.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a permanent and multidisciplinary mechanism be developed for coordination and monitor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both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s, in urban and rural areas.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give further consideration to the establishment of an ombudsperson for children or any equivalent independent complaint and monitoring mechanism. The Committee further encourages the promotion of a closer cooperation with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24.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ystem of data collection be improved and appropriate disaggregated indicators identified with a view to addressing all areas covered by the Convention and evaluating progress achieved, with due regard being paid to the situation of children belonging to the most disadvantaged groups.
25. The Committee strongly recommends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e full implementation of article 4 of the Convention and under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the maximum extent of available resourc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children.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situation of the most disadvantaged groups of children in the light of the principles of non discrimination and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
26.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greater efforts should be made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children in family, school and social life, as well as the effective enjoyment of their fundamental freedoms, including the freedom of opinion, expression and association, which should be subject only to the restrictions provided by the law and which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27.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adopt further measures to ensure assistance for the family to ensure its responsibilities in the upbringing and development of the child, in particular in the light of articles 18 and 27 of the Convention.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prevention of child abandonment, as well as to the prevention of, and appropriate assistance to, child headed families.
 28. In the area of child abuse and domestic violence,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adopt further measures to prevent such situations, and to protect and ensure appropriate physical recovery and social reintegration of children affected thereby.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of early detection, surveillance and referral.
 29.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review its education policy, with a view to reflecting fully the aims of education set out in article 29 of the Convention.
 30. In the area of child labour,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adopt appropriate measures with a view to reflecting fully the Convention, in particular article 32, in its legislation and practice. It recommends that consideration be given to the ratification of ILO Convention No. 138 on minimum age for admission to employment and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consider pursuing such action in consultation with ILO.
 3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visage undertaking a comprehensive reform of the system of juvenile justice in the spirit of the Convention, in particular articles 37, 39 and 40, and of other United Nations standards in this field, such as the "Beijing Rules", the "Riyadh Guidelines" and the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Particular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consideration of deprivation of liberty only as a measure of last

resort and for the shortest period of time,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to due process of law and to the full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the judiciary. Training programmes on the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should be organized for all those professionals involved with the system of juvenile justice. The Committee would like to suggest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sider seeking international assistance in this area of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from the Centre for Human Rights and the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Branch.

32.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report submitted by the State party, the summary records of its consideration and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be disseminated as widely as possible within the country.

* At the 287th meeting, held on 26 January 1996.

대한민국 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최종견해 : 대한민국

배포

일반

CRC/C/15/Add.197

2003년 3월 18일

원본: 영문

아동권리위원회

32차 회기

1. 위원회는 2003년 1월 15일 개최된 838차 및 839차 회의(CRC/C/SR.838 및839)와 2003년 1월 31일 개최된 862차 회의에서 2000년 5월1일 제출된 대한민국의 제2차 정부보고서(CRC/C/70/Add.14)를 심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최종견해를 채택한다.

A. 도입

2. 위원회는 제2차 국가보고서 및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 및 서면답변 제출을 환영하며, 이는 한국아동권리 상황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한국정부의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대표단 파견에 주목하며, 심의중에 있었던 제안과 권고에 대해 한국정부 대표단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준 것을 환영한다.

B. 한국정부가 취한 후속조치 및 진전사항

3.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 및 신고에 중점을 둔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별법” 제정과 19세 미만자의 성매수 관련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2000년 “청소년호보법”의 제정 등의 입법조치를 환영한다.

4.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환영한다.

5. 1999년 ILO 제138호 협약, 2001년 ILO 제182호 협약 비준과 이전에 권고한 바 있는 고용최저연령의 15세 이상으로의 상향조정을 환영한다.

C. 협약이행 장애요인 및 어려움

6. 아동권리위원회는 1997년 아시아외환위기와 IMF 구조조정개혁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이행하는 하는데 있어 경제적·재정적 제약을 받았음을 인정하며, 이러한 강력한 긴축조치로 인하여 한국정부가 국제부채를 적정한 시기에 상환할 수 있었고 전반적인 경제회복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D. 주요 문제영역 및 권고사항

1.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위원회의 이전 권고사항

7. 대한민국정부의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CRC/C/8/Add.21)에 따라 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대부분의 권고안들(CRC/C/15/Add.51) 이,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음에 유감을 표명한다.

(가) 유보조항의 철회(19항)

(나) 소녀, 장애아동, 혼인외출생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의 근절을 위한 공공 교육 캠페인의 개발(20항)

(다) 가정,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 아동의 참여증진을 위한 조치(26항)

(라) 모든 형태의 체벌 금지(22항)

(마) 아동권리협약 제29조에 규정된 교육 목표를 완전히 반영하기 위한 교육 정책의 검토(29항)

-
8. 아동권리위원회는 상기 사항들에 대해 재차 강조하며, 제1차 정부보고서 최종평가에 포함되었으나 이행되지 않은 권고사항과 제2차 정부보고서 최종평가에 포함되어있는 관심사항을 다루는데 대한민국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협약에 대한 유보조항

9.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정부가 제9조 3항(자녀의 부모면접권 보장), 제21조(a) (입양의 절차) 및 제40조 2항 (b)(v)(상소권의 보장)들을 유보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10. 아동권리위원회는 유죄를 선고 받은 청소년의 항소권에 유념하며, 가능한 빨리 제40조 2항(b)(v)(상소권의 보장)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한다. 또한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1993)에 의거하여, 아동권리협약 제21조(a) (입양의 절차)와 제9조 3항(자녀의 부모면접권 보장)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수 있도록,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상호면접교섭권을 보장하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민법을 신속히 개정하고, 국내 입양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국내입법 조치

11. 아동권리위원회는 국내법의 개정에 주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이 여전히 아동권리협약의 조항과 원칙에 아직까지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12. 아동권리위원회는 국내법이 아동권리협약의 조항 및 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한다.

아동권조정기구

13. 아동권리위원회는 제8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1998-2002)에 아동에 대한 국가 행동계획이 포함되어있었음에 주목한다. 그러나 정부 다양한 정부부처에 운영되는 모든 아동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한 조정권한을 행사하는 상설중앙기구

가 아직껏 없음에 유감을 표명한다.

14. 아동권리위원회는 2001년 “어린이보호·육성종합계획”의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권리를 포괄하고 2002년 5월 유엔총회 아동특별회기에서 만들어진 “어린이에게 살기 좋은 세상”에 구체화된 임무를 포괄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관련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갖는 상설중앙기구를 설립하여, 그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충분한 재정적 인적, 물적 자원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공공기관에 의한 모니터링

15.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대표단이 대한민국정부가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부내 상설기구의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
16. 아동권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모니터링기구의 설립을 신속히 추진하여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정부의 활동을 활발히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한다.

독립적인 모니터링

17. 아동권리위원회는 4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권리 부문에 대한 전문성이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18. 아동권리위원회는 정부당국이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파리원칙(총회 결의 48/134)과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2호에 의거하여 다음의 사항을 보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다.
- (가) 인권위원중 적어도 1명의 아동전문가가 임명되도록 보장하거나 아니면, 아동권에 대한 소위원회의 설립을 보장
 - (나) 아동의 진정을 아동친화적인 방식으로 접수, 조사 및 처리하는 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아동의 접근성을 보장.

예산배정

19.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년간의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1997년 이래로 정부 예산에서 아동에 배정된 예산이, 특히 보건과 교육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음에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현재의 지출수준은 아동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우선권을 두고 있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며, 한국과 비슷한 경제발전 수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예산배정규모와도 같은 규모가 아니다.
20.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아동권리협약 제4조의 충분한 이행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 (가) 아동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속하는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예산할당에 우선순위를 두고,
 - (나) 다양한 부문에서 아동을 위한 서비스의 비용, 접근성 및 품질과 효과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적·사적 부문 및 민간단체 영역에서 아동에게 소요되는 정부예산액과 비율을 밝힐 것.

자료수집

21.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서면답변에서 표현하였듯이, 현재의 자료수집체계가 협약의 모든 영역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는 우려에 견해를 같이 하며, 아동권리의 지표를 개발하려는 계획에 주목한다.
22. 아동권리위원회는 분산된 자료의 수집, 특히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관련 자료의 수집을 위해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지속하고 강화할 것을 장려한다. 그리고 그 자료와 지표를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및 계획의 수립, 모니터링, 평가를 위해 이용할 것을 장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협약이행 관련 진전사항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아동권리 지표작업을 완수할 것을 장려함.

시민사회와의 협력

23. 아동에게 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서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협력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필수적인 기준설정이 없고, 정책수립 단계 또는 보고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제한적이었음을 우려한다.
24. 위원회는 협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동반자로서의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한국정부가 민간단체와 좀더 체계적이며 공동적 방식으로, 정책 수립을 포함하여 협약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전국적으로나 지역에서나 협력할 것을 권고하며 향후 국가보고서를 기초하는 과정에서도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아동권 이행에 있어 사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에 관한 2002 총토론의 날’에 제기된 권고(CRC/C/121)를 고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적기관에 대한 감독을 개선할 것을, 특히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과 인증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홍보

25. 위원회는 아동 및 대중뿐만 아니라 아동관련 전문가 역시도 협약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고, 협약에 담긴 아동권에 기초한 접근에 대한 지식이 불충분함을 우려한다.
26.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배포하기 위한 민간단체와 국제기구의 활동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협약이행사항에 관한 정부보고서와 협약의 원칙과 조항을 광범위하게 알리는 것이 협약 42조와 44조에 따른 정부의 의무임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 (가) 일반대중과 특별히 아동을 겨냥하여 아동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공공캠페인 실시
- (나) 특히 교사, 판사, 국회의원, 법집행공무원, 공무원, 지자체 종사자, 아동 구급 시설 종사자, 심리학자를 포함한 보건의료인, 사회사업가를 포함하여 아동과 함께 혹은 아동을 위해서 종사하는 전문가에 대해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시행

2. 아동에 대한 정의

27. 위원회는 남아(18세)와 여아(16세)간의 최저혼인연령의 차이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28. 위원회는 여아의 최저혼인연령을 남아와 마찬가지로 상향조정하라는 이전의 권고를 반복한다.

3. 일반원칙

29. 위원회는 협약에 규정된 일반원칙 예를 들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2조), 아동이익 최상의 원칙(3조), 생명·생존 및 발전의 권리(6조),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아동의 견해가 존중 받을 권리(12조) 등이 한국 정부의 입법, 정책 및 프로그램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우려한다.
30.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다음의 내용을 권고한다.
- (가) 협약의 일반원칙인 2,3,6조 및 12조를 아동과 관련된 모든 입법에서 반영
 - (나) 위의 일반원칙을 모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치적, 사법적, 행정적 결정 및 계획, 프로그램, 서비스에 적용
 - (다) 위의 일반원칙을 계획과 정책 결정의 매 단계에서 또한 사회·보건복지·교육기관·법원·행정당국이 취하는 모든 조치에 적용하라.

차별금지

31. 위원회는 정부보고서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정보가 빠져있으며, 한부모가정 아동, 혼외출생아동, 장애아동, 여아 및 이주가정의 아동에 대한 차별행위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임에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협약에서 언급된 인종, 피부색, 언어,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인종적 출신,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에 따른 차별을 대한민국 헌법이 명백히 금지하고 있지 않음을 우려한다.
32. 위원회는 협약 2조에서 나열하고 있는 모든 근거를 포함할 수 있도록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사회적 차별, 특히 한부모가정 아동, 혼외출생아동, 장애아동, 이주노동자의 자녀, 여아에 대한 차별과 싸우기 위해, 특히 대중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포함하여 모든 필요한 혁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33. 위원회는 2001년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 채택된 선언과 행동 프로그램에 관한 후속조치로서 한국 정부가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와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다음 번 정기보고서에 포함할 것과 협약 29조 1항(교육의 목표) 관련 위원회의 일반논평을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아동의 견해 존중

34.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전통적 태도가 가정, 학교, 기타기관과 전체 사회 속에서 여전히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을 제한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35. 위원회는 협약 12조에 따라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 (가) 2000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포함하도록 재개정. 또한 법원, 행정기구, 학교 및 교육기관의 징계과정에 의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과 아동의 참여를 증진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입법 조치를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 (나) 특히, 부모, 교직원, 정부 행정 공무원, 사법부 및 크기는 사회에 아동들이 그들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견해를 밝히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한 교육 정보의 제공
 - (다)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와 그것이 정책과 프로그램 및 아동자신에게 끼친 영향에 대한 정기적 검토.

4. 시민권과 자유

표현과 결사의 자유

36. 위원회는 초·중등학교에서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교외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학교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10대들이 독립적으로 만든 인터넷 대화방이 당국 자의적으로 폐쇄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더욱 우려한다.
37. 협약 12조 내지 17조에 따라, 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과 학교 내외에서의 정치활동에 서의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 교육부가 만든 지침 및 학교교칙을 개정하고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체벌 금지

38. 위원회는 체벌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큰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위원회는 체벌이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부합되지 않으며, 특히 아동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본다(유엔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의 비슷한 견해 참고, E/C.12/1/Add.79, para 36). 교육부의 지침이 학교에서의 체벌 사용과 관련된 결정을 개별학교당국에 위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정형태의 체벌이 수용가능한 것임을 보여 주며, 따라서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징계를 조성하려는 교육적 조치를 훼손하고 있다.
39.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 (가)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
 - (나) 체벌에 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 학교 및 가정에서 체벌의 대안으로서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규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동에 대한 학대가 끼치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공공교육 캠페인 수행.

5.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대안 양육

40. 위원회는 가정과 분리된 아동의 시설양육에 대한 대안으로 그룹홈을 설립한 데 주목한다. 그러나, 그룹홈의 설립과 대안 양육 체계의 개발이 여전히 제한적이며, 사적 양육 기관이 정부의 규제나 정기적인 감사를 받고 있지 않음을 우려한다.
41.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 (가) 그룹홈과 대안양육시스템의 수를 지속적 확대. 특히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카운슬링과 지원체계를 강화
 - (나) 모든 공적·사적 시설에 아동 입소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보장. 이는 아동의 견해와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가능한 한 시설입소아동을 가정환경 속에 재통합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함.
 - (다) 대안양육되는 또한 취약가정의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숫자를 늘리고 그들의 기술과 능력을 향상.

입양

42. 위원회는 보편적인 부정적 문화적 전통으로 인해, 국내입양이 허가나 자격 있는 기관에 의하지 않고 이뤄질 수 있으며, 그러한 입양이 아동최상의 이익 또는 (적절한 경우) 아동의 견해를 반드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높은 숫자의 해외입양에 대해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해외입양이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으며, 한국정부가 해외입양과 관련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96년 1차 권고에서 언급했던 우려를 반복한다.
43.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1차 권고를 반복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가) 아동권리협약, 특히 협약 21조의 원칙과 조항에 완전히 부응하도록 하기위하여 법률 개정의 관점에서 국내 및 해외입양 체계를 포괄적으로 재검토

(나) 해외입양과 관련된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 비준.

아동학대 및 유기

44. 위원회는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보고를 받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여러 지역에서 설립된 것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며 피해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전국적인 체계가 미비함을 우려한다.
45.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 (가) 아동학대와 방임관련 진정을 접수, 모니터링, 조사하는 전국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법률 개혁을 포함하여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기소가 필요한 경우, 아동 친화적인 방식으로 돼야 하며, 법집행공무원과 사회복지사 및 검사들에게 이점에 관한 훈련 실시
 - (나) 개입 또는 처벌에 그치지보다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폭력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상담과 회복, 재융합을 위한 지원을 보장하는 전국적인 대응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센터 설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
 - (다) 아동학대 및 방임의 문제 정도를 적절히 평가하고 그에 관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있도록 성별 및 연령대로 분산된 학대 및 방임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관한 자료수집 체계 구축.

아동 부양

46. 위원회는 법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아동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혼부모와 한부모 가정(주로 어머니)의 수치가 높음에 우려한다.
47. 협약 27조와 아동이의 최상의 원칙(3조)에 입각하여, 법원의 명령에 근거하여 또는 아동이나 양육부모에게 오명을 씌우지 않는 방식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근거하여 아동양육의무를 집행하기 위한 모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

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강제집행을 하는 동시에 미불된 아동양육비를 아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지불할 수 있는 정부기금을 조성하거나, 아동양육의무를 진 자의 봉급에서 자동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6. 기초보건과 복지

48. 위원회는 높은 수준의 아동 보건 지표에 고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한국정부의 보건예산 할당이 1% 미만이며 보건시설의 90%가 사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모유수유율이 90년대에 상당히 감소했다는 점과 청소년의 흡연의 증가와 각성제 및 여타의 불법약물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49.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가) 보건예산을 상당수준 늘리고, 저소득 가정이 무료로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의료 체계를 구축하라.
 - (나) 영아에게 처음 6개월간의 완전한 모유수유가 주는 유익성에 대해 어머니를 교육하고 모유수유를 장려하라. 모유수유에 대한 국가규범을 채택하라.
 - (다) 자녀에게 모유를 먹이는 여성이 고용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
 - (라) 에이즈 및 여타의 성병에 대한 교육, 10대의 흡연과 약물남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청소년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청소년 보건 연구에 착수하라.

장애아동

50. 위원회는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광범위하며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있는 생활”을 누릴 장애아동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한다. 특히, 위원회는 상당수의 장애아동이 매년 버려지고 있으며, 많은 아동이 학교에 다닐 수 없고, 학교에 가면 다른 학생들과 분리된다는 보고에 우려한다.
51. 위원회는 ‘1997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장애아동에 관한 토론의 날’에서 도출된 권

고와 장애인의 기회평등에 관한 기준 규칙(유엔통회 결의안 48/96)에 따라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가) 학부모, 아동, 교사 및 일반대중을 겨냥하여 인식 향상과 교육 운동을 포함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문화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
- (나)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을 포함하여 장애아동의 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하라. 이 조사는 교육 및 여타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장애아동의 교육 욕구 및 접근에 대해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다) 학교, 여가시설을 포함하여 공공 건물과 공공 영역에 대한 장애아동의 물리적 접근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존의 프로그램을 확대하라. 또한 유치원 및 초·중·고 단계에서의 통합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확대하라.

7. 아동교육

- 52. 위원회는 정부가 중등교육을 무상화하려는 과정에 있다는 정보를 환영하지만, 대한민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수준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육만이 무상인 점을 우려한다. 마찬가지로, 초등교육에서는 여아와 남아의 입학비율에 차이가 없지만 고등교육에서는 남아보다 여아의 수가 적어지는 점을 우려한다.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매우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이 아동 잠재성의 최대한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위원회의 우려를 반복한다.

- 53.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다.
 - (가) 학교에 제공되는 자원을 늘리고 학습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사립학교에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인 공립학교의 질을 높여라.
 - (나) 취학 전 교육과 중등교육에서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무료화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라.
 - (다) 여아의 입학율 증진하고 끈질긴 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응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
 - (라) 경쟁성을 감소시키고, 협약 29조 1항과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에서 언급된 교육의 목적을 반영할 목적으로 정부의 교육 정책을 재고하라.

8. 특별보호 조치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54. 위원회는 아동에게 성적 서비스를 산 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2000년 청소년보호법을 만든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법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아동성착취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임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원조교제” 현상에 대해 우려한다.
55.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가) 상업적 아동 성착취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하라. 이 계획에는 1996년과 2001년 ‘제 1·2차 상업적 아동 성착취 철폐 세계 대회’에서 합의됐듯이 효과적인 자료 수집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 (나) 아동친화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접수·모니터·조사·기소하는 방법에 대하여 법집행공무원, 사회사업가 및 검사를 훈련하라.
 - (다) 모든 성학대와 성착취 피해자들에게 회복과 재통합을 위한 적합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보장하라.
 - (라) 연소자에 대한 성학대 및 착취에 관련된 법률 정보, 건강한 생활양식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등 예방적 조치를 개발하라.

청소년 사법

56. 위원회는 법을 위반한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이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적 지원 없이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57.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 (가) 특히 협약 37, 40, 39조와 소년사법집행에 관한 유엔 최소기준(베이징 규칙), 소년비행방지를 위한 유엔가이드라인(리야드(Riyadh) 가이드라인), 1995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소년사법집행에 관한 토론의 견지에서, 소년사법기준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고 소년사법 관련 종사자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수행하라.

-
- (나) 자유의 박탈을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라. 그리고 자유의 박탈로 귀결될 수 있는 보호처분과 관련된 모든 청소년에게 조기에 변호인을 보장하라.
- (다) 연소자를 형사절차에 회부할 것인지 보호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검사의 자유재량(검사선의주의)을 없애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라.

이주노동자 자녀

58. 위원회는 교육 및 사회보장관련 법과 규칙이 외국인 아동,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에게 복지와 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우려한다.
59.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 (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포함하여 모든 외국인 아동에게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도록 국내법, 특히 교육과 사회보장관련법을 개정하라.
- (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1990)의 비준을 고려하라.

9. 아동권리에 대한 선택의정서 및 협약 제43조 2항의 개정

60. 위원회는 협약에 따른 두 개의 선택의정서(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서명하고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것에 주목한다.
61. 위원회는 협약에 따른 두 개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권고한다.

10. 협약문서의 보급 홍보

62. 협약 44조 6항의 견지에서, 위원회는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와 서면답변을 광범위한 대중, 특히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관련 기록과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포함하여 보고서 출판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정부, 국회, 일반 대중 및 민간단체 내

에서 협약에 대한 인식과 토론을 낳고 협약의 이행과 모니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위와 같은 문서는 광범위하게 배포되어야만 한다.

11. 차기보고서 제출

63. 위원회가 채택한 정기보고서에 대한 권고와 29차 회기(CRC/C/114)의 보고서에서 기술한 권고에 입각하여, 위원회는 협약 44조에 충분히 부응하는 국가 보고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협약의 이행에서 나타난 진전을 점검할 수 있는 정기적인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것은 협약 당사국의 중요한 책임이다. 이런 점에서 정기적으로 시기를 맞춰 제출되는 정부보고는 아주 중요하다. 위원회는, 예외적인 조치로, 한국정부가 협약에 부응하는 보고 의무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한국의 3차와 4차 보고서를 하나의 보고서로 만들어서 4차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돼있는 2008년 12월 19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원래 3차 보고서가 2003년에 제출돼야 하나, 한국 정부의 보고서 제출이 늦었고 위원회의 심사회의회도 지연된 관계로 2차 보고서를 2003년에야 심의하게 되었다. 이에 3차 보고서 심사를 건너뛰게 된 것이다; 역자주) 위원회는 협약이 정한대로 한국정부가 매 5년마다 보고할 것을 기대한다.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Distr.
GENERAL
CRC/C/15/Add.197
18 March 2003
Original: ENGLISH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irty second session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Concluding observations: Republic of Korea

1.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second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RC/C/70/Add.14), submitted on 1 May 2000, at its 838th and 839th meetings (see CRC/C/SR.838 and 839), held on 15 January 2003, and at the 862nd meeting, held on 31 January 2003, adopted the following concluding observations.

A. Introduction

2. The Committee welcomes the submission of the State party's second periodic report, as well as the detailed written replies to its list of issues (CRC/C/Q/REPKO/2), which gave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in the State party. It further notes with appreciation the high level delegation drawn from several sectors sent by the State party and welcomes the positive reactions to the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made during the discussion.

B. Follow up measures undertaken and progress achieved
by the State party

3. The Committee welcomes the legislation enacted to implement furthe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particular the Special Act for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of 1997, which addresses investigation and reporting of cases of child abuse, and the Juvenile Protection Act of 2000, which criminalizes persons involved in the purchase of sexual services from those under 19 years of age.

GE.03 40848 (E) 030404

4. The Committee welcomes the establishment in 2001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5. The Committee welcomes the State party's ratification of ILO Conventions Nos. 138 and 182 in 1999 and 2001, respectively, and its raising of the minimum age of employment to 15 years, as was previously recommended by the Committee.

C. Factors and difficulties impe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6. The Committee acknowledges that, due to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ensuing structural adjustment reform programme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State party has faced economic and financial constraints which has affected its ability to implement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Committee also notes that the strict austerity measures have allowed the State party to repay its international loans in a timely manner and that the economy has largely recovered.

D. Principal areas of concern and recommendations

1.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Committee's previous recommendations

7. The Committee regrets that most recommendations in the concluding observations

(CRC/C/15/Add.51), adopted following its consideration of the State party's initial report (CRC/C/8/Add.21), have been insufficiently addressed, particularly those regarding:

- (a) The withdrawal of reservations (para. 19);
- (b) The development of public education campaigns to combat discriminatory attitudes towards girls, disabled children and children born out of wedlock (para. 20);
- (c) Measures to promote participation of children in family, school and social life (para. 26);
- (d) The prohibition of all forms of corporal punishment (para. 22);
- (e) A review of the State party's education policy with a view to reflecting fully the aims of education set out in article 29 of the Convention (para. 29).

8. The Committee reiterates those concerns and urges the State party to make sustained efforts to address thos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n its initial report that have not been implemented and to address the list of concerns contained in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on its second periodic report.

Reservations

9. The Committee remains very concerned at the State party's reservations to articles 9, paragraph 3, 21, paragraph (a), and 40, paragraph 2 (b) and (v).
- 10. The Committee, noting that juveniles sentenced for having committed a crime have the right to appeal,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withdraw, as soon as possible, the reservations made to article 40, paragraph 2 (b) and (v). The State party is also encouraged to expedite the process of reforming the Civil Act so that both children and parents are guaranteed the right to maintain contact with each other, and to strengthen its efforts to change public attitudes to domestic adoption, in order to withdraw the reservations to articles 21, paragraph (a), and 9, paragraph 3, in accordance with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adopted in 1993.**

Legislation

11. The Committee, while taking note of amendments to domestic legislation, nevertheless remains concerned that domestic laws do not yet fully conform with the provisions

and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12.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its domestic legislation conforms fully with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Coordination

13.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National Plan of Action on Children was included in the eighth Five Year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Plan for 1998 2002. However, it remains concerned at the lack of a permanent central mechanism that is fully empowered to coordinate all policies and programmes for children run by the various ministries at different levels of government.
14.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broaden the scope of the Comprehensive Plan for Child Protection and ChildRearing, formulated in 2001, to include all rights under the Convention and the commitments made at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children (May 2002) and outlined in the outcome document entitled “A World Fit for Children”. In addi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designate one permanent and central mechanism to be responsible for the coordination of all policies and programmes for children, and ensure that it has the necessary authority and adequate financial,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o carry out its responsibilities effectively.**

Monitoring by public authorities

15. The Committee welcomes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delegation that the State party is considering the establishment of a permanent body within the Government to monitor its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16.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xpedite the establishment of such a monitoring mechanism and actively monitor its activities in implementing the Convention.**

Independent monitoring

17. The Committee welcomes, as noted in paragraph 4 above,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Nevertheless, it is concerned that the Commission has no specialization in children's rights.
18.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Paris Principle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134, annex) and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2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 (a) **Ensure that there is at least one child rights expert amongst the Commissioners, or alternatively, that the Commission establish a subcommittee on children’s rights;**
 - (b) **Ensure that the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is accessible to children, in particular by raising awareness of its power to receive, investigate and address complaints by children in a child sensitive manner.**

Allocation of resources

19.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allocations for children from the central budget,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health and education, have been steadily declining since 1997, despite economic recovery in the past two years. Current levels of spending are insufficient to respond to national and local prioritie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hildren's rights and are not commensurate with budgetary allocations of other States at a similar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20.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e full implementation of article 4 of the Convention by:**
- (a) **Prioritizing budgetary allocations to ensure implementation of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children, in particular those belonging to economically disadvantaged groups, “to the maximum extent of … available resources”;**
 - (b) **Identifying the amount and proportion of the State budget spent on children in the public, private and NGO sectors in order to evaluate the impact of the expenditures and also, in view of the costs, the accessibility, qua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services provided to children in the various sectors.**

Data collection

21. The Committee shares the concern expressed by the State party in its written replies that the existing data collection mechanism does not cover all children under 18 years in all areas of the Convention and notes the plan to develop a child rights index.
22.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continue and strengthen its efforts to establish an effective system for the collection of disaggregated data, specifically for all persons under the age of 18, and use these data and indicators for the formul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policies, programmes and project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t also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complete the work on the child rights' index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be able to evaluate continuously the progress made in implementing the Convention.**

Cooperation with civil society

23. While noting the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party and civil society in delivering services to children,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re is a lack of necessary standardsetting, and that cooperation with civil society at the policy making level or in the reporting process has been limited.
24. **The Committee emphasizes the important role of civil society as a partner in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volve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in a more systematic and coordinated manner, in all stage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cluding policy formulation,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s, and in the drafting of future periodic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t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into account the recommendations arising from the day of general discussion held in 2002 on the theme “The private sector as service providers and its role in implementing child rights” (CRC/C/121, para. 630) and improve its supervision of private organizations delivering services by, inter alia, improving the system of registration and authorization of service providers.**

Dissemination

25.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children and the public at large, as well as all groups of professionals working with and for children, are not sufficiently aware of the Convention and the rights based approach enshrined therein.
26. **While noting the activities of NGO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disseminate information on children's rights, the Committee reminds the State party of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s 42 and 44 to make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s well as its own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widely known. It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Undertake public awareness campaigns on children's rights aimed at the general public and specifically at children;**
 - (b) **Carry out systematic education and training on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for all professionals working with and for children, in particular teachers, judges, parliamentarians, law enforcement officials, civil servants, municipal workers, personnel working in institutions and places of detention for children, health personnel, including psychologists, and social workers.**

2. Definition of the child

27.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about the difference in the minimum age of marriage of girls (16) and boys (18).
28.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previous recommendation to the State party that it raise the minimum age of marriage of girls to that of boys.**

3. General principles

29.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general principles and rights, enshrined in the Convention, such as the right to non discrimination (art. 2), the principle tha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all be a primary consideration (art. 3), t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of the child (art. 6) and the right of the child to express his or her views freely and to have those views taken into account according to age and

maturity (art. 12) are not fully reflected in the State party's legislation, policies and programmes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s.

30.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Appropriately integrate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namely articles 2, 3, 6 and 12, into all relevant legislation concerning children;**
 - (b) **Apply those principles in all political, judicial and administrative decisions, as well as in projects, programmes and services which have an impact on all children;**
 - (c) **Apply those principles in planning and policy making at every level, as well as in actions taken by social and health welfare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courts of law and administrative authorities.**

Non discrimination

31.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e absence of information in the State party's report on racial discrimination, and the limited amount of information regarding acts of discrimination against children from single parent families, children born out of wedlock, children with disabilities, girls and migrant families. It is also concerned that the Constitution does not explicitly prohibit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race, colour, language,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ethnic origin, disability, birth or other status, as stated in the Convention.
32.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act legislation explicitly prohibiting discrimination in order to include all grounds enumerated in article 2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undertake all necessary proactive measures to combat societal discrimination, in particular against children from single parent families, children born out of wedlock, children with disabilities, children of migrant workers and girls through, inter alia, public education and awareness campaigns.**
33. **The Committee requests that specific information be included, in the next periodic report, on the measures and programmes relevant to the Convention undertaken by the State party to follow up on the Durban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adopted**

at the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held in 2001, taking account of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1 on article 29,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aims of education).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34.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raditional attitudes towards children in society still limit respect for their views within the family, schools, other institutions and society at large.
3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 (a) Ensure that the Child Welfare Act, amended in 2000, be revised to include the right of children to express their views freely in all matters affecting them, and take effective measures, including legislation, to promote respect for the views of children and facilitate their participation in all matters affecting them, by courts, administrative bodies, schools and disciplinary proceedings in the education system;**
 - (b) Provide educational information to, inter alia, parents, educators, government administrative officials, the judiciary and society at large on children's right to have their views taken into account and to participate in all matters affecting them;**
 - (c) Undertake a regular review of the extent to which children's view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of the impact this has on policies, programmes and children themselves.**

4. Civil rights and freedoms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36.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limitations on students'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due to strict administrative control of student councils and school regulations that limit or prohibit outside political activities of student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It is further concerned about allegations that Internet chat rooms, set up independently by teenagers, have been arbitrarily closed down by the authorities.

37. **In the light of articles 12 to 17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mend legislation, guidelines issu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hool regulations to facilitate children's active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processes and in political activities both within and outside schools and ensure that all children fully enjoy their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expression.**

Corporal punishment

38. The Committee notes with great concern that corporal punishment is officially permitted in schools. The Committee is of the opinion that corporal punishment does not conform with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particularly since it constitutes a serious violation of the dignity of the child (see similar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1/Add.79, para. 36). The fact that the Ministry of Education guidelines leave the decision on whether to use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to the individual school administrators suggests that some forms of corporal punishment are acceptable and therefore undermines educational measures to promote positive, non violent forms of discipline.

3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Implement the recommenda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at the relevant legislation and regulations be amended to expressly prohibit corporal punishment in the home, schools and all other institutions;**
- (b) **Carry out public education campaigns about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illtreatment of children in order to change attitudes to corporal punishment, and promote positive, non violent forms of discipline in schools and at home as an alternative to such punishment.**

5. Family environment and alternative care

Alternative care

40. The Committee notes the State party's establishment of group homes as an alternative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hildren separated from their families. However, it is concerned that the establishment of group hom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foster

care system remain limited, and that private alternative care institutions are not subject to governmental regulations or regular inspections.

4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Continue to expand the number of group homes and the foster care system, in particular by providing greater financial support to foster families and increasing the counselling and support mechanisms for foster families;**
 - (b) **Ensure a periodic review of placement of children in all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that takes into account the views and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nd, wherever possible, aims to reintegrate children into a family environment;**
 - (c) **Increase the number of social workers and upgrade their skills and capacity to provide assistance to children in alternative care and to vulnerable families.**

Adoption

42.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due to prevailing negative cultural traditions, domestic adoptions may be arranged without authorization or involvement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that such arrangements do not necessarily take into accoun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or, where appropriate, the views of the child. The Committee also notes with concern the high number of intercountry adoptions, suggesting that this form of adoption is not necessarily a measure of last resort, and reiterates its concern, stated in previous concluding observations, that the State party has not ratified the Hague Convention of 1993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43.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previous recommendation to the State party and calls for:**
- (a)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system of domestic and inter country adoptions with a view to reforming legislation in order to bring it into full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particular article 21;**
 - (b) **The ratification of the Hague Convention of 1993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Child abuse and neglect

44. The Committee welcomes the establishment of Centre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in many regions of the country that deal with repor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and provide counselling and assistance to victims. Nevertheless, it is concerned that there is no nationwide system for receiving and effectively addressing complain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for providing assistance to victims.
4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legislative reform, to establish a national system for receiving, monitoring, and investigating complain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and, when necessary, prosecuting cases in a child sensitive manner, and provide training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social workers and prosecutors in this regard;**
 - (b) **Strengthen its efforts to establish Centre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in order to develop a nationwide response system which is designed to provide, where appropriate, support and assistance to both victims and perpetrators of family violence, rather than solely intervention or punishment, and which ensures that all victims of violence have access to counselling and assistance with recovery and reintegration;**
 - (c) **Establish a mechanism for collecting data on the perpetrators and victims of abuse and neglect, disaggregated by gender and age, in order to assess properly the extent of these problems and design policies and programmes to address these concerns.**

Child maintenance

46.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high number of divorced and single parents, primarily mothers, who do not receive the child maintenance payments to which they are legally entitled.
47. **In the light of article 27 and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rt. 3),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all effective measures to enforce child maintenance obligations based on a court order or agreements between parties in a manner that does not stigmatize the child or his or her custodial parent. For**

instance, the State party might consider establishing a national fund to ensure payment of overdue child maintenance obligations to the custodial parent while enforcement measures are enacted, or introducing a system in which child support payments are automatically deducted from salaries of those employees with child maintenance obligations.

6. Basic health and welfare

48. The Committee is encouraged by the very positive health indicators for children. Nevertheless, it is concerned that the proportion of the government budget allocated to health is less than 1 per cent, and that 90 per cent of all health care facilities are privately operated.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that the proportion of mothers breastfeeding their children has declined significantly during the 1990s, and that the number of adolescents smoking and using amphetamines and other illicit substances is increasing.

4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Increase to a significant level the funding allocated to health and establish a system of public care facilities so that low income families may have access to health systems at no cost;**
- (b) Take steps to encourage and educate mothers on the benefits of exclusive breastfeeding of infants during the first six months and adopt a national code on breastfeeding;**
- (c) Take effective measures to counteract any negative impact on the employment of women who breastfeed their children;**
- (d) Undertake a study of adolescent health with a view to developing a comprehensive adolescent health policy that addresses, inter alia, education on HIV/AIDS and other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the problem of smoking and drug abuse amongst teenagers as well as other relevant issues.**

Children with disabilities

50. The Committee is extremely concerned that societal discrimination against children is widespread and prevents these children from enjoying their right to “a full and decent

life, in conditions which ensure dignity, promote self reliance and facilitate the child's active participation". In particular, it is concerned at reports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re abandoned each year, that many cannot attend school and when they do attend school they are segregated from other students.

5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arising from the Committee's day of general discussion, held in 1997, on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96, annex):**
- (a) **Take effective measures to combat the culture of discrimination against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rough awareness raising and education campaigns aimed at parents, children, teachers and the general public;**
 - (b) **Undertake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number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ose currently not attending school, which assesses their educational needs and access to education and other social services;**
 - (c) **Expand existing programmes aimed at improving the physical acces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o public buildings and areas, including schools and recreational facilities, and increase the number of integrated education programmes at pre primary,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levels.**

7. Education

52.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despite the State party's relatively high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only primary education is free, yet it welcomes the information that the State party is in the process of making middle school education free. Similarly, while there is no disparity in enrolment rates of girls and boys in primary education, significantly fewer girls than boys attend higher education. Finally,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concern that the highly competitive nature of the education system risks hampering the development of the child to his or her fullest potential.
53.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Raise the quality of public schools, which is low compared to private schools, by increasing material resources provided to school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
- teaching;
- (b) **Develop a time bound strategy for reducing and eliminating the cost of preschool and secondary education;**
 - (c) **Take effective measures to ensure that higher education is accessible to all on the basis of capacity, by promoting the enrolment of girls and addressing persistent gender stereotypes;**
 - (d) **Review its education policy with a view to reducing competitiveness and reflecting the aims of education set out in article 29,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and in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1 on the aims of education.**

8. Special protection measures

Sexual exploitation

54. The Committee welcomes the enactment in 2000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which aims to penalize those purchasing sexual services from children. However,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is Act is not being effectively implemented, and that there is limited data available on the prevalence of child sexual exploitation. It is also concerned at reports of the widespread phenomenon of “Wonjokyuje” in which adolescent girls engage in a sexual relationship with older men for money.

5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Develop a National Plan of Action on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which includes measures for effective data collection, as agreed at the First and Second World Congresse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held in 1996 and 2001, respectively;**
- (b) **Train law enforcement officials, social workers and prosecutors on how to receive, monitor, investigate and prosecute complaints in a child sensitive manner;**
- (c) **Ensure that all victims of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 have access to appropriate recovery and reintegration programmes and services;**
- (d) **Develop preventive measures that target those soliciting and providing sexual services, such as materials on relevant legislation on the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 of minors and education programmes, including programmes in schools on healthy lifestyles.**

Juvenile justice

56.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juveniles accused of violating the law and subject to protective disposition may be deprived of their liberty without undergoing criminal procedures and having access to legal assistance.

57.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Ensure the full implementation of juvenile justice standards, in particular articles 37, 40 and 39 of the Convention,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the Beijing Rules) and the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the Riyadh Guidelines), and in the light of the Committee's day of general discussion, held in 1995, on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and carry out specialized training for personnel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 (b) **Use deprivation of liberty only as a measure of last resort and ensure that all juveniles involved in protection dispositions that may result in deprivation of liberty have access to legal counsel at an early stage;**
- (c) **Amend legislation in order to eliminate the discretionary power of the public prosecutor to decide whether a minor is subject to criminal procedures or protective dispositions.**

Children of migrant workers

58.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laws and regulations do not include specific provisions providing for the welfare and rights of foreign children, in particular those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5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Amend domestic laws, in particular those on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to include specific provisions which ensure equal access to services for all foreign children, including those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 (b) **Consider ratify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of 1990.**

9. Optional Protocols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Amendment to article 43, paragraph 2, of the Convention

60.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State party has signed but not ratified the two Optional Protocols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an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6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ratify the two Optional Protocols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0. Dissemination of documents

62. In the light of article 44, paragraph 6,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econd periodic report and written replies submitted by the State party be made widely available to the public at large and children in particular, and that the publication of the report be considered, along with the relevant summary records and concluding observations thereon adopted by the Committee. Such a document should be widely distributed in order to generate debate and awareness of the Convention and its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within the Government, the parliament and the general public, including concerned NGOs.

11. Next report

63. **In the light of the recommendation on reporting periodicity adopted by the Committee and described in the report on its twenty ninth session (CRC/C/114), the Committee underlines the importance of a reporting practice that is in full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An important aspect of States parties' responsibilities to children under the Convention is ensuring that the Committee has regular opportunities to examine the progress mad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this regard, regular and timely reporting by States parties is crucial. As an exceptional measure, in order to help the State party catch up with its reporting obligations in full compliance with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invites the State party to submit its third and fourth reports in one consolidated report by 19 December 2008, date on which the fourth report is due. The Committee expects the State party to report thereafter every five years, as foreseen by the Convention.**

대한민국 국가 보고서 심의 최종 권고

CRC/C/OPAC/KOR/CO/1

27 June 2008

1. 위원회는 2008년 5월 23일에 열린 제1322회 회의(CRC/C/SR 1322)에서 대한민국의 최초 이행 보고서(CRC/C/OPSC/KOR/1)를 심의 했으며, 2008년 6월 6일에 열린 제1342회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A. 서 문

2. 위원회는 선택의정서에 보장된 권리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적용 되는 입법상, 행정상 및 다른 조치들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한 당사국의 서면 답변서와 최초 이행보고서의 제출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당사국 대표단이 건설적인 대화를 위해 필수적인 몇몇 정보가 부족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3. 위원회는 이번 최종 견해가 2003년 1월 15일에 채택된 당사국의 제2차 보고서에 관한 최종 견해(CRC/C/15/Add.197)와 2008년 6월 6일에 채택된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최초 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CRC/C/OPSC/KOR/CO/1)와 함께 해석되어야 함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B. 긍정적인 측면들

4.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감사한다.
 - a) 대한민국 군대의 지원 입대 가능 연령은 18세 이상이라는, 선택의정서 비준 시 당

사국의 선언

- b) 현역병 지원 입대 연령을 17세에서 18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병역법 제14조 1항의 개정(2004년 12월)
 - c) 18세 미만의 아동을 무력분쟁에 참여하게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한 공군 규정의 개정
 - d) 2006년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설립
5.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 조약 및 의정서에 대해 비준 및 가입한 것을 환영한다.
- a) 2004년 9월 아동매매, 성매매 및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 b) 2006년 10월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 c) 2002년 11월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약
6. 더 나아가, 위원회는 무력분쟁에 참여한 아동 보호를 위한 재정 지원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국제협력 분야에서 보여준 활동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I. 일반이행조치

홍보 및 교육

7.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교과과정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증진을 위해 실시해 온 다양한 노력들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내용이 평화유지군 파병 전 교육과 군사 학교 교과 과정 등에서 어떻게 교육되고 홍보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8. 6조 2항에 비추어, 위원회는 당사국이 미디어를 포함한 적절한 수단을 이용하여 군인, 평화유지 인력뿐 아니라 공무원 및 일반 대중에게 선택의정서의 조항과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를 군사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권고한다.
9.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보건 인력, 사회복지사, 교사, 변호사, 판사 및 출입국관리 담당 공무원과 같이 무력분쟁 지역으로부터 온 망명 및 난민 아동을 접하는 직업을 포

함하여 아동과 관련된 모든 전문가 집단을 위해 선택의정서 조항에 관한 체계적인 인식 제고,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독립적인 국가 인권 기관

10. 위원회는 당사국이 2008년 2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를 포함하여 국가기관에 의한 아동의 인권침해에 대해 감시할 권한을 가지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선택의정서 이행의 감시 증진을 위한 아동권리 전담 부서가 없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11. 위원회는 당사국의 제2차 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의 권고의견(CRC/C/15/Add.197, para. 18)을 다시 강조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선택의정서의 이행을 적절히 감시·증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아동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인식 제고 조치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 권리 부서의 신설에 필요한 인적 및 재정 지원을 당사국이 계속해서 보장하도록 권고한다.

II. 금지 및 관련 문제들

법률

12. 위원회는 2004년 12월 병역법 제14조 1항의 개정을 통해, 지원입대 가능 연령을 기존의 17세에서 18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18세 미만 아동의 적대행위 참여 혹은 강제 징집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는 점을 우려한다.
13.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사항을 권고한다.
 - a) 적대행위에 아동의 징집 및 참여와 관련하여 선택의정서의 조항을 위반하는 것을 법에 의해 금지한다.
 - b) 모든 법률이 선택의정서의 조항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한다.

-
- c) 모든 군사법, 소책자 및 다른 군사 지침서들이 선택의정서 정신 및 조항과 일치하도록 보장한다.

사법권

14. 위원회는 당사국의 국내법이 15세 미만 아동의 군대 혹은 무장 단체로의 징집에 관한 치외법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환영한다.
15. 아동의 군대 혹은 무장단체로의 징집과 적대행위에 있어 아동의 이용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양자 혹은 다자 협정을 통해 적대 행위에 아동을 참여 시키고 징집하는 범죄에 관한 역외관할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한다.

III. 보호, 회복 및 재통합

아동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

16. 위원회는 북한 아동의 경우 망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당사국의 입장과 지금까지 단독 입국 아동이 당사국에 의해 보고된 선례가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적대행위에 징집되었거나 이용되었을지 모르는 망명 및 난민 아동을 확인 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들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 재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결여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원회는 또한 분쟁 지역에서 온 망명신청 아동을 포함하여, 당사국의 망명지위 인정 비율이 매우 낮음을 우려한다.
17.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사항을 권고한다.
- a) 해외에서 적대행위에 징집되거나 이용되었을지 모르는 망명 및 난민 아동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이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체계를 도입한다.
 - b) 망명 및 난민 아동의 상황을 주의 깊게 평가하고, 선택의정서 6조 3항에 따라 그들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 재통합을 위해 즉각적이고, 문화적 배경을 고

려한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한다.

- c) 본국에서 적대행위에 징집되거나 이용되었을지 모르는, 당사국의 사법권 안에 있는 망명 및 난민 아동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한다.
- d) 이와 관련하여 채택된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다음 보고서에 포함한다.

18. 더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이 적대행위에 징집되거나 이용되었을지 모르는 북한 아동의 특별한 취약성을 고려하고, 출신 국가 밖에서 단독 혹은 가족과 분리된 아동의 처우에 관한 일반 논평6호(CRC/GC/2005/6) 와 선택의정서 제6조 3항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특별보호와 지원 조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적대행위에 징집되거나 이용되었을지 모르는 북한 아동이 당사국에 보호 요청 시, 이들이 송환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IV. 국제 지원 및 협력

국제 협력

19. 위원회는 당사국이 무력 분쟁에 참여한 아동을 보호 지원하는 다자 및 양자 활동에 재정 지원을 해 온 점을 환영한다.
20. 위원회는 당사국이 분쟁지역의 아동 보호 활동을 위한 재정 지원을 포함하여 국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장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특히 분쟁지역의 아동을 포함하여 아동에 쓰여진 원조 지출의 평가 감시를 위해 KOICA 지원과 관련된 재정 자료를 항목별 분석하는 방안검토를 권고한다.

무기 수출 및 군사 지원

21. 위원회는 소형 무기와 군수품 수출을 감독하는 당사국의 법률 및 프로그램을 환영하는 반면, 18세 미만의 아동이 군대나 국가의 군대가 아닌 무장 단체의 일원으로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는 점을 우려한다.

-
22. 위원회는 현재 혹은 최근의 무력분쟁에 아동의 참여가 의심되는 국가들과의 소형 무기 거래를 금지하는 관련 법률 제정을 권고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 보고서에 관련 국내법의 개정 사항 및 이들 국가와의 소형·휴대형 무기 거래 중단에 법개정이 미친 영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V. 후속 조치 및 홍보

23.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번 권고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권고사항에 대한 적절한 고찰과 추가 행동을 위해 권고사항을 관련 정부부처, 국가 위원회, 국회의원, 국방부 및 지방당국에 전달할 것을 권고한다.
24. 이와 더불어 선택의정서의 제6조 2항에 비추어, 위원회는 선택의정서와 이의 이행 및 감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사국의 국가 보고서와 위원회가 채택한 최종견해를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를 권고한다.
25. 선택의정서의 제8조 2항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선택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추가 정보를 협약 제44조에 따라 2008년 12월 19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아동 권리협약 제3·4차 통합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청한다.

(전문번역: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Distr.
GENERAL

CRC/C/OPAC/KOR/CO/1
27 June 2008

Original: ENGLISH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Forty-eighth session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8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Concluding observations: Republic of Korea

1.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RC/C/OPAC/KOR/1) at its 1322nd meeting (CRC/C/SR.1322), held on 23 May 2008, and adopted at the 1342nd meeting (CRC/C/SR.1342), held on 6 June 2008, the following concluding observations.

A. Introduction

2. The Committee welcomes the submission of the State party's initial report under the Optional Protocol and of the written replies to its list of issues (CRC/C/OPAC/KOR/Q/1/Add.1), which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on th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other measures applicable in the Republic of Korea in respect of the rights guaranteed by the Optional Protocol. However, the Committee regrets that the delegation of the State party lacked some information necessary for a constructive dialogue.

3. The Committee reminds the State party that these concluding observations should be read in conjunction with its previous concluding observations adopted on the State party's second periodic report on 15 January 2003 (CRC/C/15/Add.197) and the concluding observations

adopted on the initial report under the 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CRC/C/OPSC/KOR/CO/1) on 6 June 2008.

B. Positive aspects

4. The Committee notes with appreciation:
 - (a) The State party's declaration made upon ratific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that the minimum age for voluntary recruitment into the Korean national armed forces is 18 years;
 - (b) The amendment made in December 2004 to article 14, paragraph 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which raised the minimum age for voluntary enlistment for active service in the armed forces from 17 to 18;
 - (c) The amendment to the Air Force Regulations which removed the provision allowing for the involvement of persons under 18 in armed conflict;
 - (d) The establishment of the Child Rights Monitoring Centre, in 2006.
5. The Committee welcomes the ratification or accession by the State party of:
 - (a) The 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in September 2004;
 - (b)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October 2006;
 - (c)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November 2002.
6. Furthermore, the Committee notes with appreciation the State party's activities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the provision of financial support for action to protect children involved in armed conflict.

I.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Dissemination and training

7. The Committee, while welcoming various initiatives taken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to promote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school curricula and for the public at large, regrets that no information has been provided by the State party with respect to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and training related to the issues covered by the Optional Protocol, including in the curricula of military schools and in the pre-deployment training programmes for peace-keeping personnel.

8.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 the light of article 6, paragraph 2, ensure that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Optional Protocol are included in the curricula of military schools and widely disseminated to the general public and State officials, as well as military and peace-keeping personnel, by appropriate means, including the media.

9. It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develop systematic awareness-raising,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on the provisions of the Optional Protocol for all relevant professional groups working with and for children, including those working with asylum-seeking and refugee children coming from countries affected by armed conflict, such as health personnel, social workers, teachers, lawyers, judges and immigration officials.

Independent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10. The Committee welcomes the decision of the State party taken on 20 February 2008 to maintain the independence of the NHRCK, and notes with appreciation that it has competence to monitor violations of individual rights of children by State agents, including the military. However, the Committee regrets the lack of a child right division within the NHRCK which would for the adequate monitoring and promo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11. The Committee, reiterating what it previously stated in its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second periodic report (CRC/C/15/Add.197, para. 18),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tinue to ensure that the NHRCK is provided with the necessary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that would enable it to establish a child rights division to adequately monitor and promote the Optional Protocol and take awareness-raising measures with a view to achieving increased visibility and accessibility for children.

II. Prohibition and related matters

Legislation

12. The Committee welcomes that the amendment made in December 2004 to article 14, paragraph 1, of the Military Act which adjusted the minimum age for voluntary enlistment from 17 to 18. However,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there are no specific provisions criminalizing the compulsory recruitment or involving in hostilities of a person under the age of 18.

13.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Explicitly prohibit by law the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Optional Protocol regarding the recruitment and involvement of children in hostilities;**
- (b) **Ensure that all legislation is fully harmoniz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Optional Protocol;**

-
- (c) **Ensure that all military codes, manuals and other military directives ar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and the spirit of the Optional Protocol.**

Jurisdiction

14. The Committee welcomes that the domestic legislation of the State party provides for the exercise of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over recruitment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5 years into armed forces or groups.

15. **In order to further strengthen international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the recruitment of children for armed forces or armed groups and their use in hostilities,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sider extending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for crimes of recruitment and involvement of children in hostilities, inter alia, by entering into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III. Protection, recovery and reintegration

Measures adopted to protect the rights of child victims

16. While noting the position of the State party that children coming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e not considered as asylum-seeking children, and that no case of unaccompanied children arriving in the State party has yet been reported,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about the absence of an identification mechanism for asylum-seeking and refugee children who may have been recruited or used in hostilities, and regrets the lack a specific strategy for their physical and psychological recovery and social reintegration. The Committee also notes with concern the extremely low rate of asylum recognition by the State party, including for asylum-seeking children coming from conflict areas.

17.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Introduce a mechanism that allows for systematic identification at the earliest possible stage of refugee and asylum-seeking children entering the Republic of Korea who may have been recruited or used in hostilities abroad;**
- (b) **Carefully assess the situation of these children and provide them with immediate, culturally sensitive and multidisciplinary assistance for their physical and psychological recovery and their social reinteg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6(3) of the Optional Protocol;**
- (c) **Systematically collect data on refugee and asylum-seeking children within its jurisdiction who may have been recruited or used in hostilities in their home country;**
- (d) **Include information on measures adopted in this regard in its next report.**

18.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sider the particular vulnerabilities of children coming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 may have been recruited or used in hostilities, and grant them special protection and assistance measures, taking into account article 6(3) of the Optional Protocol and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6 (2005) on the treatment of unaccompanied and separated children outside their country of origin . The Committee also urges the State party to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children coming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 may have been recruited or used in hostilities and who seek the protection of the State party are not forcibly returned.**

IV.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19. The Committee commends the State party on its financial support to multilateral and bilateral activities aimed at protecting and supporting children who have been involved in armed conflict.

20.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continue its activities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the provision of financial support for action to protect children in armed conflict.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sider disaggregating financial data relating to the assistance provid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KOICA) to allow for an assessment and monitoring of the aid expenditure on children, and in particular, children involved in armed conflict.**

Arms export and military assistance

21. While the Committee welcomes the State party's legislation and programmes to control the export of small arms and munitions, it is concerned about the lack of specific legislation prohibiting the export to countries where persons who have not attained the age of 18 take direct part in hostilities as members of their armed forces or armed groups that are distinct from the armed forces of a State.

22.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act relevant legislation to prohibit trade of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to countries with current or recent armed conflicts that may involve children as participants. In this respect,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dicate, in its next periodic report, what changes to the domestic law have been made and how the implementation of these changes has contributed to halting the sales of small arms to those countries.**

V. Follow-up and dissemination

23.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recommendations, inter alia, by transmitting them to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State**

Council, the Defence Ministry and to provincial authorities, where applicable, for appropriate consideration and further action.

24. Additionally, in light of article 6, paragraph 2, of the Optional Protocol,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initial report submitted by the State party and the concluding observations adopted by the Committee be made widely available to the public at large in order to generate debate and awareness of the Optional Protocol, its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25.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paragraph 2,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include further inform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in its consolidated third and fourth periodic report unde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due on 19 December 2008.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 권고

CRC/C/OPSC/KOR/CO/1

02 July 2008

1. 위원회는 2008년 5월 23일에 열린 제1323회 회의(CRC/C/SR 1323)에서 대한민국의 최초 이행보고서(CRC/C/OPSC/KOR/1)를 심의 했으며, 2008년 6월 6일에 열린 제1342회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서 문

2.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최초 이행보고서 제출 및 위원회의 사전 질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서면답변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당사국 대표단이 건설적인 대화를 위해 필수적인 몇몇 정보가 부족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3. 위원회는 이번 최종 견해가 2003년 1월 15일에 채택된 당사국의 제2차 보고서에 관한 최종 견해(CRC/C/15/Add.197)와 2008년 6월 6일에 채택된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최초 이행 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CRC/C/OPAC/KOR/CO/1)와 함께 해석되어야 함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I. 일반 원칙

A. 긍정적인측면들

4. 위원회는 다음의 입법 및 기타 조치들의 채택에 감사한다.

-
- a) 2000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
 - b) 2004년,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 c) 2004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d) 혼인가능연령을 18세로 높인 민법의 개정,
 - e) 청소년 유해환경 종합대책
5. 위원회는 또한 다음과 같은 조치의 신설을 환영한다.
- a) 2006년,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설립
 - b) 2001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따른 핫라인1366 설치
6.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 의정서 및 협약에 가입 혹은 비준한 점을 환영 한다.
- a) 06년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 b) 2000년 유엔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
 - c) 2000년, 유엔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 부속,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매매의 예방·억제·처벌에 관한 의정서
 - d) 2000년, 유엔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 부속, 이주자밀수방지의정서

II. 현황자료

Data Collection

7. 위원회는 국가 보고서 및 서면 답변서에 제공된 아동 성폭력 피해자, 아동 성매매 피해자 및 가해자 기소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환영하지만, 통계자료가 성별 혹은 나이에 따라 분석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원회는 또한 위원회의 정보에 따르면 아동매매가 당사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매매 피해자에 관한 통계 자료가 없다는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원회는 또한 자료 수집 및 분석과 관련하여 정부 부처 간의 조정기능이 결여되어 있음을 우려한다.
8. 위원회는 당사국이 나이 및 성별에 따라 분석된 아동 성매매 및 음란물에 관한 자료가 정책 이행을 평가하는데 주요한 수단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자료의 체계적

인 수집 및 분석의 보장을 위해 중앙 정부 기관 안에 종합적인 자료 수집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통계자료는 또한 범죄유형에 따라 기소와 유죄판결 건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III. 일반이행조치

법률

9. 위원회는 선택의정서가 당사국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이 아동성매매 및 음란물을 다룬 부분을 비롯하여 선택의정서의 조항들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10.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 a) 선택의정서의 조항과 국내법의 완전한 조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b) 판사와 변호사를 대상으로 선택의정서 조항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국가 행동 계획

11. 위원회는 청소년육성5개년기본계획(2002-2006)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의 채택에 주목하는 반면, 두 계획 모두 선택의정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전략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
12.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 1, 2 차 아동 상업적 성착취 반대 세계회의에서 채택된 행동선언 및 의제와 세계 공약(1996년 스톡홀름, 2001년 요코하마)을 고려하여 관련 이해 당사자들과의 논의 및 협력을 통해 선택의정서에 관한 구체적인 의무 사항의 이행을 국가 전략 및 프로그램에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조정 및 평가

13. 위원회는 2004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립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2006년 3개년 시

범 사업으로 신설된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이행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 간의 효과적인 조정을 위한 상설기구가 부재하는 점을 우려한다.

14. 위원회는 당사국이 선택의정서의 이행에 있어 효과적인 조정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선택의정서의 이행 및 평가를 책임지는 상설기구화하고, 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충분한 재정 및 인적 자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홍보 및 교육

15. 위원회는 아동 성매매와 음란물에 대한 교육 캠페인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선택의정서 관련 인식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 행한 노력에 감사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집단들을 대상으로 선택의정서의 모든 내용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못한 점과, 선택의정서에 대한 인식 수준이 일반 대중뿐 아니라 관련 전문가 집단에서도 아직 낮다는 점을 우려한다.
16. 위원회는 당사국이 경찰, 검사, 판사, 의료진 및 기타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선택의정서의 이행과 관련된 국내의 모든 전문가 집단을 위한 교육 교재 및 과정 개발을 위해 충분한 자원을 별도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17. 더 나아가, 선택의정서의 제9조 2항에 비추어 위원회는 당사국이 선택의정서에 언급된 모든 범죄의 유해성과 예방 조치에 관한 미디어 및 교육을 이용한 장기적인 인식 제고 캠페인 및 학교 교과 과정을 통해 선택의정서의 조항들을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널리 알릴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 공동체와 특히 아동의 참여가 장려되어야 한다.

자원의 배분

18. 위원회는 선택의정서가 다루고 있는 각 분야별 이행에 대한 예산 배분의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19. 위원회는 당사국이 선택의정서에 포함된 모든 분야의 이행을 위해 충분한 자원을 배분할 것을 장려한다. 특히 의정서에서 다룬 범죄의 조사 및 기소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사회 재통합, 보호 및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에 필요한 인적 및 재정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독립 기관

20. 위원회는 당사국이 2008년 2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에 의한 아동의 인권침해에 대해 감시할 권한을 가지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선택의정서의 홍보 및 감시를 위한 아동권리 전담 부서가 없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1. 위원회는 당사국의 제 2차 보고서에 관한 최종 견해의 권고의견(CRC/C/15/Add.197, para. 18)을 다시 강조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선택의정서의 이행을 적절히 감시·증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아동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인식제고 조치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권리 부서의 신설에 필요한 인적 및 재정 지원을 당사국이 계속해서 보장하도록 권고한다.

IV. 아동 매매,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의 예방(9조 1항과 2항)

선택의정서가 금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한 조치

22. 위원회는 아동 성매매 및 음란물 금지 관련법의 내용에 대한 홍보물 등과 같은 예방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성매매 및 음란물을 포함한 아동 성착취의 근본원인, 특성 및 정도에 관한 내용과 조사가 부족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3.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 성매매 및 음란물을 포함한 아동 성착취 관련 예방 조치를

개발하기 위해 특히 UNICEF, ILO, IOM 및 시민 사회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 성착취의 근본원인, 특성 및 정도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조사를 실시해 문서화할 것을 장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예방조치에 별도의 예산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24. 위원회는 성매매 근절 전담팀이 성매매 예방 계획의 일환으로 2004년 도입해 성매매에 아동을 이용했거나 그런 혐의가 있는 남성들에게 의무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는 "존스쿨" 제도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가해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의 조건으로 복역을 면제 받는다는 것은 성매매 제의, 특히 아동 피해자와 관련된 성매매 제의를 범법행위로 간주하는 현행법의 제지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25. 위원회는 당사국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고 집행할 것을 장려하는 한편, 선택의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재활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계속해 나가기를 촉구한다.
26.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키리바시(Kiribati) 등 남태평양 도서 국가에서 아동 인권 가해국 사례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국가보고서 제74항) 해외 성매매 방지 전담팀이 검찰청과 경찰청 합동으로 구성된 점은 주목할 만하지만, 위원회는 해외원정 아동 성매매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부족함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7. 위원회는 당사국이 해외원정 성매매 예방을 위한 공공 캠페인에 추가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등 해외 원정 성매매 예방을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당사국은 또한 세계 관광기구의 행동강령을 관광 산업 종사자들에게 배포하고 일반 대중을 위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책임 관광(Responsible tourism)을 증진하기 위해 관련 당국과 관광산업, NGO 및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협력을 계속해 나아가야 한다.
28. 위원회는 선택의정서에 언급된 범죄와 관련하여 사이버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당사국의 노력을 감사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선택의정서에 언급된 성범죄 중 인터넷 혹은 휴대전화를 포함한 다른 정보 기술 방식을 통해 발생하는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분명하고 종합적인 전략이 결여된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사이버 범죄가 선택의정서에 관련되는 만큼 사이버 범죄의 해결을 위한 조치를 아동의 참여 아래 현행 행동계획 안에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안전한 인터넷 사용에 대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인식제고 강화 조치를 행동 계획안에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V. 아동 매매, 성매매, 아동 음란물의 금지 및 관련 문제들 (3조, 4조 2항 및 3항, 5조, 6조 및 7조)

형사법 및 규제

30. 위원회는 특히 2000년에 제정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2004년에 제정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아동 매매,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대한 아동의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한 점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당사국의 법률이 선택의정서 제2조와 제3조에 포함된 범죄 모두를 적절히 다루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 a) 인신매매 관련 범죄는 형법 제324조와 노동기본법 제113조에 포함되어 있지만, 당사국의 형법에는 책략, 폭력 혹은 다른 형태의 강압적인 수단과 관계없이, 그리고 금전 혹은 다른 형태의 보상과 관계없이 아동 매매를 금지할 수 있는 인신 매매 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 b)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0)에 포함된 아동 성매매 정의에 따르면, 성교를 포함하지 않는 성적 행위나 아동이 성적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았을 경우는 아동 성매매로 정의되지 않을 수 있다.
 - c) 성매매 알선에 관한 형법의 조항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을 이용하는 모든 경우에 체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d)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은 아동을 포함한 성매매 피해자를 범죄자로 다루고 있으나 이는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6조)고 구체적으로 명시한□□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모순된다.

e)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조 3항에 규정된 아동 음란물의 정의는 성을 주목적으로 한 아동의 성적부위에 대한 표현 또는 가상의 노골적인 성적 활동과 단순히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것은 포함하지 않으며, 이는 선택의정서 제2조 c항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

31.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 음란물의 정의에 관한 조항(제2조 c항)을 포함하여 당사국의 국내법이 의정서의 제2조 및 제3조와 완전히 부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 사항들을 권고한다.

a) 유엔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의 부속 의정서인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매매를 방지, 억제, 처벌하기 위한 의정서를 비준하고 선택의정서에 부합하도록 아동매매를 정의하고 금지 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b) 아동성매매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0)에 포함된 아동 성매매 정의를 수정한다.

c) 수단을 불문하고 아동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을 제공, 조달, 획득 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d) 아동 성매매 피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e) 선택의정서 제2조 c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성을 주목적으로 한 아동의 성적 부위에 대한 표현 또는 가상의 노골적인 성적 활동을 아동 음란물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0)을 개정한다.

f) 아동 음란물의 배포 의도와 상관없이 단순히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자체를 금지한다.

32. 위원회는 또한 특히 아동 매매,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과 연관된 행위에 대한 책임자의 기소 및 처벌을 포함하여, 선택의정서에 언급된 범죄와 관련된 법률의 집행력이 미약함을 우려한다.

33. 위원회는 당사국이 선택의정서에서 언급된 모든 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이며 신속한 수사, 기소 및 유죄 판결을 보장하도록 권고한다.

34. 더 나아가,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3조 1항이 예시하는 범죄에 대한 법인책임을 구

정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당사국의 보고서가 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

35. 선택의정서의 제3조 1항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선택의정서에 언급된 범죄에 대한 법인책임을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

입양

36. 위원회는 국내 및 해외 입양이 한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해, 선택의정서의 제3조 1항 (a)(ii)의 승인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표명과 협약 제21조의 유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의 법률이 선택의정서 제3조 1항 (a)(ii)에 따라 아동매매를 금지하지 않는 점을 우려한다.

37. 위원회는 당사국이 선택의정서 제3조 1항(a)(ii)에 대한 입장표명 및 협약 제21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고, 국가간 입양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의 비준검토를 강력히 권고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이 선택의정서 제3조 1항 (a)(ii)에 명시된 행위들을 매매행위로서 당사국 법에 의해 금지하도록 권고한다.

사법권 및 범죄인 본국 송환

38.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3조 1항과 관련된 범죄가 한국인 혹은 한국에 상주하는 이에 의해 외국에서 행하여졌을 때, 또는 피해자가 한국인일 때, 해당 범죄에 대한 치외법권의 확립을 위한 조치에 대한 정보가 당사국에 의해 제공되지 않음을 우려한다.
39. 선택의정서 제4조 2항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범죄가 한국인 혹은 한국에 상주하는 이에 의해 행하여졌을 때, 또는 피해자가 한국인일 경우, 당사국이 해당 범죄에 대한 역외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VI. 아동피해자의 권리 보호 (8조, 9조 3항과4항)

선택의정서에서 금지한 범죄의 아동 피해자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40. 당사국은 아동성매매 피해자가 기소될 가능성이 낮다고 하지만, 위원회는 『성매매 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이 아동 성매매 피해자를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41.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 사항들을 권고한다.
- a) 선택의정서에 언급된 어떤 범죄의 아동 피해자도 범죄자로 취급되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법률 개정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또한, 아동 피해자의 낙인 및 사회적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b) 아동 피해자를 위한 법적 대리 기능의 개선을 위해 소관 당국에 충분한 재정 및 인적 지원을 한다.
 - c) 선택의정서 제9조 4항에 의거하여, 당사국은 의정서에 명시된 범죄의 아동 피해자가 법적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d) 현존하는 아동 상담전화(1577,1391,1388)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검토한다. 통합 상담전화는 재정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하고, 아동들의 접근성 확보와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언어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 아동 관련 NGO, 보건인력, 사회 복지사와 상담전화 사이의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 e) 의정서 제9조 3항에 비추어, 특히 아동 피해자에게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 피해자의 사회 재통합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지원을 보장한다.

형사 사법 제도의 보호 조치

42. 위원회는 아동이 16세 미만인 경우 비디오 녹화를 통해 진술을 확보하게 한 점은 환영하지만, 이 제도가 16세-18세 사이의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범죄의 아동 피해자가 불분명한 법적 지위로 인해

아동 범죄자로 간주되거나 이로 인해 형사 사법 제도 내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우려한다.

43. 당사국은 아동 피해자와 범죄 행위 목격자를 포함하는 사법 관련 사항들에 관한 가이드라인(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2005/20)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들을 실시하여야 한다.

- a) 아동 피해자가 청소년 범죄자로 간주되거나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 피해자에게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충분하고 확실한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 b) 아동 피해자의 개인적인 이익이 결부된 소송절차의 경우, 이들의 견해, 욕구 및 우려사항이 제시되고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 c) 사법처리과정 중 겪을 고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을 위한 특별 면담실 및 아동 친화적인 심문 방식의 사용, 면담, 진술 및 심리 횟수의 축소를 포함한 아동 친화적인 절차를 사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비디오 녹화를 통한 진술 방식을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 d) 어린 성착취 피해자의 나이가 불분명할 경우, 이를 성인이 아닌 아동으로 추정한다.

피해자의 회복 및 재통합

44. 위원회는 2004년에 제정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명시된 조치들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지금까지 선택 의정서에 언급된 범죄의 아동 피해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 행해 온 노력과 당사국의 추가적인 성매매 상담센터 설립 계획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아동 피해자의 사회 재통합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조치들이 불충분하며, 이들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체계가 없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원회는 또한 현존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여성 및 여자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어로만 제공된다는 점을 우려한다.

45. 더 나아가, 위원회는 성착취 피해자들에게 선별기관을 통해 4주 이상 "교정 교육"을

실시하는 회복 및 교정 프로그램이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지, 자발적 참여가 아닐 경우 이에 대한 형법 혹은 민법 절차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당사국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원회는 특히 이런 프로그램이 아동 성착취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에 사실상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46. 위원회는 당사국이 선택의정서에 언급된 범죄에 취약한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 피해자의 완전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회복을 돕기 위해 아동의 완전한 참여 아래 충분하고 적절한 행정 조치, 사회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권고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여자 아동뿐 아니라 남자 아동을 위한 재활 조치를 제공하며, 특히 아동 성착취 및 매매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들을 참조하여 다양한 언어로 재활 조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위의 프로그램들이 아동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47.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다음 보고서에 아동 성착취 피해자의 "교정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세부정보를 제공하고, 그 프로그램이 선택의정서 8조, 소년사법의 아동권리에 관한 일반 논평 10호(CRC/C/GC/10) 및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유엔가이드라인 (리야드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동 피해자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 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VII. 국제 지원 및 협력 (10 조)

다자, 지역 및 양자 협정

48.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수의 국가에서 선택의정서의 이행과 관련된 국제협력 사업을 지원함을 환영하며, 당사국이 위원회가 선택의정서와 관련하여 이들 국가들에 대해 채택한 관련 최종견해를 고려하여 더욱 국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촉구한다.

VIII. 후속조치 및 홍보

후속조치

49.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번 권고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권고사항에 대한 적절한 관심과 추가 행동을 위해 권고사항을 정부부처, 국가 위원회, 국회의원 및 지방당국에 전달할 것을 권고한다.

홍보

50. 위원회는 선택의정서와 이의 이행 및 감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보고서, 서면답변서 및 관련 권고사항(최종견해)을 인터넷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반 대중, 시민사회단체, 미디어, 청소년 및 전문가 집단에게 널리 배포하기를 권고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학교 교과과정과 인권 교육을 통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선택의정서를 널리 홍보하기를 권고한다.

IX. 다음 보고서

51. 제12조 2항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선택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추가 정보를 협약 제44조에 따라 2008년 12월 19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아동권리협약 제3·4차 통합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청한다.

(전문번역: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Distr.
GENERAL

CRC/C/OPSC/KOR/CO/1
2 July 2008

Original: ENGLISH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Forty-eighth session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12, PARAGRAPH 1,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Concluding observations: Republic of Korea

1.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RC/C/OPSC/KOR/1) at its 1323rd meeting (CRC/C/SR.1323), held on 23 May 2008, and adopted at its 1342nd meeting (CRC/C/SR.1342), held on 6 June 2008, the following concluding observations.

Introduction

2. The Committee welcomes the submission of the State party's initial report and the replies to its list of issues (CRC/C/OPSC/KOR/Q/1/Add.1), submitted in a timely fashion. However, the Committee regrets that the State party's delegation lacked some information necessary for a constructive dialogue.

3. The Committee reminds the State party that these concluding observations should be read in conjunction with its previous concluding observations adopted on the State party's second periodic report on 15 January 2003 (CRC/C/15/Add.197) and with the concluding observations adopted on the initial report under the Optional Protocol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CRC/C/OPAC/KOR/CO/1) on 6 June 2008.

I. General guidelines

A. Positive aspects

4. The Committee notes with appreciation the adoption of the following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 (a) The Juvenile Protection Law Against Sexual Exploitation, in 2000, as amended;
- (b)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Procuring Prostitution and Associated Acts, in 2004;
- (c)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Prostitution and Protection of its Victims, in 2004;
- (d) The amendment to the Civil Code raising the minimum age of marriage to 18;
- (e) The Comprehensive Measures on Harmful Environment for Youth.

5. The Committee also welcomes the establishment of:

- (a) The Child Rights Monitoring Centre, in 2006;
- (b) The Hotline 1366, in 2001, pursuant to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its Victims.

6. The Committee further commends the State party on the accession to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2006, and the signing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and 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s, in 2000.

II. Data

Data collection

7. The Committee welcomes the statistical data provided in the State party report and the replies to the list of issues, including data on child victims of sexual abuse, children involved in prostitution, and the prosecution of offenders, but regrets that such data are not disaggregated by sex or age. The Committee also regrets that no statistical information is available on children victims of trafficking, although according to information available before the Committee, trafficking in children is a problem that affects the State party.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about the apparent lack of coordination among government ministries with regard to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8.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a comprehensive data collection system be established within a central governmental body, in order to ensure that data o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disaggregated, inter alia, by age

and sex, are systematically collected and analysed, as they provide essential tools for measuring policy implementation. Data should also include information on the number of prosecutions and convictions for such offences, disaggregated by the nature of the offence.

III.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Legislation

9. The Committee regrets that, while the Optional Protocol has the identical force and effect of law as the domestic legislation in force, national legislation is not fully in compliance with its provisions, for example, in the areas of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10.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fully harmonize its legislation with the provisions of the Optional Protocol;
- (b) Provide systematic training to judges and lawyers on the provisions of the Optional Protocol.

National Plan of Action

11. While noting the adoption of the Five-Year Basic Plan for Youth Protection (2002–2006) and the National Plan of Action for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2007–2011),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neither of them contains strategies and programmes specifically related to the Optional Protocol.

12.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corpor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cific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Protocol in its national strategies and programmes, in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with relevant stakeholders and taking into account the Declaration and Agenda for Action and the Global Commitment adopted at the First and Second World Congresse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held respectively in Stockholm in 1996 and in Yokohama in 2001.

Coordination and evaluation

13. While welcom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hild Policy Coordinating Committee under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in 2004 and of the Child Rights Monitoring Centre as a three-year pilot project in 2006,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about the absence of a functional permanent mechanism to enable effective coordination between the different institutions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14.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sure effective coordin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Furthermore,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provide the Child Rights

Monitoring Centre with sufficient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to enable it to be fully operational, and consider making it a permanent mechanism responsible for the evalu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Dissemination and training

15. The Committee notes with appreciation the State party's efforts to raise awareness of issues covered by the Optional Protocol, including by organizing numerous information campaigns and seminars related to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However,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relevant groups of professionals are not systematically provided with adequate training on all areas of the Optional Protocol and that awareness remains low among these groups of professionals as well as the public at large.

16.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llocate adequate and earmarked resources for the development of training materials and courses for all relevant groups of professionals throughout its territory, including police officers, public prosecutors, judges, medical staff and other professionals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17. Furthermore, in light of article 9, paragraph 2, of the Protocol,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make its provisions widely known, particularly among children and their families, through, inter alia, school curricula and long-term awareness-raising campaigns, including the media, and training on preventive measures and the harmful effects of all offences referred to in the Optional Protocol. In this regard, the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y and, in particular, children, should be encouraged.

Allocation of resources

18. The Committee regrets that no specific information has been provided by the State party on the budget allocat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different areas covered by the Optional Protocol.

19.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ensure that adequate resources are allocated for the implementation of all areas covered by the Optional Protocol, by providing, in particular, the necessary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for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programmes aimed at the prevention, protection, physical and psychological recovery and social reintegration of victims, as well as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the offences covered by the Optional Protocol.

Independent institutions

20. The Committee welcomes the decision of the State party taken on 20 February 2008 to maintain the independenc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and notes with appreciation that it has competence to monitor violations of individual rights of children by state agents. However, the Committee regrets the lack of a child right division within the NHRCK which would allow for the adequate monitoring and promo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21. The Committee, reiterating what it previously stated in its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second periodic report (CRC/C/15/Add.197, para. 18),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tinue to ensure that the NHRCK is provided with the necessary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that would enable it to establish a child rights division to adequately monitor and promote the Optional Protocol and take awareness-raising measures with a view to achieving increased visibility and accessibility for children.

IV. Prevention of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art. 9, paras. 1 and 2)

Measures adopted to prevent offences prohibited under the Optional Protocol

22. The Committee welcomes initiatives for preventive action, such as the development of promotional materials on laws banning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but regrets that documentation and research are lacking on the root causes, nature and extent of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cluding prostitution and pornography.

23.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carry out further gender-sensitive research and develop further documentation on the root causes, nature and extent of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cluding prostitution and pornography, in order to develop relevant prevention measures, in collaboration with, inter alia, UNICE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llocate earmarked budget resources to preventive measures.

24. The Committee notes the initiative “John School” introduced in 2004 as part of the Sex Trafficking Prevention Plan of the Task Force for the Elimination of Prostitution, whereby men who have used a child for prostitution or are suspected of having done so are sentenced to undergo a mandatory rehabilitation programme.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fact that perpetrators are exempt from a criminal sentence if they participate in the programme may weaken the deterrent effects of the existing law which criminalizes solicitation of prostitutes, particularly of child victims of prostitution.

25.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continue and strengthen its efforts to rehabilitate offenders of sexual crimes as stipulated in the Optional Protocol while encouraging the strict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existing legislation criminalizing the use of children for the purpose of prostitution.

26.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listed as one of the violators of human rights of children in island nations in the South Pacific such as Kiribati” (para. 74 of the State party report). While noting that the Special Team to Combat Overseas Prostitution has been established in partnership between the Prosecutor’s Office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Committee regrets the lack of concrete strategies to combat child sex tourism.

27.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undertake further measures to prevent sex tourism, in particular by earmarking additional funds for public campaigns for this purpose. The State party should also, through relevant authorities, continue its cooperation with the tourism industr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order to promote responsible tourism by disseminating the Code of Conduct of the World Tourist Organization among employees of the tourism industry and organizing awareness-raising campaigns for the general public.

28. The Committee notes with appreciation efforts made by the State party to address cyber-criminality in relation to offences referred to in the Optional Protocol. However, it remains concerned at the lack of a clear and comprehensive strategy to address sexual crimes referred to in the Optional Protocol which are committed via the Internet or other forms of information technology, including mobile phones.

2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clude measures within the existing plans of action to address cyber-crimes that relate to the Optional Protocol, with the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strengthen its awareness-raising efforts among the general public with a view to informing children and their parents about the safe use of the Internet.

V. Prohibition of the sale of children, child pornography and child prostitution and related matters (arts. 3; 4, paras. 2 and 3; 5; 6 and 7)

Existing criminal or penal laws and regulations

30. The Committee commends the State party on its efforts to strengthen the legal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including, inter alia, the enactment of the Juvenile Protection Law Against Sexual Exploitation in 2000 and the Prevention of Prostitution and Protection of its Victims Act and the Punishment of Soliciting Prostitution Act in 2004. Nevertheless,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offences contained in articles 2 and 3 of the Optional Protocol are not all adequately covered under the State party's legislation. In particular,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 (a) While offences relating to the sale of and trafficking in persons are covered by article 324 of the Criminal Law and article 113 of the Labour Standards Law, the State party's Criminal Code does not contain a specific provision outlawing trafficking in persons which criminalizes child trafficking regardless of the use of a deceptive scheme, force, or other form of coercion, and regardless of the provision of money or other forms of remuneration;
- (b) The definition of child prostitution contained in the Juvenile Protection Law Against Sexual Exploitation (2000) may not cover sexual acts that do not involve penetration, or cases in which the child him/herself receives payment for a sexual act;

-
- (c) The provision in the Criminal Code on procurement of prostitutes does not systematically apply to all cases of use of children for prostitution;
 - (d) The Prevention of Prostitution and Protection of its Victims Act treats victims of prostitution, including children, as offenders, in contradiction to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Procuring Prostitution and Associated Acts, which specifically stipulates that victims of prostitution are not subject to punishment (article 6);
 - (e) The definition of child pornography as contained in article 2.3 of the Juvenile Protection Law Against Sexual Exploitation (2000), does not cover mere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and simulated explicit sexual activities or sexual representation of the sexual parts of a child for primarily sexual purposes, as required by article 2 (c) of the Optional Protocol.

3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necessary measures to bring its domestic legislation in full compliance with articles 2 and 3 of the Optional Protocol, including the provision on the definition of child pornography (article 2(c)). In particular,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Ratify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take the necessary steps to adequately define and criminalize the sale of and trafficking in children in accordance with the Optional Protocol;
- (b) Amend the definition of child prostitution contained in the Juvenile Protection Law Against Sexual Exploitation (2000) in order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afforded to child victims of prostitution;
- (c) Criminalize all acts that constitute offering, delivering or accepting by whatever means a child for the purpose of his/her sexual exploitation;
- (d) Amend the relevant legislation in order to ensure that child victims of prostitution are not subject to punishment;
- (e) Amend the Juvenile Protection Law Against Sexual Exploitation (2000) to include, in its definition of child pornography, simulated explicit sexual activities or sexual representation of the sexual parts of a child for primarily sexual purposes, as required by article 2 (c) of the Optional Protocol;
- (f) Criminalize the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without requiring the intent of dissemination.

32.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about the weak enforcement of legislation relating to offences referred to in the Optional Protocol, in particular, the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those responsible for acts involving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33.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sure effective and prompt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conviction of all crimes referred to in the Optional Protocol.

34.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that the State party's report does not contain information on measures taken to establish the liability of legal persons for offences referred to in article 3 (1) of the Optional Protocol.

35. In light of article 3(1) of the Optional Protocol,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necessary measures to establish the liability of legal persons for offences referred to in the Optional Protocol.

Adoption

36. In view of the high number of domestic and inter-country adoption of Korean children, the Committee notes with regret the declaration made by the State party upon ratification to article 3(1)(a)(ii) of the Optional Protocol and its reservation to article 21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that the legislation of the State party does not criminalize the sale of children as required by article 3(1)(a)(ii) of the Optional Protocol.

37. The Committee strongly recommends the State party to withdraw its declaration to article 3(1)(a)(ii) of the Optional Protocol and the reservation to article 21 of the Convention, and consider ratifying the 1993 Hague Convention No. 33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e State party to ensure that acts covered by article 3(1)(a)(ii) of the Optional Protocol are criminalized as sale in its legislation.

Jurisdiction and extradition

38.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no information has been provided by the State party with regard to measures taken to establish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over the offences related to article 3 (1) of the Optional Protocol, when the crime is committed abroad by a national or a person who has habitual residence in its territory, or when the victim is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39. In light of article 4(2) of the Optional Protocol,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the necessary legislative measures to establish its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over the offences referred to in the Optional Protocol when such offences are committed by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or a person who has habitual residence in its territory, or when the victim is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VI. Protection of the rights of child victims (arts. 8 and 9, paras. 3 and 4)

Measures adopted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hild victims of offences prohibited under the Optional Protocol

40. The Committee is deeply concerned that that the Prevention of Prostitution and Protection of its Victims Act treats child victims of prostitution, among others, as offenders, although, according to the State party, it is “unlikely” that child victims of prostitution will be prosecuted.

4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Take all necessary measures, including legislative amendments, to ensure that child victims of any of the offences under the Optional Protocol are as such neither criminalized nor penalized, and that all possible measures be taken to avoid their stigmatization and social marginalization;
- (b) Allocate adequate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order to improve legal representation for child victims;
- (c) Ensure that all child victims of the offences described in the Optional Protocol have access to adequate procedures to seek, without discrimination, compensation for damages from those legally responsi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9(4) of the Optional Protocol;
- (d) Consider merging the existing child helplines (1577, 1391 and 1388) into one helpline which should be sufficiently funded, fully accessible and known to children, and available in a multi-lingual format; and facilitate the collaboration of the helpline with child-focus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ealth and social workers, and the police;
- (e) Ensure that resources are earmarked in order to strengthen social reintegration and physical and psychosocial recovery measur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9(3) of the Optional Protocol, in particular by providing interdisciplinary assistance for child victims.

Criminal justice system protection measures

42. While welcoming the introduction of video-taping of witness testimonies for children under the age of 16,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this practice does not apply for those aged between 16 and 18. The Committee also remains concerned about the unclear legal status of victims of crimes covered by the Optional Protocol which may result in the victims being viewed as child offenders, and as such, would not receive adequate protectio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43. The State party should be guided by the Guidelines on Justice in Matters involving Child Victims and Witnesses of Crim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solution 2005/20) and should in particular:

- (a)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hild victims by providing them with adequate and explicit protectio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o as to ensure that they are not considered or treated as juvenile offenders;

(b) Allow the views, needs and concerns of child victims to be presented and considered in proceedings where their personal interests are affected;

(c) Use child-sensitive procedures to protect children from hardship during the justice process, including by using special interview rooms designed for children and child-sensitive methods of questioning; and by reducing the number of interviews, statements and hearings, and in this connection, consider making use of video-taping of witness testimonies for all children under 18;

(d) Presume young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to be children, and not adults, if in doubt.

Recovery and reintegration of victims

44. The Committee welcomes the efforts made by the State party to assist child victims of offences referred to in the Optional Protocol with rehabilitation measures, including those stipulated in the 2004 Prevention of Prostitution and Protection of its Victims Act and the Punishment of Procuring Prostitution and Associated Acts, and the plans to establish additional centres for counselling for victims of prostitution. However, the Committee regrets that the social reintegration and physical and psychosocial recovery measures for child victims currently in place are inadequate, and that there is no mechanism to evaluate such programmes. The Committee also notes with concern that the existing programmes and services are available only for women and girl victims, and only in the Korean language.

45. Furthermore, the Committee regrets not having received sufficient clarification by the State party whether the recovery and rehabilitation programme for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which subjects them to “corrective education” for over four weeks in a selected institution is in fact voluntary, and if not, whether it is a criminal or civil procedure. The Committee is particularly concerned that such a programme may, in fact, hamper the psychological recovery of child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46.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ensure that adequate and appropriate administrative measures, social policies and programmes are in place to protect all children who are vulnerable to the offences referred to in the Optional Protocol and to allow for the full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recovery of child victims, with their full participation. In this connec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provide rehabilitation measures to boys as well as to girls, in a multi-lingual format, in particular, taking into account the most common countries of origin of child victims of trafficking and sexual exploita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sure that such programmes are effectively monitored and evaluated regularly, with the active participation of children.

47. The Committee also requests the State party to provide, in the next report, detailed information on the “corrective education” programme for child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and to ensure that the programme prioritizes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hild victims in line with article 8 of the Optional Protocol, general comment No.10 (2007) on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and the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The Riyadh Guidelines).

VII.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art.10)

Multilateral, regional and bilateral agreements

48. The Committee welcomes the State party’s suppor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in a number of countries and urges the State party to further its efforts in this regard, taking into account the relevant concluding observations adopted by the Committee on these countries with respect to the Optional Protocol.

VIII. Follow-up and dissemination

Follow-up

4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recommendations, *inter alia*, by transmitting them to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the State Council,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provincial authorities, for appropriate consideration and further action.

Dissemination

50.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report and written replies submitted by the State party and related recommendations (concluding observations) adopted be made widely available, including, but not exclusively, through the Internet, to the public at larg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e media, youth groups and professional groups in order to generate debate and awareness of the Optional Protocol, its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Furthermore,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make the Optional Protocol widely known to children and their parents through, *inter alia*, school curricula and human rights education.

IX. Next report

51.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paragraph 2,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include further inform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in its consolidated third and fourth periodic report unde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due on 19 December 2008.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 대한 실무그룹들의 보고
대한민국

Distr.

GENERAL

A/HRC/8/40

29 May 2008

Original: ENGLISH

유엔총회

유엔인권이사회 8차

의제 6번

I. 서론(Introduction)

1. 2007년 6월 18일 유엔 인권이사회(HRC) 결의안 5/1에 따라서 수립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실무그룹은 2008년 5월 5일부터 19일 까지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에 대한 검토는 2008년 5월 7일 6번째 회의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정부 대표단은 김성환 한국 외교통상부 차관을 단장으로 첨부자료에 명시된 26명으로 구성되었다. 2008년 5월 9일 진행된 10번째 회의에서 실무그룹은 대한민국에 대해 이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2. 2008년 2월 28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UPR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페루, 이집트, 요르단을 3자 보고그룹(troika)을 선정하였다.
3. 결의안 5/1의 첨부서류 15항에 따라, 다음의 문서들이 대한한국의 검토를 위해 활용되었다.
 - (a) (A/HRC/WG.6/2/KOR/1) 15(a) 항에 따라 작성되고 제출된 국가보고서/ 서면보고
 - (b) (A/HRC/WG.6/2/KOR/2) 15(b) 항에 따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에서 준비된 정리 문서

(c) (A/HRC/WG.6/2/KOR/3) 15(c)에 따라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준비된 요약서

4. 덴마크, 라트비아,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북아일랜드가 미리 준비한 질문 목록은 트로이카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되었다. 이 질문들은 유엔 정례인권검토의 온라인(extranet)에서 열람할 수 있다.

II. 검토과정의 진행에 대한 요약

A. 검토 당사국의 보고

5. 2008년 5월 7일 6번째 회의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차관은 대한민국 국가보고서를 소개하면서 한국정부가 국내외적으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성실하게 자발적 공약과 의지를 이행하고 있으며, 유엔 메커니즘과 충분히 협력하고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들을 강조하였다.

대한민국은 40여 년 동안의 권위주의 통치 이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법치, 다원주의, 선정(good governance)을 수반한 민주주의를 성취하였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은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 공유할만한 가치가 있다. 한국정부 대표단은 법적 틀 특히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넓은 범위에서 증진하고 보호함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참고하였다. 대한민국은 인권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일련의 법률들은 헌법의 정신과 내용을 구현하고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6개 주요 인권조약의 당사국이며, 현재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중이다. 국제인권조약의 비준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은 먼저 국내법과 관행이 조약의무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한다. 이 작업은 몇몇 경우에 약간 장기적 검토기간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은 또한 2006년 만들어진 법무부 인권국,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국가인권위원회(NHRCK), 반부패와 국민권익위원회(ACRC)의 설립, 권한, 기능, 역할 등을 언급하였다. 대한민국은 유엔 조약감시기구의 의견(observation)과 권고들을 기준으로 성립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행동계획(NAP) 2007~2011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그리고 언론을 포함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인권 NAP의 수행과정에서 그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대표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견

해가 정책 결정과정에서 충실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6. 한국정부 대표단은 또한 자유권과 안전, 비차별, 여성의 권리 및 다문화사회 등 특별한 인권 주제들을 언급하였으며, 조약감시기구의 최종견해와 권고에 감사하면서 이들의 의견들이 국내 법률체계에 통합되어 형사소송법과 형행법과 같은 관련 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는데 고려될 것임을 언급하였다. 기타 여러 가지 절차적 조치가 구금자들과 범죄혐의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수행될 것이다. 비차별 문제에 관해 한국정부 대표단은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도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근거없는 차별 금지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추진된 입법적 발전 즉 차별금지법이 국회 심의를 위하여 제출되었음이 언급되었다. 여성의 권리에 관해 한국정부 대표단은 여성지위 증진과 권리 개선이 정책적으로 우선순위에 있으며, 2001년에 여성부가 설립되고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의 통합이 모든 정책에 반영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대한민국은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다루기 위한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한국정부 대표단은 외국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며, 정부는 외국인들의 권리가 완전히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부처간 외국인정책협의회 뿐 아니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004년도에 도입된 고용허가제(EPS) 가 시행되고 있다.
7. 한국정부 대표단은 미리 전달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사형제의 폐지는 사법 정의, 사회적 환경, 국민 여론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사형제 폐지는 심층적 조사를 동반한 국민합의 과정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주노동자의 권리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 대표단은 많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류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들은 그들의 본국으로 송환되어야만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임금체불이나 보상의 경우에는 노동부와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구할 수 있으며, 이런 구제조치의 관련 절차가 취해질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또한 한국정부 대표단은 2008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 7차 회의 고위급 회의에서 선언된 바 있는 모든 특별절차에 대한 상시 초청(standing invitation)을 재확인하였다. 국가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가진 협의와 관련하여, 한국정부 대표단은 정부가 국회, 교수, 국제기구전문가, NGO 등의 견해를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언

급하였다. NGO와의 협의를 위한 회의는 2008년 3월 18일 개최되었다. 한국정부 대표단은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기구로서의 지위는 현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존중됨을 지적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에 설립되었고, 세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의해 A 등급이 부여되었다. 민주화의 경험을 공유하고 인권제도의 틀을 수립하는데 있어 대한민국의 역할에 관해 대표단은 민주주의가 인권을 위한 바람직한 조건을 제공한다는 확신에 기초하여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국제적 주도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한국정부 대표단은 특히 ‘문명간 연대 제안(Alliance of Civilizations Initiative)’, ‘민주주의 공동체(Community of Democracies)’, 민주적 통치의 파트너십”을 강조하였다. 대한민국은 인권 분야의 기술적 협력을 위한 특별기금에 재정적 기부를 확대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8. 2007년 4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오직 구속 및 심문 동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취해진 실질적 조치에 관해 한국정부 대표단은 심문과정에 비디오 촬영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한국정부 정부는 검찰청의 법집행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수정사항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에 대해 한국정부 대표단은 정부가 개정된 특별법을 통해 상습적 가해자에게 더욱 심한 처벌을 내려야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개정된 법에 의해 개선된 의료지원 조치가 피해자에게 공급될 것이며, 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를 위한 여러 가지 특별조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B. 검토시 국가간 상호대화 및 질의

(Interactive dialogue and responses by the State under review)

9. 상호대화에는 33개국 정부 대표들이 발언을 하였고, 이들 중 많은 정부 대표들은 대한민국의 종합적인 국가보고서 및 최근 국내적 인권상황의 향상에 대해 축하했으며, 많은 대표들은 A 등급을 부여받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 설립되었고, 인권 NAP 수립, 대한민국이 인권 이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준비가 된 것과 국제인권체계 내에서의 역할, 사형제의 사실상 모라토리움 그리고 국가보고서 준비과정에 시민사회가 광범위하게 참여한 것을 환영하였다.

-
10. 브라질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자발적 공약의 이행 상태와 실행에서 이루어진 진전에 대해 주목하였다. 브라질은 정부에게 조약감시기구 견해의 이행과 전파를 촉구하고 유보 없는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을 권고하였으며, 집회 및 자유로운 결사의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되기 위한 실제적인 수단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였다.
 11. 인도네시아는 인권 NAP 실행에서 겪는 주요한 도전과 장애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였으며,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아동권리위원회(CRC)와 함께 여성 및 아동의 권리 증진 및 보호를 위해 한국정부가 행한 노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foreigner workers)에 대한 차별이 엄격히 금지된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효과적인 보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인노동자고용법』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12. 파키스탄은 한국정부가 『비정규직보호법』의 완전한 이행을 어떻게 담보하고 있는지, 『외국인처우에관한기본법』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고용허가제가 대한민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출신의 노동자를 차별하는데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한 파키스탄은 여성의 권리에 관하여 사회적 타부(social taboos)에 대처하는 것에 관해 약간의 진전이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인권 상황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제약과 도전에 관해 질문하였다.
 13. 북한(DPRK)은 체계적인 인권침해의 근원 특히, 표현 및 집회의 자유의 영역에서 국가보안법이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사상전향제(Ideology Conversion System)는 한때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제기한 심각한 우려사항 중 하나였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북한 주민들은 적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들과의 어떤 접촉과 통신은 범죄시되고 있다. 1992년, 1999년 및 2006년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가 자유권규약 제9, 18, 19조에 부여된 제한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북한은 대한민국에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 나아가, 북한은 『보안관찰법』(Security Surveillance Law)이 정치범으로 복역한 자와 양심수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구금시설에의 고문에 관한 혐의와 형법에 고문이 부적절하게 정의된 것에 관련한 고

문방지위원회의 우려사항과 학생들의 표현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사항에 주목하였다. 또한 입법적이고 사법적인 정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14. 터키는 대한민국에게 성 평등 및 아동권리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외국인처우기본법』을 채택할 것과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계획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터키는 정부가 증가하는 노인인구 및 사회에서 인권에 관한 전통적 인식과 같은 도전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칭찬하였다. 구금시설에 관한 다양한 NGO 보고서를 고려해 터키는 이들 시설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한 가까운 장래에 사형제도를 폐지할 계획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질문하였다.
15. 알제리는 이주노동자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가 자의적 구금 및 적법 절차 없는 추방 등과 같은 차별적 관행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음을 주목하였으며, 노조결성의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도전받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알제리는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권리협약(ICRMW)을 비준할 것을 촉구하고 특히, 모든 여성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실현하고 이들이 차별적 관행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 나아가 1999년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집회에 관한 권리를 제약한다고 우려를 표명한 것을 주목하면서, 집회의 자유에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법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16. 캐나다는 한국정부가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해 민법을 개정과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의 권고를 채택하기 위한 노력을 칭송하고, 한국정부가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규정된 고문죄를 법에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법집행공무원들이 종종 이주자와 시위자를 대처하는데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다는 보고서를 상기하면서, 구금시설들이 인권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법집행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제공할 것과 어떤 경우에도 이주자들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캐나다는 법집행공무원이 행한 고문 및 가혹행위에 관한 주장들을 조사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한국정부가 프라이버시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

등록제도(resident registration system)를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캐나다는 아내강간(marital rape),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을 범죄화하고, 위반자들을 기소 및 처벌하고,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사례를 다루는 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제공할 것, 아동이 관련된 형사절차 중에 아동배려절차를 채택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캐나다는 이주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차별대우와 학대에 직면하고 있다는 보고서와 여성 이주노동자 및 그 자녀들이 특히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에 취약하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만들 때 여성과 아동에 특히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하였다.

17. 프랑스는 한국정부가 사형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최소한 법적 모라토리움을 채택한 것인지 질문하였다. 프랑스는 특히 고용영역에서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을 포함한 차별을 없애는 방안에 관해 좀더 정보를 얻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를 개혁하기 위해 생각하고 있는 조치와 이러한 조치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어느 정도 강화할 것인지, 파리원칙을 존중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랑스는 한국정부가 강제실종협약을 서명할 것을 권고하였다.
18. 콜롬비아는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 시민사회가 광범위하게 참여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한국정부가 협의과정을 촉진하는 온라인 조사(survey)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콜롬비아는 한국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사기업과 미디어 운영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19. 슬로베니아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는 양심적병역거부자의 권리 인정에 대한 권고를 지적하였다. 또한, 슬로베니아는 인권이사회가 2개의 개별 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에 있어 시민·정치적권리규약(ICCPR) 18조 제1항을 위반했음을 지적했는데, 한국정부가 이 통보 제기자들에 대해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할 것을 주문한 인권이사회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한국정부에 병역거부를 합법화하고,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public organizations)에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없애는 것을 법으로 명기하여 양심적병역거부

자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더 나아가 슬로베니아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한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부장적 태도의 존속과 가정과 사회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뿌리깊은 고정관념(stereotype)을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태도로 성인지적 관점을 UPR 후속과정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슬로베니아는 한국정부가 고용과 경제영역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몇 가지 조치를 취했음을 언급하면서, 몇 가지 보고서에 따르면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수사가 이루어지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 성폭력 사례의 기소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슬로베니아는 한국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했으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 조항과 함께 이 법 조항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 벨기에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지난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요구해 왔다고 지적하고, 한국정부가 사형제를 폐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벨기에는 가정폭력을 없애기 위한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2007년 2개의 조약기구에서 외국여성에 대한 인신매매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한 불법적 매춘과 여성에 대한 성 착취에 대한 보고서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벨기에는 한국정부의 반(反) 에이즈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대한 부정적인 대중적 태도의 지속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벨기에는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들에 대해 질문했으며,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지적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제1항에 부합하게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와 외국여성의 인신매매를 없애기 위한 활동들을 더욱 펼쳐나갈 것을 권고했다.
21. 체코는 한국정부가 한국의 인권 메커니즘 특히, 여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행한 모든 노력들에 사의를 표하면서, 한국의 높은 자살율과 고문철폐위원회가 지적한 구금시설에서의 돌연사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어떤 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는지 질문했다. 또한, 구금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높이고 부당한 처우나 고문 사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체코는 한국정부가 효과적인 국가예방기구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고문방지선택의정서 가입을 포함

하는 고민 및 부당한 대우를 없애기 위한 조치들을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가정폭력을 범죄시하는 법 조항과 그러한 폭력의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최근에 이루어진 차별금지법 성안에 대해 환영하고, 그 법안에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에 근거한 차별 사유도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22. 네덜란드는 최근 차별금지법 제정을 언급하고, 그 법이 여성, 아동, 동성애자, 장애인, 난민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동등한 처우를 보장할 수 있도록 바란다고 발언했다. 네덜란드는 또한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채택을 지지하면서 작업장에서의 성적 학대를 없애는 유사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는지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는 2008년 6월 1일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국회에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23. 말레이시아는 2050년경에는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이 최고치에 달할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예측을 주목하고, 이 문제를 주시하여 다루기로 한 정부의 공약을 환영하며, 가족 해체로 인해 발생하는 고층과 관련하여 사회권규약위원회(CESCR)이 2001년도에 표명한 입장에 대하여 노령자에 대한 사회보장 장치를 마련하는 것 이외에 한국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24. 아제르바이잔은 CEDAW 및 ICCPR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유보 철회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은 대한민국 헌법상 차별 사유별 금지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차별 금지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이 사안은 CRC가 제기한 문제이기도 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아제르바이잔은 한국정부가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제기한 문제점인 구금자에게 구금의 합법성을 결정하기 위해 신속하게 공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현행 행형법을 한국정부가 언제 어떻게 개정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25. 중국은 한국정부 보고서가 경제적, 사회적 개혁에 따라 발생하는 일부 취약 계층의 소외현상과 관련하여 정부가 세운 대책의 효율성과 취약 계층의 역량을 확립하기 위해 채택한 다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
26. 여러 대표단이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제기한 우려에 대하여 한국정부 대표단은 한국 정부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과 같이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대표단은 퇴직금 미지불에 대한 구제책과 입국 또는 재입국 절차의 간소화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노동부 산하의 노동위원회(Labour Relations Commissions)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충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이주노동자가 자국으로 귀환하기 이전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27. 사형제 폐지 문제에 관해 한국정부는 지난 11월 사형제 모라토리움에 대해 유엔 총회에 상정된 결의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합의 도출이 요구되는 사안이며,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제사회에서 제기한 국가보안법 적용에 대해 한국정부는 자의적 적용과 집행을 막기 위한 정부의 주의와 경계를 재강조하였다.
28. UPR 과정에서의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에 대한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 대표단은 UPR 준비와 후속 점검 과정에서 여성부의 활동과 충분한 참여가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였다. 2002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2004년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임시 구금 명령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여 검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가해자가 재정적으로 곤란할 경우에 국가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치료 보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두 가지 개정안을 언급하였다.
29.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는 가장 신중한 태도로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다.
30. 고문의 정의에 대해 한국정부 대표단은 고문을 정의하는 법이 없음을 인정하였으나, 고문을 금지하고 있는 형법을 포함한 몇몇 법은 존재하고 있으며, 구금시설 환경이 개선된 사실을 강조하였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와 Human Rights Violation Reporter Center는 이 문제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정부도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정부 대표단은 사회 전체의 자살률보다 구금시설(detention

centres) 내에서의 자살률이 높지 않다는 사실과 교정시설(correctional centres) 내에서의 사망률을 더욱 낮추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2000년 이후 구금시설 내에서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사망 혹은 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31. 차별 금지 영역과 관련하여 한국정부 대표단은 헌법의 ----조항에 따라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헌법 11조 1항)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은 단지 예시 조항이기 때문에 국제 인권 기구에서 규정한 다른 영역에서의 차별 또한 현행 헌법 하에서 금지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32. 대한민국은 외국 여성의 인신매매가 대규모로 나타나고 있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지만,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매매춘 산업 혹은 인신매매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일부 유형의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에만 수사가 진행되지만, 피해자가 13세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 많은 사건의 경우 수사가 자동적으로 개시된다.
33.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률이 2007년 7월 1일자로 공포되었다. 이 법은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2년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단기 노동자들은 부당해고를 당했을 시에는 보상과 피해 회복이 보장되고 있으며 그들의 기술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 계획 또한 정착되었다. 외국인 노동자 보호와 관련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 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수당의 미지급이나 작업장의 안전시설 부재 등의 불법 행위 발생시,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내 노동자들과 동등한 보호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은 외국인 지원을 위한 특별 센터를 설립 운영해 오고 있으며 7개 언어의 통역 서비스 및 한국의 언어, 관습 및 문화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34. 동등한 기회 향상을 위해, 직장가 가정의 균형을 증진하기 위한 출산 및 육아 보조금 제공과 같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장려하기 위한 몇 가지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노동시장을 떠났다가 복귀하려는 여성들을 위한 직업 훈련이 제공되고 있으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equal pay for equal value)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35. 작업장에서의 성적 학대 예방을 위해 의무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불이행시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
36. 필리핀은 이주민 및 그들의 가족들의 대우와 관하여 인권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기 위한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적절한 시기에 비준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사회 내에서 미등록 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언론 매체가 이러한 관점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37. 영국과 북아일랜드는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세를 환영하였으며, 국제적 인권 보호 노력에서 한국정부가 한층 강화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한국정부가 장애, 생물학적 성별, 성적 지향, 출신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을 아우르는 사회를 보장하기 위해 인권에 대한 대중적이고 공식적인 인식을 지속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영국은 차기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를 위한 입법안 도입 및 통과를 권고한 다른 대표단의 권고를 재차 확인하였다. 2007년 도입된 형법의 이행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으며, 법의 내용이 수사 과정에서 완전하고 투명하게 이행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개선을 위한 가능한 조치를 질의하였다. 영국은 이 법이 형벌 규정의 명확성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양심적병역기피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의 적극적인 조치를 권고하였다. 또한 한국정부의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의 제22조항에 대한 유보와 대해 입장 변화를 고려하고 있는지 질문하였으며, 이 유보를 일정한 시간 계획 내에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CAT)를 비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그 가능 시기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38. 룩셈부르크는 대한민국의 몇 가지 유형의 범죄와 위법 행위에 대해 여전히 사형이

부과되고 있음을 주목하고, 60여명의 죄수가 사형수 신분이며, 2007년도 2건의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에 주목하였다. 룩셈부르크는 한국정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유엔의 관련 문서 내용의 부합하는 사형에 관한 법률 폐지를 위해 진행 중인 입법 과정을 즉각 마무리 짓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나아가 룩셈부르크는 한국정부가 이 같은 논의를 여론과 국회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사형제 폐지에 관한 법률 도입과 관련한 예상되는 시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39. 이집트는 2003년 아동권위원회(CRC)가 제기했던 관심사인 장애아동들에 대해 만연된 사회적 차별과 이러한 현상을 없애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한 조치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였다. 또한, 이주노동자규약을 핵심인권규약으로 여기고 있는지 물으면서 대한민국이 동 규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40. 방글라데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음을 언급하였으나, 실제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지속적인 차별적 대우, 작업장에서의 학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구제가 부족하다는 의혹(allegation)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방글라데시는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기존의 입법조치들을 실행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쏟을 것을 촉구하였으며, 한국정부가 비정규 이주 이슈를 인도적인 방법으로 다루고 이주노동자의 정규화를 고려하고 또는 최소한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연예 비자(entertainment visa)로 한국에 입국해 성산업에 유혹되고 있는 여성노동자와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이러한 종류의 비자 발급을 재검토하고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41. 러시아는 조약기구와 특별절차들이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현한 것과 이러한 부인들의 법적 지위가 전적으로 한국인 남편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계층이 가장 취약한 그룹중 하나가 되었음을 주목하였다. 때문에 외국인 여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이 취해졌으며, 대부분이 불법 이주노동자이고 자신들의 착취에 대해 범죄적 결말을 감내하고(bear the criminal consequences of their exploitation) 있는 여성의 인신매매와 매춘에 관한 조약기구의 정보를 상기하면서, 이러한 인신매매와 착취를 척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지 질의하였다.

-
42. 라트비아는 1995년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그리고 2006년의 이주자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언급하면서 특별보고관과의 협력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한국정부가 모든 특별절차에 대해 상시 초청(standing invitation)을 확대하기 위한 시간 계획을 요청하였다.
43. 이탈리아는 사형제 폐지를 고려한 모라토리움의 유지를 권고하였으며,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우려했던 협약 제1조와 완전히 부합하는 여성차별에 관한 정의의 부족함과 여성폭력의 원인중 하나인 깊이 뿌리박힌 고정관념의 지속을 언급하면서 여성의 권리증진의 문제가 한국 정부의 인권정책의 중요 우선순위중 하나로 여겨질 것을 권고하였다. 이탈리아는 한국 정부가 학교와 집에서 체벌금지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련(discipline)을 증진하는 교육적 조치들을 시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44. 루마니아는 차별을 없애고 성 평등을 이루기 위해 취해진 성과에 사의를 표명하고, 여성 이주노동자들을 차별적 관행과 다른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조치들과 관련해 한국정부 대표단이 제공한 답변에 만족을 표시하였다. 루마니아는 비호신청자들(asylum-seekers)과 난민들(refugees)의 권리를 보호하는, 특히 난민 지위를 결정하는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난민지위 심사가 진행 중일 때 그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정책에 관해 질의하였다.
45. 멕시코는 호주제를 폐지하고 결혼에서의 동등한 권리를 구축하는 새 입법의 실제적 효과에 관해 질의하고, 이러한 조항들이 좀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공 캠페인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멕시코는 한국 정부가 가정폭력에 관한 입법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입법조치가 사법제도의 접근을 포함한 이주노동자의 보호를 이룰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독려했다. 이점에서, 멕시코는 이주민의 권리 협약의 비준과 이주노동자 및 가족의 보호를 제한하고 있는 다른 조약들의 유보 조항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멕시코는 사형제 폐지를 위해 한국 정부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46. 우크라이나는 폭력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체벌을 금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

치 뿐 아니라 인권분야에서 대중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환영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최상위 달성가능한 건강 기준에 대한 개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과 국가인권위원회 특히, 위원회 권고의 효과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다.

47. 미국은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정의가 개인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위협하는데 사용되어지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관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관해 질의하면서, 법 해석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48. 호주는 NGO들이 58명의 수감자가 사형대기 상태이며,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형이 실행된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한국 정부가 ICCPR 제2 선택의정서에 서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49. 투니지아는 한국 정부가 특별한 필요(need)를 가지고 있는 사회계층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취한 노력들에 만족을 표시하며,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50. 일본은 한국 정부가 언제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할 것인지에 대해 알기를 원했으며, 인터넷의 폭넓은 사용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차별을 조장하는 물품들과 아동 포르노 같은 유해한 정보를 전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인터넷에서의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들이 취해졌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51. 독일은 외국인 여성배우자가 한국 시민권자와 같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합법적 노동이 허용되지 않는 듯 하며, 거주 지위가 전적으로 그들의 한국인 남편에 달려있다는 이주노동자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우려를 언급하며, 그들이 잠재적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독일은 외국인 여성배우자들이 경제 분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하는 가능성 있는 계획에 관해 질의하였다.

-
52. 페루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다수의 이주자가 점진적으로 한국 사회에 통합되어 가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에 이주노동자협약(ICRMW)과 팔레르모 의정서(Palermo Protocol)¹⁾의 기준을 권고하였으며, 이주자 인권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인신매매와 소위 공연예술 비자의 잠재적인 악용에 관한 정보를 상기시켰다.
53. 추가 질문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조약 및 유보조항 철회에 관한 정책을 설명하였다. 대한민국은 6개의 핵심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이며 기타 조약 기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관련 이해당사자와의 적극적 자문을 통하여 기타 핵심 인권조약의 유보를 철회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개정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2006년 6월 고문방지협약이 시행된 이후 정부는 비준 문제를 둘러싸고 자문을 시작,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시로 구금시설 방문과 조사를 통하여 고문방지협약 선택 의정서의 핵심인 고문방지 행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보고서에 설명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ICRMW), 강제실종방지협약 및 국제노동기구 조약(29, 87, 98, 105조)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한국 정부는 관련 국내법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ICRMW) 기준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 정부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여부를 검토 중이며 현재 형행법 개정을 포함한 국내 법안의 범위(scope)를 검토 중이며, 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하여 현재 기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밟고 있으며 곧 결정이 날 것이라고 희망했다. 자유권 협약 제 22조 유보조항 철회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 대표단은 법과 시스템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임을 나타내었다.
54. 한국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부 권고가 단기간에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매우 진지하게 수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1) 팔레르모 의정서 : 2000년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열린 유엔 국제범죄근절회의에서 마약 및 무기류의 국제 불법거래, 돈세탁, 인신매매 및 매춘과 사이버 범죄 등의 근절을 목표로 세계 121개국이 서명한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의 부속의정서를 지칭. 팔레르모 의정서에는 조직범죄 단체의 폭행, 협박, 납치 등 인신매매 피해자 보고, 지원과 조직범죄 목적의 불법 이민, 입국 및 여권, 신분증 위조범죄 처벌을 위한 각국의 구체적인 협력의무가 담겨 있음. 한국은 협약과 의정서에 모두 서명하였음.

2007년 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67%는 인권 정책, 입법, 메커니즘, 관습에 대한 것이었으며 인권침해와 차별에 관한 87%의 권고가 수용되었다.

55. 노령화와 저출산에 관해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산 여성과 신생아가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적 계획을 세웠고, 65세 이상 노령층은 기본 퇴직과 장기 보험혜택과 기타 기회제공을 부여 받고 있으며 편친가정과 아이가 조부모와 살고 있는 가정에게 보조금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56. 사회 안전망에 관해 한국 정부는 한국을 강타한 경제위기 이후 활동범위를 넓혔으며, 특히 취약그룹의 사회 전반에 걸친 국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였고, 취약계층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57. 여성 이주자 보호를 위해 한국 정부 대표단은 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의무를 재차 강조하였으며, 2008년 다문화가정법안을 제정하여 정부가 상담 및 교육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58. 가정 내 아동 체벌에 관한 법안 개정에 관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2007년부터 일부 시험학교(pilot school)를 지정하여 체벌을 금지하였으며, 이 부분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59. 2007년 9월 한국 정부는 양심적병역거부자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으며, 새로운 시스템 이행을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고 개정 법안이 올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60. 2001년 출범한 여성부에 관한 언급도 이루어졌는데, 여성부는 확장되어 2005년 가족부와 통합되었으며, 올해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조직이 개편이 되었으며, 여전히 여성 인권 증진과 모든 공공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적극 활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07년 CEDAW는 고정관념과 남녀간 격차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진전을 인지하였지만 고정관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2003년 다수 시민사회 그룹의 지지를 받은 여성부는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공공 캠페인을 실시하

였다. 여성 이주 노동자 문제는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노동 여성보호 차원에서 정부는 전국 단일상담서비스(one-stop service)와 통역 서비스를 비롯한 기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61. 장애인 차별과 관련하여 현재 대한민국은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고려하고 있고, 차별금지법이 올해 4월 시행되었으며, 이 분야 여러 시민사회와 기구가 법안 초안을 작성하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안정적인 법의 이행을 위해 한국 정부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분석을 계속할 것이며, 이 부분의 상태의 진전 점검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것이다.
62. 난민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난민지위 인정절차가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했으며, 이 과정에 NGO를 초청하여야 한다. 한국 정부는 UNHCR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난민신청자가 일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63. 김성환 외교통상부 차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각국 대표단의 적극적 참여와 국가보고서에 대한 건설적인 논평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그는 일부 사안은 추가설명이 필요하지만 시간의 제약 때문에 6월 인권이사회 회의에 서면으로 추가 답변을 할 것이며, 한국 정부는 회원국의 지침과 권고를 검토하고 기타 권고, UPR 후속논의,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라 하였다. 검토 후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결과를 공유하고 논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한국 정부는 이주 노동자 인권에 관련된 일부 우려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이 문제에 대해 국내 논의를 거칠 것이라 하였다. 또한, 이주노동자 인권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은 다른 유입국의 모범 사례(best practice)와 경험에서 배울 것이라고 하였으며 아직 비준하지 않은 협약의 가입을 보다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III. 결론 및 권고사항

64. 검토회의 동안, 대한민국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안이 만들어졌다;
 1. 조약기구의 견해에 대한 이행과 선전에 힘쓰라. (브라질)

-
2. 유보조항 없이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라. (브라질)
 3.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고용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라. (인도네시아)
 4.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 (북한)
 5. 정치범 전력자들과 양심수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관찰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 (북한)
 6. 구금시설 내 고문 혐의와 형법상 부적합한 고문의 정의에 대한 고문방지위원회의 우려와 학생들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와 관련하여 입법, 사법정의를 개선할 수 있는 관련 조치들을 채택하라. (북한)
 7.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에 가입하고(알제리, 필리핀, 이집트, 멕시코, 페루),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를 제한하는 기타 조약의 유보를 철회하고(멕시코),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하라. (페루)
 8. 모든 여성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실현하고, 그들이 차별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 (알제리)
 9.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법제화하라. (알제리)
 10.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규정된 대로 고문 범죄를 법제화하라. (캐나다)
 11. 법집행 공무원에게 인권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이런 조치들이 항상 이주자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공공서비스 제공과 같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엄격히 제한하라. (캐나다)
 12.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모든 고문 및 부당 대우 혐의들이 조사되어야 한다. (캐나다)
 13. 사생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제(resident registration system)를 재검토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공공서비스 제공과 같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엄격히 제한하라. (캐나다)
 14. 또한, 아내강간, 아동학대, 가정폭력이 범죄화되어, 가해자들이 기소 및 처벌되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다루는 공무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아동과 관련한 형사절차에 아동 감수성이 높은 절차들(child-sensitive procedures)을 채택하라. (캐나다)
 15.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특히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특별히 강조하라. (캐나다)
 16. 한국 정부가 강제실종방지협약에 서명하라. (프랑스)

-
17.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양심적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법으로 인정하고, 병역거부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 취업 제한을 해지하라. (슬로베니아)
 18. UPR 후속 조치 과정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하라. (슬로베니아)
 19. 성범죄가 친고죄로 분류되어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법 조항과 다른 관련 조항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슬로베니아)
 20. 현재의 사실상 사형 집행유예(moratorium)를 유지하고(벨기에, 이탈리아), 사형제도 폐지로 진전시키고(벨기에, 이탈리아, 멕시코), 사형폐지 특별법이 2008년 6월 1일 개원하는 제18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제화하라. (네덜란드, 영국)
 21.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 권고대로, CEDAW 제1조항과 부합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를 채택하고,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를 퇴치하는 노력을 강화하라. (벨기에)
 22. 장차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CAT) 가입을 포함한 고문과 학대를 금하는 대책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국가적 예방메커니즘을 설립하라. (체코)
 23. 차별금지법안 초안에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포함시켜라. (체코)
 24. 국가보안법이 형법의 명확성에 있어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라. (영국)
 25. 정해진 기간 내에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2조항 유보를 철회하라. (영국)
 26.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 (영국)
 27. 한국 정부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가 유엔 관련 문서의 의무에 부응하고, 진행 중인 사형제도 폐지법안의 법적 절차를 즉각적으로 마무리하라. (룩셈부르크)
 28. 한국 정부의 인권정책에 있어 여성인권 증진을 주요 우선적 인권이슈의 하나로 고려하라. (이탈리아)
 29. 즉각 관련 법안을 개정하여 학교와 가정에서의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라. (이탈리아)
 30. 1951년 난민조약과 1967년 의정서를 이행하고, 국제 난민법에 부합하도록 난민 인정절차를 개선하라. (루마니아)

-
31. 호주제 폐지와 결혼에 있어 양성평등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법의 조항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중적 캠페인의 실행하라. (멕시코)
 32.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고, 이 법률이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하는 이주자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 (멕시코)
 33. 악용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라. (미국)
-
65. 위 권고사항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은 제8차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채택되는 결과 보고서에 포함될 것이다.
 66.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결론 혹은 권고들은 검토 후 제출국들과 검토 대상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으나, 실무그룹 전체 차원의 의견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UNITED
NATIONS

A



General Assembly

Distr.
GENERAL

A/HRC/8/40
29 May 2008

Original: ENGLISH

HUMAN RIGHTS COUNCIL
Eighth session
Agenda item 6

UNIVERSAL PERIODIC REVIEW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Republic of Korea *

* Previously issued under the document symbol A/HRC/WG.6/2/L.6; minor revisions have been add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secretariat of the Human Rights Council, on the basis of editorial changes made by States through the ad referendum procedure. The annex is circulated as received.

CONTENTS

	<i>Paragraphs</i>	<i>Page</i>
Introduction	1 - 4	3
I. SUMMARY OF THE PROCEEDINGS OF THE REVIEW PROCESS...	5 - 63	3
A. Presentation by the State under review.....	5 - 8	3
B. Interactive dialogue and responses by the State under review	9 - 63	5
II. CONCLUSIONS AND/OR RECOMMENDATIONS	64 - 66	14

Annex

Composition of the delegation.....		18
------------------------------------	--	----

Introduction

1.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5/1 of 18 June 2007, held its second session from 5 to 19 May 2008. The re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held at the 6th meeting on 7 May 2008.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headed by H.E. Mr. Kim Sung-hwan, Vice-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composition of the delegation, composed of 26 members, see annex below. At its 10th meeting held on 9 May 2008, the Working Group adopted the present report on the Republic of Korea.
2. On 28 February 2008, the Human Rights Council selected the following group of rapporteurs (troika) to facilitate the re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Peru, Egypt and Jordan.
3.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 of the annex to resolution 5/1, the following documents were issued for the re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 (a) A national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 (a) (A/HRC/WG.6/2/KOR/1);
 - (b) A compilation prepared by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 (b) (A/HRC/WG.6/2/KOR/2);
 - (c) A summary prepared by OHCH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 (c) (A/HRC/WG.6/2/KOR/3).
4. A list of questions prepared in advance by Denmark, Latvia, the Netherlands,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was transmitted to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troika. These questions are available on the extranet of the UPR.

I. SUMMARY OF THE PROCEEDINGS OF THE REVIEW PROCESS

A. Presentation by the State under review

5. At the 6th meeting, on 7 May 2008, H. E. Kim Sung-hwan, Vice-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introduced the national report, reaffirming his country's strong commitment to promot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at home and abroad. The Republic of Korea is sincerely fulfilling its voluntary pledges and commitments and underlined its policy to fully cooperate with the United Nations mechanisms and to play a constructive role. It achieved democracy, with the rule of law, pluralism and good governance achieved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following almost 40 years of authoritarian rule. The Republic of Korea believes that its experience and lessons learned on the road to democracy and development deserve to be shared with other Member States. The delegation made reference to the legal framework, in particular the Constitution, noting that it enumerates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a wide range of fundamental freedoms and human rights. Even though the Republic of Korea does not have a human rights act, a range of laws aim to realize and implement the spirit and substance of the Constitution. The Republic of Korea is a party to six 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is currently undertaking domestic procedures for the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en considering ratify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he Republic of Korea first conducts a review to consider whether domestic laws and practices comply with treaty obligations, which requires in some cases a somewhat longer period of review. The Republic of Korea also referred to the establishment, mandate, functions and role of the Human Rights Bureau in the Ministry of Justice in 2006, the National Human Rights Policy Council,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and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It highlighted the National Action Plan (NAP) 2007-2011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noting that the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by the United Nations treaty monitoring bodies were set as standards in the NAP. All stakeholders, including the NHRCK, civil society and the press can also submit their opinions on the ongoing NAP. The delegation noted that the recommendations and views of the NHRCK are taken into earnest account in the policy-making process.

6. The delegation also referred to specific human rights issues, including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s, non-discrimination, women's rights and a multi-cultural society and indicated that it appreciates the concluding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of treaty bodies and continues to incorporate their opinions into the domestic legal system by amending relevant laws such as the Penal Procedure Code and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ct. Other procedural measures are oriented towards the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detainees and crime suspects. On the issue of non-discrimination, the delegation noted that the Constitution clearly states that nobody shall be subject to discrimination. The Government is well aware of the importance of preventing ungrounded discrimination, whether direct or indirect. Reference was made to recent legislative developments, such as the draft Anti-Discrimination Act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deliberation. Regarding women's rights, the delegation indicated that the advancement of women's status and improvement of their rights remain a priority, referring to the creation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in 2001 and the integration of a gender perspective into all Government policies. The Republic of Korea has taken various measures, including strengthened legal measures to address the problem of violence against women. The delegation noted that many people of foreign origin are liv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t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build a society where their rights are fully respected. Reference was made to new legislation, such as the Basic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introduced in 2004, as well as to the responsibilities of the Inter-Ministerial Committee on Policies Regarding Foreigners.

7. In responding to advance questions, the delegation indicated th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should be considered in terms of its criminal justice function, social circumstances, and public opinion in a comprehensive way. It requires a national consensus building process along with further in-depth researches. On the issue of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the delegation noted that, as is the case in many countries, foreigners who are not legally permitted to stay in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be sent back to their home country. However, they can seek remedies through the Ministry of Labour or civil law suits in case of delayed payment or compensation and are permitted to stay until all related procedures for remedies are taken. The delegation also reiterated their standing invitation to all special procedures, extended in March 2008 during the high-level segment of the seventh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Regarding consultations held with civil society during the process of preparing the national report, the delegation indicated that the Government sought to gather views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professors, expert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GOs. A Consultation Meeting with NGOs was held on 18 March 2008. The delegation also indicated that the status of the NHRCK as an independent body from the Government remains intact under the present administration. The NHRCK was established in 2001 and has been accredited with "A" status by 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Regarding the rol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ring its experience of democratization and establishing a human rights framework, the delegation noted that it is actively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initiatives to spread democracy, based on their conviction that democracy provides more favourable conditions for human rights. The delegation highlighted in particular the Community of Democracies, the Partnership for Democratic Governance, as well as the Alliance of Civilizations initiative. The Republic of Korea is endeavouring to expand its financial contribution to specialized funds for technical assistanc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8. On the issue of practical measures undertaken to ensure that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adopted in April 2007 is justly implemented during the arrest and interrogation process, the delegation indicated that the video-taping of interrogations is widely used and that the Government has conducted education programmes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of the Prosecutor's Office on the amendments introduced in the new Code of Criminal Procedure. On the issue of domestic violence against women, the delegation indicated that the Government imposes more severe punishment on habitual offenders through the revised Special Act. Improved medical assistance is provided to victims, as part of the amended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and, in order to prevent recurrences of violence, various special treatment programmes for offenders are conducted.

B. Interactive dialogue and responses by the State under review

9. During the ensuing interactive dialogue, statements were made by 33 delegations, many of which congratulated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comprehensive national report and its improved domestic human rights record in recent years. Numerous delegations also welcomed the creation of the NHRCK in 2001 with "A" status, the NAP, the readiness of the Republic of Korea to exchange opinions on human rights issues and its role within the international system, the de facto moratorium on the death penalty as well as the broad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in preparing the national report.

10. Brazil noted the progress made on the status of implementation of the voluntary pledges and commitments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Brazil encouraged the Government to work on the implementation and dissemination of observations of treaty bodies, recommended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out reservations, and asked what practical measures are being taken to guarantee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peaceful assembly to the fullest measure.

11. Indonesia requested further explanations on the main challenges and obstacles, if any, that were encounter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NAP. Indonesia valued the national efforts to promote and protect the rights of women and children, in line with CEDAW and CRC. While noting that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workers is strictly prohibited, it recommended that efforts be strengthened to uphold the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 protection of foreign workers in the country.

12. Pakistan asked how the Republic of Korea ensures full and complete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Protection for Non-regular Workers, whether the Basic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successfully deals with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and whether the EPS is used to discriminate against workers from countries which have not signed a MoU with the Republic of Korea. Pakistan acknowledged that some progress has been made to deal with social taboos regarding women's rights and enquired about constraints and challenges to further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13.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xpressed concern at the continued application of the Security Law as a source of systemic violations of, in particular,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embly. The "Ideology Conversion System" was once a cause of serious concern raised by the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The people of the North have been defined as enemies and any contacts and communications with them are criminalized by the Security Law. While recalling that the Human Rights Committee, in its concluding observations of 1992, 1999 and 2006, expressed grave concern at the restrictions imposed on articles 9, 18 and 19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through the Security Law,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commended to the State to take concrete measures with a view to abolishing it. Furthermore, it expressed concern at the Security Surveillance Law, which restricts freedoms of former political prisoners and of prisoners of conscience and recommended that measures be adopted to address the situation. It also noted the concern expressed by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in relation to allegations of torture in detention facilities and the improper definition of torture in the Criminal Code, and by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relation to limita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embly of students. It recommended the adoption of relevant measures for legislative and criminal justice improvements.

14. Turkey commended the Republic of Korea on its programmes to achieve gender equality and to promote children's rights, on the adoption of the Basic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aimed at preventing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and on a national plan to assist their integration into society. Turkey praised the Government for its awareness of challenges, such as the increasing elderly population and the traditional perception of human rights in society. Considering various NGO reports regarding detention centres, Turkey enquired about plans to improve the conditions in these facilities. Turkey also asked whether the Government plans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in the near future.

15. Algeria noted that migrant workers and irregular migrant workers continue to be challenged by discriminatory practices, including arbitrary detention and expulsion without due process, and that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s well as the right to form trade unions are also challenged. Algeria encouraged the Republic of Korea to ratif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ICRMW) and recommended that measures be taken in particular to protect and fulfil the rights of all women migrant workers and to ensure that they are not subjected to discriminatory practices. Furthermore, while noting that in 1999, the Human Rights Committee expressed its concern about the Act on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stating that it places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assembly, Algeria asked what measures had been adopted to address this situation. It recommended that the guarantee provided for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assembly be enshrined into law.

16. Canada praised the Republic of Korea for amending its Civil Code in order to abolish the Family Head System, as recommended by the Human Rights Committee and CEDAW, acclaimed efforts to adopt recommendations made by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and recommend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enact a crime of torture as defined in article 1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AT). Evoking reports that law enforcement personnel often use excessive force when handling migrants and dealing with demonstrators, Canada expressed concern that detention centres are not managed in a manner that allows for the protection of their human rights and recommended that human rights training be provided to law enforcement personnel and that measures be taken to ensure that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are protected at all times. Canada further recommended that all allegations of torture and ill-treatment by law enforcement officers be investigated. Canada also recommend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review its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to safeguard the right to privacy. Canada recommended that marital rape, child abuse and domestic violence be criminalized, perpetrators be prosecuted and sanctioned, human rights training be provided for officials dealing with instances of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and that child-sensitive procedures be adopted during criminal proceedings involving children. Evoking reports that migrant workers face persistent discriminatory treatment and abuse in the workplace, women migrant workers and their children being particularly vulnerable to trafficking and sexual exploitation, Canada recommend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place special emphasis on women and children when formulating policies to protect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17. France enquired whether the Republic of Korea envisaged formally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or at least to adopt a *de jure* moratorium. It wished to hear more on measures envisaged to combat discrimination, including based on sexual orientation,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employment. France asked about measures envisaged to reform the statute of the NHRCK and to what extent these measures would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Commission in respect of the Paris Principles. Lastly, France recommend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sig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18. While expressing appreciation for the broad participation of the civil society in the preparation of the national report, Colombia asked the Republic of Korea to elaborate more on the on-line survey that facilitated the consultation process. Colombia also asked the Republic of Korea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n how the NHRCK mechanism to facilitate human rights education to private companies and the media.

19. Slovenia noted the recommendation by the Human Rights Committee that the Republic of Korea recognize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ors to be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s. The Committee found a violation of article 18, paragraph 1, of ICCPR in two individual communications. Slovenia recommend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follow up on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 to provide the authors of these communications with an effective remedy. It also recommended recognizing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by law, to decriminalize refusal of active military service and to remove any current prohibition from employment in government or public organizations. Furthermore, Slovenia noted the concern expressed by CEDAW at the persistence of patriarchal attitudes and deeply rooted stereotypes regarding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women and men in the family and in society, which are, as the Committee noted, a root cause of violence against women. It recommend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include a gender perspective into the UPR follow-up process in a systematic and continuous manner. While noting that the Republic of Korea took several actions to improve gender equality in employment and participation of women in the economy, Slovenia stressed that, according to several reports, sexual harassment continues to be relatively common. It noted the low prosecution rate in sexual assault cases, presumably due to the fact that sexual crime is categorised as an offence that is subjected to investigation only upon complaint from the victim. Slovenia asked what the Government is doing to change this trend, and recommended that this legal provision be reviewed, along with other relevant provisions, in order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victims.

20. Belgium noted that the NHRCK has repeatedly demonstrated its independence from the Government since its creation in 2001. It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take steps towards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Belgium highlighted the progress made in combating domestic violence but expressed concern about reports of prevalent illegal prostitution and sexual exploitation of women, two treaty bodies asserting in 2007 the persistence of trafficking in foreign women. While welcoming anti-AIDS policies, Belgium expressed regret about the persisting negative public attitudes *vis-à-vis* persons affected by AIDS. Belgium also enquired about policies in place to combat discrimination, and recommended, as CEDAW did, that a defin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compliance with article 1 of the Convention be adopted and that the fight against trafficking in foreign women be intensified.

21. The Czech Republic expressed appreciation for all efforts the Republic of Korea has made to strengthen their human rights mechanisms, in particular for women. It enquired whether the Republic of Korea had conducted any analysis into the link between the high number of suicides and other sudden deaths in detention facilities, as noted by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and ill-treatment or acts of torture. It asked what measures have been adopted to better monitor detention facilities and to ensure thorough investigation of cases of ill-treatment or torture. The Czech

Republic recommend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further strengthen measures against torture and ill treatment, including accession to the Optional Protocol to CAT in the near future, and that it establish an effective 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It enquired about legislative provisions criminalizing domestic violence and on instruments available to victims of such violence. It welcomed the recent draft anti-discrimination bill, and recommended tha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be also included in the draft.

22. The Netherlands commended the Republic of Korea on its recently enacted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and expressed hope that it will ensure equal treatment for vulnerable groups in society, such as women, children, gays and lesbians, disabled people and refugees. The Netherlands also acknowledged the adoption of legislation increasing penalties for domestic violence and asked whether similar legislation can be expected to combat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The Netherlands finally recommended passing the special bill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into law in the new National Assembly that starts its term on 1 June 2008.

23. Malaysia noted the Government's projections according to which the Republic of Korea will have the highest ratio of population aged 65 or over around the year 2050, and welcomed its commitment to address this issue. Malaysia asked how, in addition to providing a social safety net to the elderly, the Government is addressing the concern expressed by CESCR in 2001 in relation to the hardship caused by family breakdown.

24. Azerbaijan welcomed the inten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withdraw its reservations to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ICCPR. It asked how non-discrimination is guaranteed, a concern also raised by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iven that the Constitution does not explicitly prohibit discrimination on specific grounds. Azerbaijan also wanted to know when and how the Government intends to modify the revised Code of Criminal Procedure to address the concern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that persons detained do not enjoy an automatic right to be promptly brought before a judge to have the legitimacy of their detention determined.

25. China stated that the national report mentions one challenge relating to the marginalization suffered by some vulnerable groups due to economic and social reforms, and enquired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measures taken in this regard and the adoption of other measures, if any, to build the capacities of the vulnerable groups.

26. In response to concerns raised by various delegations on the issue of migrant workers, the delegation stated that the Government has set up various legal and systematic frameworks to abolish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workers, in particular through the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The delegation referred to remedies for non-payment of retirement pensions and facilitation of entry and re-entry procedures. The Labour Relations Commissions operating within the Ministry of Labour receives such grievances. Various efforts have also been undertaken to provide vocational programme before the return of migrant workers to their countries.

27. On the question of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the Republic of Korea informed that an inter-ministerial consultation had been held to discuss the draft resolution tabled last November at the General Assembly on the moratorium to death penalty. However, this issue requires a consensus at the national level, and this will take time. On the applic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an issue rais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Government of Korea reemphasized its caution and its vigilance to refrain from the arbitrary use and implementation of this law.

28. With regard to questions on the gender perspective in the UPR process, the delegation stressed the active and full participation of the Ministry of Gender and Equality in the preparation and follow-up process to the UPR. It referred to two amendments to the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in 2002 an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in 2004 that expand the role of prosecutors, authorizing them to issue temporary detention orders against perpetrators, and provides medical assistance to victims to the extent that the Government recovers medical fees in case the perpetrator lacks financial means.

29. On the question of freedom of association and peaceful assembly, the Republic of Korea reassured that relevant law is applied in the most prudent manner.

30. On the definition of torture the delegation recognized that there were no laws defining torture but there were several laws including the Penal Act that ban torture. The Republic of Korea stressed that improvements had been achieved on detention conditions. The NHRCK and the Human Rights Violation Reporter Center take action on these matters and the Government provides training to its own officials. The delegation stressed that suicide rates in detention centres are not higher than in the society as a whole and that efforts are made to further reduce death rates in correctional facilities, and noted that no death case of ill-treatment in correctional facilities had been reported since 2000.

31. With regard to anti-discrimination grounds, the delegation stressed that according to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there shall be no discrimination in political, economic, social or cultural life on account of sex, religion or social status. However, “sex, religion or social status” are just enumerative ones. Thus, discriminations based on other grounds stipulat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re also prohibited under the Constitution.

32. The Republic of Korea did not view trafficking of foreign women as a large scale problem but the Government was nevertheless making every effort to prevent female migrants’ workers from being employed in sex industries or being trafficked. A certain type of sexual crime is subjected to investigation only upon complaint from the victim. But there are many circumstances, including cases of child victims under 13, where investigations are undertaken automatically.

33.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non-regular workers a new law was promulgated on 1 July 2007. This law stipulates that an employer may hire fixed-term employees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fixed-term, part-time or dispatched workers are granted compensation and repair damages in case of undue discrimination, and an overall plan has also been put in place to strengthen their skill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foreign workers, there are the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to combat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workers. In cases of non-payment of wages and retirement pay or other irregularities such as lack of security at the workplace, foreign workers are protected the same way as national workers. The Republic of Korea has built specific support centres for foreigners and provides them interpretation in seven languages, and trains foreign workers in terms of Korean language, habits and culture.

34. On improvements on equal opportunities, in order to promote women’s integration in the labour market, a number of efforts have been undertaken, including by providing subsidies for childbirth and childcare to improve work life balance. Training for reintegration is provided for women who have left the labour market.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value applies.

35.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at the workplace, trainings are mandatory and sanctions are applied in cases of non-compliance.

36. The Philippines expressed appreciation for efforts to adopt a human rights based approach regarding the treatment of migrants and their families and encouraged ratification of ICRMW in a timely manner. It also asked about measures to promote understanding and respect for migrants within society, including undocumented migrants, and whether the media could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is respect.

37.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welcomed the stanc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human rights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urged the Republic of Korea to play a still stronger role i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It encouraged the Republic of Korea to continue public and official awareness of human rights in order to ensure a fully inclusive society regardless of disability,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or national origin. The United Kingdom, while noting responses already provided by the State, joined other delegations in recommending the introduction and ratification of legislation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in the forthcoming term of the National Assembly. It asked inform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enal Code adopted in 2007, and hoped that the code would be fully and transparently implemented during the investigative process. It also enquired about any possible steps taken to reform the National Security Act. It recommended that this Act be brought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regarding clarity of criminal law, and that active steps be taken to introduce alternatives to military service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It asked whether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reviewing its position with regard to its reservation to article 22 of ICCPR and recommended the withdrawal of this reservation within a specific time frame. Finally, it recommended to the Republic of Korea to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to CAT and enquired when this might be likely.

38. Luxembourg noted that the death penalty may still be imposed for a series of crimes and offences in the Republic of Korea, noted that some 60 prisoners remain on death row and that in 2007 two death sentences were pronounced. Luxembourg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and the Permanent Commission on Law and Justice of the National Assembly comply with the obligations of United Nations reference texts and immediately work toward finalizing the legislative procedure underway with a view to the abolition in law of the death penalty. It further enquired about specific measures the Government intends to take to move forward in this debate at the level of public opin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and about the foreseen timetable for the adoption of the law on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39. Egypt asked for more information on the widespread societal discrimination against children with disabilities, a concern raised by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2003, and measures taken or envisaged in order to combat this phenomenon. It asked whether the Republic of Korea recognizes the ICRMW as a core human rights treaty and recommend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accede to that Convention.

40. Bangladesh noted that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workers is strictly prohibited pursuant to the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However, in practice, there have been allegations of persistent discriminatory treatment, of abuse in the workplace, and of lack of adequate protection and redress for foreign workers. Bangladesh urged the Republic of Korea to make further efforts to implement existing legislative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migrant workers. It requested that the Government deal with the issue of irregular migration in a humane manner, consider regularizing migrant workers or at the minimum guarantee their fundamental human rights. Concerning female migrant workers entering the country with "entertainment" visas and being lured into the sex industry, Bangladesh asked whether the Republic of Korea envisaged reviewing the issuance of this category of visa.

41. The Russian Federation noted that treaty bodies and special procedures have expressed concern at the situation of foreign women who have married Korean citizens. Since the legal status of these wives depends entirely on their Korean husbands, this category has become one of the most vulnerable groups. It asked what measures have been taken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foreign women, also recalling information by treaty bodies on trafficking and prostitution of women, most of whom are illegal migrant workers and bear the criminal consequences of their exploitation, and asked what steps have been taken to combat trafficking in and exploitation of women.

42. Latvia raised the issue of cooperation with the special rapporteurs, referring to the visits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n 1995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in 2006. Latvia requested the Republic of Korea to provide a timetable for the extension of a standing invitation to all special procedures.

43. Italy recommended maintaining the moratorium on the death penalty with a view to its abolition. Referring to concerns by CEDAW regarding the lack of a defin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hich fully complies with article 1 of the Convention, and to the persistence of deep-rooted stereotypes which are among the causes of violence against women, it recommended that the issue of improving women's rights be considered as one of the main priorities in the Government's human rights policies. Italy further recommend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urgently amend relevant legislation to expressly prohibit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and at home and implement educational measures promoting positive and non-violent forms of discipline.

44. Romania appreciated the progress made in fighting against discrimination and ensuring gender equality. It expressed its satisfaction with the responses provided by the delegation on measures adopted to protect women migrant workers from discriminatory practices and other abuses. It enquired about the Government's policy to protect the rights of asylum-seekers and refugees, in particular by ensuring a fair and transparent process to determine their refugee status and to ensure that they could maintain their living while their status is under consideration. Romania recommend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implement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its 1967 Protocol, and ensure that refugee recognition procedures be improved in line with international refugee law.

45. Mexico asked about the effect in practice of the new legislation eliminating the Family Head System and establishing equal rights in the marriage and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carry out public campaigns to make these provisions more effective. Mexico also urged the Government to strengthen legislation regarding domestic violence and encouraged the Government to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legislation address the protection of migrants, including access to the justice system. In this light, Mexico recommended the ratification of ICRMW and withdrawal of reservations to other treaties restricting the protection of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Finally, Mexico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take measures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46. Ukraine welcomed the efforts aimed at raising public awarenes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s well as steps taken to protect children from violence and prohibit corporal punishment. Ukraine wished to be informed about measures adopted to guarantee the right of persons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and about the NHRCK,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the impact of its recommendations.

47. Enquiring about policies in place to ensure that vague definitions in the National Security Law are not used to arbitrarily arrest and detain or intimidate individuals and whether there are plans to amend this law to ensure that it does not limit freedom of expressio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commended amend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to prevent abusive interpretations of the law.

48. Australia noted that NGOs have expressed concern that 58 prisoners remain on death row and certain crimes still carry the death penalty, and enquired whether there is active consideration by the Republic of Korea to signing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ICCPR.

49. Tunisia noted with satisfaction the efforts undertaken to promote the rights of social categories having specific needs and commended the Republic of Korea for sign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50. Japan wanted to know when the Republic of Korea will ratify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also asked what measures the Government has taken so far to addre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on the Internet while protecting freedom of expression, given that wider use of the Internet has not only affected the privacy of individuals but also disseminated harmful information, such as discriminatory materials and child pornography.

51. Germany noted the concern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that foreign female spouses do not enjoy the same rights as Korean citizens, that they are seemingly not allowed to work legally and that their residence status depends entirely on their Korean husband, thus subjecting them to possible abuse. It asked about possible plans to change the relevant legislation in order to allow for a more active participation of female foreign spouses in the economic sphere and to shield them from abuse.

52. Noting that numerous immigrants coming from various countries are gradually being integrated into Korean society, Peru recommended ratification of ICRMW and of the Palermo Protocol and recalled that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informed about human trafficking and potential abuse of the so-called artists' visas.

53. In response to additional questions, the Republic of Korea explained its policy on the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withdrawal of reservations. The Republic of Korea is a party to six 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continue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ratifying other ones. The Republic of Korea also tries to withdraw reservations to core human rights treaties through active consultations with relevant stakeholders, and will continue these efforts and take various legislative measures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Since the Optional Protocol to CAT took effect in June 2006, the Government began consultations to consider its ratification. These consultations are still in progress. In addition, the NHRCK conducts occasional visits and investigations into detention facilities, substantially engaging in counter-torture activities which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Optional Protocol to CAT. As explained in the report,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a party to the ICRMW,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and the four ILO Conventions (Nos. 29, 87, 98 and 105). The ratification of the ICRMW will be thoroughly examine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relevant domestic legislation. The Republic of Korea continues to consider sign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and is examining the scope of its domestic legislation, including the revision of punishment provisions. Concern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Republic of Korea is currently undertaking domestic procedures for its ratification and it hopes that these will be concluded soon. Regarding the withdrawal of reservations to article 22 of ICCPR, the delegation indicated that this will be decided taking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laws and systems.

54. The Republic of Korea indicated that the Government takes recommendations made by the NHRCK very seriously, while acknowledging that some recommendations cannot be implemented in reality on a short-term basis. As of late 2007, 67 per cent of recommendations made by the NHRCK related to human rights policies, legislation, mechanisms and practices and 87 per cent related to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ion were accepted.

55. On the issue of aging and the low birth rates, the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prevent related problems, has come up with a comprehensive plan under which women who give birth and newborn babies receive support from various services. Older persons above the age of 65 have a basic old age pension and a long-term protection and medical treatment and also other job opportunities. Furthermore, subsidies and services are provided to for single-parent families and families in which children are living with their grandparents as well.

56. Regarding the questions on the social safety net, the Government has expanded its public assistance since the financial crisis that affected Korea, and has enhanced the national social pension scheme and health insurance system for the society at large, in particular for vulnerable groups.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s financial support as well as other programmes to ensure the independence of vulnerable persons.

57. On the protection of female migrants, the delegation reiterated its commitments to improving their situation. The Republic of Korea legislated the Act on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in March 2008 under which the Government will provide various services such as counseling and education.

58. Regarding the issue of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in the home, it is important to reflect the views of various sectors of society in order to amend legislation. Since 2007, the Republic of Korea has designated some pilot schools where corporal punishment is not practiced and alternative measures for student discipline in this regard are provided.

59. The Republic of Korea announced a new programme to give conscientious objectors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alternative in civilian service, in September 2007.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system, the Government has to revise the Military Service Act, and considers submitting a revised Act to the National Assembly this year.

60. Reference was also made to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established in 2001. The Ministry grew and later incorporated Family Affairs in 2005. With the new Government that took office this year the Ministry was again reorganized. The Ministry is still active in promoting the rights of women and incorporating a gender perspective into all public policies. In connection with the issue of stereotypes, and questions of differences between of men and women, CEDAW in 2007 recognized efforts and progress made by the Republic of Korea in this area. However, due to the Confucian tradition, stereotypes still exist. In an effort to change stereotypes of women and promote gender equality, the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was established in 2003 under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The Institute provides specialized training to better understand the issue of gender equality to general public and civil servants. The question of migrant women is an issue of considerable importance for the Republic of Korea and with a view to protecting migrant women's human rights, the Government operates shelters, one-stop service centres with interpretation services, for migrant women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61. Regarding the issue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Republic of Korea at present is envisaging ratify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Act on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came into

effect in April of this year. A number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orking in this area made considerable contributions to the drafting of this law. In order to have a stable implementation of the law, the Republic of Korea will continue analysing the situation in order to identify issues that need to be improved. The Republic of Korea will also conduct an evaluation to assess progress in this regard.

62. With regard to the issue of refugees, the Republic of Korea indicated that it has to improve the procedures to recognize the status of refugees. The Republic of Korea has to invite the NGOs to participate in this regard. The Republic of Korea works in close cooperation with UNHCR. As regards recognized refugees,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s opportunities for work. The Republic of Korea will try to amend the law so that applicants for refugee status can also have the right to work when they meet certain requirements.

63. In its concluding remarks H.E. Mr. Kim Sung-hwan,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active participation of delegates, as well as for the constructive comments on the national report. He noted that some points require more explanations and that due to time constraints, the Republic of Korea will try to give more answers in written form during the plenary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in June. The Republic of Korea will review the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that Member States have made and remain open to other recommendations, post-UPR dialogue and from othe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mechanisms. In the post-review process, the results will be fully shared and discussed with all stakeholders. The Republic of Korea takes serious note of some concerns expressed regarding the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and will engage in domestic discussion on that matter. For the enhancement of migrant's rights, the Republic of Korea will seek to learn from the best practices and experiences of other receiving countries. The Republic of Korea intends to accord more positive consideration to the accession to conventions not yet ratified.

II. CONCLUSIONS AND/OR RECOMMENDATIONS

64. In the course of the discussion,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were made to the Republic of Korea:

1. To work on the implementation and dissemination of observations of treaty bodies (Brazil);
2. To ratify the Conven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out reservations (Brazil);
3. To strengthen efforts to uphold the Act on the Foreign Workers Employment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foreign workers in the country (Indonesia);
4. To take concrete measures with a view to abolishing the "Security La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5. While expressing concern at the Security Surveillance Law, which restricts freedoms of former political prisoners and of prisoners of conscience to adopt measures to address the situatio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6. To adopt relevant measures for legislative and criminal justice improvements in relation to concerns expressed by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in relation to allegations of torture in detention facilities and improper definition of torture in the Criminal Code, and by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relation

-
- to limita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embly of student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7. To accede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s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lgeria, Philippines, Egypt, Mexico, Peru) , to withdraw reservations to other treaties restricting the protection of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Mexico) and to ratify the Palermo Protocol (Peru);
 8. To take measures to protect and fulfil the rights of all women migrant workers and to ensure that they are not subjected to discriminatory practices (Algeria);
 9. That the guarantee provided for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assembly be enshrined into law (Algeria);
 10. To enact a crime of torture as defined in article 1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Canada);
 11. To provide human rights training to law enforcement personnel and that measures are taken to ensure that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are protected at all times and limit the uses of registration numbers to those strictly necessary for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Canada);
 12. That all allegations of torture and ill-treatment by law enforcement officers be investigated (Canada);
 13. To review its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to safeguard the right to privacy and limit the uses registration numbers to those strictly necessary for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Canada);
 14. That marital rape, child abuse and domestic violence be criminalized, perpetrators are prosecuted and sanctioned, human rights training be provided for officials dealing with instances of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and that child-sensitive procedures be adopted during criminal proceedings involving children (Canada);
 15. To place special emphasis on women and children when formulating policies to protect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Canada);
 16. To sig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France);
 17. To recognize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by law, to decriminalize refusal of active military service and to remove any current prohibition from employment in Government or public organizations, in line with the recommendation by the Human Rights Committee (Slovenia);
 18. To include a gender perspective into the UPR follow-up process in a systematic and continuous manner (Slovenia);
 19. Noting that sexual crime is categorized as an offence that is subjected to investigation only upon complaint from the victim, it was recommended that

this legal provisions be reviewed, along with other relevant provisions, in order to enhance protection of victims (Slovenia);

20. To maintain the current de facto moratorium (Belgium, Italy) and to progress towards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Belgium, Italy, Mexico) and to pass the special bill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into law in the new National Assembly that starts on 1 June 2008 (Netherlands,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21. As recommended by CEDAW, that a definition on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compliance with article 1 of CEDAW be adopted and that the fight against trafficking in foreign women be intensified (Belgium);
22. To further strengthen measures against torture and ill-treatment, including accession to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in the near future, and that it establish an effective 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Czech Republic);
23. That discrimination on basis of sexual orientation be also included in the draft antidiscrimination bill (Czech Republic);
24. That the National Security Act be brought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regarding clarity of criminal law, and that active steps be taken to introduce alternatives to military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United Kingdom);
25. The withdrawal of the reservation on article 2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within a specific timeframe (United Kingdom);
26. To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United Kingdom);
27.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and the Permanent Commission on Law and justice of the National Assembly comply with the obligations of United Nations reference texts and immediately work to finalize the legislative procedure underway with a view to the abolition in law of the death penalty (Luxembourg);
28. That the issue of improvement of women's rights be considered as one of the main priorities in the Government's human rights policies (Italy);
29. To urgently amend relevant legislation to expressly prohibit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and at home and implement educational measures promoting positive and non-violent forms of discipline (Italy);
30. To implement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its 1967 Protocol, and ensure that the refugee recognition procedures be improved in line with international refugee law (Romania);
31. To carry out public campaigns to make the provisions of the new legislation eliminating the Family Head System and establishing equal rights in the marriage more effective (Mexico);

-
32. To strengthen legislation regarding domestic violence and to take measures to ensure access of migrants to services including access to the justice system (Mexico);
33. Amend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to prevent abusive interpretation by the law (United States of America).
65. The respons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se recommendations will be included in the outcome report adopt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at its eighth session.
66. All conclusions and/or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present report reflect the position of the submitting State(s) and /or the State under review thereon. They should not be construed as endorsed by the Working Group as a whole.

Annex

Composition of the delegation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headed by H.E. Mr. KIM Sung-hwan, Vice-Ministe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nd composed of 26 members:

H. E. Mr. LEE, Sung-joo, Ambassador, Permanent Representative to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eneva;

H.E. Mr. CHANG, Dong-hee, Ambassador, Deputy Permanent Representative,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Geneva;

Mr. CHO, June-hyuck, Deputy Director-General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r. PARK Hun-yul, Minister Counsellor,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Geneva;

Mr. CHANG, Jae-bok, Director, Human Rights and Social Affairs Divis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r. YANG, Dong-kyo, Director of Child and Youth Rights,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Mr. KIM, Hong-joong, Director of Rights Protec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Mr. LEE, Sung-ju, Chief, Human Rights Divisio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s. KANG, Sun-hye, Director of Liaison & Cooperatio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Mr. KANG, Nam-il, Counsellor,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Geneva;

Mr. LEE, Sang-bok, Director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Ministry of Labor;

Mr. LIM, Hoon-min, Counsellor,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Geneva;

Mr. JUNG, Mino, First Secretary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Geneva;

Mr. HONG, Seok-in, First Secretary, Assistant to the Vice Ministe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r. BEK, Bum-hym, First Secretary,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Geneva;

Mr. KIM, Pil-woo, First Secretary,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Geneva;

Mr. JANG, Hyun-cheol, First Secretary, Human Rights and Social Affairs Divis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r. HONG, Kwan-pyo, Deputy Director, Ministry of Justice;

Ms. AHN, Ji-won, Third Secretary, Human Rights and Social Affairs Divis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s. LEE, Do-kyung, Assistant Director, International Cooperation Division, Ministry of Labor;

Ms. KIM, So-yeon, Assistant Director, Public Sector Labor-Management Relations Division, Ministry of Labor;

Ms. LEE, Jin-hee, Assistant Director, Ministry of Gender Equality;

Ms. SHON, Myoung-ji, Assistant Director, Ministry of Justice;

Ms. LIM, Sung-eun,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Mr. KIM, Hyung-kee, Assistant Director of Ministry of Educatio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Distr.

GENERAL

E/CN.4/1996/39/Add.1

21 November 1995

Original: ENGLISH

COMMISSION ON HUMAN RIGHTS

Fifty second session

Agenda item 8 of the provisional agenda

**QUESTION OF THE HUMAN RIGHTS OF ALL PERSONS SUBJECTED TO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Report on the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r. Abid Hussain, submitted pursuant to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3/45

CONTENTS

Paragraphs

Introduction

I. Recent developments

II. Principal observations and concerns

III. Recommendations

Annex. Persons with whom the Special Rapporteur met during his visit

Introduction

1. This report has been prepared pursuant to resolution 1993/45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decision 1993/268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It analyses the information received by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r. Abid Hussain, during his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from 25 to 30 June 1995, as well as information received from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active in the field of his mandate concerning allegations of violations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2. It had been the Special Rapporteur's intention to visit both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owever,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dicated it was unfortunately not in a position to receive the Special Rapporteur at the time suggested by him. The Special Rapporteur expresses his sincere hope that such a visit will take place in due course, at the Government's earliest convenience.
3. The Special Rapporteur would like to express his gratitude for the cooperation extended to him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discharging his mandate. He highly appreciates the assistance received from the Government in the organization of his visit. He would like to convey his gratitude especially to th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and his staff who arranged meetings with Cabinet members and helped make his visit successful. All but a few of the Special Rapporteur's requests for meetings with government officials were met, even though these requests were forwarded to the Government at very short notice. Furthermore, the Special Rapporteur notes and appreciates the atmosphere of openness in which his visit took place, both in respect of its organization, whereby he was at great liberty to meet with all parties of concern to his mandate, and with respect to the substantive discussions concerning his mandate, which were invariably frank and constructive.
4. The Special Rapporteur would also like to express his appreciation to the Resident Representative and staff of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in Seoul for their efficient organization of his visit.

5. During his visit, the Special Rapporteur met with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and Administ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epresentatives and members of non government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representatives and members of both officially recognized and unrecognized trade unions, representatives of the media and related organizations, members of the academic community, the judiciary and the legal profession, as well as with individuals who, through their professional activities or other experience, have a special knowledge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Special Rapporteur's mandate. He would like to refer especially to meetings, organized by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with former detainees and family members of detained persons convicted on charges relating to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involving their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e Special Rapporteur was impressed by the courage and determination of the many men and women active in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A list of the persons with whom the Special Rapporteur met is to be found in annex I to this document.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list is not exhaustive. The Special Rapporteur had the opportunity to meet with many other persons in the course of his visit. He would like to thank all persons with whom he met for their generous efforts to assist him during his visit to their country. Furthermore, he would like to clarify that no person with whom he spoke indicated a wish to remain anonymous. At the close of his visit, the Special Rapporteur gave a press conference at which he presented his initial views on the visit. In the present report, the Special Rapporteur considers those issues that were at the forefront of his discussions during his visit and that he deems most important in relation to his mandate.

I. RECENT DEVELOPMENTS

6. At the outset, the Special Rapporteur would like to mention that many measures have been taken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strengthe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general. The Special Rapporteur wishes to mention briefly some important steps, as well as other developments in recent years that have been brought to his attention. This brief account does not aim to present a complete picture of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It rather serves to illustrate the context in which his visit took place relating to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
7. In 1993, the Government promulgated an amnesty for some of the prisoners convicted under previous regimes. In the same year, Cabinet Ministers initially expressed a willingnes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replac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with a law on the protection of public order in a democratic society. Some weeks later, however, the Government considered it necessary to retain the National Security Law for as long as the highly precarious security situation of the country would continue. Also in 1993, the Government acknowledged the necessity of revising interrogation procedures in order to prevent ill treatment of detainees. Thereupon, the Prosecutor General's office announced guidelines to prevent obstruction of the visits of lawyers to detainees under interrogation. Later that year the Supreme Court established the Judicial System Development Committee for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reform of the judiciary and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law restricting the investigative powers of the Agency for National Security Planning. In 1994, a parliamentary Intelligence Committee was established to oversee the Agency's work. In 1995, two months before the Special Rapporteur's visit, the Seoul Appellate Court acquitted defendant Mr. Lee Chang bok, who had previously been sentenced to a 10 month prison term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This was a landmark decision as it recognized the obligation to safeguard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defendant.
8. These steps reflect the extent to which human rights considerations are becoming part of the political and juridical agenda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pecial Rapporteur recalls the general state of affairs of human rights protection in the 1980s and before, and notes th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since then, especially under the current, democratically elected President, Kim Young sam, who took office in December 1992 and who has, on many occasions, publicly committed himself to the caus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9. The Special Rapporteur also recalls the comment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on the occasion of its consideration of the initial report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Korea under article 40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C/79/Add.6). The Human Rights Committee considered ordinary laws and criminal laws to be sufficient to deal with offences against national security. It did not see the necessity for a separate law on national security. It expressed its concern at the continued imprisonment of persons on grounds of their political opinions and

recommend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bring its legislation more into line with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Special Rapporteur also recalls decisions Nos. 29/1994 and 30/1994 adopted, on 29 September 1994, by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concerning the cases of three persons detained on charges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among them Mr. Hwang Sok yong (see para. 11 below). The Working Group decided these cases of detention were arbitrary in view of their contravening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guaranteed under article 19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0. The Republic of Korea, in recent years, has shown a growing commitment to the values of democracy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but remains a subject of concern to human rights mechanisms of the United Nations. The Special Rapporteur notes the astonishing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could serve to strengthen further the country's commitment to human rights. It was in this context that the Special Rapporteur visited the Republic of Korea. With the intention of assisting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its continuing efforts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he would like to express his principal observations and concerns on a number of issues regarding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I. Principal observations and concerns

The case of Mr. Hwang Sok yong

11. In his most recent report to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E/CN.4/1995/32, paras. 116-118), the Special Rapporteur referred to allegations received concerning infringements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of the writer Mr. Hwang Sok yong, who has been convicted and sentenced to a seven year prison term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The Special Rapporteur appreciated the opportunity of being able to meet in prison with Mr. Hwang, who appeared to be in good health and who shared valuable information with him. In the present report, for the purpose of clarifying some of his concerns, the Special Rapporteur at times refers to statements Mr. Hwang addressed to him. He would like to stress, however, that these

references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examination of the issue of the detention of Mr. Hwang, concerning which the Special Rapporteur is seeking to continue his dialogue with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National Security Law

12. The Special Rapporteur was informed of a number of controversies that have arisen over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by certain persons as related to the safeguarding of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13. The Special Rapporteur notes that article 7(1)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makes it an offence, punishable by up to seven years' imprisonment, for any person to praise, encourage, propagandize or side with the activities of an anti state organization. Articles 4, 5 and 8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furthermore make it a punishable offence to collect, divulge or transmit state secrets or materials benefiting the enemy, to receive materials or money from anti state organizations, and to meet or communicate with members of anti state organizations.
14. Reportedly, at the time of the Special Rapporteur's visit, several hundred people were either facing arrest or had been arrested, charged or convicted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mostly under article 7 thereof. Many cases where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of defendants has been restricted on the grounds of protecting national security have been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Special Rapporteur. These cases include convictions on the following grounds: visit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ithout the prior authorization of the author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contacting or speaking with citizens or official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passing on information of a general character to these persons; expressing socialist views in general; criticizing government policy with regard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5. The Special Rapporteur notes that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can,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be restricted only in the most serious cases of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He refers in this regard to paragraphs 48 to 51 of his second report to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E/CN.4/1995/32).

-
16. The Special Rapporteur notes that only in highly exceptional cases can a nation's security be directly threatened by a person's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Such a threat would require, at the very least, the clear establishment of the person's ability and intention to cause the taking of actions directly threatening national security, in particular by propagating or inciting the use of violence. In no instance may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be punished on the mere ground that it might, possibly, jeopardize national security. It is for the State to establish what consequences would ensue and why they would constitute a direct threat to national security.
17. The Special Rapporteur observes a lack of precision with respect to the scope and meaning of some key concepts which arise in the applic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These include "praising, encouraging and propagandizing of activities of an anti State organization", and "materials benefiting the enemy". He notes with concern that the National Security Law, as interpreted by the courts, criminalizes the expression of thoughts, beliefs or opinions on public matters, including government policies, as well as the possession of publicly available materials of a general or academic nature. He profoundly regrets that the quotation of publicly available materials and statements of a highly general or even trivial character are being sanctioned on the assumption that, in some way that is not explicitly specified, they benefit an anti state organization. Moreover, he notes with concern that the rules of evidence applied in cases concern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do not require the establishment of intent or definite awareness on the part of defendants that the acts for which they have been charged (as stipulated in art. 4, paras. (1) to (4) were actually "benefiting the enemy". The Special Rapporteur notes that persons have been convicted on the basis that they should have been aware that their actions, including the mere possession of publicly available academic works, were "benefiting the enemy".
18. The Special Rapporteur notes with great concern that in most of the cases referred to him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not very convincing arguments have been presented to justify the restrictions imposed on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He also notes with concern the apparent absence of any consideration of the State's obligation to protect the defendant'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or of the right to information of the public at large in legal proceedings

involv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upholding of national security. The above mentioned case of Mr. Lee Chang bok (see para. 7) is a rare exception. Furthermore, to the knowledge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none of these cases has a convincing causal link been established between the content of opinions for the expression of which persons have been charged and convicted and a serious and direct political or military threat to the nation. No reference is made to clearly identifiable, adverse consequences for the nation's security of the expression of the opinions in question. Consequently, the necessity for and effectiveness of the restrictions imposed on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cannot be properly considered in these legal proceedings.

19. The Special Rapporteur further notes with concern the broad discretion of the Agency for National Security Planning to investigate cases concerning the safeguarding of national security, and fears its arbitrary exercise. Unfortunately, the Special Rapporteur was not provided with the opportunity to meet officials of the Agency to seek information and clarification on its position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and its application of the powers entrusted to it. The Special Rapporteur learned, however, that officers of the Agency for National Security Planning are apparently in a position to put pressure on persons who are arrested, charged or convicted for statements considered criminal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The Special Rapporteur fears this might lead to unwarranted interference by the Agency with the due process of the law.

20. The case of Mr. Hwang Sok yong (see para. 11 above), illustrates this point. He informed the Special Rapporteur that his wife and son were living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ould not return to the Republic of Korea because they feared being arrested upon their arrival. Mr. Hwang was convicted on the charge inter alia of having visite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ithout authorization fro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i.e. the Agency for National Security Planning. His wife and son accompanied Mr. Hwang on this visit and thus, presumably, face similar charges. However, according to Mr. Hwang, officers of the Agency for National Security Planning promised him his wife and son could return to their country without being arrested if he would cooperate with the Agency's investigation into his case. More recently, it appears, officers of the Agency informed

Mr. Hwang that the time was not yet appropriate for the return of his wife and son. The Special Rapporteur fears that the Agency's officers were motivated by considerations quite independent of the case of Mr. Hwang.

21. On the basis of the above considerations, the Special Rapporteur is compelled to conclude that the wording and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fail to offer adequate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s provided for by applicabl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cluding article 19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article 19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o which the Republic of Korea became a party in 1990.

Freedom of opinion

22. It has been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Special Rapporteur that prisoners who allegedly hold particular political convictions are requested by prison authorities to renounce those convictions.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received by the Special Rapporteur, this practice is based on an administrative regulation issu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1969, the purpose of which is to facilitate the social rehabilitation and monitoring of prisoners after their release.
23. If prisoners do not comply with this request, they face sanctions. These include their applications for release on parole not being considered, being deprived of their privileges, and restrictions on their rights with respect to correspondence and visits.
24. The Special Rapporteur considers that this practice, irrespective of its purpose, is in breach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provided for in article 19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 and article 19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this respect, the Special Rapporteur refers to chapter I, section B of his previous report to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E/CN.4/1995/32), which deals with restrictions and limitations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He specifically refers to paragraph 39 of that report, wherein he states that no interference with the right to hold opinions is allowed.

-
25. The Special Rapporteur considers, furthermore, that the said practice violates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of detainees. The Special Rapporteur would like to refer to Principle 6 (1) of the 1957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and Principle 2 of the 1990 Basic Princip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which prohibits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political or other opinion. The practice of sanctioning the non compliance of prisoners with the request to renounce their ideological convictions is not in conformity with these internationally recognized principles.
26. In some cases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Special Rapporteur where prisoners do not comply with the request to renounce their political convictions, they apparently do not wish to do so because they consider this as admitting to an opinion which they claim never to have possessed. Quite apart from the consideration tha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does not permit any sanction, legal, administrative or otherwise, for merely holding a political opinion, the subsidiary question arises here of prisoners effectively being asked to incriminate themselves retroactively, which is in contravention of Principle 21.1 of the 1988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which prohibits, *inter alia*, taking undue advantage of the situation of a detained or imprisoned person for the purpose of compelling him to incriminate himself.

Freedom of expression of detainees

27. The Special Rapporteur has been pleased to learn that, in general, prison conditions have improved considerably in recent years. Yet, he would like to express his concern on some issues relating to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detainees.
28. The Special Rapporteur notes that the general regime for the administration of prisons is in large measure based on a law on prisons promulgated under Japanese occupation in 1923. He was furthermore informed that prisoners, as well as prison warders, were generally of the opinion that the regime resulting from this law should be changed and adapted to developments that have since taken place i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general and the rights of prisoners in particular.

-
29. In reply to a request of the Special Rapporteur, the detained Mr. Hwang Sok yong informed the Special Rapporteur of a number of incidents relating to his writing activities in prison. Mr. Hwang explained that he needed the approval of the Ministry of Justice for the publication of his books. Mr. Hwang cited as an example his attempt to reprint one of his publications with an updated preface, to be written in prison. He explained that in reply to his request for paper, the prison authorities asked him to indicate the number of pages he envisaged writing and added that if he wanted to write 10 pages they would provide him with 10 blank pages and if he wanted to write 20 pages they would provide him with 20. Mr. Hwang informed the prison authorities that if that were the case he preferred to write the preface in the form of a letter, whereupon the prison authorities provided him with two postcards. After having written his preface using the space available on the two postcards provided to him, Mr. Hwang stated, the prison authorities requested him three times over to rewrite what he had written on those two postcards. In the end, Mr. Hwang explained, after having revised his preface three times, he had effectively been able to use the space available on one of those two postcards.
30. Mr. Hwang furthermore explained that before receiving approval from the prison authorities to write on whatever subject, or even to keep notes or to write on anything personal and not intended for publication, he first had to indicate the subject on which he wanted to write. The subject had then to be review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before paper was made available to him by the prison authorities. Furthermore, what he had written was reviewed by the prison authorities after completion. Mr. Hwang concluded that he preferred not to write at all under these circumstances, which in his opinion merely led to discussions on what topics were the most appropriate for him to write on.
31. The testimony of Mr. Hwang captures the atmosphere of the prison regime. The Special Rapporteur observes that Mr. Hwang Sok yong is not free to engage in his writing activities within limits reasonably necessitated by his incarceration. He is concerned that prison conditions in general do not fully reflect applicable standards, including those governing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of detainees. In this connection, the Special Rapporteur would like to refer to the 1990 Basic Princip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hich Principle 5 reads in full:

"Except for those limitations that are demonstrably necessitated by the fact of incarceration, all prisoners shall retain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set out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 and, where the State concerned is a party,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Optional Protocol thereto, as well as such other rights as are set out in other United Nations covenants."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workplace

32. The Special Rapporteur was informed of a number of problems in the exercise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workplace. He notes that article 13 (2) of the Labour Dispute Mediation Act prohibits anyone who has no immediate connection to a workplace where a dispute between workers and employers is taking place from intervening in that dispute. Violation of this prohibition on what is commonly referred to as "third party intervention" carries a maximum penalty of five years' imprisonment. He also notes that article 3 of the Trade Union Law prohibits the establishment of trade unions or trade union federations if these duplicate or interfere with the work and purpose of existing trade unions or trade union federations.
33. The Special Rapporteur notes with concern that a number of persons who have been imparting information to workers on legitimate trade union action or the Government's labour policies have been arrested or are facing arrest on charges of illegal intervention in a labour dispute.
34. The Special Rapporteur holds the view that freedom to associate in trade unions is a prerequisite of the effective collective expression of labour related opinions, including grievances. Trade unions assist individual workers, among others, in their exercise of the right to seek and receive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arriving at a well informed opinion on their professional circumstances and activities related thereto. Trade unions, furthermore, make possible public discussion on issues that regard not only their members but society at large, such as legislation on labour, taxation and welfare. As such, they perform an essential function in a democratic society that respects human rights.

-
35. The Special Rapporteur, taking into account the purpose of trade unions, which is principally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ir members, considers that there must be room for more than one union. A worker must be able to choose the union which, in his opinion, protects his interests best. He must also have the freedom to associate with other workers to form a new trade union if he considers that existing trade unions do not effectively protect his interests. In such cases, the forming and joining of a new trade union cannot be construed as interference with the work of pre-existing trade unions.
36. The Special Rapporteur observes that article 3 of the Trade Union Law effectively amounts to a general prohibition on forming or joining a trade union of one's choice. It impairs the legitimat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n the workplace.
37. The Special Rapporteur also observes that the legal regime covering trade union activities in practice prevents workers from freely seeking, receiving and imparting information essential for forming a balanced opinion on matters relating to their professional activities and development. This includes advice given to workers, irrespective of their union membership, about their labour rights. In addition, the Special Rapporteur has found that this legal regime in practice prevents the full enjoyment of the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which is intimately linked to the full enjoyment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He refers in particular to the status of the Korean Council of Trade Unions, which is seeking to be established alongside the only legally established nationwide trade union,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38. The Special Rapporteur, considering his mandate, does not wish to address questions uniquely or mainly relating to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Yet, noting the close connection of these freedoms to the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he would like to recall the recommendations offered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the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in 1993, which called, *inter alia*, for the repeal of the ban on "third party intervention". Due regard should also be given to two important ILO Conventions: Convention No. 87 concerning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and Convention No. 98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the Right to Organise and to Bargain Collectively. Both Conventions have been elaborated upon and clarified by the competent organs of the ILO.

Performance Ethics Committee

39. The Special Rapporteur notes that performing artists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required to submit the text or recording of their performance, prior to its publication, to the Performance Ethics Committee. Under the Performance Act, the Movies Act and the Act concerning Records and Video Materials, the Performance Ethics Committee is empowered to withhold authorization for publication on various grounds, including the upholding of public morals. In practice, the Performance Ethics Committee at times requests performing artists to review their submissions before authorizing publication.
40. The Special Rapporteur considers that any system of prior restraint on freedom of expression carries with it a heavy presumption of invalidity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y institutionalization of such restraint adds further weight to this presumption. In his opini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nd the right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would be better served, not by routinely submitting specific types of expression to prior scrutiny, as is currently the case under the Performance Ethics Committee, but rather by initiating action after publication, if and when required. Such an approach would bring the Committee's considerations on the protection of the public interest into the public arena, which would considerably enhance the degree of public knowledge and appreciation of any necessary protection. It would, furthermore, offer an adequate safeguard against possible unduly restrictive administrative measures. While not excluding the possibility of legitimate and necessary prior restraint on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e Special Rapporteur would want to express his concern about leaving such prior constraints on this right, which is vital to a democratic society, to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not public legal procedure.
41. The Special Rapporteur recalls paragraph 55 of his previous report (E/CN.4/1995/32) where he stresses the importance of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of

minority views, including those views that might be offensive or disturbing to a majority. Such protection applies especially to views expressed by means of the performing arts, as well as to the arts in general, in view of the special character and function of artistic expression.

Press and media

42. The Special Rapporteur was informed that the situation of the press and media had improved since the previous regime. At the same time, the press today seems to face a number of pressures. These are in part related to its own success, which leads to fierce competition, and in part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faced by certain press organs, especially those owned by small companies. In other part these pressures stem from the structure of ownership of the press. Press management appears to align closely with the interests of the owner companies, mostly local businesses that have profited from the building boom in recent years. The absence of a strong tradition of editorial independence and balanced labour relations leads to a working climate that can at times cause difficulties for press professionals.
43. In addition, the Special Rapporteur was informed of cases where libel suits have led to the arrest of journalists who reported critically on members of the Government. He was also informed of the imposition of fines following critical news reports. These fines are reportedly of an amount that could threaten the survival of the press and media institutions concerned. In a democratic society, government institutions should be open and responsive to all criticism, even when at times it is critical of personalities. The function of the press as a public watchdog and the right of the public to be informed are of great importance. They should not suffer from a climate in which the press and media fear the consequences of their statements delivered in good faith and in the interest of the public.

Cases of concern to the Special Rapporteur

44. The Special Rapporteur is seeking further information from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a number of persons about whom information received by the Special Rapporteur, both before and during his visit, appears to indicate undue

restriction of their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fter having carefully considered all information necessary to arrive at a well informed opinion, the Special Rapporteur will present his observations on these cases, if he sees it to be appropriate.

45. The Special Rapporteur has noted with appreciation the special amnesty granted by the Government, as of 15 August 1995, six weeks after his visit, to a large number of prisoners on the occasion of the fiftieth anniversary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He has been informed that some of the persons about whom he expressed his concern have had their prison sentences suspended and have been released.

III. RECOMMENDATIONS

46. On the basis of the principal observations and concerns described in the previous section, the Special Rapporteur would like to mak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The Special Rapporteur recalls the constructive nature of the exchange of views with the Government during his visit and is confident that his recommendations will be received in a spirit of mutual commitment to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 (a)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strongly encouraged to repeal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to consider other means, in accordance with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o protect its national security.
 - (b) The practice of requesting prisoners who allegedly hold political opinions repugnant or unpalatable to the establishment to renounce such opinions should cease. All sanctions under prison or social rehabilitation regimes emanating from non compliance on the part of prisoners with this request should cease.
 - (c) All prisoners who are held for their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should be released unconditionally. The cases of prisoners who have been tried under previous Governments should be reviewed, due account being taken of obligations arising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this respect, the obligation to protect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cannot be seen in isolation from other obligations arising under the Covenant, notably concerning the right to a fair trial.

-
- (d) The Government is encouraged to revise the Labour Dispute Mediation Act and the Trade Union Act so as to facilitate legitimate trade union activities, including the expression of well informed collective opinions by workers on matters relating to labour disputes and collective bargaining.
 - (e) The Government is encouraged to continue its efforts to align its national law with the provisions relating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particular by introducing more explicit national legislation to facilitate the attainment of a proper balance in the judiciary's efforts to protect human rights in general and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n particular.
 - (f) The Government is encouraged to take steps to enhance the systematic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the national legal system, especially concerning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e Government is invited to consider disseminating appropriate human rights materials, including case law, to the judiciary and the larger legal profession, and to seek the participation of practising judges and lawyers in seminars or courses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 (g)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encouraged to take the necessary steps to bring its prison regime into accordance with established international principles o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so as to protect effectively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of detainees.
 - (h) The Government is encouraged to limit administrative interference with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to substitute public legal procedure for existing administrative procedure, especially with regard to prior constraints on this right.

Annex

PERSONS WITH WHOM THE SPECIAL RAPPOREUR MET DURING HIS VISI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Mr. GONG Ro-myong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Mr. KIM Do-hyun	Vice-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Mr. KIM Jong-koo	Vice-Minister of Justice
Mr. LEE Kyeong-jae	Vice-Minister of Information

Non-government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Mr. KANG Je-yoon	Secretary,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Mr. LEE Sock-bum	Lawyer,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Ms. NAM Kyu-sun	Secretary-General, Human Rights Group "MINKAHYUP"
Mr. LEE Seong-hoon	International Coordinator, Korean Human Rights Network "KOHNET"
Mr. NOH Tae-hoon	Secretary-General, Centre for Human Rights "SARANBANG"
Ms. CHOI Eun-ah	Member, Centre for Human Rights "SARANBANG"
Mr. LEE Suk-tae	Attorney at law, Secretary-General of "MINBYUN" -Lawyers for Democracy
Mr. LEE Don-myung	Senior member, "MINBYUN"
Mr. MOON Dok-su	President, International PEN, the Korean Centre
Mr. LEE Tae-dong	General Secretary, International PEN, the Korean Centre
Mr. CHANG Baek-il	Vice-President, International PEN, the Korean Centre
Mr. KIM Si-chul	Vice-President, International PEN, the Korean Centre
Mr. KIM Moon-soo	Vice-President, International PEN, the Korean Centre

Trade unions and trade union activists

Mr. HEO Young-koo	General Secretary, Korean Council of Trade Unions
Mr. LEE Yong-bum	Executive Committee Member, Korean Council of Trade Unions
Ms. JUNG Hae-sook	President,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al Workers Union "CHUNKYOJO"
Mr. LEE Dong-jin	Chairperson of Solidarity Committee, "CHINKYOJO"
Mr. SHON Seok-choon	Director of Policy Planning, Korean Federation of Press Unions

Media, press and related organizations

Mr. NAM Si-uk	President, Korea Newspaper Editors' Association
Mr. HWANG Myong	Poet, President, Korean Literary Writers' Association
Mr. JONG Chul-park	Secretary-General, Korean Literary Writers' Association
Mr. AHN Jae-hwi	President,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Academic community

Mr. CHIANG Sang-hwan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Gyeong Sang National University
Mr. KIM Chong-yang	President, Hanyang University
Mr. KIM Kyung-min	Vice-Dean, Offi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Hanyang University
Mr. CHOI Sung-chul	Dean, College of Social Sciences, Hanyang University
Mr. OH Myeung-ho	Vice-President,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Hanyang University
Mr. HAN Sung-joo	President, International Relations Institute "ILMIN", Korea University Former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Members of the judiciary and the legal profession

Mr. LEE Young-mo	Secretary-General, Constitutional Court
Mr. SEO Sang-ho	Senior Research Officer of the Constitutional Court, Presiding High Court Judge
Mr. SUH Sung	Vice-Minister of Court Administration, Supreme Court
Mr. PARK Il-hoan	Judge
Mr. KIM Yong-dug	Judge of Seoul High Court Planning Director, Ministry of Court Administration, Supreme Court of Korea
Mr. KIM Sung-nam	Attorney at law, Secretary-General, Korean Bar Association
Mr. HA Kyung-chull	Attorney at law, Executive Director of Human Rights, Korean Bar Association
Mr. CHANG Soo-kil	Attorney at law, Executive Director of Public Relations, Korean Bar Association
Mr. KIM Seon-soo	Attorney at law
Mr. CHUN Jung-bae	Attorney at law, representing the singer Joung Tae-choon

Selected individuals

Mr. JOUNG Tae-choon	Singer
Mr. HWANG Sok-yong	Writer, serving a seven-year prison sentence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Mr. KIM Dae-jung	Chairman, Kim Dae-jung Peace Foundation for the Asia-Pacific Region
Mr. GONG Ro myong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Mr. KIM Do hyun	Vic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Mr. KIM Jong koo	Vice Minister of Justice
Mr. LEE Kyeong jae	Vice Minister of Information

Non-government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Mr. KANG Je yoon	Secretary,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Mr. LEE Sock bum	Lawyer,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Ms. NAM Kyu sun	Secretary General, Human Rights Group "MINKAHYUP"
Mr. LEE Seong hoon	International Coordinator, Korean Human Rights Network "KOHRNET"
Mr. NOH Tae hoon	Secretary General, Centre for Human Rights "SARANBANG"
Ms. CHOI Eun ah	Member, Centre for Human Rights "SARANBANG"
Mr. LEE Suk tae	Attorney at law, Secretary General of "MINBYUN" Lawyers for Democracy
Mr. LEE Don myung	Senior member, "MINBYUN"
Mr. MOON Dok su	President, International PEN, the Korean Centre
Mr. LEE Tae dong	General Secretary, International PEN, the Korean Centre
Mr. CHANG Baek il	Vice President, International PEN, the Korean Centre
Mr. KIM Si chul	Vice President, International PEN, the Korean Centre
Mr. KIM Moon soo	Vice President, International PEN, the Korean Centre

Trade unions and trade union activists

Mr. HEO Young koo	General Secretary, Korean Council of Trade Unions
Mr. LEE Yong bum	Executive Committee Member, Korean Council of Trade Unions
Ms. JUNG Hae sook	President,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al Workers Union "CHUNKYOJO"

Mr. LEE Dong jin Chairperson of Solidarity Committee, "CHINKYOJO"
Mr. SHON Seok choon Director of Policy Planning, Korean Federation of Press Unions

Media, press and related organizations

Mr. NAM Si uk President, Korea Newspaper Editors' Association
Mr. HWANG Myong Poet, President, Korean Literary Writers' Association
Mr. JONG Chul park Secretary General, Korean Literary Writers' Association
Mr. AHN Jae hwi President,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Academic community

Mr. CHIANG Sang hwan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Gyeong Sang National
University
Mr. KIM Chong yang President, Hanyang University
Mr. KIM Kyung min Vice Dean, Offi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Hanyang University
Mr. CHOI Sung chul Dean, College of Social Sciences, Hanyang University
Mr. OH Myeung ho Vice President,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Hanyang
University
Mr. HAN Sung joo President, International Relations Institute "ILMIN", Korea University
Former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Members of the judiciary and the legal profession

Mr. LEE Young mo Secretary General, Constitutional Court
Mr. SEO Sang ho Senior Research Officer of the Constitutional Court, Presiding High Court
Judge
Mr. SUH Sung Vice Minister of Court Administration, Supreme Court
Mr. PARK Il hoan Judge
Mr. KIM Yong dug Judge of Seoul High Court Planning Director, Ministry of Court
Administration, Supreme Court of Korea
Mr. KIM Sung nam Attorney at law Secretary General, Korean Bar Association
Mr. HA Kyung chull Attorney at law Executive Director of Human Rights, Korean Bar
Association

Mr. CHANG Soo kil Attorney at law Executive Director of Public Relations, Korean Bar Association
Mr. KIM Seon soo Attorney at law
Mr. CHUN Jung bae Attorney at law, representing the singer
Joung Tae choon

Selected individuals

Mr. JOUNG Tae choon Singer
Mr. HWANG Sok yong Writer, serving a seven year prison sentence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Mr. KIM Dae jung Chairman, Kim Dae jung Peace Foundation for the Asia Pacific Regio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Distr.
GENERAL
E/CN.4/1999/64
29 January 1999
Original: ENGLISH

COMMISSION ON HUMAN RIGHTS
Fifty fifth session
Item 11 (c) of the provisional agenda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CLUDING THE QUES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r. Abid Hussain

Republic of Korea

98. On 22 July 1998 the Special Rapporteur requested information from the Government about the cases of Ham Yun Shik and Son Chung Mu, charged with criminal defamation and imprisoned for their coverage of the 1997 presidential campaign. Ham Yun Shik, the publisher of One Way Magazine, who printed highly critical articles concerning presidential candidate Kim Dae Jung's background and political ideology, was taken to court by Kim Dae Jung's political party (National Congress for New Politics - NCNP) after his successful bid for the presidency. Mr. Ham was reportedly arrested on 28 February 1998 and is currently serving a jail term after a Seoul court sentenced him to one year in prison on 2 July 1998. Son Chung Mu, the publisher of Inside the World magazine, was arrested on 1 June 1998 allegedly for his magazine's

coverage of the 1997 presidential campaign. He is being detained while awaiting his court appearance, which was scheduled for 20 July 1998.

99. On 10 August 1998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formed the Special Rapporteur that Ham Yun Shik's criminal history dated back to 1967 and that he was arrested after having issued and distributed 100,000 copies of his magazine in which he allegedly libelled Kim Dae Jung with reports on his birth, ideology, military service and health condition. As regards Son Chung Mu, the Government recalled that he had been found guilty of "defamation by printed materials" for which he was sentenced to one year's imprisonment on 17 February 1994. The sentence was suspended for two years. Mr. Son wrote Kim Dae Jung, X File, a book in which he accused Mr. Kim of being a communist, allegedly on the basis of falsified documents. The NCNP lodged a complaint against Mr. Son which was filed for prosecution on 20 February 1998 without physical detention. The two cases are pending in Seoul District Court. The Government also recalled that within the context of the guaranteed rights of freedom of press and publication, Korean legislation provides reasonable limitations in order to ensure fair and just elections. The Public Office and Election Malpractice Prevention Act, enacted in 1994, provides sanctions in article 251 against those with the intention to libel candidates while article 309 of the Korean Criminal Code protects against crimes against reputation committed through printed materials.
100. The Special Rapporteur thanks the Government of Korea for its reply; however, further details would be most welcomed on the fate of the two above mentioned persons awaiting trial.



General Assembly

Distr.
GENERAL

A/HRC/4/24/Add.2
14 March 2007

Original: ENGLISH

HUMAN RIGHTS COUNCIL
Fourth session
Item 2 of the provisional agenda

**IMPLEMENTATION OF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251
OF 15 MARCH 2006 ENTITLED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 **

(5-12 December 2006)

* The summary of this document is being circulated in all official languages. The report, which is annexed to the summary, is being circulated in the language of submission only.

** The present document was submitted late so as to include the most up-to-date information possible. As such, it has not been edited, except for paragraph numbering and table of contents. This document, including annexes, is reproduced as received.

Summary

This report is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resolution 2001/52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following the official visit paid by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to the Republic of Korea between 5 and 11 December 2006. The Special Rapporteur takes this opportunity to thank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inviting him to visit the country and for the valuable assistance and cooperation afforded to him prior to and during his mission.

The Special Rapporteur notes that civil society in the Republic of Korea is highly organized to address the phenomenon of migration, including associations of migrant workers. The Special Rapporteur notes that steps taken by various migrant associations as well as women organizations in their negotiations with the authorities have led to important commitments on the part of the Government, in the context of the dialogue on improving the situation of migrants, especially for female foreign spouses.

The report contains a study of the various aspects regarding the situation of migrants living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pecial Rapporteur bases his finding on an analysis of labour laws and on information gathered through interviews and meetings he held with a wide array of sources, including Government official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lawyers, migrants, as well as from his visit to shelters for female migrants.

Accordingly, he recommends a number of measures to be adopted by the Government in order to comply with its commitment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bour standards including:

- ratification of the 1990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 review of the labour laws especially the Act Concerning the Employment Permit for Migrant Workers (EPS Act);
- and measures to protect women in particular those involved in international marriages.

In this report, the Special Rapporteur highlights the vulnerable situation of unskilled migrant workers who remain in an irregular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despite efforts to regularize their situation, given the lack of opportunities for a large proportion of them to stay beyond a limited three years time limit established by the current labour laws.

Annex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5-12 DECEMBER 2006)**

CONTENTS

	<i>Paragraphs</i>	<i>Page</i>
I. INTRODUCTION	1 - 4	4
II. THE GENERAL SITUATION OF MIGRANT WORKERS IN THE REPUBLIC OF KOREA	5 - 31	4
A. Migrant workers in the Republic of Korea	7 - 25	5
B. Situation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26 - 31	8
III. WOMEN MIGRANTS IN THE REPUBLIC OF KOREA	32 - 49	9
IV. RA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50 - 52	12
V. CONCLUSIONS	53 - 56	13
VI. RECOMMENDATIONS	57 - 66	13

I. INTRODUCTION

1.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visited the Republic of Korea (RoK) from 5 to 11 December 2006 at the invit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pecial Rapporteur takes this opportunity to thank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inviting him to visit the country and for the valuable assistance and cooperation afforded to him prior to and during the visit. The Special Rapporteur wishes to express his sincere appreciation for the assistance provided by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in Seoul and by the man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whom he had an opportunity to meet during his stay in the Republic of Korea.

2. The main purposes of the visit were to assess the prevailing situation of migrants liv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promote the ratification of the 1990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ICRMW).

3. In this report, the Special Rapporteur has paid special attention to the circumstances and impact of new labour systems implemented in order to regulate unskilled migrant workers living in the Republic of Korea namely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ITS) and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and the situation of female migrants.

Programme of the visit

4. During his visit, the Special Rapporteur held meetings with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relevant 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trade unions and employers. The Special Rapporteur also had the opportunity to spend a day in a women shelter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outside Seoul. The following report is based on the meetings the Special Rapporteur held with the authorities, the representatives of the civil society and the migrants themselves.

II. THE GENERAL SITUATION OF MIGRANT WORKERS IN THE REPUBLIC OF KOREA

International standards

5. The Republic of Korea has ratified the ma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 particular, the country acceded to the ICCPR and the ICESCR in April 1990; the CERD in December 1978;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onvention against Torture) in January 1995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in December 1984;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in November 1991. However the Republic of Korea has not ratifie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ICRMW).

Koreans living abroad

6. The Republic of Korea is both a labour sending and a receiving country. In mid-sixties, South Koreans began migrating to the United States to study or to find a higher quality of life. In the 1970s and 1980s, millions of construction workers went to the Middle East as employees of South Korean contractors.¹ Most of these workers returned home after a few years with substantial savings. Although prosperity has brought higher living standards to the Republic of Korea, a number of middle-class South Koreans still continue to immigrate to Asian and Anglophone countries such as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in search for a better quality of life for themselves and their children. In 2003, some 8,300 Koreans went abroad to permanently settle in a foreign country.² According to government surveys of emigrants, the most popular destination countries are the United States (28.4 per cent), followed by China (16.8 per cent), Japan (12.6 per cent), Canada (10.0 per cent), and Australia (5.1 per cent). Family reunification provisions are the main reason for the flow to the United States, where, according to the United States Census Bureau, in 2000 there were 860,000 Korean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The number of South Koreans who went abroad in 2003 for education reasons - largely to the United States and China - numbered around 500,000.

A. Migrant workers in the Republic of Korea

7. Migrant workers in the Republic of Korea began to arrive in late 1980s when workers from neighbouring Asian countries were attracted to the country as the rapid economic growth earned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media.

8. In the early 1990s, with labour shortages exacerbated in small and medium businesses and the presence of thousands of irregular migrant workers the Republic of Korea officially opened its doors to migrant workers. As of August 2006, at least 420,000 migrant workers - or approximately 1.5 per cent of the workforce - were believed to be working in the Republic of Korea, based on government and NGO figures.³ These workers come from China, Viet Nam, Bangladesh, Nepal,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among other countries.

9. Korea's employment system for foreign workers can be divided largely into three categories, namely, the employment system for unskilled foreign workers, the employment system for highly-skilled foreign workers and the other status of sojourn with employment rights. In relation to unskilled foreign workers, the Republic of Korea is introducing the minimum number of migrant workers needed according to strict procedures to protect the employment opportunity of Korean workers and minimize distortion of the labour market. The employment programmes for unskilled foreign workers can be classified into two legal systems,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and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ITS).

¹ www.migrationinformation.org/Profiles.

² www.icem.org.mo/nesca/.

³ www.csr-asia.com/upload.

Industrial Trainee System (ITS)

10. In 1992 in order to respond to labour shortages and to reduce the number of undocumented migrants, the RoK introduced ITS. The ITS programme was initially aimed to provide training to foreign workers recruited by Korean companies to acquire improved skills and enhance their performance. However, most of the jobs performed in the framework of the ITS were considered to be “dirty”, “difficult”, and “dangerous”; so called 3D.

11. The status of the migrant workers following ITS programme was very much dependent on his/her employer, leaving them in a vulnerable situation. Despite their status as trainees, they were mobilized as unskilled labour for work - which was mostly avoided by Korean nationals - and they were paid stipends which were a fraction of the actual wage. They had neither the right to change their workplace nor did the labour laws protect them as regards minimum wage, security guarantees and working hours.

12. Industrial trainees endured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the confiscation and retention by employers of their passports, visa papers and identity cards, delays and non-payment of stipendiary wages, instances of verbal and occasional physical violence.

13. In addition the recruitment and the management of trainees were seriously distorted. Controlled by the Korean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KFSB), trainees had to bear a huge financial burden to apply for traineeships and paying long-term debts on a monthly basis while working in Korea. KFSB monopolized the ITS programme in the Republic of Korea by non-transparent linkages with recruitment agencies in labour exporting countries. While KFSB reportedly earned a portion of the recruitment fees, they were also culpable in allowing such an exploitative system to operate. This in turn further worsened the vulnerability of migrant trainees under ITS. This process institutionalized a system which had not resolved the high levels of indebtedness faced by the industrial trainees leading to de facto conditions of debt bondage and which had also significantly worsened their vulnerability.

14. Running away from difficult working conditions, many trainees left their designated workplaces and sought employment outside the ITS. As their legal status was strictly bound to their traineeship, trainees became irregular migrants as soon as they left their companies with no legal rights and therefore in many instances, subjected to further exploitation.

15. However, the number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continued to surpass the number of documented industrial trainees. Statistics in 1997 collected by the Ministry of Labour demonstrat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d hosted slightly over 16,000 industrial trainees while the number of irregular workers reached around 130,000. In 2001, the Government revised the System to allow an industrial trainee, two years of employment after a one-year traineeship and a guarantee of a minimum wage. However the changes did not help in reducing the number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lthough the trainee quota had been expanded up to 130,000 in 2002, nearly 80 per cent of the 290,000 migrants were irregular migrant workers. Problems such as excessive recruitment fees and low wages remained subjects of concern. This led the Government in drafting a new labour law for migrants, the EPS Act in 2003.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16. After eight years of debate,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Employment Permit for Migrant Workers Bill in August 2003, establishing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Initially the EPS was meant to replace the ITS, however, confronted by objections from the employers unions, the authorities decided to operate both the ITS and the EPS. The EPS was introduced in July 2004 in the following sectors, manufacturing, construction, agriculture, fishing and service industries.

17. The EPS began to be implemented through bilateral Memoranda of Understanding (MOUs), signed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sending countries setting out the rights and duties of Governments and the status and benefits for the workers. The procedure involves Labour Ministries of the two countries and excludes intervention of the private sector. By December 2006, nine countries had signed MOU with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e EPS including Cambodia, Indonesia, Mongolia, Pakistan, Philippines, Sri Lanka, Thailand, Uzbekistan and Viet Nam.

18. Overall the EPS offers better status to migrant workers than the ITS: the recruitment process is more transparent and statistics show that around 75 per cent of the EPS workers spent US\$ 1,100 or less to come to the Republic of Korea.

19. It has also offered an opportunity for a number of irregular migrants to obtain a legal status. In 2003, the number of irregular migrant workers registered by the Ministry of Labour exceeded 227,000 and 80 per cent of them were afforded legal status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20. EPS workers receive benefits including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employment insurance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the national pension based on reciprocity between the parties of the MOU. They are entitled the same legal status as native workers as stipulated in labour related laws and thus guaranteed a minimum wage, the rights to form trade unions, collective actions and collective bargaining. Nevertheless, the EPS fails to provide a judicial mechanism for holding accountable those who violate this provision.

21. The fact that the EPS requires migrant workers to annually renew employment contracts with their employers for a period not exceeding three years places them in a vulnerable situation. The annual extension of contracts depends upon their employers, therefore very few dare to lodge complaints if their working conditions are inadequate, fearing the non-extension of their contracts. Moreover, it also impedes their freedom of movement of work because they are bound to remain within their first employment company throughout the three-year period. Those workers who would like to extend their stay over the three-year period have to leave the country for at least a year before returning.

22. The sum required to join the programme is disproportionately high as most of these workers come from poor or lower middle class families from countries where this sum is about one to two years' per capita income. It forces migrant workers to borrow money at very high rates of interest or by mortgaging their land or houses. This high indebtedness is an important and the fundamental reason many migrant workers stay on in the Republic of Korea beyond the three years' limits as it takes most of the three years just paying up their debts.

23. The EPS programme does not apply to migrant workers employed for domestic services and family reunification is not allowed. The family reunification for over 10,000 workers has been a pending issue over years.

24.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Labour, all migrant workers are eligible to benefit from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scheme. However the Special Rapporteur was told that migrant workers are largely unaware of their rights and, according to information received, the employers do not report work-related accidents as they have not taken the necessary measures to provide insurance to their migrant workers. The reluctance from employers to comply with their obligation to adopt safety environment at work, to insure their migrant employees and report work-related accidents is linked to their fear of investigations by insurance companies and adoption of safety measures which would affect their profitability.

25. In August 2007, the three-year cycle of implementation of the EPS will come to an end and the Government has committed itself to revise it in order to, inter alia, address the plight of undocumented migrants. Many irregular migrant workers in RoK are hoping for legalization under the new revision of the EPS Act in 2007, however, the Ministry of Justice (MoJ) and the Immigration Department are reportedly not favouring the regularization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B. Situation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26. With the adoption of the EPS in August 2003, the Government set the regularization process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s follows:

Undocumented migrants who had been in the Republic of Korea as of March 2003:

- For less than 3 years: eligible to sojourn status;
- Between 3 years and 4 years: eligible for visa issuance certificate but must first leave the country until 15 November (2003). After that they should return to the RoK within three months to be employed legally;
- For more than 4 years: no possibility to legalize their status and must leave the RoK by 15 November (2003) or will be deported.

27.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ICA), immigration officers were given the authority to search, detain irregular workers and issue deportation orders. The issue of detention orders by immigration officers appears to bypass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requiring detention orders to be issued by a judge. In June 2005,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recommended that the Ministry of Justice, under whom the immigration authorities work, revise the current Immigration Law, arguing that ministry officials had been violating the basic rights of undocumented migrants, including their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during operations by police and immigration officials.

28. The authorities increased the control and expulsion of irregular migrants and engaged in a series of operations to arrest, detain often in very poor conditions and deport all irregular migrant workers who remain in the Republic of Korea. In addition, it was reported that in many cases, irregular migrant workers who have suffered long-term or permanent injuries as a result of industrial accidents have reportedly been forced to leave the Republic of Korea immediately after medical treatment without compensation.

29. By October 2005, more than 30,000 irregular migrant workers had reportedly been deported. Regular documented migrant workers have also been detained and interrogated by immigration officials in an effort to get them to reveal the whereabouts of irregular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30. As of December 2006 there were at least 189,000 undocumented migrants workers, more than half of the migrant worker popul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⁴ A number of them, the irregular migrant workers, had overstayed their visas, some migrants interviewed by the Special Rapporteur had been living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more than 10 years without any document under a constant threat of deportation. However, as there was still a high demand for labour, particularly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because they were long term migrant workers with a good knowledge of the Korean language and better work skills their presence was tolerated.

31. The deportation of irregular migrants' children is also an issue of particular concern. On 21 August 2006 the Ministry of Justice released a new policy regarding undocumented migrants' children. Undocumented migrants' children who are enrolled in elementary school are required to report their irregular status within the reporting period from 1 September 2006 to 30 November 2006 and will be given special stay permission. Those who reported their irregular status are allowed to stay until the end of February 2008. However, those who are supposed to graduate in February 2007 may stay until 30 days following the graduation date of the elementary school. This special permission will not be given to those who do not report and will therefore be deported. Under the current Nationality Act which is based on *jus sanguini*, the children of foreigners residing as workers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prohibited from obtaining Korean nationality even if the children were born in the Republic of Korea.

III. WOMEN MIGRANTS IN THE REPUBLIC OF KOREA

Female migrant workers

32. Female migrant workers now constitute approximately one third of migrant worker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y are frequently under threat of sexual harassment and abuses in the workplace and their average income is lower than that of male co-workers. Undocumented female migrant workers do not report violence perpetrated against them out of fear of arrest and deportation.

⁴ Around 360,000 migrant workers - or 1.5 per cent of the workforce - were believed to be working in South Korea as of June 2006, based on government and NGO figures.

The entertainer E-6 visa

33. For example the E-6, or “entertainer visa”, is available to “foreigners who, for the good of profit-making, wish to be engaged in activities such as music, art, literature, entertainment, performance, plays, sports, advertising, fashion modelling, and other occupations that correspond to those above”. Female migrant workers coming to the Republic of Korea under an “entertainer visa” are increasingly being lured into sexual activities. This visa category, established in 1994 has met an increasing demand for foreign female entertainers and requests doubled since 1997.

34. Prostitution is illegal in the Republic of Korea, though numerous brothels operate in major cities and around United States military bases. Sex workers, especially female migrant workers, often suffer from grave abuses, including arbitrary detention and verbal or physical abuse by their employers. For migrant sex workers, language and cultural barriers exacerbate their vulnerable legal status. Most of them are irregular migrant workers who have overstayed their “entertainer” visas which makes it even more difficult for them to report abuse or seek redress from government authorities.

35. One of the Vietnamese female migrant workers interviewed by the Special Rapporteur reported long hours of domestic work and non-payment of her wages by her employer for the last 16 months. She was forced to perform several tasks for 12 hours on a daily basis from 5 a.m. to 5 p.m. She would then perform as an entertainer in an elephant show; besides, she was forced to engage in prostitution with her employer’s clients. She finally ran away and was staying in a shelter when she met the Special Rapporteur.

36. In September 2004 the Republic of Korea enacted a law that included a provision stipulating a prison term of up to 10 years for people who forced their employees to sell sex, and as a means to repaying the debts the employees incurred in the course of such employment. The new law also paved the way for trafficking victims to pursue cases against brothel owners. However, the law does not protect those that either want to stay in the sex industry or cannot prove that they were coerced. Critics argue that police crackdowns pursuant to the law have driven many sex workers further underground, putting them in an even more vulnerable situation.

Marriages

37. Over the past few years, the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s has sharply increased. In particular, as legal immigration routes are limited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new employment schemes, international marriages are becoming more popular than ever because it guarantees a long term and stable resident status. The number of marriages between Korean men and their foreign female spouses stands at around 30,000 in 2006, more than three times higher than marriages between Korean women and foreign male spouses. In 2006, mixed marriages represented 13.6 per cent of the total number of marriages in the Republic of Korea but in the rural areas they represent 36.9 per cent of the marriages.

38. Statistics by nationality reveal that 66.2 per cent of foreign female spouses are from China and 18.7 per cent are from Viet Nam. Japanese nationals constitute 4 per cent; Filipino nationals 3.2 per cent; and the rest of the women are from other countries including Thailand, Mongolia, and Russia.

39.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3 of the Amended Guidelines on the Resident Status of Foreign National Spouse married with Korean Nationals (1 October 1999), foreign spouses married to Korean nationals - whether male or female - shall obtain approval regarding the resident status.

40. As of May 2006, according to the Korean Nationality Act, foreign wives are eligible to apply for Korean nationality after two years instead of five years of married life with a Korean spouse. However, the male spouse's support is required for the application, which is another inequality in favour of Korean male spouses.

41. One of the most fundamental problems for the authorities is the integration of foreign spouses into the Korean society and very few surveys are carried out through provincial authorities and governors to understand the phenomena and provide assistance.

42. The federal government believes that this is an area under the jurisdiction of provincial authorities. But provinces are not allocated sufficient budgets from the federal government for language classes and cultural integration. Provincial authorities' guidelines are not legally binding. Each province has its own system of running agencies, regulations and education programmes. The provincial authorities can also contact the Government of a foreign spouse directly.

43. A number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s are prearranged and constitute mail ordered brides. In 2005 it was estimated that there were more than 1,000 wedding agencies operating in the Republic of Korea.⁵ These matchmaking agencies are registered as business companies without specific qualifications. The procedures of international marriage agencies are diverse - photo, interview, post-mail order, video file, travel packages through marriage agencies and group marriages through religious groups. The agencies reportedly charge excessive fees from both sides. International marriage agencies offer various marriage packages for South Korean men, which cost approximately US\$ 10,000. During the application process to RoK, foreign wives often suffer from lack of information about the country, its traditions and social life. They often do not speak the language and no adequate interpretation facilities are provided to them upon arrival to RoK.

44. Matchmaking agencies are reported to confiscate the passports and the immigration visas of foreign spouses and prevent female foreign spouses from contacting those who have the same nationality. If they divorce, in some cases they are sent back to their countries through the agencies.

45. Foreign female spouses interviewed by the Special Rapporteur expressed their distress due to varying reasons. In many cases their husbands did not have a stable job and they had to work to pay their husband's expenses. Since they are not allowed to work legally, they automatically belong to a marginal labour market. Without any formal language training, foreign wives are sometimes put to work soon after entering RoK along with other migrant

⁵ www.semoonchang.com.

workers as part of the cheap labour force. Another disturbing factor in these marriages lies with the fact that the legal resident status of a female migrant spouse depends entirely on her Korean husband and this subjects them to all sorts of domestic abuse.

46. In the case of divorce or separation, difficulties still exist. Foreign female spouses have to personally prove the faults and liabilities of their male spouses. Women's organizations have been concerned about the many cases of fraud and deliberate misinformation by marriage agencies and marriage brokers that occur during the international marriage process.

47. Although the problems regarding the need to regulate international marriage agencies and private brokers have been raised for years, no concrete proposals have been discussed until April 2006 when the Government publicly announced a comprehensive plan called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me for migrant women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s and their family members.

48. The programme would mainly focus on the following issues:

- (a) Unlawful international marriages through brokers;
- (b) Legal status of foreign spouses;
- (c) Support for children's education;
- (d) Support for adjustment and integration.

49. Also since 2003,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two shelters nationwide for foreign women to provide them with assistance for return to their country of origin and free legal advice from the Korean Legal Aid Corporation.

IV. RA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50. According to its draft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NAP),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a plan to ratify the Convention. Nevertheless, it has not yet done so. The Government informed the Special Rapporteur that it is still discussing internally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prior to its ratification.

51. In the meantime, faced with a surge of xenophobia and racism against migrant workers, the Government is also looking for alternative plans to promote the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 workers in Korea and enhance their legal and protection framework.

52. Although numerous organizations are lobbying for the necessity of ratifying the 1990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it seems that the efforts deployed so far did not succeed in involving government officials in the debate and did not manage to persuade government policymakers for the need to ratify the Convention. One of the most contentious issues is family reunification.

V. CONCLUSIONS

53. Historically, the Republic of Korea saw itself as a mono-ethnic society, with a small Chinese minority that has blended into the wider society very smoothly over the years. With the economic growth, and globalization, the Republic of Korea has become as of the eighties an attractive country for migrants. The Koreans authorities, started to initiate programmes to organize the migration flow without necessarily giving the required attention to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54. It is only recently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recognized the vulnerability of unskilled migrant workers and has engaged in addressing their situation by drafting and enacting the ITS and the Act Concerning the Employment Permit for Migrant Workers (EPS Act). However, both ITS and EPS have serious pitfalls as they maintain the residence status of migrant workers as tied to their position with their initial employers, thus exposing them to greater vulnerability.

55. Migrant women are also particularly vulnerable to multiple violations based on their gender and their status. They may become victims of violence at home, within their families, in their hosting communities and as foreign migrant workers at the workplace.

56. The situation of undocumented children of migrants is another matter of concern. Children's rights to education are not addressed appropriately in accordance with relevant human rights standards, includ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VI. RECOMMENDATIONS

57. **The Special Rapporteur calls on the Republic of Korea to ratify as a matter of priorit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s it is the foremost international instrument for the promotion and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58. **The Special Rapporteur encourages incentives for voluntary return rather than expulsion in accordance with procedural guarantees against forced return provided for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rticle 13.**

59. **The Special Rapporteur encourages the Korean Government to revise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EPS Ac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signed or ratified. In this regard specia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need to provide unskilled migrant workers with the possibility of lodging complaints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from his employer in case of violations of his human rights.**

60. **The RoK should consider providing migrant workers with the possibility of family reunification.**

61. **The Special Rapporteur recommends that every employer who is responsible for violating the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is brought promptly to justice, including through criminal prosecutions.**

With regard to female migrants

62.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itigate the requirements to apply for naturalization for th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Migrant women who have a child with Korean men should be entitled to residency rights regardless of their marriage status.**
63. **The Government should create systematic arrangements to provide foreign spouses with Korean-language training and cultural integration programmes upon their arrival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health-related information to foreign wives in a language they understand.**
64. **In the case of domestic violence,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a legal system to protect the foreign spouse. Foreign victims must have access to adequate interpretation facilities in police stations and the courts. The Korean Government must expand translation services through the Women's Emergency Hotline.**
65. **The Government must regulate marriage agencies and brokers. Victims of international marriage agencies and private marriage brokers must be registered classified after a screening process to be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With regard to migrant children

66. **As foreseen in the CRC,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ould govern all regulations or decisions taken to govern their status. In particular, all efforts should be made to allow them to enjoy all their human rights notably with regard to access to education and health services.**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 모음집

인쇄일 : 2008년 12월

발행일 : 2008년 12월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팀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 B/D 11층
Tel. (02)2125-9755 Fax. (02)2125-9748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Tel. (02)313-7593 Fax. (02)393-3016

사전증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